발간등록번호
11-1290000-000440-11

2020 국방백서

Defense White Paper

대한민국 국방부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2020 국방백서

Defense White Paper

발간사

최근 우리의 대내외 안보상황은 매우 복잡하고 엄중합니다. 한반도의 주변국들은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첨단 군사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으며, 해상과 공중은 물론 우주·사이버 등으로 군사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재난, 테러 등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들이 국가안보의 도전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의 확산, 미중 간 전략적 경쟁 등으로 역내 안보구도의 유동성과 불확실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은 2018년 「9·19 군사합의」를 체결한 이후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보이면서도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평화정착 노력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보상황의 도전 속에서 우리 군은 '강한 힘'과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국민을 위한 군'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여 '강한 안보, 자랑스러운 군, 함께하는 국방'을 건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국지도발 및 전면전에 대응할 수 있는 연합방위태세와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투임무 위주의 실전적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에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군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한미동맹은 한반도 및 역내 평화·번영의 핵심축으로, 공동의 가치를 공유하는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지속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양국 군은 앞으로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새로운 연합방위체제 구축을 추진하면서 한미동맹의 한 단계 더 높은 도약을 준비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은 주변국과의 전략적 국방교류협력과 국방외교 대상의 다변화를 통해 국방교류협력의 내실화와 외연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적극적 국방외교 활동을 통해 세계 평화에 이바지할 것입니다.

우리 군은 미래 전장환경에 맞는 국방역량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핵·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한 우리 군 및 한미연합의 능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핵심군사능력을 중심으로 주요 전력을 증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방개혁 2.0」과 스마트 국방혁신 추진을 통해 첨단과학 기술군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구



조를 미래전장에 맞는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정예화된 부대구조, 작전·전투 중심의 인력구조로 개편하고 있으며, 드론, 인공지능, 로봇 등 4차 산업혁명 첨단기술을 국방분야에 적극 도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술발전에 기초한 국방역량을 구축하여 미래를 주도하는 강한 군사력을 건설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함께 행복한 국방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으로 거듭나기 위해 공정·투명하고 효율적인 국방운영체계를 확립하고, 군 내 포용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국민 참여 확대, 방위사업 투명성 및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국방운영체계를 확립하고 있으며 군 공항 이전 추진,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등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장병 복무여건과 군 의료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제대군인 및 참전용사를 포용할 수 있는 지원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국민과 함께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한반도 지상, 해상, 공중에서의 평화는 남북 모두를 위한 길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은 「9·19 군사합의」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튼튼한 국방태세를 확립하여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강한 힘'으로 뒷받침할 것입니다.

「2020 국방백서」는 이러한 우리 군의 노력을 국민들에게 상세히 알리기 위해 지난 2년간의 국방 분야 주요 성과와 향후 정책추진 방향을 수록하였습니다. 「2020 국방백서」가 우리 군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강한 안보, 자랑스러운 군, 함께하는 국방'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우리 군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20년 12월 31일

국방부장관 서 욱

목차

제1장 안보환경의 변화와 도전

제1절 세계 안보정세 008
제2절 동북아 안보정세 011
제3절 북한 정세 및 군사 위협 019

제2장 국가안보전략과 국방정책

제1절 국가안보전략 034
제2절 국방정책과 군사전략 037
제3절 국방개혁 2.0 043

제3장 전방위 안보위협 대비 튼튼한 국방태세 확립을 통한 평화수호

제1절 튼튼한 군사대비태세 확립 050
제2절 핵·대량살상무기 위협 대응역량 강화 059
제3절 초국가적·비군사적 안보위협 대응체계 구축 065
제4절 민·관·군·경 통합방위태세 확립 078
제5절 전투임무 위주의 교육훈련 및 장병 정신전력 강화 082

제4장 강력한 국방개혁 추진을 통한 혁신강군 건설

제1절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정예화된 부대구조 개편 096
제2절 작전·전투 중심의 국방인력구조 개편 및 예비전력 정예화 100
제3절 합동성에 기초한 전력증강 추진 106
제4절 4차 산업혁명 기술 기반 '디지털 강군, 스마트 국방' 구현 112

제5장 공정·투명하고 효율적인 국방운영체계 확립

제1절 효율적 국방인력운영체계 혁신 122
제2절 국방 문민화 및 개방형 국방운영 128
제3절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공정·투명한 국방운영 134
제4절 방위사업 투명성 제고 및 방위산업 경쟁력 확보 145
제5절 책임국방 구현을 위한 적정 국방예산 확보 및 예산 운용 효율화 151

제6장 상호보완적 굳건한 한미동맹 발전과 국방교류협력 증진

제1절 상호보완적 굳건한 한미동맹 발전 162
제2절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 169
제3절 국방교류협력 내실화 및 외연 확대 172
제4절 국제평화유지 기여 및 재외국민 보호 193

제7장 국민과 함께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 내 포용문화 정착

제1절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선진병영문화 정착 210
제2절 장병 복지 향상 및 복무여건 개선 216
제3절 군 의료시스템 개편 224

제4절 장병 인권보호 강화 229
제5절 제대군인 지원 및 참전용사 예우 강화 234

제8장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군사적 뒷받침
제1절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 및 군비통제 추진 244
제2절 남북교류협력의 군사적 보장 및 국군포로 문제 해결 250

부록

특별부록
1. 「9·19 군사합의」 의의와 이행성과 258
2. 6·25전쟁 70주년 사업 추진 264
3.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 269
4. 일과 후 병 휴대전화 사용 272
5. 우리 군의 코로나19 대응 276

일반부록
1. 주변국 군사력 현황 286
2. 세계 주요 국가의 국방비 현황 288
3. 연도별 국방비 현황 289
4. 남북 군사력 현황 290
5. 남북 경제지표 현황 291
6.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결의 현황 292
7. 북핵문제 관련 주요 비핵화 합의 293
8.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경과 및 평가 294
9.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298
10. 남북 군사관계 일지 308
11. 북한의 대남 침투·국지도발 일지 319
12. 연합·합동연습 및 훈련 현황 321
13. 제51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 322
14. 미래 한미동맹 국방비전 327
15.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 329
16.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연합방위지침 334
17. 주한미군 주둔비용 직·간접 지원 규모 335
18. 국제 방산협력협정 체결 현황 337
19. 국방협력협정 체결 현황 338
20. 국제 군축 및 비확산 협약 및 기구 339
21. 우리 군의 해외파병 현황 341
22. 병사 봉급 변화 추이 342
23. 현역병 복무기간 변천 343
24. 국방기구도 344
25. 국방부 소관 법령 정비 현황 346
26. 국회 국방위원회 구성 및 주요 활동 360



제 1 장

안보환경의 변화와 도전

제1절 세계 안보정세
제2절 동북아 안보정세
제3절 북한 정세 및 군사 위협



G20 화상 정상회의 (2020년 11월)

제1절

세계 안보정세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유행이 각국의 정치·경제·사회적 불안정성을 가중시키면서 국제안보의 새로운 위협 요인으로 부상하는 한편, 국지적으로는 영토·종교 등 전통적 갈등 요인으로 인한 안보위협도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제사회에는 자국 우선주의가 심화되는 한편, 다양한 안보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공조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1. 코로나19와 안보환경의 변동성 증대

2019년 말 시작된 코로나19가 빠른 속도로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국제사회에 유례없는 복합적 안보위기 상황을 초래하였다. 2020년 3월 세계보건기구(WHO)가 팬데믹(Pandemic)[1]을 선언한 후 9개월 만에 세계적으로 6,100만 명 이상의 확진자와 140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여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인명 피해를 가져왔다.

코로나19는 각국의 보건의료체계를 비롯한 사회시스템의 마비를 초래하고, 글로벌 공급망의 단절, 경제활동 위축, 대규모 실업 등 국제경제 위기를 가져왔으며, 세계 곳곳에서 인종 혐오범죄, 정부의 격리조치에 대한 경제적 취약계층의 반대 시위 등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켰다. 보건 분야에서 시작된 위기가 정치·경제·사회적 위기로 확대됨에 따라 국제사회에 중대한 안보위협이 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은 국제안보 환경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다.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해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면서 기존의 동맹국 및 우방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새로운 파트너십과 다양한 협력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중국은 '일대일로 구상'을 추진하면서 자국의 이익 보호와 영향력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초기 대응 시 국제사회는 국제기구나 지역협력체 차원의 공동대응보다는 국경 봉쇄 등의 자국 우선주의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경향은 다양한 안보위협에 대한 국제사회의 결속과 다자안보협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한편 사이버위협, 테러, 재난 등 초국가적·비군사적 안보위협도 여전히 국제안보

1)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대유행하는 상태

의 위협 요소가 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 각 분야에서 원격 근무·의료·교육이 보편화 되고 디지털 의존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사이버 공격은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비례하여 증가하고 있다. 국제테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ISIS[2]와 알카에다의 조직재건, 서방권 대상 테러 선동 등 불안이 지속되고 있으며, 코로나19 장기화와 경제난 심화 등으로 선원 피랍 등 해적 행위가 급증하고 있다. 또한 2019년 호주 대형 산불 및 아프리카 남부지역 발생 슈퍼 사이클론, 2020년 필리핀 화산 폭발 및 터키 지진 등 세계 곳곳에서 자연재해와 재난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재난의 피해 규모가 날로 커지고 있으며, 예측 또한 어려워 발생국가의 노력만으로는 구호와 재건에 한계가 있어 국제적인 공조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2. 전통적 위협 요인의 상존

군비경쟁과 지정학적 요인 등에 따른 강대국 간 갈등이 상존하며, 또한 지역별로 영토·종교 등 전통적 갈등 요인으로 인한 안보위협도 지속되고 있다.

아태 지역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상호 견제 성격의 군사행보를 지속하고 있다. 또한 미국이 중거리핵전력조약(INF)[3]을 폐기하는 등 군비통제 등을 둘러싼 미국과 러시아 간 전략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보이고 있다. 중국과 인도는 히말라야 서부 국경지대 관할권을 두고 분쟁 중인 가운데 2020년 6월 양국 간 유혈 충돌이 발생하였다.

유럽 지역은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둘러싼 미국과 유럽의 갈등 등 다양한 대내외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또한 유럽연합은 2020년 7월 말 종료 예정이었던 러시아에 대한 크림반도 병합 관련 경제제재를 6개월 재연장하여 유럽연합과 러시아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중동 지역에서는 ISIS와 같은 폭력적 극단주의 세력이 약화되고 있으나, 수년간 지속되어온 시리아와 예멘에서의 내전이 단기간 내 종전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또한 2018년 5월 미국이 이란 핵 합의(JCPOA)[4]의 탈퇴를 선언하고 대이란 독자제재를 복원시킨 이후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협 등이 전개되면서 역내 긴장이 고조되었으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갈등도 지속되고 있다. 반면 2020년 UAE·바레인-이스라엘 간 관계 정상화 협정이 추진되어 중동 지역 정세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저개발 등 만성적인 문제들로 인한 정치 세력 간 권력 투쟁,

2) Islamic State of Iraq and Syria

3) Intermediate-range Nuclear Forces Treaty

4) 포괄적 공동행동계획으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및 독일(P5+1)과 함께 2015년 7월에 체결한 이란 핵 문제에 관한 합의문서(JCPOA :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종족 간 갈등, 폭력적 극단주의 세력에 의한 테러 등으로 인해 정치·경제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사헬(Sahel) 지역[5] 국가들 및 동아프리카의 소말리아 등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들의 공격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으며, 서아프리카 기니만 해역 내 해적 공격이 급증하고 있다.

3. 안보위협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 공조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을 경험하면서 국제사회의 공조와 협력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감염병·기후변화·사이버·테러 등 초국가적·비군사적 안보위협이 개별국가나 일부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세계 각국은 공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연대와 협력을 통한 국제적 공조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2020년 3월 개최된 G20 특별 화상 정상회의와 4월 개최된 아세안+3 특별 화상 정상회의, 5월 세계보건기구, 11월 개최된 APEC 정상회의와 G20 화상 정상회의를 통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노력할 것을 결의하였고, 국제사회의 공동대응을 촉구하였다. 그리고 의료지원이 필요한 국가에 방역물자를 지원하고,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는 등 국제사회 공조도 진행되고 있다.

또한 사이버위협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국제사회는 사이버공간총회, 유엔 정부전문가그룹(GGE)[6], 유엔 개방형작업반(OEWG)[7], 서울안보대화(SDD)[8] 사이버 워킹그룹,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9], 사이버안보 전문가워킹그룹 등을 통해 지속 협력하고 있다.

아울러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구조 및 복구지원을 위해 아세안 지역안보포럼(ARF)[10], 지역재난지원협조센터(RHCC)[11],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 산하 지역협의체 등 다자안보협의체를 활용하여 공조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5) 사하라 사막 이남의 남쪽 주변지대로 니제르·말리·모리타니아·부르키나파소·차드 5개국을 지칭

6) Group of Governmental Experts

7) Open-Ended Working Group

8) Seoul Defense Dialogue

9) ASEAN Defense Ministers' Meeting-Plus

10) ASEAN Regional Forum

11) Regional HADR (Humanitarian Assistance Disaster Relief) Coordination Center

제2절

동북아 안보정세

동북아에서의 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쟁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심화되는 가운데 중·러간 전략적 연대 강화, 일본 등 각국의 군사력 증강 및 영향력 확대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안보환경은 코로나19 상황과 한반도 비핵화 변수가 접목되어 역내 안보구도의 유동성과 불확실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1. 지역 안보정세

미중 간 전략 경쟁과 갈등이 정치, 경제, 군사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미·중·일·러 간의 역학관계로 인해 동북아 지역의 불확실성 또한 더욱 커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세와 남중국해에서의 미국과 중국의 군사활동으로 역내 긴장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미국은 '힘을 통한 평화' 기조하에 「국가안보전략(NSS)」과 「국방전략(NDS)」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수정주의 세력(Revisionist Power)'으로 명시하고 장기적·전략적 경쟁을 공식화하였으며, '인도·태평양 전략'을 중심으로 역내 국가들과의 양자 및 다자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특히 국방예산을 지속 증액하여 아태 지역 배치 전력 증강, 재래식 전력 강화, 핵 억제능력 현대화, 미국 본토의 미사일 방어능력 강화 등 군 현대화와 대비태세 강화를 위한 투자를 지속 확대하고 있다.

중국은 2017년 10월 제19차 당대회에서 중국몽(中國夢) 실현 로드맵으로 2020년부터 2035년까지 소강(小康)[12] 사회 건설의 기조 아래 사회주의 현대화를 실현하고, 2050년까지 '세계 일류 강군 육성'을 통한 사회주의 강국의 전면적 건설을 목표로 제시하였으며, '인류운명공동체'를 기반으로 중국 주도의 새로운 국제질서를 구축하려는 대외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9월 코로나19 극복을 대내외에 선언하였으며, 체제 우월성을 강조하면서 적극적인 국제사회 방역 지원을 통해 영향력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일본은 평화헌법에 기초한 '전수방위'[13] 원칙을 유지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나, '국제협조주의에 입각한 적극적 평화주의'[14]를 내세우며 일본의 안전 및 국제사회

12) '소강(小康)'은 중국 사회의 발전 단계에서 '따뜻하고 배부르다'는 뜻의 '온포(溫飽)' 다음 단계를 의미. '온포'가 기초적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면, '소강'은 문화적 여유까지 가미한 중산층 생활을 의미

13) 상대방으로부터 무력공격을 받았을 때에 비로소 방위력을 행사하고 방위력의 행사 및 보유·유지하는 방위력도 자위를 위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등 평화헌법 정신에 따른 수동적 방위전략

14) 일본의 국가안전보장전략에 기술되어 있는 국가안전보장의 기본 이념으로, 일본이 그 국력에 걸맞게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 및 번영을 확보하기 위해 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기여해 나가야 한다는 개념

의 평화와 안정 및 번영을 실현한다는 명분으로 이전보다 더욱 적극적인 방위정책으로의 전환을 추구하고 있다. 아울러 북한의 핵·미사일,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급변하는 안보환경을 반영하여 '다차원 횡단 방위' 개념을 심화한 '다차원 통합방위력'[15] 구축을 통해 우주, 사이버, 전자파 영역에서의 작전수행능력 향상을 추진하고 있다.

러시아는 군사력 현대화, 핵·우주무기 발전 등 국방력 강화를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동북아 지역 내에서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과는 중거리 핵전력조약 폐기와 미러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 등을 둘러싸고 갈등이 심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 주변국 국방정책 및 군사동향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은 전략적·군사적 우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중국과 일본, 러시아도 해·공군력을 중심으로 군사력을 경쟁적으로 증강하고 있다. 한반도 주변 4국의 군사력을 개관하면 [도표 1-1] 과 같다.

[도표 1-1] 한반도 주변 4국의 군사력



* 출처 : 「The Military Balance 2020」(국제전략문제연구소, 2020년 2월), 「미국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15) 육·해· 공과 같은 기존 영역뿐만 아니라 우주, 사이버, 전자전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포함한 모든 영역의 능력을 유기적으로 융합하고, 그 상승효과로 인해 전체적인 능력을 증강하게 하여 영역횡단(Cross-Domain) 작전을 실시할 수 있게 하는 능력 (출처 : 일본 방위백서)

미국 미국은 2017년 「국가안보전략」과 2018년 「국방전략」에서 본토 및 미국민 보호, 자국의 번영 증진, 힘을 통한 평화 유지, 영향력 확대 등을 핵심이익으로 설정하고, 이를 힘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군사적 우위 유지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를 전략적 경쟁국으로 평가하면서 외교·안보 등 제반 분야에서 장기적 견제 노선을 추구하고 있다.

2019년 미 국방부는 「국가안보전략」과 「국방전략」을 구체화한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하면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치명적인 능력을 갖춘 합동전력과 강력한 동맹 및 파트너들 간의 연대를 통해 비전을 현실화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대비태세, 파트너십, 그리고 역내 네트워크 증진 노력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이를 위해 미국은 군 현대화 및 전력증강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역내 연합훈련을 통해 상호운용성을 향상시키는 등 동맹 및 우방국의 군사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아울러, 기존의 동맹 및 우방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새로운 파트너 국가들과 협력 기회를 모색하고 있으며, 한·미·일, 미·일·호, 미·일·호·인 소다자협력을 증진하는 등 확대된 안보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군사적으로는 '국제공역에서의 접근과 기동을 위한 합동 개념(JAM-GC)'[16]을 발전시켜 최적의 합동군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전략 자산의 전략적 유연성을 증대하고 작전적 불가측성을 한층 높인 역동적 전력운영(Dynamic Force Employment)을 시행하고 있다. 나아가 새로운 작전 요구사항을 반영한 합동 작전 개념을 체계화하는 노력을 지속해 나가고 있다. 이 개념은 미군 전력을 더 분산 배치하되 첨단 전장 네트워크로 연결함으로써 각 군별 군사 역량을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육군의 다영역작전(MDO)[17], 공군의 신속대응투사(ACE)[18], 해군의 분산해양작전(DMO)[19], 해병대의 원정전방기지작전(EABO)[20] 등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한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전략폭격기 등 핵전력 3축체계를 현대화하고 있으며, 다층적인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을 지속 추진 중이다. 또한 F-22, F-35 등 스텔스 전투기, P-8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버지니아급 핵잠수함, 해저 무인잠수정, 전략폭격기 등 해·공군 첨단전력을 아태 지역에 배치하고 있다.

2019년 12월 트럼프 대통령은 상·하원의 초당적 지지하에 역대 최대 규모의 국방예산을 편성한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21]에 서명함으로써, 2016년부터 매년 국방비를 증액시키며 '힘을 통한 평화' 추진을 위한 기반을 공고히 하였다.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은 전년 대비 국방예산 약 210억 달러를 증액(7,380억 달러, GDP 3.3% 수준)하고, 현역 1,400명을 증원하였으며, 군 현대화 및 대비태세

16) Joint Concept for Access and Maneuver in the Global Commons

17) Multi Domain Operations

18) Agile Combat Employment

19) Distributed Maritime Operations

20) Expeditionary Advanced Base Operations

21)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강화, 위협 대응, 동맹 및 우방국 지원, 장병 복지문제 등의 내용을 총체적으로 망라하였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 위협을 재강조하며 이에 중점을 둔 정책을 권고하는 한편, 중국 대응 차원에서 인도·태평양 전략의 구체화를 촉구하였다.

육군은 병력 규모를 현재 48만 7,500명에서 48만 명 수준으로 감원하고, 전술·다목적 차량과 M1 탱크 165대, AH-64E 헬기 48대, UH-60 헬기 98대, 팔라딘 자주포 53대 등의 구매 예산을 승인·편성하였다. 해군은 병력 규모를 현재 33만 5,400명에서 5,100명을 증원하고, 버지니아급 잠수함 2척, 알레이버크급 구축함 3척, 신형 포드급 항공모함 1척 등 함정 18척의 전력구축 사업을 승인하였다. 공군은 병력 규모를 현재 32만 9,100명에서 3,700명을 증원하고, F-35, F/A-18 등 기존 전투기 획득 및 성능개량 예산을 정상 편성하였으며, KC-46 공중급유기 등의 전력증강을 승인하였다.

또한, 핵 능력 강화를 위해 지상기반 전략미사일, 장거리 순항미사일, 콜롬비아급 잠수함, B-21 폭격기 등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우주기반 탄도미사일 요격체계 등 신기술과 본토 방어력 강화를 위한 연구를 강조하였다.

아울러,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은 주한미군 병력을 2만 2,000명 이하로 감축하는 것을 제한했던 2019년에 이어, 주한미군 병력을 2만 8,500명 이하로 감축 추진 시 이러한 조치가 미국의 안보이익에 부합하고, 역내 동맹국의 안보를 저해하지 않으며, 한일 등 동맹국과 적절히 협의했음을 입증하는 의무를 미 국방부 장관에게 부과하였다. 한편, 한미 양국은 매년 개최되는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통해 주한미군의 역할을 평가하고, 대한민국 방어에 대한 확고한 미국의 공약을 지속 확인하고 있다.

미국은 사이버 및 우주 분야의 안보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동 국방수권법에 중국과 함께 러시아, 이란, 북한의 사이버공격과 침입에 관한 연례 보고서를 국방부가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국방부의 사이버 정책 전반을 조정하고 감독할 고위직 신설 조항을 반영하는 등 사이버 역량 강화 노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미국의 6번째 군종[22]으로 우주군을 창설하는 등 우주 분야에서의 비교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다.

한편, 2021년 1월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으로 미국 안보정책에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제반 동맹 현안을 연합방위태세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관리하도록 한미 국방당국 간 긴밀한 공조가 요구된다.

중국

중국은 세계 일류 강군 육성을 목표로 군의 현대화·효율화를 위해 군 체제·편제를 조정하고, 국방정책 및 제도를 개혁하고 있다. 2015년 시진핑 국가주석이 병력 30만 감축을 선언한 이후, 연합작전지휘기구 설립, 6개 군종

22)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해안경비대, 우주군

(육·해·공군, 로켓군, 전략지원부대, 연근보장부대)으로의 전환, 7대 군구에서 5대 전구로의 재편 등 군 구조 개혁을 완료하였고, 2019년에는 합동작전지휘체계 개선 등 국방정책·제도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육군은 전략적 요구에 따라 '지역방위에서 전역작전형(全域作戰型)'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과거 집단군–사단–연대–대대에서 집단군–여단–대대로 작전지휘체계를 간소화하여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작전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해군은 '근해 방어와 원양에서의 국익수호'가 가능한 현대화된 해군 건설을 위해 전략적 억제와 반격, 해상 기동·합동작전 능력 등을 향상시키고 있다. 특히, 원양에서의 역량 강화를 위해 항공모함, 신형 핵잠수함 등 현대화된 무기·장비 건설에 집중하면서 상륙작전 수행능력 보강을 위해 해군육전대 사령부를 창설하였다.

공군은 '항공–우주통합(天空一體)·공방겸비(攻防兼備)'[23]의 전략적 목표 달성을 위해 조기경보·공중타격·항공방어 능력 등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원거리 작전능력 제고와 공격임무 수행을 위해 조기경보통제기, 공중급유기 등 전력화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

로켓군(火箭軍)은 '핵 및 재래식 미사일 능력 겸비 및 전 지역 억제'를 목표로 핵 억제·반격능력과 중장거리 정밀타격력 향상을 추진하고 있다. 차세대 중·장거리 탄도미사일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등의 전력화를 추진 중이며 극초음속 비행체(HGV)[24]를 탄두에 탑재 가능한 신형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실시하는 등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에 대응한 신형무기체계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전략지원부대는 항공·우주, 사이버작전, 정보수집, 전자·심리전 등을 주요 임무로 한다. 국방과학기술 혁신을 위해 군과 민간의 접점 분야인 인공지능(AI), 무인기·무인시스템, 정보과학기술, 네트워크 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민간의 우수기술 흡수 및 국방과학역량 강화, 해외 첨단기술 획득 등 군민융합에서의 심층적 발전을 강화하고 있다.

연근보장부대는 군수지원 관련 중앙집권적 지휘와 전구작전 지원체계 확립을 위해 창설되었으며, 우한 연근보장기지에서 연근(보급·병참) 보장업무를 총괄하면서 부대 전략기동을 지원하고 있다. 5개 전구 지역에 위치한 5개 보장센터는 책임작전부대에 대한 근무지원을 담당한다.

국방동원능력 강화를 위해 민병 구조 개선과 동원역량 확충을 중점으로 긴급상황 및 전시 대비 준군사조직으로서의 임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예비 역량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해상 민병은 정찰·위장·양동작전·군수지원 등 군사작전 수행이 가능한 활동역량과 규모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 중국은 역내 영향력을 확장하고 미국의 남중국해에서의 항행의 자유작전,

23) 항공과 우주 전력을 정보화·일체화하고, 공격과 방어능력을 겸비한 강력하고 현대화된 전략 공군을 건설하고자 하는 목표

24) Hypersonic Glide Vehicle

대만과의 협력 강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군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남중국해 인근 초계활동, 태평양 원해훈련 등 군사활동과 파키스탄, 태국, 캄보디아 등 주요 협력국과의 연합훈련을 실시하였다. 특히, 2019년 러시아와의 관계를 '신시대 전면적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한 것을 계기로 연합군사훈련의 점진적 증가와 전략적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가 예상된다.

일본 일본은 적극적 평화주의 명분에 따라 2014년 7월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헌법해석을 변경하여 자위대의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2015년 4월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과 9월 안보법제[25] 정비를 통해 자국의 존립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무력공격이 없더라도 집단적 자위권을 발동하여 무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일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태라고 판단되는 경우 미군뿐만 아니라 타국 군에도 지리적인 제한 없이 급유와 탄약 지원 등 후방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재외 일본인에 대한 자위대의 구출활동, 자위대와 함께 행동하는 미군 및 외국군에 대한 방호, 국제평화유지활동(PKO)에서 안전확보 및 출동경호 임무 추가 등 자위대의 임무와 활동범위를 확대하였다. 그리고 북한의 핵·미사일,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급변하는 안보환경을 반영한 '다차원 통합방위력' 구축을 통해 우주, 사이버, 전자파 영역에서의 작전수행능력 향상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19년 3월 방위부대신을 위원장으로 하는 '다차원 통합방위력 구축위원회'를 설치하고 방위력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육상자위대는 도서 지역의 각종 사태에 즉각 대응하기 위해 높은 기동력과 경계감시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18년 4월 사·여단을 신속하고 유연하게 운용하기 위한 육상총대[26]를 신설하고, 조어도(센카쿠/댜오위다오) 인근 도서에 연안감시대와 지대함 및 지대공미사일 부대를 배치하였으며, 수륙양용작전을 전담하는 수륙기동단을 창설하였다. 새로운 영역에서의 작전능력 강화를 위해 육상총대 산하 사이버 부대와 전자파 작전부대를 신규편성하였다.

해상자위대는 주변 해역의 방위와 해상교통로의 안전 확보를 위해 호위함부대의 대응능력 향상, 잠수함부대 및 고정익 초계기부대의 전력강화를 추진[27]하고 있다.

항공자위대는 일본 주변의 공역에 대한 상시 경계·감시를 위해 항공경계관제부대를 유지하고 있다. 남서지역 방어태세 강화를 위해 2014년 4월 오키나와에 조기경보기(E-2C) 부대인 경계항공대를 창설하고, 2016년 1월 F-15 전투기 비행대를 증편하였다. 방공능력의 강화를 위해 F-35의 도입을 기존 42대에서 단거리 이륙·수직착륙이 가능한 F-35B 42대 등을 포함하여 147대로 늘리고, 공중급유·수송부대

25) 자위대법·선박검사활동법·국제평화협력법·무력공격사태법·중요영향사태법 개정 및 국제평화협력지원법 신설 등

26) 육상자위대의 각 부대를 신속·유연하게 전국적으로 통합운용하는 작전사급 부대로 우리의 지상작전사령부에 해당

27) 일본은 해상자위대의 전력증강을 위해 2023년까지 호위함을 47척에서 54척으로, 이지스함을 6척에서 8척으로 증강하고, 고정익 초계기는 P-1 신형초계기 위주로 65대를 유지할 예정임. 또한 초계 헬기를 76대에서 80대로 증강하고, 잠수함을 16척에서 22척으로 증강시킬 예정이며 이즈모형 구축함에 F-35B가 탑재 가능하도록 개조 추진 중

와 무인기 부대를 신규 편성하는 등 방공능력 및 작전반경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우주·사이버·전자파 영역에서의 대응을 위해 우주공간의 안정적 이용을 확보하기 위한 우주상황감시(SSA)[28]체계의 구축과 정보수집, 통신, 측위 등의 능력 향상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20년 우주작전대를 항공자위대 예하에 새로 편성하고 규모 확대와 실질적 작전운용 개시를 추진하고 있다. 사이버영역에서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사이버방위대 인력을 강화하고 육상 자위대에 사이버방호대를 새로 편성하였으며, 각 자위대 간 시스템 연결, 전파 정보수집·측정장치 정비 등을 추진하고 있다.

러시아

러시아는 군 구조 및 편제 개편, 장병 임금 인상 및 군 주거 환경 개선 등 국방개혁에 매진해왔다. 또한 국제유가 하락과 서방의 경제제재 장기화 등 경제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국가재무장 계획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극초음속 무기 개발 등 무기체계 현대화를 진행하고 있다.

육군은 군 현대화를 위해 기계화 보병부대와 전차부대를 위주로 기동성 및 독립작전 수행능력 보강에 중점을 두고 신규 부대 창설, 장비 현대화, 편제 보강 등을 추진하고 있다. 2019년 지상군은 1개의 전차군을 포함한 11개의 신규 부대를 창설하였으며 지상군 장비 현대화를 위해 전차 및 장갑차와 화포 성능개량, 신규장비 전력화를 지속하고 있으며, 병력 보충을 위해 모병제를 부분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시리아전에 특수임무부대 위주로 병력을 파병하여 실전경험을 축적하고, 국가급 전략지휘참모훈련 및 중국 등 주변국과의 연합훈련을 통해 연합·합동작전능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해군은 2018년 보레이급 전략핵잠수함 3척을 건조하여 핵 억지력을 강화하는 한편, 상륙강습함 및 항공모함을 포함한 신형 함정 건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극초음속 순항미사일 '지르콘(Zircon)'과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초음속 순항미사일 '칼리브르(Kalibre-M)', 핵추진 수중드론 '포세이돈' 등 첨단 비대칭 전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북양함대와 태평양함대 장거리 원양훈련, 중국·인도와의 정례 연합훈련을 통해 전력 투사능력을 신장시켜 나가고 있다.

항공우주군도 장비의 현대화와 첨단 항공기 개발에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전투기로는 스텔스 성능을 갖춘 SU-57과 MIG-41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 중 SU-57은 2019년에 처음 항공우주군에 인도되어 시험 중에 있다. 폭격기로서는 스텔스 성능을 갖춘 PAK-DA를 개발하고 있으며 장거리 폭격기 TU-22M과 전략폭격기 TU-160의 전자장비·엔진을 개량 중에 있다. 방공무기체계로는 저고도 방공무기체계인 S-350을 2020년 3월 도입하기 시작했으며 고고도 방공무기체계인 S-500도 조만

28) Space Situational Awareness

간 전력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략미사일군은 지속적으로 구형 미사일을 도태시키고 신형 미사일인 RS-24(Yars)와 RS-28(Sarmat)로 교체를 추진하여 현대화율을 높이고 있다. RS-24는 2011년 처음 도입한 이래 RS-12M(Topol-M) 등의 구형 미사일을 대체 중이며, RS-28(Sarmat)은 2021년 도입을 목표로 시험을 진행 중에 있다. 특히 RS-28의 미사일에는 극초음속활공 비행체인 아방가르드를 탑재할 것으로 추정된다.

제3절

북한 정세 및 군사 위협

북한은 2011년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핵·경제 병진노선'을 표방하며,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역량을 집중하여 2017년에는 '국가핵무력' 완성을 선언하였다. 2018년 들어 새로운 전략노선으로 '경제건설 총력 집중노선'을 제시하고,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표방하며 활발한 정상외교를 추진하였으나, 2019년 북미 정상의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비핵화 협상 교착국면이 장기화되었다. 2020년 들어 대북제재 및 코로나19로 경제난이 심화되는 상황에서도 자위적 국방력 강화를 명분으로 핵·미사일 능력 강화 및 선별적 재래식 전력증강을 통한 작전태세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1. 북한 정세

내부 정세

북한은 2011년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역량을 집중하였으며, 2017년에는 6차 핵실험 및 다종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통해 '국가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이후 2018년 신년사에서도 '핵·경제 병진노선'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핵탄두와 탄도로케트의 대량생산 및 실전배치를 강조하였다.

2018년 4월 20일 당 중앙위원회 제7기 3차 전원회의에서 '핵·경제 병진노선'의 성공을 선포하며 '사회주의 경제건설 총력 집중노선'을 새로운 전략노선으로 공식화한 이후 2019년 신년사에서는 '자력갱생'을 통한 경제건설을 강조하고,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표출하며 핵무기를 생산·시험·사용·전파하지 않을 것임을 선포하였다.

또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9년 4월 10일 당 중앙위원회 제7기 4차 전원회의를 통해 '자립적 경제토대 강화를 통한 경제건설'을 강조한 데에 이어 4월 12일 집권 이후 최초로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경제제재에 대하여 '자력갱생'으로 극복할 것을 재차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의 성과달성을 위해 '인민군대가 조국보위도 사회주의 건설도 다 맡자'라는 구호와 함께 삼지연지구, 양덕온천문화휴양지, 원산갈마관광지구, 어랑천 발전소 등 주요 공사에 군의 동원이 확대되었다.

한편, 북한은 2019년 북미 비핵화 협상 결렬 이후 교착국면이 장기화되자 12월 말 당 중앙위원회 제7기 5차 전원회의를 통해 새로운 전략노선으로 '핵 억제력 동원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경제건설'에 집중하는 '정면돌파전'을 제시하였다.

2020년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유행에 따라 북한은 1월 말 국가비상방역체계로 전환하여 국경 및 주민이동을 통제하며, 코로나19 유입 및 확산 차단을 위한 노력을 하였다. 이를 위해 당 정책회의를 연이어 활발하게 개최하면서 전염병의 차단을 위한 방역 수단과 규정을 재정비하고 엄격한 방역체계 시행을 강조하였다.

특히 7월에는 재입북한 탈북 인원에 의한 코로나 유입 가능성을 우려하여 당 정치국 비상확대회의를 개최하고 개성시를 완전봉쇄할 것과 국가비상방역체계를 강화할 것을 지시하였다.

한편, 북한은 제재 장기화 및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하계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면서 주민들의 생활고가 심화되고, 연초에 계획했던 국가목표달성이 어렵게 되었다. 이에 따라 북한은 '당-군-민' 일심단결을 강조하며 평양 당원들과 군부대를 대규모로 동원하여 재해복구 공사를 조기에 완료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당 설립 75주년 열병식 연설을 통해 '위대한 우리 인민'을 강조하며, 코로나19와 재해를 극복해낸 주민들에게 수차례 감사를 표명하였다.

향후에도 북한은 제재 장기화 및 코로나19로 인해 심화된 경제난 극복을 위해 자력갱생을 지속 주장하며, 사상무장 및 내부통제 강화를 통해 내부결속을 도모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자위적 국방력 강화를 명분으로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지속하며 '김일성 생일 110주년'을 맞이하는 2022년까지 주민생활의 실질적인 개선을 목표로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하여 경제성과 창출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남 정책

2017년 7월 베를린 구상 등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정착 노력에 호응하여 북한이 2018년 평창올림픽에 선수단을 파견하는 등 남북간 대화 재개의 여건이 마련되었다. 이를 토대로 4월 27일에는 2007년 이후 11년 만에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여 「판문점선언」을 채택하였고,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여 「9월 평양공동선언(이하 평양공동선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합의서(이하 9·19 군사합의)」를 채택하였다.

2019년에도 신년사를 통해 「판문점선언」, 「평양공동선언」, 「9·19 군사합의」를 사실상의 불가침 선언으로 규정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조건 없는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재개 의사를 비추며 남북 화해와 협력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그러나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북한은 남북대화 및 교류에 소극적 태도로 변하였으며, 4월 12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시정

연설에서 우리 정부의 독자적 대북정책 추진을 촉구하였다.

이후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과 우리 군의 F-35A 도입 등의 전력증강 활동을 남북군사합의 위반행위 및 남북관계 악화의 원인으로 주장하면서도, 접경 지·해역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 조치 이행 등 전반적으로 「9·19 군사합의」를 준수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우리 정부의 남북대화 및 협력 제안에는 응하지 않으면서, 10월 23일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금강산을 방문하여 우리 기업의 시설물 철거를 지시하였다. 또한, 11월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방한계선(NLL) 북방 창린도를 방문 시 해안포 사격을 지시하였다.

북한은 2020년 새해 첫날 발표한 당 중앙위원회 제7기 5차 전원회의 결과에도 남북관계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나, 3월 우리 정부에 코로나19 관련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하며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시사하였다.

그러나 5월 3일 강원도 철원군 비무장지대 북한군 초소에서 우리 감시초소(GP)를 향해 14.5㎜ 고사총을 발사하는 도발을 하였다.[29] 6월 들어 북한은 우리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남북간 통신선들을 차단한데 이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였다. 이어 북한은 군사적 조치를 담은 대남군사행동계획을 발표하였으나, 보류 발표를 통해 실제 이행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9월 북한은 서해에서 북측해역으로 넘어간 우리 국민을 총격으로 사망하게 하였고,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북한의 만행을 규탄하고 책임자 처벌과 공동조사를 요구하는 등 단호히 대응하였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통지문을 통해 유감을 표명하고 사과의 뜻을 전하였으며, 당 설립 75주년 열병식 연설에서는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기도 하였다.

대외 정책

북한은 국제사회의 고강도 대북제재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주, 평화, 친선'의 외교 원칙을 바탕으로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유대관계 강화 및 한반도 주변국들과의 정상외교를 통해 대외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북한은 2012년 「2·29 합의」[30] 파기로 미국과의 공식적인 대화가 단절된 이후, 미국의 계속된 비핵화 요구에도 불구하고 핵능력 고도화에 집중하였다. 특히 2017년 8월 '괌 타격계획'을 공개하고 미 본토 전역에 도달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개발의 일환으로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급 탄도미사일을 11월에 발사하였다.

그러나 2018년 3월 '한반도 비핵화' 및 미국과의 대화 용의를 표명한 이후 4월 20일 '핵·ICBM 실험 모라토리움' 선언에 이어 5월 24일 외신기자단을 초청하여 풍계리

29) 북한은 「9·19 군사합의」 체결 이후 창린도 해안포 사격(2019.11.23.) 및 중부전선 우리측 GP에 대한 총격(2020.5.3.)으로 2차례 「9·19 군사합의」를 위반

30) 2012년 2월 29일 미국의 대북지원을 대가로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과 우라늄 농축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합의

핵실험장 폐기 행사를 진행하였다.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역사상 최초로 개최된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은 새로운 북미관계 구축과 한반도 비핵화, 미군 유해 송환 등에 합의하였으며, 7월 27일 1차로 미군 유해 55구를 송환하였다.

하지만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미 관계는 교착 상태에 접어들었다. 이후 북미는 6월 판문점에서 전격적으로 열린 남북미 정상회동에서 실무협상 재개에 합의하였으나, 10월 스웨덴 스톡홀롬에서 열린 실무협상은 큰 성과없이 종료 되었다.

2020년 초 발표한 당 중앙위원회 제7기 5차 전원회의 결과에서 북한은 미국의 적대시 정책이 철회되고 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축될 때까지 전략무기 개발을 계속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또한 싱가포르 정상회담 2주년을 맞아 '핵전쟁억제력'을 재차 강조하고, 미국의 상응하는 보상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협상을 재개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북미대화 교착국면은 장기화되고 있다.

한편, 북한은 2020년 10월 당 설립 75주년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공개하고 '전쟁억제력'을 공언하면서도 미국에 대한 언급 없이 '선제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향후 북미 대화의 여지를 시사하기도 하였다.

대일 관계는 2014년 5월 양국 간의 「스톡홀름 합의」[31]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관계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아베 총리는 2019년 북미 정상회담 이후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조건 없는 정상회담' 의지를 표명하였고, 9월에는 북일 우호 야마나시현 대표단이 북한을 방문하기도 하였다. 또한 스가 총리는 2020년 9월 취임 이후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조건 없이 만날 것임을 표명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북한이 일본의 과거사 청산 문제, 대북 압박정책 전환 등을 주장하면서, 북일 간 대화는 아직까지 본격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중 관계는 북한의 핵개발로 인해 부침이 반복되었다. 2013년 북한의 제3차 핵실험 이후 중국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동참하면서 북중 관계는 경색되었으나, 2018년부터 2019년까지 5차례 북중 정상회담을 통해 중국과의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회복하였다. 특히, 북미 대화 전후로 북중 정상회담을 실시하며 전략적 협력관계를 강화하였다. 2019년 6월에는 시진핑 주석이 취임 이후 최초로 평양을 방문하여, 양국 간 경제 및 인사 등 분야별 교류·협력 강화에 합의하였다. 한편,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1월 말 북중 국경을 봉쇄한 이후 정상적인 교역 및 인적교류가 제한되는 여건 속에서도 전통적 친선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다.

대러 관계는 2014년 북러 경제공동위원회 개최 이후 2015년 3월 북러 '친선의 해'

31) 2014년 5월 26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외무성 국장급 회담에서 일본이 대북제재 일부를 완화하는 대가로 북한이 일본인 납치 피해자를 포함한 재북 일본인을 재조사하기로 합의

를 선포하고 공동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기본적인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2019년 4월 2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처음으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하여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실시하였다. 11월에는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러시아를 방문하여 러시아 외무부 모르굴로프 차관과 제1차 북러 전략대화를 실시하였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인적교류가 제한되는 상황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러시아 전승 75주년을 맞아 푸틴 대통령에게 축전을 발송하며 북러간 우호관계 발전에 대한 의지를 표출하였다.

2. 북한의 군사전략 및 군사지휘구조

군사 전략 북한은 '주체사상'에 입각한 '국방에서의 자위'[32] 원칙에 따라 1962년 4대 군사노선을 채택하고, 군사력을 지속적으로 증강하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집권 이후 인민군대의 강군화를 위한 군건설의 전략적 노선으로 '정치사상 강군화, 도덕 강군화, 전법 강군화, 다병종 강군화의 4대 전략적 노선'을 새로이 제시하였다.

북한은 기습전, 배합전, 속전속결전을 중심으로 하는 군사전략을 유지한 가운데 다양한 전략·전술을 모색하며 선별적인 재래식 무기 성능 개량과 함께 핵·WMD[33], 미사일, 장사정포, 잠수함, 특수전 부대, 사이버 부대 등 비대칭 전력 증강에 집중하고 있다. 2019년 5월부터는 고체연료 기반의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연이어 시험 발사하고 있으며, 특히 6,800여 명의 사이버전 인력을 운영하여 최신 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을 지속하는 등 사이버전력 증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북한군은 유사시 비대칭 전력 위주로 기습공격을 시도하여 유리한 여건을 조성한 후 조기에 전쟁을 종결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9년 7월 신형 잠수함 건조 현장 방문시 '당의 군사전략적 기도'를 언급하고, 2020년 들어 2015년 제4차 포병대회시 제시한 '포병무력강화방침'을 재차 강조한 바 있다. 따라서 향후 북한은 대외 전략적 환경변화와 경제난 등 대내 여건을 고려하여 군사전략의 변화를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

군사지휘구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인민군 최고사령관,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을 겸직하면서 북한군을 실질적으로 지휘·통제하고 있다.

국무위원회는 북한의 최고 정책지도기관으로서 국방전력건설 사업을 비롯한 중요

32) 북한헌법 제60조에서 "국가는 군대와 인민을 정치사상적으로 무장시키는 기초위에서 전군 간부화, 전군 현대화, 전민 무장화, 전국 요새화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자위적 군사노선을 관철한다"라고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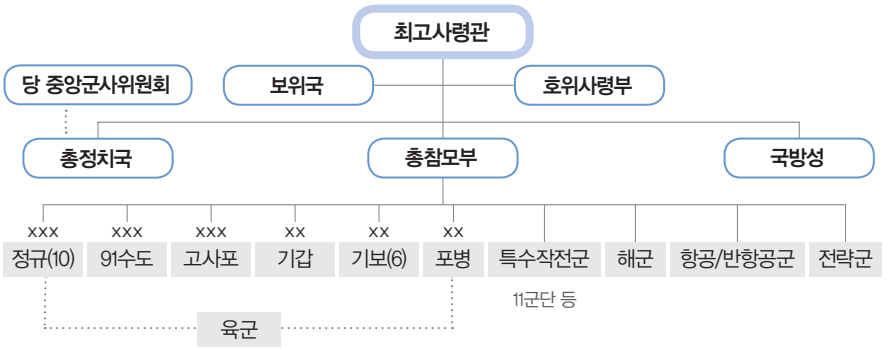
33) 대량살상무기(WMD : Weapons of Mass Destruction)

정책을 결정한다. 최고사령관 예하의 총정치국은 군내 당 조직과 정치사상 사업을 관장하고, 총참모부는 군사작전을 지휘하는 군령권을 행사하며, 육군·특수작전군·해군·항공 및 반항공군·전략군 등 5개 군종을 통합군제로 운용하고 있다.

국방성[34]은 대외적으로 군을 대표하면서 군사외교, 군수, 재정 등 군정권을 행사한다. 보위국은 군내의 모든 군사범죄 활동에 대한 수사, 예심, 처형 등을 담당하고, 호위사령부는 반체제 쿠데타 진압, 최고 지도자 및 가족들의 신변보호, 숙소경계와 관리 등의 경호를 담당하는 기구이다.

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조선 노동당 규약에 따라 당의 군사노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대책을 토의·결정하며 국방사업 전반을 당적으로 지도한다. 북한의 군사지휘기구도는 [도표1-2]와 같다.

[도표 1-2] 북한의 군사지휘기구도



* xxx : 군단 xx : 사단

3. 군사능력

육군 육군은 총참모부 예하에 10개의 정규 전·후방군단, 91수도방어군단, 고사포군단, 1개 기갑사단, 6개 기계화보병사단[35], 1개 포병사단 등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국방성 예하에는 도로건설군단, 총정치국 예하에는 공병군단 등 전문건설부대가 편성되어 있다.

북한은 육군 전력의 약 70%를 평양-원산선 이남 지역에 배치하여 언제든지 기습공격을 감행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 전방에 배치된 170㎜ 자주포와 240㎜ 방사포는 수도권 지역에 대한 기습적인 대량 집중 공격이 가능하고, 최근 사거리 연장 및 정밀유도가 가능한 300㎜ 방사포[36]와 대구경방사포를 개발하여 한반도 전역을 타격할

34) 인민무력성을 '국방성'으로 명칭 변경(2020년 10월)

35) 기계화 2개 군단을 사단으로 명칭 변경, 기존 4개 기계화보병사단 포함 총 6개의 기계화보병사단 편성

36) 2012년부터 수차례의 시험 발사를 실시 중이며, 2015년 10월 당 설립 70주년 열병식에서 실(實)장비를 최초 공개하고 2020년 10월 75주년 열병식에서는 개량형 장비를 공개

수 있는 방사포 위주로 화력을 보강하고 있다. 기갑 및 기계화부대는 6,900여 대의 전차와 장갑차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기동성과 생존성이 향상된 신형 전차와 다양한 대전차미사일, 기동포를 탑재한 장갑차를 개발하여 노후전력을 대체하고 있다. 북한 육군이 보유하고 있는 주요 장비와 당 설립 75주년 열병식간 식별된 육군 주요 신형 장비는 [도표 1-3]과 [도표 1-4]와 같다.

[도표 1-3] 북한 육군의 주요 장비



전차
4,300여 대



장갑차
2,600여 대



야포
8,800여 문



방사포
5,500여 문

[도표 1-4] 당 설립 75주년 열병식(2020. 10. 10.)간 식별된 육군 주요 신형 장비



전차



대전차미사일 탑재 장갑차



장갑차형 기동포



자주포

특수작전군

북한군은 특수전 부대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특수작전군'[37]을 별도의 군종으로 분류하였으며, 특수전 부대는 11군단[38]과 특수작전대대, 전방군단의 경보병 사·여단 및 저격여단, 해군과 항공 및 반항공군 소속 저격여단, 전방사단의 경보병연대 등 각 군 및 제대별로 다양하게 편성되어 있고, 병력은 20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수전 부대는 전시 땅굴을 이용하거나 잠수함, 공기부양정, AN-2기, 헬기 등 다양한 침투수단으로 전·후방지역에 침투하여 주요 부대·시설 타격, 요인 암살, 후방 교란 등 배합작전을 수행할 것으로 판단되며, 공중 및 해상·지상 침투훈련과 아군 전략시설 모형을 구축하여 타격훈련을 실시하고, 무장장비를 현대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전력을 보강하고 있다. 북한 특수작전군 활동은 [도표 1-5]와 같다.

37) 11군단, 해상·공중 저격여단, 특수작전대대 등을 특수작전군으로 분류, 별도 사령부 미편성 / 사령관 미식별

38) 전략적 특수전부대, 일명 폭풍군단

[도표 1-5] 북한 특수작전군 활동



특수작전군 기(旗)



열병식



도서 점령훈련



아군 전략시설 타격훈련

해군

해군은 해군사령부 예하 동·서해 2개 함대사령부, 13개 전대, 2개의 해상저격여단으로 편성되어 있다.

해군은 총 전력의 약 60%를 평양-원산선 이남에 전진 배치하여 언제든지 기습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소형 고속함정 위주로 편성되어 원해 작전 능력은 제한된다. 수상전력은 유도탄정, 어뢰정, 소형경비정 및 화력지원정 등 490여 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부분 소형 고속함정으로 지상작전과 연계하여 지상군 진출을 지원하고 연안 방어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최근에는 신형 중대형 함정을 건조 및 작전배치하고 있으며, 일부 함정에 함대함미사일[39]을 장착하여 원거리 공격능력도 향상시키고 있다. 수중전력은 로미오급 잠수함과 잠수정 등 70여 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상교통로 교란, 기뢰 부설, 수상함 공격, 특수전부대의 침투 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최근에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40] 탑재가 가능한 신형 잠수함을 추가 건조하는 등 전력을 지속 증강하고 있다.

상륙전력은 공기부양정, 고속상륙정 등 250여 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부분 소형함정으로 특수전 부대를 우리 후방지역에 침투시켜 주요 군사·전략시설을 타격하고 중요 상륙해안을 확보하는 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안방어전력은 동·서해 해안을 따라 다수의 해안포와 지대함미사일을 배치하여 해상에서 접근하는 함정을 공격하고 대상륙 방어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최근 지대함미사일[41]의 성능을 개량하고, 사거리를 연장하는 등 연안방어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북한 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주요 함정 및 지대함미사일은 [도표 1-6]과 같다.

39) 북한은 2015년 2월 6일 원산 근해에서 동 미사일 시험 발사를 공개하였으며, 사거리는 약 100km로 추정됨.

40) Submarine Launched Ballistic Missile

41) 정권 설립 70주년(2018. 9. 9.) 행사시 신형 지대함미사일을 공개하였고, 당 설립 75주년 행사시에는 발사관 4개 증가(4 → 8개), 발사차량(TEL)은 신형으로 교체한 개량된 지대함미사일을 공개하였으며, 사거리는 약 200km로 추정됨.

[도표 1-6] 북한 해군의 주요 함정 및 지대함미사일



전투함정
430여 척



지원함정
40여 척



잠수함정
70여 척



상륙함정
250여 척



지대함미사일

공군 공군은 항공 및 반항공군 사령부[42] 예하 5개 비행사단, 1개 전술수송여단, 2개 공군저격여단, 방공부대 등으로 편성되어 있다.

북한 공군은 북한 전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 전력을 배치하고 있으며, 총 1,580여 대의 공군기를 보유하고 있다.

전투임무기는 810여 대 중 약 40%를 평양-원산선 이남에 전진 배치하여 최소의 준비로 신속하게 공격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AN-2기와 헬기를 이용한 특수전 부대의 침투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노후 훈련기 도태, AN-2기와 경항공기의 추가 생산 및 배치, 다양한 정찰 및 공격용 무인기 개발 등 공군전력 효율화 및 현대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나, 신규 전투임무기 도입이 제한되어 신형 지대공미사일 개발 및 배치 조정 등을 통해 방공력을 보강하고 있다.

방공체계는 항공 및 반항공군 사령부를 중심으로 항공기, 지대공미사일, 고사포, 레이더 부대 등으로 통합 구축되어 있다. 전방지역과 동·서부 지역에 SA-2[43]와 SA-5[44]지대공 미사일이 배치되어 있으며 평양 지역에는 SA-2와 SA-3[45] 지대공 미사일과 고사포를 집중 배치하여 다중의 대공 방어망을 형성하고 있다. 또한, GPS 전파교란기를 포함한 다양한 전자교란 장비를 개발하여 대공방어에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상관제요격기지, 조기경보기지 등 다수의 레이더 방공부대는 북한 전역에 분산 배치되어 있어 한반도 전역을 탐지할 수 있으며 레이더 방공부대의 탐지 정확도를 높이고 작전 대응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자동화방공지휘통제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북한 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주요 항공기 및 지대공미사일은 [도표 1-7]과 같다.

[도표 1-7] 북한 공군의 주요 항공기 및 지대공미사일



전투임무기
810여 대



정찰기
30여 대



공중기동기(AN-2 포함)
350여 대



헬기(해군 포함)
290여 대



지대공미사일

전략군 북한은 별도의 군종사령부인 전략군 예하에 스커드, 노동, 무수단 등 13개 미사일여단을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전략군은 중국군의 로켓군, 러시아군의 전략미사일군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42) 기존 공군사령부를 항공 및 반항공군 사령부로 명칭 변경(2012년 5월)

43) 최대사거리 56km의 중·고고도 표적 요격용 유도탄 체계(SA-2 : Surface to Air-2)

44) SA-2 보완용으로 개발된 최대사거리 250km의 고고도 표적 요격용 유도탄 체계(SA-5 : Surface to Air-5)

45) 최대사거리 25km의 중거리, 저·중고도 표적 요격용 유도탄 체계(SA-3 : Surface to Air-3)

북한은 전략적 공격능력을 보강하기 위해 핵, 탄도미사일, 화생무기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1980년대 영변 핵시설의 5MWe 원자로를 가동한 후 현재까지 폐연료봉 재처리를 통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 50여 ㎏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통해 고농축 우라늄(HEU)도 상당량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2006년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 감행한 총 6차례의 핵실험을 고려 시 핵무기 소형화 능력도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평가된다.

1970년대부터 탄도미사일 개발에 착수하여 1980년대 중반 사거리 300㎞의 스커드-B와 500㎞의 스커드-C를 배치하였으며, 1990년대 후반에는 사거리 1,300㎞의 노동 미사일을 배치하였고, 그 후 스커드 미사일의 사거리를 연장시킨 스커드-ER을 배치하였다. 2007년에는 사거리 3,000㎞ 이상의 무수단 미사일을 배치하여 한반도를 포함한 주변국에 대한 직접적인 타격능력을 보유하게 되었다.

북한은 2012년 이후 작전 배치되었거나 개발 중인 미사일에 대한 시험 발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2017년에는 화성-12형을 북태평양 방향으로 발사하였고,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화성-14형과 15형을 시험 발사하였다. 그러나 탄두의 대기권 재진입기술 확보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실거리 사격은 실시하지 않아 이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2018년에는 미사일 시험 발사가 없었으나, 2019년 이후 작전 운용상 관리가 유리한 다종의 고체추진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3형을 시험 발사하였다.

2020년 10월 당 설립 75주년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북극성-4ㅅ'으로 표기된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총 9종의 탄도미사일을 공개하였고, 열병식간 식별된 주요 신형 미사일은 [도표 1-8]과 같다. 그리고 북한이 현재 개발 또는 보유하고 있는 탄도미사일의 종류와 사거리는 [도표 1-9] 및 [도표 1-10]과 같다.

[도표 1-8] 당 설립 75주년 열병식간 공개된 신형 ICBM과 SLB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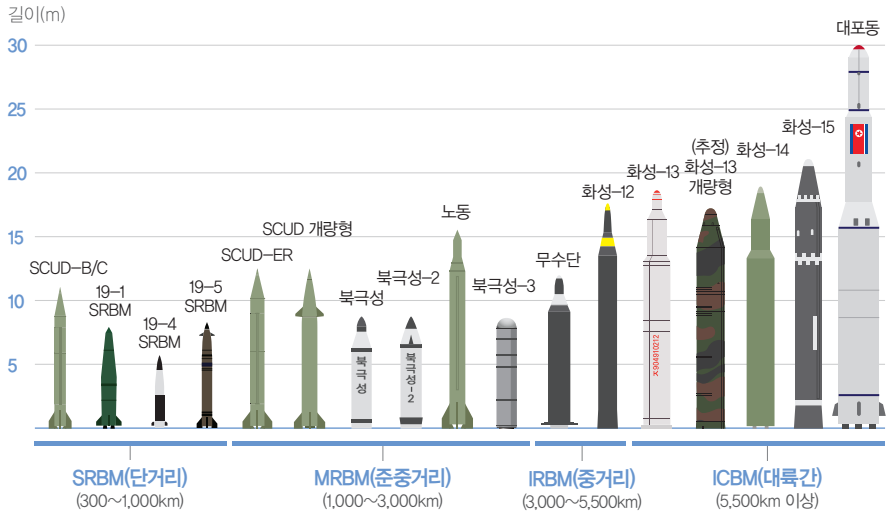


신형 ICB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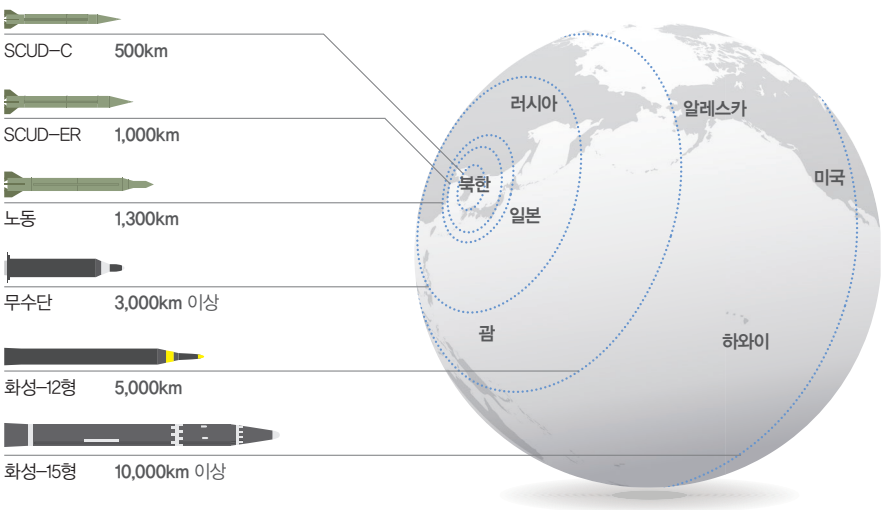


신형 SLBM

[도표 1-9] 북한이 개발 또는 보유 중인 탄도미사일 종류



[도표 1-10] 북한의 탄도미사일 사거리



북한은 1980년대부터 화학무기를 생산하기 시작하여 약 2,500~5,000톤의 화학무기를 저장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탄저균, 천연두, 페스트 등 다양한 종류의 생물무기를 자체적으로 배양하고 생산할 수 있는 능력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전쟁지속능력 북한의 예비전력은 전투동원 대상인 교도대, 직장 및 지역 단위의 노농적위군, 고급중학교 군사조직인 붉은청년근위대, 준군사부대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14세부터 60세까지 동원 대상이며, 전 인구의 약

30%에 달하는 762만여 명으로 추산되며, 유사시 정규전 부대의 전투력을 보강할 수 있는 교도대는 60만여 명으로 정규군에 준하는 훈련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북한 예비전력 현황은 [도표 1-11]과 같다.

[도표 1-11] 북한 예비전력 현황

구분	병력	비고
계	762만여 명	
교도대	60만여 명	동원예비군 성격(17~50세 남자, 17~30세 미혼여자)
노농적위군	570만여 명	지역예비군 성격(17~60세 남자, 17~30세 교도대 미편성 여자)
붉은청년근위대	100만여 명	고급중학교 군사조직(14~16세 남녀)
준군사부대	32만여 명	호위사령부, 사회안정성 등

북한은 전시에 약 1~3개월 정도 전쟁을 지속할 수 있는 전쟁물자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의 군수공장은 전시 단기간 내 전환 가능한 100여 개소 이상의 민수용 공장을 포함하여 약 300여 개소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며 유사시 신속하게 군수품 생산이 가능하도록 전시동원체계를 갖추고 있다. 주요 군수 생산 및 비축시설은 지하 요새화되어 전시 생존성이 보장된 가운데 전투임무기를 제외한 주요 무기 및 탄약을 자체 생산할 수 있는 능력 또한 갖추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장기화됨에 따라 에너지난과 원자재난이 심화되고 있어 지속적인 군수산업 육성 및 전쟁지속능력 유지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제 2 장

국가안보전략과 국방정책

제1절 국가안보전략
제2절 국방정책과 군사전략
제3절 국방개혁 2.0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 (2020년 12월)

제1절

국가안보전략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국가비전으로 설정하고, 안보 분야 국정목표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선정하였고 이를 위한 '국가안보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튼튼한 안보를 유지한 가운데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다.

1. 국가비전과 국가안보목표

문재인 정부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고 정의가 바로 선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국가비전으로 설정하고,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5대 국정목표로 선정하였다. 안보 분야 국정목표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선정하고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항구적 평화정착', '동북아 및 세계 평화·번영에 기여' 그리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안심사회 구현'을 국가안보목표로 설정하였다.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항구적 평화정착 국제사회 공조 하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남북 간 신뢰구축 및 군비통제의 포괄적인 추진으로 북한 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우리의 국방역량을 강화함으로써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뒷받침할 것이다.

동북아 및 세계 평화·번영에 기여 동북아와 세계의 평화·번영을 증진하는 환경 조성을 통해 국익을 도모하는 가운데 평화협력을 주도하는 국가로 발돋움하고자 한다. 우선 한미 공조를 토대로 역내 국가 간 협력을 통해 한반도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인도, 아세안, 유라시아 국가들과의 정치·경제적 협력 강화, 지역 협력의 제도화를 통해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 공동번영에 기여하고 기후변화, 국제 테러, 감염병, 난민 문제 등 국제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글로벌 안보 현안 해결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안심사회 구현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 개개인의 재산과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사이버 위협, 테러, 재난, 생활안전 등 다양한 위협과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할 것이다.

2. 국가안보전략 기조

정부는 안보 분야의 국정목표인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구현하기 위해 국방, 통일, 외교 분야에서 실행해야 할 추진 전략으로 '한반도 평화·번영의 주도적 추진', '책임국방으로 강한 안보 구현', '균형 있는 협력외교 추진', '국민의 안전확보 및 권익보호' 등을 선정하였다.

한반도 평화·번영의 주도적 추진 우리는 한반도 문제의 직접 당사자로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북핵 문제 해결이 진전되고 여건이 조성될 경우 '한반도 신경제구상'[1] 등의 본격적인 이행을 통해 평화와 번영의 선순환 구조를 창출할 것이다.

1) 「문재인의 한반도 정책」의 3대 목표 중 하나인 '한반도 신경제공동체 구현'의 핵심으로, 남북관계 상황변화 등 여건 조성 시 남북 경제협력을 활성화하여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여 남북 경제통일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임

나아가 남북대화 정례화, 다방면의 교류협력 확대, 남북합의 법제화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를 발전시킬 것이다.

책임국방으로 강한 안보 구현

'우리 국방은 우리 스스로 책임진다'는 책임국방을 구현하여 확고한 안보태세를 구축할 것이다. 전환기적 안보상황에 대비하여 확고한 국방태세를 유지하고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시작전통제권의 조기 전환을 통해 우리 군 주도의 새로운 연합방위체제를 구축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 미래지향적이고 강도 높은 「국방개혁 2.0」을 추진하여 국민들이 외부환경 변화에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우리의 국방역량을 강화하고 방위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것이다. 아울러 장병 인권 보장, 복무여건 개선 및 선진병영문화 정착을 통해 국민과 함께 하는 군대를 육성할 것이다.

균형있는 협력외교 추진

주변 4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아세안, 유럽, 중동, 아프리카 등으로 협력의 외연을 확장하는 균형 있는 협력외교를 추진할 것이다. 우선 한미동맹을 안보 및 경제협력, 인적교류와 글로벌 리더십을 포함하는 포괄적 관계로 심화·발전시키는 한편 주변국에 대한 협력외교를 강화함으로써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신북방정책, 신남방정책[2]을 추진하여 외교의 지평을 확장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기반을 확대할 것이다. 아울러 대규모 자연재난, 감염병, 마약, 난민 문제 등 초국가적 위협에 대해 국제사회와 공동대응하고, 공공외교, 국제경제, 기후변화, 개발협력 등의 분야에서도 우리의 국력에 상응하는 국제협력과 기여외교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국민의 안전확보 및 권익보호

대규모 재난과 사고에 대해 상시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통합적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할 것이다. 사이버위협, 테러 등 다양한 유형의 비군사적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재외국민을 보호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재외국민 보호 시스템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

2) 정부는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주변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를 추진 중임. 신남방정책은 아세안 10개국 및 인도를 정치, 경제, 문화, 인적교류 측면에서 주변국 수준으로 우호협력을 강화하는 외교정책이고, 신북방정책은 러시아, 중국, 몽골, 중앙아시아 국가 등 한반도 북방 유라시아 국가들과 교통·물류 및 에너지 인프라를 연계하여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공동번영을 추구하는 한편 한반도를 포함한 유라시아 대륙의 평화·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

제2절

국방정책과 군사전략

국방부는 국방비전인 '유능한 안보 튼튼한 국방'을 구현하기 위해 국방정책 6대 기조를 추진하고 있다. 군 본연의 임무인 군사대비태세를 튼튼히 하고, 장병들이 가고 싶고 국민들이 보내고 싶은 선진병영문화를 정착시켜 국민들이 신뢰하는 군을 육성할 것이다. 또한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체제를 토대로 국방역량을 강화하여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강한 힘으로 뒷받침할 것이다.

1. 국방목표

국방목표는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하고, 평화통일을 뒷받침하며, 지역의 안정과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것이다.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국가 보위

우리 군은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 남과 북은 군사적 대치와 화해·협력의 관계를 반복해 왔으나, 2018년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면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새로운 안보환경을 조성하였다.

특히, 2018년 9월에는 남북 군사당국이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체결하고 이행함으로써 실질적인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이다. 우리 군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고, 모든 상황에 철저히 대비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잠재적인 위협과 테러·사이버공격·대규모 재난 등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평화통일 뒷받침 평화는 우리의 생존 문제이자 최고의 국익이며, 평화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토대이다. 강한 안보 없이는 평화를 지킬 수도, 만들어 갈 수도 없다. 이를 위해 우리 주도의 국방역량을 구축하여 한반도의 평화를 힘으로 뒷받침할 것이다.

지역의 안정과 세계평화에 기여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주변국과 군사적 우호협력 관계를 증진시키고 국제 평화유지 활동 및 국방교류협력 등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동북아 지역의 안정은 물론 세계평화에 기여할 것이다.

2. 국방비전 및 국방정책 기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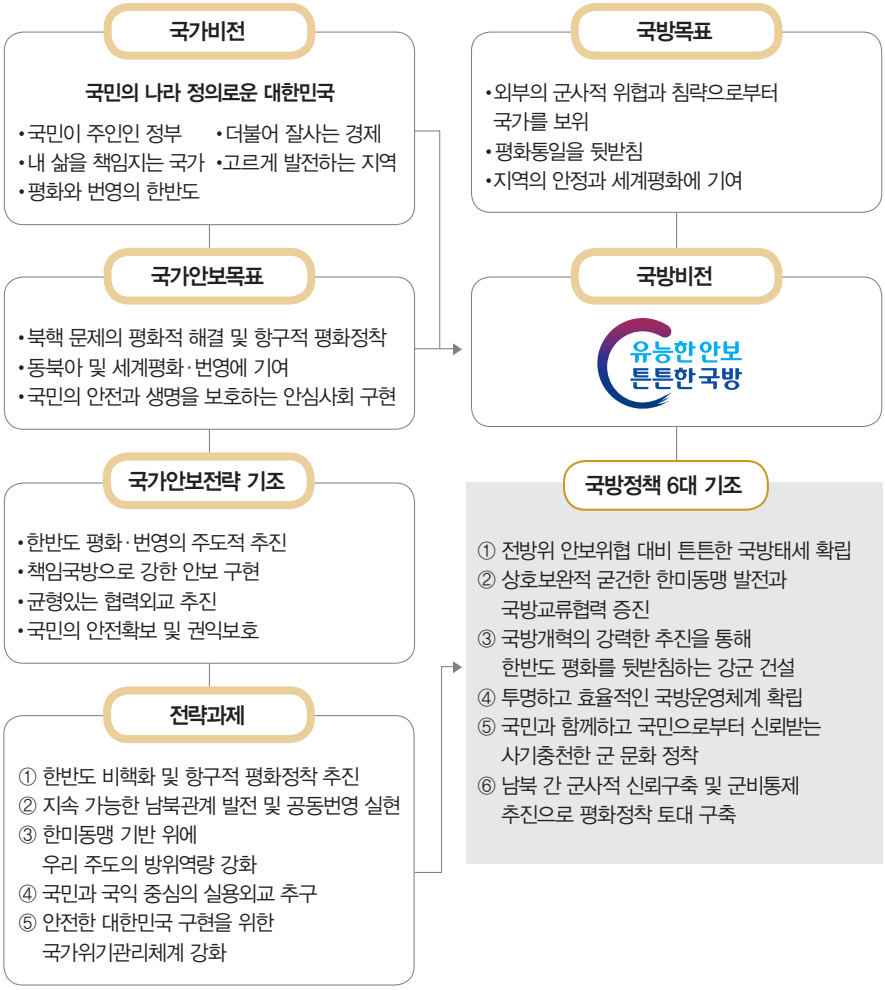
국방비전 우리 군은 '유능한 안보 튼튼한 국방'을 우리 군이 달성해야 할 국방비전으로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유능한 안보'는 우수한 첨단전력, 실전적인 교육훈련 및 강인한 정신력 등을 토대로 우리 주도의 전쟁 수행능력을 구비하여, '강한 힘'으로 대내외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영토와 주권을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다.

'튼튼한 국방'은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우리 주도의 강력한 국방력을 토대로 적의 도발을 억제하고 도발 시 적극 대응하여 싸우면 이기는 전방위 군사대비태세를 확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방정책 기조 국방비전을 구현하기 위한 일관된 정책방향으로 ①전방위 안보위협 대비 튼튼한 국방태세 확립, ②상호보완적 굳건한 한미동맹 발전과 국방교류협력 증진, ③국방개혁의 강력한 추진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뒷받침하는 강군 건설, ④투명하고 효율적인 국방운영체계 확립, ⑤국민과 함께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기충천한 군 문화 정착, ⑥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 및 군비통제 추진으로 평화정착 토대 구축을 6대 기조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국가안보전략과 국방정책은 [도표 2-1]과 같다.

[도표 2-1] 국가안보전략과 국방정책



전방위 안보위협 대비 튼튼한 국방태세 확립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북한은 물론 잠재적 위협으로부터의 도발을 억제하고, 도발 시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방위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동시에 사이버공격, 테러, 감염병, 각종 재난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민·관·군·경 통합방위태세 발전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할 것이다. 또한 전투임무 중심의 군대를 육성하기 위해 장병의 정신전력을 강화하고 상시 실전적 교육훈련이 가능한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교육훈련 환경을 조성할 것이다.

상호보완적 굳건한 한미동맹 발전과 국방교류협력 증진

한미는 굳건한 한미동맹의 기반 위에서 우리 군이 주도하는 연합방위체제를 구현하기 위해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또한 한미동맹을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발전시키고, 국방교류협력 강화 및 해외파병 성과의 확대·발전을 통해 우리에게 우호적인 전략환경을 조성할 것이다.

국방개혁의 강력한 추진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뒷받침하는 강군 건설

급변하는 안보환경과 전방위 안보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힘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국방개혁 2.0」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다. 이를 통해 전방위 안보위협에 유연하게 대응이 가능한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정예화된 강군을 건설함으로써 우리 스스로 국방을 책임지는 '책임국방'을 구현할 것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국방운영체계 확립

사회여건 변화와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국방운영체계 전반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해서 효율성, 개방성, 투명성을 강화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에 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정책 과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다. 또한 방위사업 비리 근절 대책을 수립하여 적극 시행하고, 국방운영의 효율화를 통한 국방비 절감 노력도 강력히 추진할 것이다.

국민과 함께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기충천한 군 문화 정착

장병이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장병의 인권을 보장하고 복무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사회 변화에 부합하는 선진병영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다. 또한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국가적 재난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적극적·선제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국민과 함께하고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 군대를 육성할 것이다.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 및 군비통제 추진으로 평화정착 토대 구축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남북 간 군사적 긴

장완화와 신뢰구축 조치를 추진할 것이다. 남북 간 교류협력사업의 진전과 연계하여 안정적인 군사적 보장조치를 추진하고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진전에 따라 실질적인 군비통제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3. 군사전략

군사전략은 국가안보전략과 국방정책을 군사적 차원에서 구현하기 위해 군사전략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군사력 운용개념과 군사력 건설방향을 구체화한 것이다.

목표 우리 군은 안보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고려하여 북한의 위협과 잠재적 위협 및 비군사적 위협에 동시에 대비해야 한다. 군사전략목표는 외부의 도발과 침략을 억제하고 억제 실패 시 '최단시간 내 최소피해'로 전쟁에서 조기에 승리를 달성하는 것이다.

개념 우리 군의 군사전략개념은 안보환경 변화와 전방위 안보위협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전방위 위협에 대해서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주도적인 억제·대응능력을 구비하는 것이다.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는 위협 감소를 통해 전쟁가능성을 감소시키고 장기적으로 평화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군비통제 전략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또한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강력한 억제력을 발휘하고, 유사시 전승을 달성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갖춘다. 이를 통해 북한의 도발과 침략을 억제하고,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며 도발 시에는 신속한 대응과 위기완화 조치를 병행하여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 억제 실패 시에는 '최단시간 내 최소피해'로 전쟁을 조기에 종결한다.

평시 주변국과는 긴밀한 협력을 통해 유리한 전략적 환경을 조성하고 억제능력을 강화함으로써 분쟁을 예방한다. 사이버위협에 대해서는 포괄적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비군사적 위협에 대해서는 국내외 국민보호를 위한 군사적 대비와 유관기관과의 정보공유 및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위협을 예방하고 사태 발생 시에는 신속한 대응으로 조기에 안정을 회복한다.

군사력 건설방향

우리 군의 군사력 건설 목표는 북한 및 잠재적 위협을 포함한 전방위 안보위협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군사력을 건설하는 것이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군구조(지휘구조, 부대구조, 병력구조, 전력구조) 개편을 통해 우리 주도의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구비한다. 사이버·우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작전수행체계를 구축하고, 테러, 국제범죄, 재난 등 비군사적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군사적 지원체계를 보강한다.

제3절

국방개혁 2.0

국방부는 평화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힘으로 뒷받침하는 '강한 군대' 조기 구현을 목표로 실행력을 강화한 「국방개혁 2.0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목표 달성을 위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1. 목표와 기조

국방부는 평화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힘으로 뒷받침하는 '강한 군대' 조기 구현을 개혁의 목표로 선정하였다. '강한 군대'란 전방위 안보위협에 주도적 대응이 가능한 군,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정예화된 군, 선진화된 국가위상에 걸맞게 운용되는 군을 의미한다.

이를 위한 「국방개혁 2.0」의 추진기조는 첫째, 주도적 방위역량 확충을 위한 체질과 기반을 강화하고 둘째, 자원제약 극복과 미래 전장환경 적응을 위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과학기술을 적극 활용하며 셋째, 국가 및 사회 요구에 부합하는 국방개혁 추진으로 범국민적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다.

이러한 「국방개혁 2.0」의 목표와 기조는 2006년 제정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지난 역대 정부에서 추진해 온 국방개혁과 지향점을 같이 하고 있다. 그러나 세부사항에 있어서는 다양한 안보여건의 변화 등으로 조정과 지연이 반복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최근 북한 위협은 물론 동북아 안보정세의 불안정성 심화와 재난, 테러, 사이버 등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의 증대 등 전방위 안보위협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더해, 인구절벽 현상에 의한 병역자원의 부족과 인권 및 복지에 대한 국민적 요구 등 국방정책 수행 여건의 급격한 악화로 더 이상 국방개혁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국방개혁 2.0」은 정부 임기 내 실질적인 개혁의 완료를 목표로 소요예산의 확보와 법령 제·개정 추진 등 실행력을 대폭 강화하였다.

2. 국방개혁 2.0 추진 과제

「국방개혁 2.0」은 군구조, 국방운영, 병영문화, 방위사업 등 4대 분야 43개 과제에 더해 4차 산업혁명 첨단 과학기술을 국방 전 분야에 적용한 스마트 국방혁신 분야 과제를 추가하였다.

군구조 개혁은 전방위 안보위협에 주도적·탄력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군사력 구조로 정예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상비병력은 2017년 61.8만 명에서 2022년까지 50만 명 수준으로 감축하고, 이와 연계하여 육군사단을 39개에서 33개로 감축하는 등 부대개편을 추진할 것이다. 비록 병력과 부대는 감축되지만, 전투부대 간부 보강 및 비전투 분야 민간인력 확대 등 전투 중심의 국방인력 구조 개편과 첨단 무기체계 전력화 등을 통해 실질적인 전투역량은 강화될 것이다.

국방운영 개혁은 고효율·신뢰성·개방성 제고로 선진화된 국방운영체제를 구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장군정원 조정, 병 복무기간 단축, 여군 비중 확대, 문민통제 등을 확립하고 국민참여와 소통을 제고해 나갈 것이다.

병영문화 개혁은 국민 눈높이에 걸맞은 인권·복지로 사기와 복무의욕이 충만한 병영문화를 정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군 사법제도 개혁, 영창제도 폐지 등을 통해 장병 인권보호를 강화하고, 장병 복지여건도 개선해 나갈 것이다.

방위사업 개혁은 효율성·투명성·전문성 측면에서 국제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방획득 교육·인사제도 개선, 창의·도전적 연구개발, 국방 R&D 수행기관 역할 재정립, 고강도 비리 예방대책 등을 추진할 것이다.

스마트 국방혁신은 4차 산업혁명 첨단기술 기반의 국방혁신을 통해 스마트 강군을 육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합성전장훈련체계(LVC) 기반의 실전형 워리어 육성과 국방자원 수명주기(Life-Cycle) 관리를 통한 효율적인 국방운영을 실현하고, 초연결·초지능·초융합의 국방인프라 조성으로 기술·기반을 혁신하며, 무기체계 지능화·고도화로 미래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전력체계를 혁신해 나갈 것이다.

3. 추진성과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을 추진하면서, 4차 산업혁명의 첨단과학기술을 국방 전 분야에 반영하는 노력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 「국방개혁 2.0」 개혁과제를 추진한 결과, 현재까지 계획 이행도는 최종 목표 대비 정상추진으로 평가되어 국방의 체질 개선

과 강한 군대 조기 구현에 한층 다가서고 있다.

군구조 분야는 합동참모본부 조직개편 등 미래 지휘구조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육군은 1·3야전군사령부를 통합한 지상작전사령부를 2019년에 창설하였고, 4개 사단 해체와 연계하여 육·해·공군 전체 상비병력을 2020년에 55.5만 명으로 감축하였다. 해군은 특수전전단을 개편하였고 해병대는 항공대대를 창설하였다. 공군은 정찰비행단 및 우주작전대 창설 등 부대를 개편하였다. 병력감축과 연계하여 간부 비율은 2017년 31.6%에서 2020년 35.9%로 4.3%p 확대하고, 민간인력을 증대하는 등 국방인력구조도 개편하고 있다. 또한,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다련장, 정찰용 무인항공기, 잠수함(KSS-Ⅲ), F-35A 등 첨단 무기체계를 전력화하여 전투력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그리고, 「국방개혁 2.0」 이후 예상되는 위협, 동맹, 자원, 기술 등의 변화를 고려하여 미래 안보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장기 군구조 발전방안도 적극 구상해 나가고 있다.

국방운영 분야는 국방부 국·과장급 직위 문민화 확대, 병 복무기간 64일 단축(육군기준), 장군정원 46명 감축, 여군 비중을 7.4%로 확대 및 근무여건 개선, 빅데이터·사물인터넷 등 첨단 ICT 기반의 군사력 운용능력 발전과 가상현실(VR) 기반의 영상모의 사격장비를 도입한 예비군 과학화훈련장 설치, 스마트 예비군훈련관리체계 적용 등의 과학화 훈련체계를 확대하였다. 또한, 투명성·청렴성 제고를 통한 개방형 국방운영과 해·강안 철책철거(34.7㎞), 민통선 등 군사시설 보호구역 완화·해제(428.8㎢, 여의도 면적의 147배) 등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주민 친화적 군사시설로 체질을 개선하였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하여 초국가적·비군사적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테러 및 재난대비 전문역량 강화' 과제를 포괄적인 '비전통 위협 국방 대응체제 발전'으로 확대하여 법률 및 체계 발전, 구조 및 편성 발전, 지원역량 강화 등 군의 대응 능력을 적극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다.

병영문화 분야는 2019년 12월에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를 위해 「병역법」 등을 제·개정하였고, 2020년 8월에 병 영창제도를 대체하여 인권친화적 군기교육으로 개선 시행하는 등 장병 인권을 보장하였으며,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여 군 의문사 진상규명을 지원하였다. 또한, 병 봉급 인상(2020년 병장기준 54만 900원), 평일 일과 후 외출제도 활성화 및 휴대전화 사용 전면시행, 자기개발 지원금(2020년 1인당 10만 원) 및 대학 원격강좌 수강료지원 50% 확대 등 병 복무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다. 간부 자가보유율 제고를 위한 주거지원제도 개선 및 제대군인 취업지원을 강화하였고, 장병 군병원 이용 편의성 향상 및 민간병원 이용절차 간소화 등으로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

다. 이와 더불어 심판관 지정 및 관할관 감경 엄격 적용, 군검사 의견제시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군사법원 국방부 통합 설치 및 각 군 검찰단 창설 등 군 사법제도 개혁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

방위사업은 효율적인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방위사업협의회를 신설하여 운용하고 있고, 4차 산업혁명 기술 등 첨단기술의 신속한 국방적용을 위해 신속시범획득제도를 신설하였다. 민간 R&D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업체주관 연구개발 및 핵심기술·부품국산화사업 확대, 방산혁신클러스터 시범운용, 방산 일자리 창출 지원 등을 통해 정부지원을 대폭 확대해 나가고 있다. 방위사업의 효율성 제고와 더불어 투명성 강화를 위해 방산비리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방위사업청 공무원행동강령 개정 등 자정시스템을 강화하고 퇴직 공직자 재취업을 규제하는 등 실효적 대책을 시행하였다. 또한, 방산수출 증진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노력을 집중하여 국가이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방위산업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국방부는 4차 산업혁명 스마트 국방혁신을 통한 국방개혁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포괄적·구체적 국방혁신 추진을 위해 2019년 1월 '4차 산업혁명 스마트 국방혁신 추진단'을 출범시켜 운영하고 있다. 추진단은 국방운영, 기술·기반, 전력체계의 3대 혁신 분야를 대상으로 9개 대과제 71개 사업을 선정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체계적 사업관리를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또한 2019년 7월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국방부의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과제를 추진하는 등 정부 차원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유해발굴용 지하투과 및 자율이동체 개발, 지능형 스마트 부대 구축, 군 의료정보 빅데이터 정보체계 등 다양한 과제 추진을 통해 민간의 우수한 기술 역량을 활용하고 군이 민간에 테스트베드(Test Bed)를 제공하고 민간기술을 검증함으로써 국가-국방R&D 역량을 강화하여 민군 상생에 기여하고 있다. 국방부는 4차 산업혁명 기술 발전에 발맞춰 지속적으로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한편 민·관·군 협력을 통해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여 '디지털 강군, 스마트 국방'을 구현해 나갈 것이다.

「국방개혁 2.0」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적정수준의 국방재원을 확보하였다. 2020년 국방예산은 본예산 기준으로 2019년 대비 7.4%가 증가된 약 50조 원 이상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2021~2025 국방중기계획 상 총 재원규모는 약 300.7조 원으로 계획하였다.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군구조 개편 등 「국방개혁 2.0」 과제 추진을 위한 방위력개선비는 2020년도 예산으로 2019년 대비 8.5% 증가한 약 16조 7,000억 원을 확보하였고, 지속적인 예산확보를 통해

핵·WMD 대응전력,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 대비 필수 전력을 확충해 나갈 것이다. 또한 전력운영비는 2020년도 예산으로 2019년 대비 6.9% 증가한 33조 4,000억 원을 확보하여 국방인력 재설계를 위한 민간인력 증원 등 국방운영·병영문화 개혁을 위해 사용하였다. 또한 「국방개혁 2.0」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등 56개 법령에서 70건의 제·개정 소요를 식별하여 그 중 「병역법」 등 32개 법령과 관련하여 37건의 제·개정을 완료하였다. 특히, 2019년도에는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 및 '군기교육제도 도입'과 관련한 법률안이 통과되어 국방개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였다.



제 3 장

전방위 안보위협 대비 튼튼한 국방태세 확립을 통한 평화수호

제1절 튼튼한 군사대비태세 확립
제2절 핵·대량살상무기 위협 대응역량 강화
제3절 초국가적·비군사적 안보위협 대응체계 구축
제4절 민·관·군·경 통합방위태세 확립
제5절 전투임무 위주의 교육훈련 및 장병 정신전력 강화



각 군 대비태세

제1절

튼튼한 군사대비태세 확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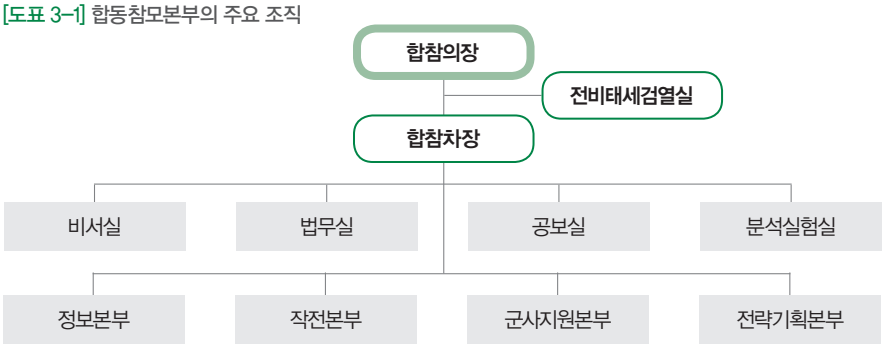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국지도발 및 전면전 도발에 대응할 수 있는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위기관리를 위해 감시 및 조기 경보태세를 확립, 위기관리체계를 발전시키고 지·해·공역에서의 침투·도발과 테러, 사이버공격 등의 도발에 대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북한의 전면전 도발에 대비하여 전시 작전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고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고 있으며, 전쟁지속능력을 확충하기 위해 필요한 전력과 장비·물자를 획득·유지하고 있다.

1. 군사조직 및 보유전력

합동참모본부 조직

합참은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육·해·공군의 작전부대를 작전지휘 및 감독하고, 합동부대를 지휘 및 감독하여 합동작전과 연합작전을 수행한다. 또한 민·관·군·경 통합방위작전과 계엄업무 등을 수행한다. 합참은 비상설기구로 국방부 내에 설치·운영되어 오다가[1] 1963년 '합동참모본부'로 창설되었으며, 현재는 1차장 5실 4본부로 운영되고 있다. 합참 조직은 [도표 3-1]과 같다.

[도표 3-1] 합동참모본부의 주요 조직



합참은 육·해·공군과의 긴밀한 상호지원과 통합으로 합동성을 강화하고 본연의 임무·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업무수행체계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하여 미래합동작전수행에 최적화된 조직의 편성과 기능, 군사능력을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우리 군 주도의 전쟁수행능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대한민국 국군 홍보영상

1) 1948년 연합참모회의, 1954년 합동참모회의, 1961년 연합참모국

육군

육군은 육군본부와 2개의 작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수전사령부, 항공작전사령부, 미사일사령부, 동원전력사령부, 기타 지원부대로 편성되어 있다. 주요 조직과 보유 전력은 [도표 3-2]와 같다.

[도표 3-2] 육군 주요 조직과 보유 전력



* 전차, 장갑차, 야포/다련장은 해병대 전력 포함
* 지상작전사령부 2019년 1월 1일부 창설

지상작전사령부는 작전지역 내에서 모든 작전요소를 통합하여 다양한 지상작전을 수행하고, 제2작전사령부는 민·관·군 통합작전으로 합동후방지역의 안정과 전쟁지속능력을 유지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수도방위사령부는 수도 서울의 기능 유지를 위해 중요시설과 도시기반시설을 방호한다. 특수전사령부는 전시 특수작전과 평시 평화지원작전 임무를 수행하고, 항공작전사령부는 항공작전을 수행한다. 동원전력사령부는 동원사단, 동원지원단 등의 평시 전투준비태세를 완비하여 전시 상비병력 수준의 전투력 발휘가 가능한 동원사단 및 보충대대를 군단에 제공한다. 그 외 사령부는 인사 및 군수지원, 교육훈련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육군은 현존전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미래합동작전개념 구현을 위해 신속결정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부대를 개편하며, 정찰·공격·전자전 드론을 활용하는 드론봇 전투체계[2] 등 감시·정찰능력과 K2전차, 한국형 기동헬기, 다련장 로켓[3] 등의 기동 및 타격 능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고 있다.

육군 홍보영상

해군 홍보영상

해병대 홍보영상

해군

해군은 해군본부와 해군작전사령부, 해병대사령부, 서북도서방위사령부, 기타 지원부대로 편성되어 있다. 주요 조직과 보유 전력은 [도표 3-3]과 같다.

2) 드론과 로봇의 합성어로 유인 전투체계의 능력을 보완·대처하기 위한 유·무인 전투체계

3) 다수의 로켓탄을 상자형 또는 원통형으로 배열한 발사시스템으로 다량의 화력을 동시에 집중시키는 무기

[도표 3-3] 해군 주요 조직과 보유 전력



* 병력은 해병대 2만 9천여 명 포함

해군작전사령부는 전반적인 해군작전을 지휘하고 대함작전[4], 대잠작전[5], 기뢰작전[6], 상륙작전 등을 수행한다. 함대사령부는 구축함, 호위함, 초계함, 고속정 등의 전투함을 운용하여 책임 해역의 방어임무를 수행하며, 잠수함사령부는 잠수함 작전을 수행한다. 해병대사령부는 상륙작전과 책임지역 및 전략도서 방어작전을 수행하며 신속기동부대를 운용한다. 서북도서방위사령부는 서북도서에 대한 경계와 방어임무를 수행하며 그 외 사령부는 군수지원, 교육훈련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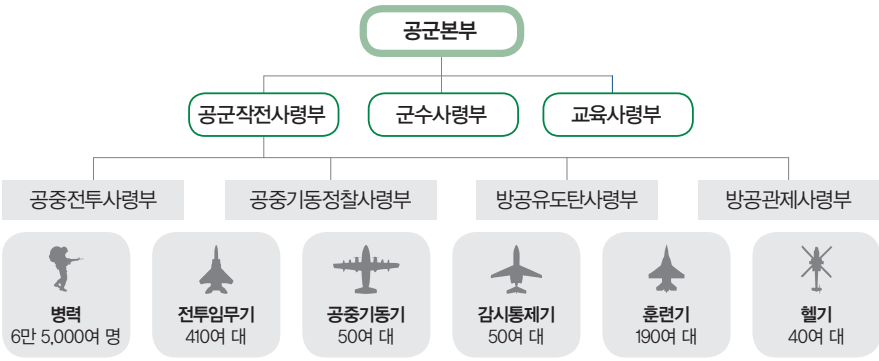
해군은 수중·수상·공중에서 각종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차기잠수함, 이지스급 구축함, 차기구축함, 차기호위함, 차기고속정, 해상초계기, 해상작전헬기를 확보하여 입체 전력을 통합 운용하며, 해병대는 입체고속상륙작전, 전략도서 방위 등 다양한 임무수행이 가능한 전력구조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공군 홍보영상

공군

공군은 공군본부와 공군작전사령부, 기타 작전 및 지원부대로 편성되어 있다. 주요 조직과 보유 전력은 [도표 3-4]와 같다.

[도표 3-4] 공군 주요 조직과 보유 전력



4) 수상전투함, 잠수함, 항공기를 이용하여 해양 통제권을 확보·유지하거나 적의 수상세력을 파괴 또는 무력화시키는 작전

5) 적 잠수함을 파괴 또는 무력화시켜 자유로운 해양 사용을 보장하는 작전

6) 기뢰를 사용하여 적 해군 세력을 차단 또는 무력화하거나 적의 기뢰 사용을 거부하는 작전

공군작전사령부는 전반적인 항공작전을 지휘하고, 제공작전[7], 항공차단작전[8], 근접항공지원 작전[9]을 비롯하여 핵·미사일·장사정포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작전을 수행한다. 공중전투사령부는 공군작전사령부의 통제에 따라 부여된 전투임무를 수행하고, 전투임무기의 전투력 발휘를 보장한다. 공중기동정찰사령부는 공중기동 및 공중급유, 감시정찰, 조기경보 및 항공통제, 특수임무 및 탐색구조임무를 수행하고, 공중기동전력의 전투력 발휘를 보장한다. 방공유도탄사령부는 탄도탄 및 항공기 등 다양한 공중위협에 대한 방어 임무를 수행하고, 방공관제사령부는 한반도 전구 내 항공통제, 공중감시, 항공기 식별, 항공작전 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공군은 F-35A 등의 최신예 전투기를 지속 확보하여 월등한 공중우세를 달성하고, 중·고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를 도입하여 공중감시정찰 능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주한미군과 증원전력

주한미군사령부는 미8군사령부, 주한미해군사령부, 주한미해병대사령부, 주한미특수전사령부, 주한미공군사령부로 편성되어 있다. 주한미군사령관은 유엔군사령관과 한미연합군사령관을 겸임하고 있다. 주요 조직과 보유전력은 [도표 3-5]와 같다.

[도표 3-5] 주한미군 주요 조직과 보유 전력



유사시 대한민국의 방위를 지원하기 위해 투입되는 미 증원전력은 육·해·공군 및 해병대를 포함하여 병력 69만여 명, 함정 160여 척, 항공기 2,000여 대의 규모이다. 미 증원전력은 위기상황 전개에 따라 「한미 상호방위조약」 제2조에 의거하여 '신속억제방안(FDO)'[10]과 '시차별부대전개제원(TPFDD)'[11]으로 구분되어 증원된다. 한반도에 위기가 고조되면 전쟁을 억제하고 위기를 완화하기 위한 신속억제방안이 시

7) 공중우세를 확보하기 위해 적의 항공 우주력과 방공체계를 파괴하거나 무력화하는 작전 (CA : Counter Air)

8) 적의 군사력이 사용되기 이전에 차단·교란·지연·파괴하여 적 전력의 증원·재보급·기동성을 제한하는 작전 (AI : Air Interdiction)

9) 아군과 근접하여 대치하고 있는 적의 군사력을 공격함으로써 아군의 공격, 반격 또는 방어작전을 지원하는 작전 (CAS : Close Air Support)

10) 연합사의 위기조치 절차 중에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 신속히 조치해야 하는 정치·경제·외교·군사적 행동방안 (FDO : Flexible Deterrence Option)

11) 한미 연합작전계획 시행을 위한 증원부대의 부대전개목록과 제원 (TPFDD : Time Phased Forces Deployment Data)

행되어 지정된 전력이 투입되며, 전쟁이 발발하면 한미 연합작전계획의 시행을 보장하도록 시차별부대전개제원에 따라 계획된 전투부대와 지원부대가 증원된다.

우리 군은 한반도 방어를 위해 한미 간 전체적인 전투력이 약화되는 일이 없도록 미 증원전력 전개계획 발전을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다.

2. 국지도발 대비태세 유지

감시 및 조기 경보태세 확립 우리 군은 긴밀한 한미 연합 정보감시태세를 바탕으로 대북 감시 및 조기경보 태세와 북한의 도발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한미 연합정보자산 외에도 대내외 유관기관으로부터 수집된 첩보를 종합하고, 분석하여 작전에 활용함으로써 군사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또한 우리 해·공역 내 주변국 군사활동에 대비하여 감시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중·고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 다목적 실용위성, 군 정찰위성 등의 전력증강을 통해 독자적인 감시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다.

위기관리체계 발전 북한의 다양한 도발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리 군 주도의 위기관리체계와 한미동맹의 공동위기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있다. 「국가안보전략지침」, 「국방기본정책서」, 「국방개혁 2.0 기본계획」을 기초로 2020년 3월 「국방위기관리훈령」을 개정하였고, 안보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을 발전시켰다. 뿐만 아니라 유관부처 고위급 정책결정자들이 참가하는 국가안보전략게임[12]에서 구체화된 범정부 차원의 대응방안을 강구하는 등 상시 위기관리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우리 군은 연합위기관리 연습을 강화하고 한미 공동위기관리체계를 보완하는 등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할 수 있도록 위기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지·해·공역 침투·도발 대비태세 확립 북한은 「남북기본합의서(1991)」 및 「불가침부속합의서(1992)」를 통해 북방한계선(NLL) 관련 사항에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합의의 실효성을 무력화하는 도발을 지·해·공역에서 감행했으며, 특히 서해 북방수역과 서북 5개 도서 지역에 대

12) 안보분야 전문가들이 토의를 통해 주요 안보 상황에 대해 정치·군사·사회·경제 등 제반요소를 고려하여 문제점을 식별하고, 정책대안을 도출해 내는 연습의 한 형태

한 고강도 도발을 지속적으로 시도했었다. 서북 5개 도서와 북방한계선(NLL)은 우리 군이 지금까지 굳건하게 지켜온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으로, 앞으로도 북방한계선 준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고 북방한계선에 대한 그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

2016년에 구축 완료된 GOP 과학화 경계시스템으로 경계태세에 많은 발전이 있었으며, 운영 중 파악된 미비점에 대해서는 향후 지속적인 성능개량 등을 실시하여 침투·도발 대비태세를 진화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또한, 우리 군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도발 시 강력하고 단호하게 응징할 수 있도록 긴밀한 한미 공조 하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확립할 것이다. 이와 병행하여 「9·19 군사합의」 이행을 통해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다.

서북도서와 마라도, 울릉도, 독도 등을 포함하는 동·서·남해의 전 영토·영해·영공을 확고히 수호하기 위해 한반도 전역에 대한 감시 및 즉각 대응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강력한 수호 의지와 대비태세를 확립하고 있다.

앞으로도 변화하는 작전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접적 지·해·공역에서의 감시·결심·타격체계를 최적화하고, 핵심전력을 지속 보강할 것이다.

기타 도발 대비태세 유지

우리 군은 수도권과 후방지역의 국가중요시설 및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테러, 사이버공격 등에 대비하기 위해 민·관·군·경 통합방위태세를 발전시키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 중심의 통합방위작전 수행태세 완비를 위해 민·관·군·경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도발 유형별 작전계획과 대응 매뉴얼을 발전시키고 주기적인 연습 및 훈련을 통해 통합방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다양한 테러 위협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군 대테러특공대 및 유형별 대테러 작전부대를 추가 지정하고, 민·관·군·경 통합방위체계에 의한 대테러 작전수행 및 지원태세를 보완하는 등 철저한 테러대비태세를 확립하고 있다.

또한, 북한의 위성항법장치(GPS)[13] 전파교란에 대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상호협업체계를 갖추고 위성항법장치 전파혼선 위기대응 매뉴얼을 개정하는 등 민·관·군·경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사이버공격에 대비·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지속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영토, 독도

13) Global Positioning System

[도표 3-6] 국군이 수호해야 할 우리의 영역



* 출처 : 국토지리정보원

3. 전면전 대비태세 확립

전시 작전수행능력 향상 북한은 재래식 전력을 질적으로 향상시키고 있으며, 주요 전력 대부분을 전방 지역인 평양–원산선 이남에 배치하여 유사시 최소한의 재배치로 기습 공격과 속전속결이 가능한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 군은 북한의 전면전 도발 위협에 대비하여 한미 공동의 작전계획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연례적인 한미 연합 전구급 지휘소연습(CPX)[14]을 통해 이를 검증·보완하고 있다.

특히,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하여 한미 연합연습 시 연합검증평가[15]를 병행함으로써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고 우리 군의 작전수행 및 연합연습 주도능력을 향상시켜 전면전 대비태세를 확립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을지연습'을 우리 군 단독연습인 '태극연습'과 통합하여 '을지태극연습'[16]으로 조정·시행하였다.

연합야외기동훈련(FTX)[17]은 '연중 균형되게 연합준비태세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한다'는 원칙 하에 한미 연합군의 발전된 무기체계와 작전운용체계를 최대한 활용하고, 다양한 추가 훈련방법을 적용함으로써 연합작전수행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우리 군은 '최단시간 내 최소피해'로 전승을 달성하기 위한 전면전 대비 작전수행 개념을 발전시키고 있으며, 한미 연합연습·훈련 등으로 변함없는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유지하고 유사시 연합·합동전력을 운용함으로써 지상·해상·공중·우주·사이버 공간 등 전 영역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통해 조기에 전쟁을 종결시킬 것이다.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북한의 전면전 도발에 단호히 대응할 수 있는 연합방위체제를 유지 및 발전시키고 있다. 또한 강력한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한 협의하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미 양국 군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에도 보다 굳건한 연합방위체제가 유지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와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향후에도 다양한 국방협의체를 운영하여 동맹 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다.

14) 각급 제대의 지휘관과 참모조직의 임무 수행연습으로 다양한 상황에서 통신을 유지하면서 지휘소 이동·운용, 지휘·참모활동 절차 연습, 작전계획과 작전예규의 적용 등을 숙달 (CPX : Command Post Exercise)

15) 한국군이 주도하는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임무수행능력을 검증 및 평가하기 위해 시행

16) 대형복합재난에 대한 위기대응훈련과 국가총력전 차원의 전시대비연습을 통해 포괄안보 개념의 국가 비상대비 역량과 군사대비태세를 제고하는 연습

17) Field Training Exercise

전쟁지속능력 확충

우리 군은 전쟁지속능력 확충을 위해 전시 소요와 현재의 능력을 바탕으로 전쟁 수행에 필요한 전력과 장비·물자를 획득 및 유지하고 있으며, 조달·정비지원·물류체계를 혁신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먼저 전·평시 장비가동률 보장을 위해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팩토리, 원격정비지원체계 등으로 핵심정비능력을 향상시키고 정비환경을 개선하고 있다. 아울러 민·군 협력 기반 정비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군 내 정비능력을 초과하는 군수지원 문제를 해결하고, 성과기반군수지원(PBL)[18]에 따라 군수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하여 독자적인 탄약지원능력을 구축하기 위해 작전에 필요한 긴요 탄약을 확보하고 저장관리, 성능유지 및 폭발물처리지원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향후에도 우리 군은 민·관·군과 국내외의 가용자원을 통합·활용함은 물론, 국제 군수협력을 확대함으로써 전쟁지속능력을 더욱 확충해 나갈 것이다.

18) Performance Based Logistics

제2절

핵·대량살상무기 위협 대응역량 강화

우리 군은 그동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해 한미 연합 및 우리 군의 독자적인 능력과 태세를 강화해 왔다. 앞으로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정착이 완료될 때까지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과 대비태세를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다. 특히, 우리 군의 독자적인 억제·대응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전력의 조기 구축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1. 전방위 핵·미사일 위협 대비 억제·대응능력 발전

맞춤형 억제전략 발전 및 미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한미는 그동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미 공동의 '맞춤형 억제전략'[19]을 토대로 연합 억제·대응능력을 향상해 왔다.

'맞춤형 억제전략'은 북한 지도부의 특성과 핵·미사일 위협 등을 고려하여 한반도 상황에 최적화된 한미 공동의 억제·대응전략으로서 미국이 제공하는 일반적인 확장억제[20] 개념보다 한 단계 발전된 억제·대응전략이다. '맞춤형 억제전략'에는 북한이 핵 사용을 위협하는 단계부터 직접 사용하는 단계까지 모든 위기상황별로 이행 가능한 군사·비군사적 대응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맞춤형 억제전략'은 한미 양국이 보유하고 있는 억제 방법과 수단을 최대한 활용하여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대응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한미는 '맞춤형 억제전략'을 발전시키고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의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한미억제전략위원회(DSC)[21], 한미 외교·국방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22] 등 다양한 정책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한미억제전략위원회는 차관보급 정례 협의기구로서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23]회의와 함께 매년 전·후반기에 각각 개최하고 있으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다양하고 실질적인 억제 및 대응방안들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특히 한미억제전략위원회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한미 확장억제 공동연구'를 진행하여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 및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들을 도출하였다. 한미 확장억제 공

19) 2013년 10월 제4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한미 국방장관이 서명했으며, 미국이 동맹국과 수립한 최초의 억제전략으로서 일반적인'확장억제'에서 한발 더 나아가 한반도 상황에 맞도록 최적화한 전략개념

20) 미국이 적대국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동맹국을 보호하기 위해 핵능력, 재래식전력, 미사일 방어능력 등의 억제력을 제공하는 일반적인 개념

21) Deterrence Strategy Committee

22) Extended Deterrence Strategy & Consultation Group

23) Korea – U.S. Integrated Defense Dialogue



한미 억제전략위원회 (2019년 9월)

동연구는 2019년 9월 개최된 제9차 한미억제전략위원회 승인을 거쳐, 2019년 11월 제51차 한미안보협의회의에 보고되었다. 한미 양국 국방장관은 한미 확장억제 공동연구가 확장억제 강화에 기여하였다고 평가하였고, 향후 한반도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영향을 고려하면서 '맞춤형 억제전략'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방안들을 공동으로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한미는 한미억제전략위원회 개최와 연계하여 확장억제수단의 운용 연습[24]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2019년 2월에 실시된 제6차 확장억제수단 운용 연습에서는 기획, 위협 평가, 지역 안보협력, 능력 발전, 전략적 소통, 연합연습 등 6개 분야를 중심으로 맞춤형 억제전략의 실행력 제고를 위한 방안 등을 토의하였다.

한편 한미 외교·국방 확장억제전략협의체는 외교 당국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정례 협의기구로서, 차관급 인사가 참석하는 고위급회의는 외교·국방장관회의와 번갈아 격년으로 개최하고, 국장급 인사가 참석하는 본회의는 매년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한미는 한미 외교·국방 확장억제전략협의체를 통해 확장억제 수단을 군사(M) 영역에 국한하지 않고 외교·정보·경제(DIE) 영역까지 확대하여 억제·대응 효과를 배가하고 있다.

한미 간 긴밀한 정책 공조를 보여준 대표적 사례는 2018년 2월 초 발간된 미국의 「2018 핵 태세 검토보고서(NPR)」[25]이다. 국방부는 핵 태세 검토보고서 작성 초기 단계부터 미국과의 수차례 협의를 통해 우리의 의견을 제시하고 작성 방향을 토의하였다. 그 결과 미국은 이번 보고서에 북한 비핵화 목표를 명확히 제시하였으며, 북한의 어떠한 핵공격도 허용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앞으로도 우리 군은 '맞춤형 억제전략'을 토대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의 실행력을 제고하고 한미 연합 억제·대응능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동맹의 미사일대응 전략 발전

한미는 '맞춤형 억제전략'에 기반하여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동맹의 포괄적 미사일 대응 전략(일명 4D 전략)'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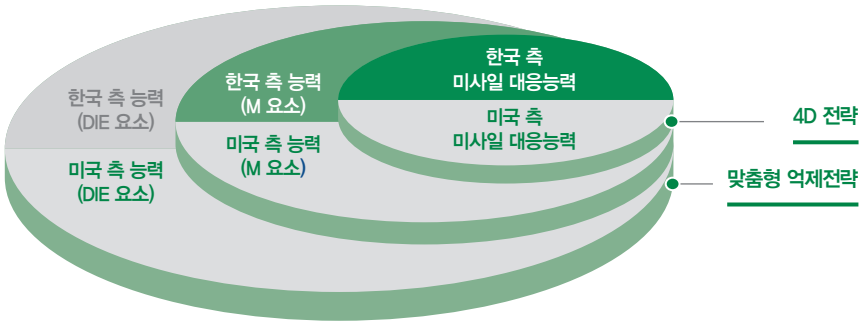
한미는 2014년 제46차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4D 작전개념'[26]에 대해 합의한 이후, 2015년 제47차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는 '4D 작전개념'을 기반으로 구체적인 이행

24) 가상의 시나리오 상황 아래 미국의 확장억제수단의 운용 방안을 논의하는 토의식 연습(Table Top Exercise)

25) 역대 4번째 NPR(1994·2001·2010·2018)로서 미국 행정부의 핵 정책·전략·전력·태세 구축 관련 대통령 지침을 담은 문서

26) 동맹의 포괄적 미사일 대응 작전개념으로 '포괄적'은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탐지, 교란, 파괴, 방어(4D) 분야에서의 전반적인 능력 향상을 의미하며, 4D 각 분야의 개념은 다음과 같음
- 탐지(Detect) : 정보·감시·정찰(ISR) 자산을 운용하여 교란·파괴·방어 지원
- 교란(Disrupt) : 북한 미사일 운용을 지원하는 고정 기반시설 타격
- 파괴(Destroy) : 북한 탄도미사일 및 이동발사대(TEL) 직접적 타격
- 방어(Defend) : 우리 측을 향해 날아오는 북한 탄도미사일 요격

[도표 3-7] 맞춤형 억제전략 및 4D 전략



* DIE : 외교(Diplomacy), 정보(Information), 경제(Economy)
* M : 군사(Military)

지침을 반영한 「4D 작전개념 이행지침」을 승인하였다. 2016년 이후 한미는 「4D 작전개념 이행지침」을 토대로 동맹의 의사결정, 기획, 지휘통제, 연습 및 훈련, 능력발전으로 구성된 5개 분야에 대한 이행방안을 발전시켜 왔다. 2019년 제9차 한미억제전략위원회에서는 '4D 작전개념'을 작전적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4D 작전수행개념'[27]을 정립하였고, 이를 기존의 '4D 작전개념'과 통합하여 '4D 전략'으로 명명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를 통해 한미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작전수행개념을 공유하고 구체적인 작전수행절차를 보완·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앞으로도 우리 군은 북한의 다양한 탄도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동맹의 포괄적 미사일 대응능력과 태세를 지속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핵·미사일 위협 억제·대응을 위한 핵심전력 구축

우리 군은 '4D 전략'을 구현해 나가는 가운데,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비한 독자적인 억제·대응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략적 타격체계'와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로 구성된 '핵·WMD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이를 위해 '핵·WMD 대응체계'의 핵심전력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략적 타격체계'[28]는 전방위 비대칭 위협에 대한 억제 및 대응을 위해 거부적 억제[29]와 응징적 억제[30]를 통합 구현한다. 이를 위해 우리 군은 원거리 감시능력 및 정밀타격능력 기반의 전력을 지속 확충하고 있다.

또한,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는 탐지체계, 지휘통제체계, 요격체계로 구성되며, 우리 측으로 향해 날아오는 미사일을 조기에 탐지·요격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경보를 전파한다. 우리 군은 전방위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여 방어 가능지역을 확대하고 탐지·요격능력을 향상시켜 한반도 전장환경에 최적화된 다층방어[31] 능력을 구비

27) '4D 작전수행개념'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한미 공동의 작전수행단계로 '탐지(Detect), 결심(Decide), 격퇴(Defeat), 방어(Defend)'로 구성

28) 기존의 Kill-Chain 체계와 대량응징보복(KMPR) 체계를 포괄하는 개념

29) 적의 특정 전략목표 달성을 거부하는 능력을 보유함으로써 적에게 침략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희생과 위험부담이 더 크다는 것을 인식시켜 침략을 포기하도록 하는 개념

30) 보복 위협을 통해 예상하는 이익보다 비용이 더욱 클 것이라는 점을 인식시켜 상대방이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념

31) 복수의 요격체계로 적 미사일과 최소 2차례 이상 교전이 가능한 방어체계

해 나가고 있다. 특히 국내 기술로 개발한 미사일 요격체계를 추가 확보하여 독자적인 미사일 방어능력을 확충하는 한편, 주한미군 미사일방어체계와의 상호운용성을 강화하여 동맹의 대응능력도 지속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앞으로도 우리 군은 '핵·WMD 대응체계'의 조기 구축을 통해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억제 및 대응능력을 지속 확보해 나갈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 정책 지원

우리 군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대응 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북핵 문제의 근원적이고 평화적인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국방부는 다양한 국방외교 채널과 국방협의체를 활용하여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견인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지원하는 한편, 우리 군의 정보 및 군수지원, 통역, 검증 등 지원능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비핵화 검증 시 활용 가능한 군 전문인력을 관리하고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수립하는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하지만 국방부는 북한의 위협이 실질적으로 감소할 때까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군사대비태세를 지속 유지하고 전력증강도 정상적으로 진행해 나갈 것이다. 향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완료되고 북한의 위협이 실질적으로 감소하여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가 정착된다면, 그 시점에서의 다양한 핵·미사일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대비태세와 전력소요를 조정해 나갈 것이다.

2. 화학·생물위협 대비 능력 발전

화생방 대비태세 발전

우리 군은 북한의 화생방 위협뿐만 아니라 화생방 관련 사고·테러, 감염병 등의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들을 강구하고 있다.

우리 군은 한미 간 긴밀한 연합방위체제를 구축한 가운데, 연합 정보자산을 활용하여 북한의 화생방 관련 동향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있으며, 공격징후를 조기에 파악하여 유사시 무력화 할 수 있는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제대별 화생방 및 의무부대를 편성하여 화생방 정찰·제독, 치료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방독면·보호의·제독제·치료제 등 방호장비·물자를 확보하고 화생방 방호시설도 구축하는 등 방호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특히, 첨단과학 기술을 적용한 신형 화생방

장비를 전력화함으로써 화생방 보호 및 탐지·식별 능력을 보강해 나가고 있다.

한편, 우리 군은 화생방 관련 사고·테러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지역별 화생방신속대응팀과 국가 대화생방테러특수임무대를 확대하여 운용하고,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중심의 화생방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등 군사적 지원 대책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범정부 차원의 통합대응 및 유관기관 협력 강화

우리 군은 화생방 위협, 화생방 관련 사고·테러, 감염병 등에 대비하여 범정부 차원의 통합대응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유관부처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32],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해 화학물질 유출사고 등의 상황 발생 시에는 화생방부대 등 가용전력을 즉각 현장에 투입하여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 조기 피해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제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도표 3-8] 화생방부대 지원현황

2020년 11월 기준, 단위 : 회

구분	계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독감	구제역	화학사고	기타(산불,급수)
2018년	2,129	미발생	802	120	13	1,194
2019년	4,434	2,103	394	376	71	1,490
2020년	2,854	2,263	246	미발생	82	263

또한 우리 군은 범정부 차원의 화생방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화랑훈련 등과 연계하여 민·관·군·경 통합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질병관리청이 주관하는 생물테러 대응훈련 및 생물테러 대응 종합평가대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주관의 국가 방사능 방재합동훈련 등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민·관·군·경 통합대응 능력을 제고하고 있다.



코로나19 대응 방역 지원 (2020년 3월)

앞으로도 우리 군은 북한의 화생방 위협에 대비한 군사대비태세를 철저히 유지한 가운데, 국민의 안전을 저해하는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유관부처와의 협력체제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

32) 코로나19 대응 방역 지원(2020.2.24.~11.30.) : 3,351회(인원 31,611명, 제독장비 24,062대)

한미 공조 및 국제협력 강화



한미 대량살상무기대응위원회 (2019년 10월)

우리 군은 동맹과의 공조를 통해 화생방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한미 국방부는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차단하고 공동 대응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1997년부터 국장급 연례 협의체인 대확산회의(CPWG)[33]를 양국 유관기관의 참여하에 운영해 왔으며, 2017년부터는 명칭을 대량살상무기대응위원회(CWMDC)[34]로 변경하여 정책적 협의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2019년 10월에 개최된 대량살상무기대응위원회에서는 북한 WMD 위협 제거 및 확산 차단, 한미 공동 대응능력 발전 등에 관한 다양한 정책적·군사적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지속적으로 한미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한미 양국은 2011년부터 생물위협에 대한 연합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한미 생물방어연습(Able Response)을 실시해 왔으며, 2017년부터는 화생방 전 분야로 확대한 한미 화생방대응연습(Adaptive Shield)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한미 화생방대응연습은 양국의 유관기관들이 참여한 가운데, 한반도 내에서 발생 가능한 화생방 위기 대응시스템 점검과 범국가적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공동대응방안을 논의하고, 대량 피해 발생에 대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대응체계도 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화학무기금지협약(CWC)[35]과 생물무기금지협약(BWC)[36]의 가입국이며, 우리 군은 협약 이행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은 협약 당사국의 협약 이행을 검증하는 화학무기금지기구(OPCW)[37]의 정기사찰 시 국가 호송기관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국제협약 준수 및 이행에 대한 신뢰도와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다. 한편,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는 2005년부터 필리핀, 인도, 방글라데시 등 아시아 회원국을 대상으로 화학무기금지기구 국제화학방호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도 우리 군은 한미 간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는 한편 유엔, 화학무기금지기구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다.

33) Counter Proliferation Working Group

34) Countering Weapons of Mass Destruction Committee

35) Chemical Weapons Convention

36) Biological Weapons Convention

37) Organization for the Prohibition of Chemical Weapons

제3절

초국가적·비군사적 안보위협 대응체계 구축

국방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전통적 안보위협을 넘어 사이버공격, 테러, 재난, 우주위협 등 초국가적·비군사적 안보위협에 대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사이버·우주 공간에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방 사이버안보 및 국방우주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국내외 테러 위협에 대비하여 테러예방·대응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군 내 재난과 국가적 재난에 대해 선제적인 재난대비 태세를 구축하여 신속하게 병력·장비를 지원함으로써 장병과 국민의 생명·안전을 지키고 있으며, 해외재난 발생 시 국제 공조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해외재난 대응 국제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1. 국방 사이버안보 역량 강화

국방 사이버정책·전략 및 사이버전 임무수행 체계 발전

정보통신기술과 인프라의 발전에 따라 사이버 공간에서의 위협수단과 기법이 다양화·지능화되고, 군의 제반 업무와 군사작전 수행도 사이버공간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우리 군은 정확하고 안전한 국방 사이버공간을 창출·유지·보호하고 사이버공간에서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국방 사이버안보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정부는 2019년 최초로 국가안보실 주관으로 국가 사이버안보 정책의 최상위 지침서인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을 발표하였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방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등 유관부처가 참여하여 「국가사이버안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였다. 국방부는 「국가사이버안보전략」과 연계하여 국방 사이버안보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중장기 발전목표와 발전계획을 제시한 「국방사이버안보정책서」를 2019년 10월 작성하였다. 이는 「국방기본정책서」와 「국방개혁 2.0 기본계획」의 국방정책 방향을 국방 사이버안보 차원에서 구체화한 것으로, 국방 사이버안보 임무수행체계 발전, 사이버전 수행인력의 전문화·정예화, 사이버공격 대응역량 고도화, 국방 사이버안보 국제협력 강화 등의 정책과제를 담고 있다.

사이버 작전태세를 강화하고 사이버안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9년 합동참모본부 중심의 사이버작전 수행체계를 구축하고, 합동참모본부–사이버작전사령부–각 군 간의 유기적인 사이버작전 통제 및 보고체계를 정립하였다. 2019년 2월 '국군사이버사령부'를 '사이버작전사령부'로 개편하고 합동부대로 지정하여 합동

참모의장의 지휘 여건을 보장하였으며, 각 군의 '사이버방호센터'를 '사이버작전센터'로 개편하고 인력을 보강해 사이버작전 수행에 적합한 조직 구조로 발전시켰다.

사이버 조직·인력 및 교육훈련 발전

사이버작전 분야는 다른 전장보다 인력의 전문성에 의해 작전역량이 크게 좌우되는 영역이다. 국방부는 사이버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획득-교육-보직-진급'이 연계되는 종합적 인사관리 제도를 발전시키고 있다.

2019년에 장교·부사관을 대상으로 사이버 특기를, 2020년에 군무원을 대상으로 사이버 직렬을 신설하여 사이버 인력의 안정적 획득 및 인사관리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다. 우리 군의 사이버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소양 등을 식별하여 직무별 필수역량을 '국방사이버직무체계'로 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방 사이버 인력의 자격기준, 보직경로, 교육훈련체계 등을 정비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사이버 특기 및 직렬 신설에 맞추어 사이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2020년에는 사이버 전문인력에 대해 사이버작전 형태와 임무역량의 수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작전역량을 향상할 수 있도록 교육체계를 개편하였으며, 사이버 분야에 근무하는 장교의 필수 보수 교육과정으로 2016년부터 운영 중인 소위 지휘참모과정 이외에 대위 지휘참모과정을 신설하였다. 향후에도 다양한 사이버작전 상황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실전적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사이버전력 확충 및 대응역량 고도화

우리 군은 나날이 발전하고 증가하는 사이버공격으로부터 국방 사이버공간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사이버전력을 확충해 나가고 있다. 사이버작전 수행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종합하고 시각화하는 사이버작전 체계를 구축하여 지휘관의 신속한 의사결정과 지휘통제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악성코드 등 네트워크상 이상행위를 식별하는 탐지·분석체계를 중심으로 사이버전력을 구축하고 있다. 급변하는 사이버 환경에 발맞추어 인공지능(AI) 등 최신 IT기술을 활용하여 비정형 사이버공격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고, 사이버작전 체계의 기능 및 성능을 지속적으로 보강할 계획이다.

아울러 여러 사이버 위기상황을 가정한 사이버 모의훈련을 주기적으로 수행하고, 사이버 분야 민·관 기관과의 상호 공조를 확대하는 등 사이버 위기상황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우리 군의 대응역량을 고도화하고 있다.

사이버안보 분야 국제협력 강화

전 세계가 연결된 사이버공간에서의 적대행위는 단일 국가가 해결하기 어려운 초국가적 위협으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국가 간의 신뢰와 협력이 필수적이다. 우리 군은 다양한 양자 및 다자간 협의 채널을 통해 사이버안보 분야의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사이버안보 분야에서 가장 활발하게 교류 중인 국가는 미국이다. 한미 양 국방부는 전통적인 한미동맹에 기반하여 2014년부터 한미 사이버정책실무협의회(Cyber Cooperation Working Group)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이버 위협정보를 공유하고 기술·인력·조직 분야의 협력 및 교류 방안을 논의해왔다. 향후 양국은 협력 사항을 구체화하고 내실화하여 긴밀한 파트너십을 구축할 것이다.

다자간 협력 채널로는 국방부가 주도하는 차관급 연례 다자안보협의체인 서울안보대화(Seoul Defense Dialogue) 내에 2014년부터 사이버워킹그룹(Cyber Working Group)을 운영하고 있다. 매년 20~30여 개 국가가 사이버워킹그룹에 참여하여 사이버위협 현황을 공유하고, 각국의 사이버안보 정책과 제도를 소개하는 등 활발한 교류를 지속하고 있다. 앞으로도 참여국의 사이버 역량 강화와 신뢰 관계 구축을 위해 국방 사이버 협력 분야의 대표적인 다자회의체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또한 2018년부터는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미국 등 플러스 8개국으로 구성된 아세안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내의 사이버전문가워킹그룹(Expert Working Group on Cyber Security)에 참가하여 국방 사이버 정책공유, 사이버 위협 발생 시 위기관리 능력 강화를 위한 토의식 훈련(TTX)[38] 등을 실시하고 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우리나라는 말레이시아와 공동의장국 임무를 맡아 회원국의 사이버안보 관련 정책 및 기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과제를 발굴하고, 협력 성과를 창출하여 아세안국가 및 플러스국가들과 국제적인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2. 국내외 테러 예방 및 대응태세 확립

국내외 테러 위협

최근 미국 주도의 ISIS 격퇴작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체적인 테러 건수가 감소하였으나, 미국-이란 갈등에 따른 중동정세 불안, 프랑스-이슬람권 갈등 관련 ISIS·알카에다 등의 보복테러 등 전 세계적으로 테러 위협은 지속될 전망이다.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국제테러단체에 의한 직접적인 공격은 없었으나 사제폭발물을 제조하는 등 유사테러 성격의 범죄는 발생

38) Table Top eXercise

하고 있으며, 드론을 이용한 테러 위협도 점증되고 있다.

테러 대비 정책·제도·체계 발전 우리 군은 점증하는 테러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테러대응체계와 대테러작전부대의 작전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9년, 2020년 「국방부 대테러활동 훈령」 개정을 통해 국가 및 군 중요행사 대테러안전활동 체계를 발전시켰으며, 군 대테러정보협의회와 군 테러사건수사본부 등의 전담조직을 추가 지정하고, 임무와 역할을 보완하였다. 또한, 「군 테러위기대응 실무매뉴얼」, 「통합작전 수행 매뉴얼」을 보완하여 상황 발생 시 테러혐의점을 조기에 판단하고, 현장 초동조치 시 군·경·소방이 통합·공동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다.

군 대테러작전부대 전문역량 구비 707대테러특공대 등 군 대테러작전부대의 편성을 보강하고 대테러 작전유형별 공통으로 적용 가능한 「대테러 장비·물자 편성 기준안」을 정립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대테러 장비·물자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대테러작전부대의 전문역량 구비를 위해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그리고 국가 지정 대테러작전부대 대부분이 수도권과 서부 지역에 편중된 점을 감안하여, 지역 단위 '대테러특수임무대'와 '대화생방테러특수임무대'를 추가 지정하여 골든타임 내 신속한 대테러작전수행체계를 구축하였다.

드론테러 대응 종합대책 추진 사우디아라비아 석유시설에 대한 드론 공격, 한빛·고리원전 상공의 미상 드론 무단비행 등의 사례처럼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드론테러가 국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현실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테러센터 주도로 범정부 차원의 '드론테러 대응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는 원전 및 석유비축기지 6개소에 대한 드론테러 위협에 대비하여 군 대공탐지자산을 지원하였으며, 국방과학연구소를 통해 레이저대공무기 등 안티드론능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국가중요시설 방호 관련 통합방위지침과 군 테러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보완하여 드론테러 위협에 대한 대응절차를 개선하고, 이를 적용·시행하고 있다.

국가중요행사 지원 우리 군은 정부의 주요 국제행사에 대비하여 연인원 20,300여 명과 장비 약 1,307종을 투입하는 등 대테러 안전활동을 강화함으로써 2019년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부산 한·아세안 정상회담, 서울안보대화(SDD),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 국제해양방위산업전(MADEX), 2020년 대한민국 방위산업전(DX-Korea) 등의 성공적 개최를 보장하였다.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대테러훈련 (2019년 6월)



2020년 국가 대테러 종합훈련 (2020년 11월)

국내외 대테러 협력체계 구축 우리 군은 국내 테러 위협에 대비하여 범정부 대응체계를 공고히 유지하고 있다. 2020년 11월 대테러센터 주관으로 실시한 국가 대테러 종합훈련에 참가하여 관계기관간 정보공유 및 상황전파 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복합테러 위협에 대한 관·군·경 통합대응 역량을 향상시켰다. 또한 국제적 테러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산하 대테러 분과 실무회의와 테러 대응 연합훈련에 참가하는 등 국제 대테러 협력을 통한 정보공유와 공조체계 구축을 통해 테러 대응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앞으로도 우리 군은 국내외 테러 위협 대비 민·관·군·경 통합 작전수행체계 및 능력을 향상시키고, 국제사회 및 우방국과의 대테러 공조와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3. 국가적 재난 극복을 위한 적극적·선제적 지원체계 구축

군 내 재난 예방 활동 강화 국방부는 군의 안전에 대해서 국민적 관심과 요구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장병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건강하게 가족에게 돌려보내기 위해 군 내 시설물 등에 대한 재난예방 활동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2019년 9월)



고속열차 탈선사고 대응 을지태극연습 (2019년 5월)

강화하고 있다. 특히 많은 부대가 산악지역에 배치되어 있고 노후 시설도 산재해 있는 특성을 고려하여 재난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선제적 재난예방체제를 갖추고 있다.

국방부는 사고 위험요인이 있는 군 내 노후 시설과 취약지역에 대한 생활 속 안전점검 활동과 주기적인 안전진단을 내실화하고 있으며, 범국가적 안전진단을 통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2020년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여 5만 5,994개소를 안전점검하고, 각 분야별 민간전문가를 국가안전대진단 전 과정에 참여시킴으로써 신뢰성을 제고하였다.

또한 우리 군은 재난 예방, 대비, 복구 등 재난관리의 전 과정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민·관·군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교육훈련을 통해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재난 유형별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최신화하고, 매년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하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적극 참가함으로써 매뉴얼을 실제훈련에 적용·보완하고 있다. 특히 2019년 6월 을지태극연습 간 국토교통부와 함께 고속열차 탈선사고 대응훈련을 실시하는 등 민·관·군 합동 대응체계를 공고히 하였다.

국방부는 육·해·공군 각 급 부대에 400여 개의 재난상황실을 운영하여 군 내 재난발생 상황은 물론, 군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지역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력 및 긴급 대응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국방부 주관으로 매년 전군 재난관계관 회의와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각급 부대 재난관계관들의 재난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국가재난 지원

최근 지진, 산불, 가뭄, 집중호우 등 재난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과 더불어 재난 극복을 위한 대민지원 활동 또한 군의 주요한 임무가 되었다. 최근 5년간 우리 군은 재난대응 및 피해복구를 위해 장병 98만여 명, 장비 7만 7천여

일상을 지키는
대한민국 국군

[도표 3-9] 최근 5년 간 대민지원 현황

2020년 11월 30일 기준

연도	지원내용	지원인력(명)	장비(대)
	총계	978,348	76,963
2016	산불, 화재	5,180	180
	구제역, AI, 소나무 재선충 방제	5,658	577
	가뭄, 집중호우 및 태풍(차바), 지진 피해 지원	55,227	594
	폭설 및 건축물 붕괴, 해양오염 피해 복구 지원	5,573	47
	실종자 수색·구조	2,111	95
	철도·화물 노조 파업 지원	35,410	400
2017	산불, 화재	23,707	169
	가뭄, 집중호우 및 태풍 피해 지원	39,003	1,736
	실종자 수색·구조	2,473	152
	구제역·AI 방제	33,042	3,279
	폭설, 지진 피해 지원	17,474	659
2018	산불지원	8,970	186
	가뭄, 집중호우 및 태풍 피해 지원	16,125	8,168
	실종자 수색·구조	1,165	219
	구제역·AI 방제	10,452	1,246
	폭설, 지진 피해 지원	7,848	13
2019	산불, 화재	22,442	526
	폭염·가뭄, 태풍·호우, 폭설	64,745	2,319
	실종자 수색·구조	4,208	748(군견15)
	조류독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차단	108,985	7,490
	철도·화물 노조 파업 지원	3,900	-
	해양오염, 인천 적수 등	908	401
2020	산불, 화재	1,984	89
	폭염·가뭄, 태풍·호우, 폭설	128,699	17,063
	실종자 수색·구조	5,604	778
	조류독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차단	60,161	6,108
	코로나19 대민지원	307,294	24,469

대를 지원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현장 최일선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지원현황은 [도표 3-9]와 같다.

2019년 4월 초 산불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강원도 지역에 군 산불진화임무헬기 5대를 전진 배치하였고, 강원도 고성 대형산불 발생 시 병력 8,180명, 진화헬기 35대 등 장비 546대를 투입하여 군 피해를 최소화하고 빠른 시간 내에 주민들이 생활터전으로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민간 피해복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2019년 5월 헝가리 유람선 침몰사고 발생 시 세월호 구조 유경험자 등으로 구성된 해군 해난구조대 1개 팀 7명이 현지 구조작전에 파견되어 헝가리 현지의 악조건에서도 우



강원 고성 산불 진화병력 투입 (2019년 4월)



청해진함 독도 추락 소방헬기 동체 인양 (2019년 11월)

리 국민 구조작전을 헌신적으로 수행하였다.

2019년 11월 9일 독도 일대 조업 어선 내 부상자 후송을 위해 출동한 산림청 헬기가 추락하였고, 우리 군은 청해진함 등 수중탐색이 가능한 군 함정과 야간 수색을 위한 항공기 조명 등 첨단장비를 지원하였다. 그 결과, 실종자 3명을 구조하고 추락 소방헬기 동체 및 블랙박스를 인양하였으며, 이후에도 제주도 근해 민간어선 화재·침몰 사고 발생 시 실종자 구조 및 어선 탐색·인양 등의 군 첨단전력을 통한 해상사고 구조 활동을 시행하여 대군 신뢰를 공고히 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2018년 8월부터 중국, 몽골, 베트남 등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확산됨에 따라 정부는 국내로의 유입차단을 위해 대응을 강화하였으나, 2019년 9월 16일 경기도 파주시 소재 양돈 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최초로 발병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관련 기관 및 지자체와 협조하여 야생멧돼지 포획 및 폐사체 수색, 농가초소 및 이동통제초소 방역활동, 항공방역을 지원함으로써 접경지역에서의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및 확산을 방지하는데 크게 기여[39]하였다.

2020년 6월부터 8월까지 발생한 역대 최장기간(54일)의 장마와 장마 이후 3차례 연이어 발생한 태풍[40]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인명, 재산피해 등 막대한 피해[41]가 발생하였다. 국방부는 31개 시·군·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선제적인 복구지원을 위해 66개 도청·시·군에 군 협력관을 파견하여 복구지원 소요를 확인하고, 소요가 지역방위사단 지원 역량을 초과하는 5개 시·군(충북 제천·충주, 경기 이천, 전남 남원·구례)에 대해서는 조기 피해복구를 위해 특전사 7개 부대, 해병1사단 등 가용부대를 집중 투입하였다. 특히 강원도 인제



육군 특전사 천마부대 수해복구 지원

39) 2020.11.30. 기준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군 병력 166,236명, 장비 12,734대 지원

40) 제8호 바비(8월 26일), 제9호 마이삭(9월 3일), 제10호 하이선(9월 7일)

41)
- 인명피해 : 53명 (사망 50명, 실종 3명),
- 재산피해 : 약 1조 2,600억 원

군의 피해교량을 대신하여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군 교량장비(간편조립교)를 설치하였으며, 의암댐 전복 선박 실종자 수색지원과 수해지역 일대 유실지뢰 탐색작전 등에 연인원 12만 8천여 명과 장비 1만 7천여 대를 지원함으로써 국가적 재난 극복과 국민생활 안정에 기여하였다.

코로나19 대응과 국방신속지원단 운영

2019년 발생한 신종 감염병인 코로나19는 우리나라에서 2020년 1월 20일 최초 확진 환자 발생 후 11월 30일 기준 3만 4,201명의 누적 확진 환자와 526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으며 국내에서는 최초로 감염병에 의해 대구·경북 지역 5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등 국민건강과 경제활동에 심각한 위협이 되었다.

국방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민간의 확진자 수용을 위해 국군 대전·대구·고양병원을 국가감염병전담병원으로 전환하였다. 또한 생활치료센터 100여 개소와 해외동포 임시생활시설 등에 의료 및 운영 인력을, 공항·항만 검역소에 의료 및 특별검역 인력을 지원하였으며, 국민 안전을 위해 시급한 마스크·방역물자 확보 및 유통, 도로 및 시설방역·소독 등에 연인원 30만 6천여 명과 제독차를 비롯한 2만 4천여 대의 장비를 투입하였다.

국방부는 코로나19 대응 간 지역책임부대와 지자체간 협조범위를 초과하는 방역소요 및 수송소요, 기획재정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중앙 부처의 지원요청 등 기존 자연재난과 다른 형태의 지원 소요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0년 3월 국방부 군수관리관을 단장으로 하는 국방신속지원단을 출범시켰다. 국방신속지원단은 마스크 유통, 방역물자 긴급수송, 전국적인 방역 및 소독, 취약계층 복지지원을 실시하였고, 전국 시·도 단위로 신속지원협력관을 운용하여 지자체의 지원요청 이전에 선제적으로 지원소요를 확인하여 서울·경기, 대구·경북, 충청 지역 등 권역별 전담팀을 통해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대응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우리 군의 대민지원활동은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이 조기에 생업에 복귀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방부는 국가적 재난 발생 시 병력과 장비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것이다.

전군 통합재난관리시스템 구축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잦은 재난 발생에 따라 군의 재난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재난 예측시스템을 포함하여 재난관리 4단계(예방–대비–대응–복구) 전반에 대한 종합관리시

스템 구축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국방부는 각 군별로 운영하는 재난관리 정보체계를 통합하기 위해 2019년에는 전군 통합 국방재난관리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 전략 계획(ISP) 사업을 수행하여 통합 운영될 시스템 전반의 구축 방향을 설계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국방부와 각 군 간 실시간 정보공유를 통해 신속하게 조치 사항을 전파하고, 행정안전부의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등 유관기관의 시스템과 연계하여 국가재난에 대한 군의 긴급구조지원능력을 공유함으로써 효율적인 민·관·군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긴급구조지원기관 역량 강화



국방부-소방청 재난대응 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 (2019년 5월)

국방부는 2019년 5월 소방청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동반자로서 효과적인 재난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양 기관은 향후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안전조치 및 복구를 위해 양 기관이 보유한 상황정보 공유 및 인력·물자·장비들의 상호지원, 응급환자 이송체계 강화, 다수사상자 발생 재난 시 공동대응 등에 관한 사항에 상호 협력하기로 하는 등 재난대비 능력을 지속 발전시키고 있다.

4. 해외재난 긴급구호 국제협력체계 구축

해외재난 긴급구호 지원

최근 여러 국가에서 발생하고 있는 대규모 재난은 해당 피해국가의 노력만으로는 복구를 감당하기 어려워 인도적 차원에서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대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대규모 해외재난 발생 시 정부 해외긴급구호대(Korea Disaster Relief Team) 및 구호물자·장비의 수송을 지원하는 등 국제 재난대응 협력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10년 간 해외 재난구호 지원 현황은 [도표 3-10]과 같다.

[도표 3-10] 최근 10년 간 해외 재난구호 지원 현황

시기	지역(재난)	지원내용
2011년 3월	동일본(지진, 해일)	· 수송기(C-130) 10대(총 4회), 구호물자 58.8톤, 구조대 102명 수송
2011년 10월	터키(지진)	· 군용 텐트 100동 수송
2013년 11월	필리핀(태풍)	· 수송기(C-130) 9대(총 4회), 구호물자 329톤, 구조대 포함 2,022명 수송
2016년 4월	일본 구마모토현(지진)	· 수송기(C-130) 2대, 구호물품 11만 달러(천막, 담요, 햇반, 생수)
2018년 7월	라오스(댐 사고)	· 수송기(C-130) 5대(총 3회), 구호물자 23톤, 의료팀 20명 수송
2018년 10월	인도네시아(지진)	· 수송기(C-130) 3대(10.8, 11.30), 텐트 170동, 국제구호물자 456톤 수송
2020년 7월	동티모르/필리핀 (코로나19)	· 수송기(C-130) 1대, 방역마스크 국가별로 각각 20만장, 40만 장(6톤) 수송

해외재난 국제협력체계 구축

2019년 국방부는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 인도적 지원 및 재난구호 전문가 실무회의와 연합훈련 그리고 아태지역 인도적 지원 관련 민군협의체 회의 등 6회의 국제회의와 훈련에 참가하여 다양한 형태의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인도적 지원 및 재난구호를 위한 국제협력체계를 공고히 하였다.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에서 발생한 지진과 쓰나미 상황을 가정하여 7월에 말레이시아에서 실시된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 인도적 지원 및 재난구호(ADMM-Plus HA/DR)[42] 연합훈련에 참가하여 다른 참가국들과 재난 발생 시 재난구호 전력 파견 절차, 재난구호 전력 파견 전·후 관련 정보 획득 및 협조 절차 그리고 국제기구와의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그리고 제5차 아시아 지역 대화그룹(RCG)[43] 연례회의에 최초로 참가하여 인도적 지원 및 재난구호 작전 간 정보공유, 군수지원 관련 민·군 협력체계 발전방안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심도있는 토의를 통해 해외재난 긴급구호체계를 공고히 하였다.



ADMM-Plus HA/DR 연합훈련 (2019년 7월)



제5차 RCG 연례회의 (2019년 12월)

42) ASEAN Defense Minister's Meeting – Plus Humanitarian Assistance / Disaster Relief

43) 아태지역의 인도주의적 민군협조 및 외국군 자산 사용 분야를 포함한 재난대응 전반에 걸친 현안 토의를 목적으로 개최되는 회의로 5차 연례회의는 태국 치앙마이에서 개최 (RCG : Regional Consultative Group)

5. 국방우주력 발전

국방우주력 발전기반 강화

국방부는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국제규범[44]을 준수하는 가운데, 우리 군의 국방우주력 발전을 위해 법·제도 정비, 조직·인력 보강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국방부는 2018년 국가 우주개발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와 기본방향을 정하는 「우주개발 진흥 기본계획」 개정에 참여하여, 군 정찰위성 및 우주위협감시체계 개발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후 2019년에는 변화하는 우주 안보환경을 반영하여 국방부 차원의 「국방우주력 발전 기본계획서」를 개정하였다. 개정된 계획서에서는 중장기 국방우주력 발전 목표에 따라 정책기반 구축, 운영체계 발전, 우주전력 확충, 대내외 협력 확대의 4대 중점분야와 분야별 세부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공군 위성감시통제대 창설식 (2019년 9월)

국방부는 국방우주력 발전의 정책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우주기술 연구개발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또한 합참 및 각 군에 우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을 확충하는 한편, 국내외 우주 분야 교육기회를 확대하여 전문인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2019년 한반도 상공에 대한 우주감시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초의 우주부대인 공군 위성감시통제대를 창설하고 2020년 '공군 우주작전대'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또한 2020년 군 독자 통신위성을 발사하여 세계에서 10번째로 군사위성을 확보한 국가가 되었다. 앞으로 국방부는 우주에서 역량을 본격적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감시정찰, 조기경보 위성 등 다양한 우주자산을 지속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동시에 국방부는 국방우주력 발전을 위해 대내적으로 민·군 우주기술 협력을 강화하고, 대외적으로는 미국과 프랑스 등 우방국과의 우주분야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앞으로도 국방부는 우주 안보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유관부처·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한 가운데, 국방우주력 발전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것이다.

아나시스 2호 발사

44) 유엔은 1967년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우주의 탐사·개발에서의 국가활동을 규율하는 제원칙에 관한 조약(우주조약)'의 체결을 주도하였으며, 우주조약에서는 핵무기 또는 기타 대량파괴무기의 지구 주위 궤도 배치 등을 금지하고 있음

한미동맹 기반의 국방우주협력 발전

한미는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우주분야에서도 다양한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특히, 양국은 매년 정기적으로 '국방 우주협력 실무협의체'를 개최하고, 우주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우주상황인식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한미는 2012년 제44차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한미 국방우주협력 실무협의체(SCWG)[45] 관련 약정」을 체결한 이후 총 15차례의 '국방 우주협력 실무협의체'를 개최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방우주정책 현안 공유, 우주인력 훈련·양성 교류, 우주상황인식(SSA)[46] 협력, 국제우주상황조치 연습 참가 등 다양한 협력 성과를 달성하였다. 특히, 2019년에는 우주위협에 공동 대처하는 우주상황인식 정보공유 확대 및 우주인력 교류 활성화 방안을 협의하였고, 2020년에는 동맹의 더욱 긴밀한 우주정책 발전을 조성해 나가자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



국제우주상황조치 연습 (2019년 9월)

한미는 우주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2014년 9월 「우주상황인식 서비스와 정보공유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 군은 미국 우주사령부로부터 우주상황인식 정보를 제공받고 있다. 2015년 7월 공군 우주정보 상황실을 설치하여 미국이 제공하는 우주상황인식 정보를 기반으로 우주위협을 분석하고 위성 충돌에 대비하여 우주상황조치 연습을 실시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우주정보 상황실은 2020년 2월 천리안2B호 발사 과정에서 미 연합우주작전센터와 위성 궤도정보를 긴밀히 공유하고,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위성이 목표궤도에 안착하도록 협력한 바 있다.

2020년 10월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한미는 동맹으로서의 우주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동맹의 우주작전능력 향상을 위한 양자 및 다자간 연합연습과 훈련을 확대함과 동시에 우주 전문인력을 양성할 기회 등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45) Space Cooperation Working Group

46) 우주물체 추락 및 충돌 등 우주위험에 대비하여 지상시스템과 우주시스템으로부터 데이터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사용자에게 정보를 제공(예·경보)하는 개념 (SSA : Space Situational Awareness)

제4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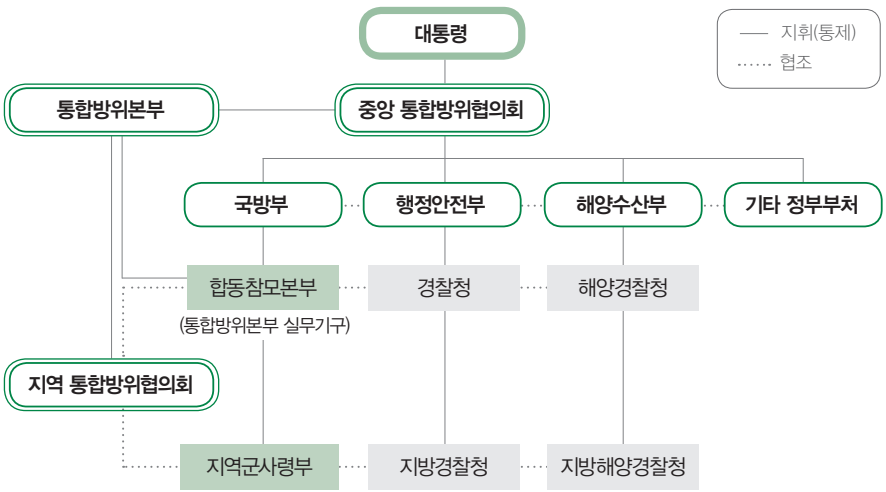
민·관·군·경 통합방위태세 확립

우리 군은 증대되는 다양한 안보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모든 국가방위요소를 유기적으로 통합하고 관계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민·관·군·경 통합방위태세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1. 통합방위기구 운용

통합방위기구 정부는 국가방위요소의 육성 및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해 중앙 통합방위협의회, 통합방위본부, 지역통합방위협의회, 통합방위지원본부 등의 통합방위기구를 운용하고 있으며, 원활한 통합방위작전 수행을 위한 각 기관별 지휘 및 협조체계는 [도표 3-11]과 같다

[도표 3-11] 통합방위 지휘 및 협조체계



중앙 통합방위협의회 국무총리 소속의 통합방위 관련 최고 의결기구로서 국가 차원의 통합방위정책, 통합방위작전·훈련지침, 통합

방위사태 선포와 해제, 정부 각 부처 및 관계기관 간의 통합방위와 관련된 업무의 조정, 통합방위작전에 따른 국가방위요소의 동원 비용 등을 심의하고 의결한다.[47]

통합방위본부 통합방위업무를 주관하는 기구로 합동참모의장이 본부장이 되며, 통합방위 정책의 수립·조정, 통합방위 대비태세 확인·감독, 통합방위작전 상황의 종합 분석 및 대비책 수립, 통합방위작전·훈련에 관한 지침 및 계획 수립과 그 시행의 조정·통제, 통합방위 관계기관 간의 업무 협조 및 사업 집행 사항에 대한 협의·조정 등의 사무를 수행하며, 통합방위에 관한 정부 내 업무 협조와 그 밖의 원활한 통합방위 업무수행을 위해 통합방위 실무위원회[48]를 둔다.

지역 통합방위협의회 서울특별시 등 17개 광역시·도 및 특별자치시·도, 228개의 시·군·구에 설치되며 의장은 광역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통합방위사태 선포 또는 해제[49], 통합방위작전 지원 대책 수립, 취약지역 선정과 해제,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인 육성·운용 및 지원 대책 등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통합방위지원본부 광역시·도, 시·군·구, 읍·면·동에 설치되며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시행, 통합방위 종합상황실 설치·운영, 국가방위요소의 육성·지원, 통합방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한 주민신고 체제의 확립,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 업무의 지원, 지역 합동보도본부 설치 지원, 지역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을 시행하는 등의 사무를 관장한다.

2. 지방자치단체장 중심의 통합방위 수행체계 개선·발전

안보영역이 기존에 위협으로 인지하지 못했던 자연·사회적 재난, 감염병, 안전사고 등 비군사적 위협으로 점차 확대됨에 따라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다양한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통합방위 수행체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47) 「통합방위법」 제4조에 의거 중앙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은 국무총리가, 위원은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부처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국가보훈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국가정보원장 및 통합방위본부장(합참의장)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구성됨

48) 대통령 훈령 제398호, 통합방위지침 제8조에 의거 정부 부서,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각 군 본부 및 작전사의 실무 국장급으로 구성

49) 통합방위사태의 선포 및 해제는 통합방위법 제5조에 의거 특별시 및 광역시·도, 특별자치시·도 통합방위협의회에서만 가능

통합방위 역량 강화

52차(2019년)와 53차(2020년) 중앙 통합방위회의는 군사적 위협 뿐만 아니라 드론을 이용한 신종 테러, 재난 및 감염병, 안전사고 등 비군사적 위협에 대비한 군사대비태세 및 통합방위태세를 평가하고,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간의 심층 토의를 통해 범정부 차원의 대비책을 마련하였다. 그 결과 2019년에는 지방자치단체장 중심의 통합방위역량 강화 등 4개 분야 14개의 후속조치 과제를 도출하여 추진하였으며, 특히 2010년 이후 9년 만에 대통령훈령 제398호 통합방위지침을 개정[50]하였다. 또한, 2020년에는 다양한 안보위협에 대응한 범정부 차원의 총력대응태세 확립을 위한 통합방위훈련 성과 제고와 드론을 이용한 신종테러에 대비한 대응태세 확립 등 4개 분야 10개 핵심 과제를 도출하였고, 분기 단위 통합방위 실무위원회를 통해 정부부처, 유관기관, 지방자치단체별 추진성과를 분석하고, 통합방위 업무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긴밀하게 협업하고 있다.

통합방위훈련 성과 제고

통합방위본부는 전·평시에 발생할 수 있는 비군사적 위협 등 다양한 위협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전국 17개 광역시·도를 11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후방지역 종합훈련(화랑훈련)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역별 전 국가방위요소가 참가하여 지역별 통합방위 작전수행체계를 진단하고, 보완·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특히, 2018년부터 시행 중인 정부통합평가단[51]을 확대 편성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현장 위주의 행동화에 중점을 두고 유관기관을 전담 평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장 중심의 통합방위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단위 통합방위태세 수준을 한 단계 향상시키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또한, 유사시 원활한 통합방위작전 수행을 위해 법적·제도적 보완 소요를 도출하여 법규개정 절차에 따라 통합방위법 1건, 통합방위법 시행령 3건, 통합방위지침(대통령훈령 제398호) 3건, 통합방위 세부시행지침 9건에 대한 개정을 추진하였다.

3. 통합방위 정보공유체계 구축 및 협업 강화

정부는 2011년부터 주민안전과 범죄 예방 등 다양한 목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CCTV의 관제기능을 하나로 통합하여 지역 내 각종 상황발생 시 관련 기관이 합동으로 대응하도록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2019년 228개 모든 지자체에 센터를 구축하였고, 더 나아가 지능정보사회(ICBAM)[52]와 융합된 사

50) 2010년 이후 통합방위법·동법 시행령 개정과 연계, 경계태세 발령시 통제구역 설정 등 23개 분야를 수정·보완하여 2019년 3월 1일부로 대통령훈령 제28호를 대통령훈령 제398호로 개정

51) 통합방위본부와 행안부, 국정원, 경찰청, 해경청, 소방청, 국가중요시설 소관부처 담당자 30~40여 명으로 구성하여 17개 광역시·도의 지방자치단체, 지방경찰청·해양경찰청, 소방재난본부 및 국가중요시설의 통합방위태세를 평가

52) ICBAM(지능정보사회) : I(사물인터넷,IoT), C(클라우드,Cloud), B(빅데이터, Big Data), A(인공지능, AI), M(모바일, Mobile) 및 3D 프린팅, 생명공학, 사이버물리시스템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오프라인 현장은 물론 실세계 모든 사물들의 지능화와 초연결 사회

회기반체계로 발전시키고 있다.

특히, 2019년 제52차 중앙통합방위회의 결과, 통합방위작전 및 테러·재난 시 지방자치단체장이 통합방위지원본부에서 실시간 현장을 보면서 적시적인 상황 판단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CCTV 통합관제센터와 통합방위지원본부 통합운용에 대한 발전방안을 도출하여 추진하고 있다. 2020년 12월 기준 228개 시·군·구 중 207개 지역에서 CCTV 통합관제센터의 영상을 통합방위지원본부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였고, 기타 48개 지역도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CCTV 통합관제센터

또한, 지역 단위로 대테러 및 대침투작전 뿐만 아니라 재난상황 발생 시 지역책임부대와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고, 신속한 초동조치와 민·관·군·경·소방 통합작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업 하에 CCTV 통합관제센터와 지역책임부대 지휘소 간의 영상정보 공유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2020년 총 228개 시·군·구 중 101개 지역에서 구축을 완료하였고, 2021년에도 통합방위업무 중 핵심과제로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제5절

전투임무 위주의 교육훈련 및 장병 정신전력 강화

우리 군은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강한 전투원 및 전투부대 육성'을 위해 학교 교육체계를 발전시키고 실전적 부대훈련과 장병 정신전력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유능한 간부 육성을 위해 우수인력을 확보하고 창의적 군사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1. 우수인력 확보 및 군사 전문인재 양성

우수인력 확보

「국방개혁 2.0」 추진으로 병력구조가 간부 중심으로 정예화되고 첨단 무기체계 도입에 따라 이를 운용할 우수 간부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반면 향후 병역자원이 감소하고 청년 취업률이 개선되면 장교나 부사관 복무를 희망하는 사람이 줄어들어 우수한 간부 인력 확보는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에 우리 군은 군인의 직업성을 강화하여 우수 인재가 안정적으로 군 복무할 수 있도록 장기복무 선발 인원을 확대하고 있다. 정원 구조상 중·소위와 하사를 줄여 초임 획득 규모는 줄이는 대신 직업군인으로 장기복무하는 간부를 늘려서 '소수획득-장기활용'의 인력운영체계로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우수 인력을 확보하고 숙련인력을 장기간 활용함으로써 전투력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단기복무를 희망하는 장교·부사관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단기복무 장려금(장려수당)을 지급하여 우수인력이 유치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중기복무를 희망하는 대학 및 전문대 재학생들에게는 학자금을 제공하여 학업 기회와 간부 복무를 연계할 수 있도록 군 가산복무 지원금[53]을 지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 군은 인력획득이 어려워지는 상황에 대비하여 우수한 중·단기복무 간부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것이다.

창의적 군사 전문인력 육성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안보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방 분야의 혁신을 주도할 창의적

53) 장교 및 부사관으로 임용된 후에 기본 의무복무 기간에 가산하여 복무하는 조건으로 대학 및 전문대 등의 재학생에게 지급하고 있는 등록금 수준의 지원금

군사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전문학위 교육과 국외군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전문학위교육은 군 교수, 연구개발, 특수기술 분야 등의 군사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이다. 국내외 우수 교육기관에서 석·박사 학위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 국방을 선도할 인공지능, 로봇공학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연간 300여 명의 교육생을 선발하고 있다.

국외군사교육은 선진 군사지식 습득, 무기체계 운용, 전투기술 숙달, 지역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이다. 40여 개국 국방대학원, 지휘참모대학, 병과학교 등의 교육기관에 연간 320여 명을 파견하고 있으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대비 연합·합동 전문인력과 신남방·신북방정책의 군사분야 지원을 위한 지역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해 동남아, 유라시아, 중동, 남미, 아프리카 등으로 파견 국가를 다변화하고 있다.

2. 학교 교육체계 발전

추진 중점 국방부와 각 군은 학교 교육체계를 정예장병 육성을 위한 양성교육과 야전수요 충족을 위한 보수교육의 개선에 중점을 두고 발전시키고 있다. 교육방식은 교관 중심의 강의위주 교육에서 교육생 중심의 참여형 교육과 문제 해결형 교육으로 전환하였으며, 첨단무기체계 도입, 과학기술의 발달 등 국방환경 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교육소요를 지속 검토하여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있다. 특히 정예장교 육성을 위한 사관학교 교육체계 개선, 우수 부사관의 안정적 충원 및 양성을 위한 부사관 학군단 운영, 병 숙련도 향상을 위한 신병 교육체계 개선, 국방 온라인교육 활성화를 추진하였으며, 「국방개혁 2.0」과 연계하여 군무원 교육체계와 합동·연합작전 교육체계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군의 학교교육 현황은 [도표 3-12]와 같다.

[도표 3-12] 각 군 및 국직·합동 교육기관의 교육과정 현황

2020년 기준, 단위 : 과정 수

구분	계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국직 · 합동부대
양성교육	35	14	7	8	5	1
보수교육	2,344	776	908	434	28	198

사관학교 교육체계 개선 창의적이고 주도적인 정예장교 양성을 위해 사관학교 교육체계를 개선하였다. 자율성이 발휘될 수 있도

록 생도 주도의 토론·발표식 수업과 프로젝트 수행 등 '참여형 교육'을 강화하고 자기 주도적 학습여건을 조성하였다. 또한 야전 요구를 반영한 실전적 군사훈련을 위해 장교 초등군사반 교육과 연계한 생도 훈련목표를 정립하고 맞춤형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국방부는 사관생도들의 합동작전에 대한 이해와 필요성 인식을 위해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매년 2~3주간 체험·현장 중심의 합동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1학년 생도들은 과학화 전투훈련과 GOP 부대 주·야간 경계체험 등을 강화한 육군 이해 교육을 실시하였고, 2학년 생도들은 올바른 국가관을 확립하고 해군 이해도 제고를 위해 대형수송함, 구축함 등 해군 함정에 승함하여 한반도 주변 국가와 국내 주요 도서(울릉도·독도, 이어도 근해 등)를 방문하고 다양한 해상훈련과 함상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3군 사관생도 합동순항훈련'을 실시하였다. 3학년 생도들은 공군 작전부대 견학, 공중 항법훈련 체험 등을 통해 공군을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였다. 2019년부터는 3군 사관학교 합동교육을 확대하여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참여시켰으며, 육군3사관학교를 대상으로 한 합동성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부사관 학군단 정식운영 우수 부사관 인력의 안정적 확보 및 양성을 위해 2015년부터 6개 전문대학에 '부사관 학군단'을 시범운영하였으며, 2019년에 부사관 학군단 정식운영 및 확대방안을 확정하여 해군·공군은 2020년 1월 1일부터, 육군·해병대는 2020년 4월 1일부터 정식운영하고 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개 기수 643명이 임관하여 임무수행 중이며, 현재 부사관 학군단 5, 6기가 재학 중에 있다.

신병 교육체계 개선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의 병 복무기간 단축에 따라 발생될 수 있는 병 숙련도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신병 교육체계를 개선하였다. 야전부대의 의견을 반영하여 교육과정을 부대 임무와 역할에 부합한 개인화기 사격과 전투체력단련, 정신전력 등 핵심 과목 위주로 개선하여 교육하고 있다. 또한 육군의 철야 행군을 포함한 3박 4일 야외종합훈련, 해군의 해상훈련, 공군의 생존술 훈련, 해병대 이함훈련 및 전투수영 등 각 군의 특성화 훈련을 강화하였다.

국방 온라인 교육 활성화 우리 군은 소집교육으로 인한 야전부대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양질의 교육을 다수의 교육생에게 적

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온라인 교육을 확대하고 있다. 교육 입교 대상자들은 각 교육기관의 소집교육 전 사전 온라인 강의를 통해 학습준비를 하고 있으며, 야전부대의 근무자들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우리 군의 각 교육기관이 제공하는 다양한 강의를 수강할 수 있다. 2020년 기준 합동군사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국방정신전력원, 육군 보병학교 등 19개 기관에서 52개의 국방 통합 온라인 공개강좌(M-MOOC)[54]를 제공하고 있다. 국방부는 향후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군사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인터넷 기반 온라인 교육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군무원 교육체계 개선

「국방개혁 2.0」에 따른 군무원 정원 및 역할 확대에 따라 군무원 교육체계 전반을 개선하고 있다. 그간 각 군에서 시행하던 신규 채용자 교육을 2023년부터는 보다 체계적인 전군 통합교육 형태로 개선할 계획이다. 6급 이하의 실무자 보수교육은 직급별 요구되는 역량과 소양함양을 중점으로 교육과목을 재검토하고 내용을 보완하였으며, 4·5급 관리자 직급을 대상으로 중견리더 장기교육 과정을 신설하여 군무원 리더로서의 소양과 리더십 함양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향후 중·장기적으로 국방 행정·기술·연구 분야의 전문학위교육 시행을 위해 군무원 인사정책 차원의 개선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합동·연합작전 교육체계 구축

미래전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하여 합동·연합작전 수행 역량을 갖춘 군사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해 장교 계급별 교육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장교 양성과정에서는 사관학교 합동교육 확대와 더불어 학군·학사사관 등 후보생 교육과정에도 합동교육 관련 기본소양 교육과목을 신설하였다. 위관장교 보수교육과정에는 타군의 조직·편성과 합동·연합작전 수행 기본개념을 이해하기 위한 교육을 추가하였다. 소령·중령 장교 중 선발된 일부 인원에 한해 시행하던 합동·연합작전 전문교육을 다수의 인원에게 제공하기 위해 2021년 목표로 원격교육과 단기과정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정책부서와 합동부대에 근무하는 대령을 대상으로 합동·연합 정책관리자 과정을 운영 중에 있으며, 준장 진급자를 대상으로 한 고위정책결정자 과정의 교육과목에 합동·연합작전 관련 과목을 확대 반영하였다.

합동·연합작전 교육에 대한 합동참모본부의 역할을 강화하였으며 합동참모대학이 우수교관을 확보하도록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등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54) 군사교육을(Military) 수강인원의 제한 없이(Massive) 모든 사람이 수강하는(Open), 웹기반으로(Online) 구성된 강좌(Course) (M-MOOC: Military – Massive Open Online Course)

3. 실전적 부대훈련 강화

추진 중점 우리 군은 안보환경의 변화, 병 복무기간 단축, 도시화 및 대민 갈등 증가 등 변화된 교육훈련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실전적 부대훈련을 강화하고 있다.

합동·연합작전 수행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국내외 연합훈련을 확대하고 육·해·공군을 통합한 합동부대를 편성하여 많은 인원들이 훈련을 경험하도록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부대의 전투수행능력 향상과 훈련 제한사항을 극복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 첨단기술을 적용한 과학화 교육훈련체계를 확대하고 있다.

육·해·공군 및 해병대 주요 훈련 육군은 전장 중심의 실전적인 교육훈련을 위해 개인 및 부대 훈련을 강화하고 과학화 교육훈련을 확대하는 한편, 다양한 연합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육군 전투력 발휘의 근간인 개인 전투력 강화를 위해 전투임무 위주의 체력단련을 통해 전장 상황에서의 극복능력을 배양하고 있다. 또한, 전투전문가가 우대받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개인 및 팀 단위의 최정예 300전투원(300 Warriors)을 연1회 선발하여 포상하고 있다. '임무에 기초한 교육훈련'을 구현하기 위해 부대가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할 과업을 선정한 임무필수과업목록(METL)[55]에 의한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병 복무기간 단축, 기상이변, 민원 등 교육훈련의 다양한 제한사항을 극복하기 위해 첨단과학기술을 활용한 과학화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있다. 기존 대대급 과학화 전투훈련단(KCTC)[56] 훈련체계를 7년에 걸친 개발을 통해 2018년부터 여단급 훈련체계로 개선하여 훈련하고 있으며, 마일즈 장비[57]의 야전부대 확대보급을 통해 주

육군 KCTC 훈련

55) Mission-Essential Task List

56) Korea Combat Training Center

57) 레이저 발사기와 감지기 등 첨단 과학기술을 이용한 교육훈련장비(MILES : Multiple Integrated Laser Engagement System)



육군항공 시뮬레이터 (2020년 10월)



한미 특수작전 훈련 (2020년 4월)

둔지 또는 임의지역에서 소부대 쌍방교전 훈련을 활성화하고 있다. 또한 가상의 전장환경에서 사격, 조종, 전술모의 등을 훈련할 수 있는 모의장비(Simulator)를 활용하여 다양한 우발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컴퓨터 모의기법을 활용한 전투지휘훈련(BCTP)[58]을 통해 지휘관과 참모의 전투지휘능력과 통합전투력 운용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향후 육군은 실기동 훈련(Live), 모의장비훈련(Virtual), 컴퓨터 모의기법을 활용한 전투지휘훈련(Constructive), 게임(Gaming) 등 과학화 훈련체계를 통합하는 합성훈련환경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연합작전 수행능력 배양과 상호운용성 제고를 위해 한미특수작전, 비정규전, 제병협동훈련, 공중강습, 고공 강하훈련 등 다양한 연합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미 8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밴달(Vandal) 훈련센터에서의 연합 소부대 과학화 훈련과 미 본토 국립훈련센터(National Training Center)에서의 연합 소부대훈련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육군 연합훈련 현황은 [도표 3-13]과 같다.

[도표 3-13] 최근 3년간 육군 연합훈련 현황

단위 : 회

구분	계	국내			국외		
		소계	한미연합	다자간 훈련	소계	한미연합	다자간 훈련
2018년	33	31	31	-	2	-	2
2019년	91	89	89	-	2	1	1
2020년	30	29	29	-	1	1	-

* 2020년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한미 협의하 훈련 조정 시행

해군은 동·서·남해 각 해역에서 전장환경에 부합하는 실전적 협동[59] 및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한미 및 다자간 연합훈련을 통해 작전수행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또한 사관생도의 직무수행능력 배양과 국익 증진을 위해 매년 순항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협동 및 합동훈련은 지상·해상·공중의 합동전력이 참가하며, 대함·대잠·방공작전 등 다양한 작전유형에 부합된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대표적인 협동 및 합동훈련으로는 해상 기동훈련, 서북도서방어훈련, 북방한계선(NLL) 국지도발 합동대응훈련, 합동상륙훈련, 동해영토 수호훈련 등이 있으며, 전투탄 실사격을 통해 정밀유도무기의 성능을 확인하고 운용능력을 극대화하고 있다.

연합방위태세 확립과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한미 연합훈련뿐만 아니라 인도주의적 지원과 군사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다자간 연합훈련을 강화하고 있다. 한미 연합훈련은 작전수행능력 제고와 상호운용성 증대를 위해 한미 해상기회훈련, 연합



해군 순항훈련

58) Battle Command Training Program

59) 어떤 특정한 공통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휘관계가 없는 2개 이상의 부대가 상호협력하는 것



ADMM-Plus 해양안보분과 연합 해상기동훈련
(2019년 5월)

전구대잠전 훈련, 기뢰전·구조전·특수전 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다자간 연합훈련으로는 코브라골드 훈련, 서태평양 기뢰대항전 훈련, 환태평양훈련(RIMPAC)[60], 다자간 구조훈련(KOMODO)[61],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해양안보분과 연합 해상기동훈련(FTX)[62]과 일본·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수색 및 구조훈련(SAREX)[63]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 주변국 및 우방국과의 연합기회훈련도 확대하고 있다. 최근 3년간 해군 연합훈련 현황은 [도표 3-14]와 같다.

[도표 3-14] 최근 3년간 해군 연합훈련 현황

단위 : 회

구분	계	국내			국외		
		소계	한미연합	다자간 훈련	소계	한미연합	다자간 훈련
2018년	66	58	51	7	8	-	8
2019년	81	68	61	7	13	1	12
2020년	88	75	70	5	13	4	9

순항훈련[64]은 전 세계를 권역별 4개 항로로 구분하여 매년 항로를 번갈아 가면서 약 100~140여 일 동안 진행하고 있다. 2019년에는 1954년 순항훈련을 처음 실시한 이래로 12개국 141일이라는 역대 최장기간의 훈련을 실시하였고,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어려운 여건에서도 사관생도의 실무적응능력 배양을 위해 방역대책을 철저히 강구한 가운데 60여 일간 2개국 방문과 원양항해 훈련을 실시하였다. 더불어 순항훈련 간 방문국과의 군사 교류·협력뿐만 아니라 6·25 참전국 보은행사와 해외 교민 위문행사, 방산협력 등을 통해 국가 위상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공군은 전방위 군사대비태세 확립과 주도적인 항공우주작전 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규모의 단독 및 합동훈련, 국내외 연합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공군 단독훈련으로는 대규모 항공전역 훈련(Soaring Eagle), 공격편대군 훈련, 공대공 실사격 및 공대지 폭격훈련, 방어제공 종합훈련, 감시정찰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합동훈련은 합동방공, 긴급항공차단, 대화력전, 근접항공지원, 서북지역 공해 합동훈련, 대규모 해상 조난자 탐색구조 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다.

국내 연합훈련으로는 대규모 연합공중작전 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연합 편대군



공군 해상 조난자
합동 탐색구조 훈련

60) Rim of the Pacific Exercise

61) KOMODO는 인도네시아 소순다 열도의 섬 이름

62) Field Training eXercise

63) Search and Rescue Exercise

64) 해군사관학교 4학년 사관생도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원양 항해훈련



연합 편대군 종합훈련 (2019년 11월)

종합훈련(Korea Flying Training), 전시 작전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전투준비태세 종합훈련(CFTE)[65] 및 연합 특수작전훈련(Teak Knife), 연합 전투탐색구조훈련(CSAR-TE)[66] 등을 실시하고 있다. 2019년부터는 연합훈련 기회확대를 위해 중규모 연합편대군(CFE)[67] 훈련과 한미 전투대대간 소규모로 실시하는 쌍매브라보 연합훈련, 연합 근접 항공지원훈련을 신설하였다.

해외 연합훈련은 다국적 연합 전구급 공중훈련(Red Flag-Alaska)과 환태평양 지역 국가들간 인도적 지원 및 재난구호 협력 훈련(Cope North) 및 전시 피해복구 능력 향상을 위한 연합전시 피해복구 훈련(Silver Flag)에 정기적으로 참가하고 있다. 또한 2018년부터는 침투 및 투하전술 등 특수작전 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미국 고급공수 전술훈련에 참가하고 있다. 향후 다양한 국가와의 연합작전 수행능력 향상 및 상호운용성 확보와 전술 교류를 위해 다양한 해외 연합훈련 참가를 추진하고 있다. 최근 3년간 공군 연합훈련 현황은 [도표 3-15]와 같다.

[도표 3-15] 최근 3년간 공군 연합훈련 현황

단위 : 회

구분	계	국내			국외		
		소계	한미연합	다자간 훈련	소계	한미연합	다자간 훈련
2018년	21	18	17	1	3	-	3
2019년	22	18	17	1	4	1	3
2020년	68	66	66	-	2	-	2

이외에도 지상모의훈련 장비(Simulator), 공중전투기동훈련 장비(GPS-ACMI)[68], 전자전훈련 장비(EWTS)[69] 등을 활용한 과학화 훈련과 다국적 우주상황조치 협력 강화를 위한 국제 우주상황조치 연합연습(Global Sentinel)을 통해 우주상황인식 능력 제고 및 연합 우주작전 수행능력 향상을 추진하고 있다.

해병대는 강제진입작전 수행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상륙훈련을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신속기동부대 훈련, 연합·합동훈련, 제대별 전술훈련 등을 통해 최고도의 작전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상륙훈련을 통해 연합·합동 강제진입작전 능력을 배양하고 있으며, 신속기동부대의 서북도서 방어작전·안정화작전·비군사작전 수행능력을 신장하고 있다. 이 외에도 서북도서 증원훈련, 울릉도 및 제

65) Combined Flying Training Event

66) Combat Search And Rescue Training Event

67) Combined Forces Exercise

68) Air Combat Maneuvering Instrumentation

69) Electronic Warfare Training System

주도 전지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연합훈련의 경우, 한미 해병대 전술제대급 연합훈련(KMEP)[70]을 연 20여 회 이상 실시하여 병과별 능력 및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코브라골드 훈련, 칸퀘스트 훈련, 환태평양훈련(RIMPAC) 등의 해외 연합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2021년부터 호주 탈리스만 세이버(Talisman saber)훈련, 필리핀 카만닥(Kamandag) 훈련 참관 등 다자간 해외 연합훈련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 3년간 해병대 연합훈련 현황은 [도표 3-16]과 같다.



합동상륙훈련 (2020년 4월)

[도표 3-16] 최근 3년간 해병대 연합훈련 현황

단위 : 회

구분	계	국내			국외		
		소계	한미연합	다자간 훈련	소계	한미연합	다자간 훈련
2018년	15	12	12	-	3	-	3
2019년	25	24	24	-	1	-	1
2020년	8	7	7	-	1	-	1

* 2020년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한미 협의하 훈련 조정 시행

제대별 전술훈련은 독립 전장을 주도, 관리할 수 있는 작전수행 완전성 구비를 위해 실시하고 있으며, 부대별 특화된 공수훈련, 상륙기습훈련, 유격훈련 등과 연계한 전술훈련을 적극 시행하고 있다. 또한 과학화장비를 활용한 쌍방훈련으로 실전적 훈련을 강화하고 있으며, 주기적인 상륙함 탑재훈련 및 대대급 이하 상륙작전 기회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합동[71]연습[72]과 훈련[73]

우리 군은 급변하고 있는 안보상황에 대비하여 합동작전 수행능력을 제고하고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하여 합동연습과 훈련을 강화하고 있다.

을지태극연습은 정부의 을지연습과 우리 군 단독연습인 태극연습을 연계하여 국가위기관리역량 강화 및 전시전환 연습을 통한 군사대비태세 유지를 목적으로 2부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다. 1부 국가위기대응연습은 중앙 및 지방행정기관과 협조하여 국방부·합참·각 군 본부를 중심으로 통합된 상황관리 및 대응 절차를 숙달하

70) 한국에서 실시하는 한미 해병대 전술 제대급 연합훈련으로 한미 해병대가 연합작전수행능력 및 상호운용성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훈련 (KMEP : Korea Marine Exercise Program)

71) 동일국가의 2개 군 이상의 부대가 동일 목적으로 참가하는 각종 활동, 작전, 조직

72) 작계수행절차 숙달을 위해 작전계획, 교리, 작전환경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실제와 같도록 실시하는 훈련(Exercise)

73) 개인 및 부대가 부여된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군사지식과 전투기술을 행동으로 숙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실천적인 활동(Training)

며, 2부 전시대비연습은 우리 군 단독 지휘소연습(CPX)으로 작전사급 이상 제대 전투참모단이 참가하여 컴퓨터 모의모델 지원 하에 국지도발 상황에 따른 통합방위사태 선포, 방어준비태세 격상 등 전쟁 이전 단계의 전시전환 절차와 전면전 초기 대응절차를 중점적으로 숙달하고 있다.

호국훈련은 합동작전 수행능력과 통합전투력 운용 및 작전지원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합참 주관 하에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방어적 성격의 야외 기동훈련이다. 합참 통제 하에 통합된 상황조성으로 각 군 및 작전사의 합동성을 강화하고 제 기능이 통합된 대응능력과 현존전력 운용을 극대화하고 있다.

화랑훈련은 통합방위본부 주관 하에 민·관·군·경·소방의 모든 작전요소가 참가하는 후방지역 종합훈련으로 전·평시 연계된 통합방위작전계획 시행 및 지원 절차를 숙달하고, 지자체장 중심의 통합방위태세 확립과 지역주민 안보의식 고취 및 공감대 확산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고 있다. 특히 재난·테러 등 점증하는 초국가적·비군사적 안보위협 분야에 대한 통합방위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됨에 따라, 화랑훈련을 통해 전 국가방위요소의 실질적인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통합대응능력을 배양하고 있다.

연합[74]연습과 훈련 한미는 현 연합방위체제 하에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 연합전력의 전쟁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전투준비태세와 연합작전수행 및 작전지속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연합연습 및 훈련을 시행하고 있다. 변화하는 안보상황을 고려하여 2019년부터는 한미 협의 하 키리졸브(KR) 연습과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대체하는 새로운 연합지휘소훈련(CCPT)[75]을 전·후반기 각 1회씩 시행하고 있다. 연합지휘소훈련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의한 전장 상황을 조성하여 연합방위태세를 점검하고 전쟁수행절차를 숙달하는 한미 연합 전구급 지휘소연습이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하여 2017년과 2018년에는 합참이 계획분야, 대항군 운용, 사후검토를 주도함으로써 우리 군 주도의 전구 연합연습 수행능력을 배양하였으며, 특히 2019년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 간 기본운용능력(IOC)[76] 검증 평가를 병행하여 미래 지휘구조 적용 하 연합작전 주도 능력을 숙달하였다.

앞으로 전·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을 통해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굳건히 유지하고 우리 군의 작전수행능력을 향상시키며, 미래 지휘구조 아래 검증평가를 병행 추진하여 전작권 전환 조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독수리(FE)[77]훈련은 한미연합작전능력 향상을 위한 핵심적 훈련이었으나, 북한의

74) 2개 이상 동맹국 부대나 기관 간의 협력관계

75) Combined Command Post Training

76) Initial Operational Capability

77) Foal Eagle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한 군사적 뒷받침의 하나로 2019년 한미 국방부 협의 하에 종료되었다. 하지만 개별적인 연합훈련은 이전과 같이 연중 지속 시행함으로써 확고한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우리 군은 2018년부터 전구연습·훈련체계인 합동연습·훈련체계(JTS)[78]를 각 군 본부, 작전사, 합동부대까지 확대 적용[79]하여 체계적인 연습·훈련 관리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합동 및 연합연습을 위한 각종 워게임(War-game) 모델을 개발하여 적용하는 등 우리 군의 연합연습 수행능력을 향상시키고 효율적인 연합연습·훈련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4. 장병 정신전력 강화

확고한 국가관·안보관 확립 교육

우리 군은 장병들의 올바른 국가관·안보관 정립과 필승의 군인정신 함양을 위해 체계적으로 정신전력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급변하는 안보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안보관을 견지한 가운데, 군 본연의 임무완수와 대비태세 중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조함으로써 전방위 군사대비태세를 확립하고 있다. 특히 장병의 명확한 안보관 확립을 위해 북한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교류와 협력의 대상임과 동시에 여전히 현실적인 군사적 위협으로서, 도발한다면 단호하게 응징할 태세와 능력을 갖추어야 함을 분명하게 교육하고 있다.

신병 정신전력교육은 '선 정신무장, 후 전투기술 숙달'을 목표로 필승의 군인정신, 국가관, 안보관 과제를 집중 편성한 정과교육을 추진하고, 훈련과 병영생활 전반을 정신전력교육의 장으로 활용함으로써 강인한 군인정신으로 무장한 군인 만들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장병 정신전력교육은 학교 정신전력교육과 부대 정신전력교육으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다. 학교 정신전력교육은 교관으로서 필요한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발표·토의식 교육과 교관화 실습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부대 정신전력교육은 제대별 지휘관을 중심으로 일일-주간-반기 단위로 체계적이고 반복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교수·학습 패러다임 개선으로 강인한 군인정신 체득

정신전력교육의 성과와 학습 몰입도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추진하고 있다. 기존 강의와 토의

78) Joint Training System

79) 합참은 2012년도, 작전사는 2017년도, 각 군 본부 및 합동부대는 2018년부터 적용

위주 교육에서 체험형·자기 주도적 교육[80]으로 전환함으로써 장병 스스로 정신적 대비태세를 확립하고 내적 성장과 군 복무의 자긍심을 고양하도록 하였다.

또한 임무 중심의 교육 콘텐츠[81]와 강인한 군인정신 함양을 위한 '영화 속 군인정신' 프로그램, 첨단 과학기술을 접목한 디지털 교재[82] 시범 개발 등을 통해 장병들이 자연스럽게 전사(戰史)에 대해 이해하고 역사현장을 간접 체험하여 강인한 군인정신을 체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애국심과 자긍심 고양을 위한 역사교육 강화

장병들이 올바른 역사 인식과 애국심, 자긍심을 고양할 수 있도록 역사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장병 정신전력교육 연간 계획에 독립군·광복군 역사교육을 반영하고, 독립기념관과의 업무협업 프로그램을 지속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주요 계기별 교육과 특집 다큐멘터리[83] 제작 및 방영을 통해 장병의 올바른 역사 인식과 애국심, 전우애를 함양하는데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앞으로도 우리 군은 교육기법의 혁신과 내실 있는 교육을 통해 강인한 군인정신을 함양하고 정신적 대비태세를 확고히 유지해 나갈 것이다.



독립기념관 방문 체험식 역사교육

국방정신전력원 운영

국방정신전력원은 군인정신 함양 및 국가관·안보관 확립에 관한 교육, 정신전력에 관한 전투 발전 및 교리연구, 장병 정신전력교육 관련 콘텐츠 개발을 주 임무로 하는 전문 연구 및 교육기관이다.

군 내 유일한 군인정신 전문교육과정 이외에도 공보정훈 장교 및 부사관 대상의 필수 보수과정과 문화예술, 통일안보 등의 다양한 전문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장병 정신전력 관련 수준 높은 콘텐츠를 개발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정신전력 발전을 위한 세미나 개최, 논문 공모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장병 인성교육 추진

바르고 건전한 민주시민이자 훌륭한 군인을 양성하기 위해 창의, 용기, 책임, 존중, 협력, 충성, 정의의 인성교육 7대 덕목을 중심으로 장병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민간 인성교육 전문가에 의한 집중교육과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활용한 생활화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80) 인터넷 강의·북 콘서트·문화예술과 융합된 강연과 장병이 직접 강사가 되는 '나도 명강사'와 같은 장병 주도적 참여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교육

81) 각 군 장병들이 수행하고 있는 임무와 연계한 콘텐츠 제작(예 : 영공 침범 대응, GOP 완전작전, 영해 수호 임무 수행 등)

82) 몰입감과 현실감이 뛰어난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의 기술을 이용하여 현장에 가지 않고 체험이 가능한 교육기법

83)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다큐멘터리(2019년), 6·25전쟁 70주년 계기 다큐멘터리(2020년)

제 4 장

강력한 국방개혁 추진을 통한 혁신강군 건설

제1절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정예화된 부대구조 개편
제2절 작전·전투 중심의 국방인력구조 개편 및 예비전력 정예화
제3절 합동성에 기초한 전력증강 추진
제4절 4차 산업혁명 기술 기반 '디지털 강군, 스마트 국방' 구현





각 군 첨단전력

제1절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정예화된 부대구조 개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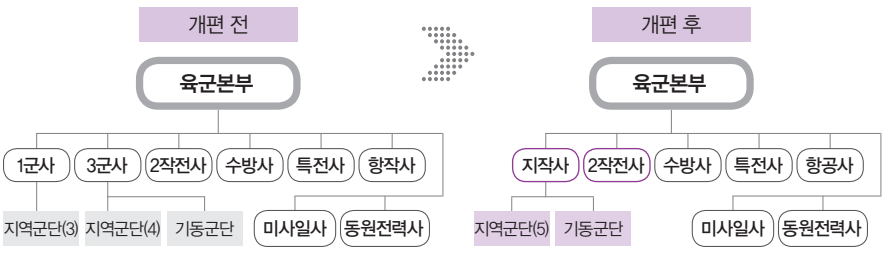
국방부는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병력집약형 부대구조에서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정예화된 구조로의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1. 각 군 부대구조 개편

육군 육군은 신속결정작전 수행이 가능한 부대구조로 개편하고 있다. 상비병력은 48.3만 명에서 2022년까지 36.5만 명으로 11.8만 명을 감축하고, 이와 연계하여 야전군사령부를 3개에서 2개로 감축하였고, 군단을 8개에서 6개로, 사단을 39개에서 33개로 감축해 나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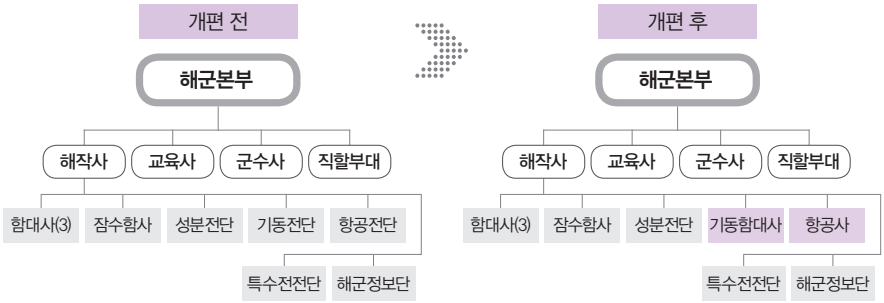
2019년 1월 1일, 연합·합동 지상작전을 주도할 수 있도록 1·3야전군사령부를 통합하여 지상작전사령부를 창설하였다. 지역군단은 군단 중심의 작전수행체계를 구축하여 축선별 독립작전 수행이 가능하도록 개편하고, 기동군단은 기동력과 화력지원 능력을 대폭 향상시켜 신속결정작전 수행이 가능하도록 개편하고 있다. 2작전사령부는 통합방위작전 수행이 가능하도록 기존 향토사단을 지역방위사단으로 개편하여 광범위한 후방지역에서의 작전수행능력을 향상시키고 작전지속지원능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육군 부대구조 개편계획은 [도표 4-1]과 같다.

[도표 4-1] 육군 부대구조 개편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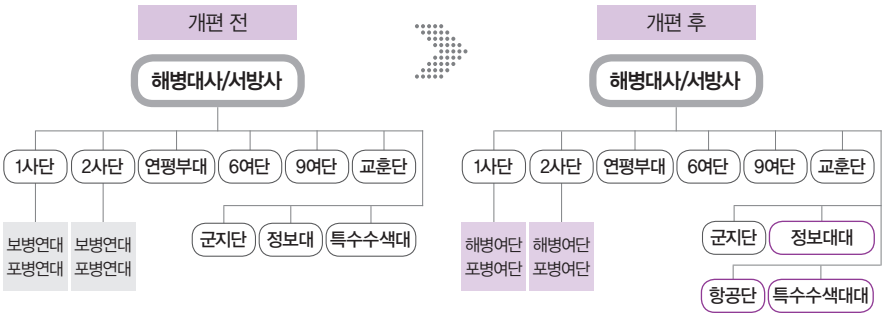
해군 해군은 수상·수중·항공의 입체적인 해상작전 수행이 가능한 부대구조로 개편하고 있다. 기동전단은 원·근해 해양에서 기동부대의 독립적인 작전수행을 위해 구축함 전력 증강과 연계하여 기동함대사령부로 개편해 나갈 것이다. 항공전단은 넓은 해역에 대한 해상항공작전의 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해상초계기 및 해상작전헬기 등 전력증강과 연계하여 항공사령부로 개편해 나갈 것이다. 해군 부대구조 개편계획은 [도표 4-2]와 같다.

[도표 4-2] 해군 부대구조 개편계획



해병대 해병대는 입체고속상륙작전, 신속대응작전 및 전략도서방위 등 다양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공지기동형 부대구조로 개편하고 있다. 해병대사령부는 상륙작전 등 연합·합동작전 수행 및 작전지휘가 가능하도록 정보대대, 특수수색대대, 항공단 등을 편성할 것이다. 사단 예하에 보병연대를 정보·기동·화력이 보강된 여단급 부대로, 포병연대는 대포병 탐지 및 장거리 정밀타격능력을 보유한 포병여단으로 개편해 나갈 것이다. 해병대 부대구조 개편계획은 [도표 4-3]과 같다.

[도표 4-3] 해병대 부대구조 개편계획



공군 공군은 전략적 억제 및 항공우주작전 수행이 가능한 부대구조로 개편하고 있다. 한반도 상공의 위성활동 감시능력 구비를 위해 우주작전대를 창설하였고, 감시정찰능력 강화를 위한 중·고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와 기존 정찰자산을 효율적으로 통합운용하기 위해 정찰비행단을 창설하였다. 중·장기적으로는 합동이동표적감시통제기 및 전자전기 전력화와 연계하여 감시통제비행전대와 전자전전대를 창설할 것이다. 또한, 복합·광역다층방어를 위해 호크포대에서 천궁포대로 개편하고, 탄도탄감시대대 및 장거리지대공미사일(L-SAM)대대 창설 등 방공유도탄사령부를 개편해 나갈 것이다. 공군 부대구조 개편계획은 [도표 4-4]와 같다.

[도표 4-4] 공군 부대구조 개편계획



2. 국직·합동부대 개편

국직·합동부대는 부대별 고유 임무수행의 효과성과 부대해체로 인한 영향요소 등을 고려하여 군별 전문성과 균형편성 강화, 민간인력 확대, 조직 효율화, 합동성 강화, 적정 지휘범위 보장 등에 중점을 두고 부대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군 보안·방첩 및 군사안보지원 등의 부대임무에 맞게 편성과 기능을 개편하였다. 국방전비태세검열단은 합참의장의 전투준비태세 검열 기능을 보강하고, 작전부대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을 보장하기 위해 국방부에서 합동참모본부로 지휘관계를 조정하였다. 합동군사대학교는 합동성 교육을 유지한 가운데 국방대학교의 지휘를 받는 것으로 조정하였고, 합동군사대학교 예하의 육·해·공군대학은 각 군이 요구하는 전문성 함양을 위해 각 군의 지휘를 받는 것

으로 조정하였다. 국군사이버사령부는 사이버 전장에서의 작전수행능력을 보강하기 위해 국직부대에서 합동부대인 사이버작전사령부로 전환하였다.

또한, 행정·지원부대에서 근무하는 현역을 전투부대로 전환하고, 해당 직위를 장기간 근무가 가능한 민간인력으로 대체하는 등 인력구조를 개편하여 전투력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 일부 국직부대는 통합하거나, 그 기능을 각 군으로 전환시켜 군별 전문성과 특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제2절

작전·전투 중심의 국방인력구조 개편 및 예비전력 정예화

국방부는 미래 전략환경, 군사전략, 부대 개편계획 등과 연계하여 상비병력을 2022년까지 50만 명으로 단계적으로 감축할 것이다. 이에 따른 전투력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전투 분야 군인 직위를 전투부대로 전환하고, 그 직위를 민간인력으로 대체해 나가는 등 작전·전투 중심의 국방인력구조 개편을 가속화하고 있다. 또한, 첨단기술이 적용된 예비군 훈련체계 발전, 평시 복무 예비군제도 도입 추진 등 예비전력 정예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1. 상비병력 50만 명으로 감축

국방부는 미래 전략환경, 군사전략, 부대개편 계획 등과 연계하여 병역자원 수급 전망을 고려해 상비병력을 2022년까지 50만 명으로 단계적으로 감축할 예정이다. 육군병력은 36만 5천 명 수준으로 감축하고 해군과 해병대, 공군은 현 정원을 유지할 것이다.

상비병력은 2017년 61만 8천여 명이었으나, 부대 해체 및 편성 효율화 등을 통해 2020년 현재 55만 5천여 명까지 감축되었다. 2022년 말까지 최종 50만 명으로 감축될 예정이며, 감축계획은 [도표 4-5]와 같다. 또한 군 구조를 병력집약형에서 첨단무기 기반 기술집약형으로 전환하고, 병력 구조도 병에서 숙련 간부 위주로 정예화함으로써 상비병력 감축에도 전투력은 오히려 강화될 것이다.

[도표 4-5] 상비병력 감축 및 민간인력 확대 계획

구분		2017년	2020년	2022년
국방인력 (상비병력+민간인력)		65.0만여 명	60.2만여 명	55.8만여 명
상비병력	계	61.8만여 명	55.5만여 명	50.0만여 명
	육군	48.3만여 명	42.0만여 명	36.5만여 명
	해군 (해병대)	7.0만여 명 (2.9만여 명)	7.0만여 명 (2.9만여 명)	7.0만여 명 (2.9만여 명)
	공군	6.5만여 명	6.5만여 명	6.5만여 명
민간인력 (국방인력 대비 비중)		3.2만여 명 (5%)	4.7만여 명 (7.8%)	5.8만여 명 (10.4%)

2. 작전·전투 중심의 국방인력구조 개편

국방인력구조 재설계 우리 군은 2006년 국방개혁 추진 이후 상비병력을 감축하고, 숙련도와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에 부사관 위주로 간부를 증원해 왔다.[1] 그러나 청년 인구와 중장기적인 청년실업률 감소 전망에 따라 향후 군 간부 획득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또한 상비병력 감축 및 병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전투력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국방부는 기존의 간부 증원 중심의 병력구조 개편계획을 보완하여 군인, 군무원, 민간근로자를 모두 포괄하는 국방인력 개념을 설계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국방인력구조 개편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첫째, 「국방개혁 2.0」에 따른 부대구조와 병력 규모에 맞게 군별·신분별·계급별 정원을 재설계하고, 둘째, 비전투 분야는 군무원 등 민간인력으로 전환하고, 군인은 작전 및 전투 중심으로 배치하며, 셋째, 초임 간부 획득 전망, 최첨단 무기 운용, 숙련된 전투력 확보 필요성 등을 고려해 장교 및 부사관의 계급구조를 기존 '대량획득–단기활용'의 비효율적인 피라미드형 구조에서 '소수획득–장기활용'이 가능한 항아리형 구조로 개편한다.

국방부는 이러한 국방인력구조 개편계획을 중기 및 연도 부대계획에 반영해 실행력을 제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숙련 간부 중심의 정예화된 강한 군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비전투 분야 민간인력 활용 확대 국방부는 상비병력 감축에 따른 전투력 손실을 방지하고 국방행정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높이기 위해 비전투 분야 민간인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2017년 약 5% 수준이었던 국방인력 대비 민간인력[2] 비중을 2022년 약 10%까지 확대한다는 목표 아래 2019년 약 6천여 명, 2020년 약 4천여 명의 민간인력을 증원하여 2020년 현재 국방인력 대비 민간인력 비중을 약 7.8%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민간인력은 군인이 직접 수행해야 할 전투·지휘통제 직위를 제외한 비전투 분야 직위를 대체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군무원은 주로 정비, 예산 편성 등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필요한 직위를, 민간근로자는 주로 전산, 시설관리, 어학 등 민간의 전문성이 활용되기 쉬운 직위를 대체하고 있다.

1) 상비병력을 2005년 말 68.2만 명에서 2020년 말 55.5만 명으로 12.7만 명 감축하였고, 부사관을 2005년 말 9.7만 명에서 2020년 말 12.9만 명으로 3.2만 명 증원

2) 민간인력은 '군무원'과 '민간근로자'로 구분

현행 작전부대 병력 보강 국방부는 상비병력 감축에도 상시 전투준비태세가 차질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GOP 및 해안경계, 방공 감시·정찰, 초동조치 등 24시간 작전임무를 수행하는 현행 작전부대 병력을 보강하고 있다. 2019년은 GOP와 해안경계 병력을 최우선으로 보강하였고, 2020년에는 방공 감시·정찰 병력을 보강하였으며, 향후 대테러부대, 주둔지 경계병력 등도 지속 보강해 나갈 계획이다.

장군정원 조정 및 계급 적정화 국방부는 2018년 장군정원 감축을 「국방개혁 2.0」의 핵심 과제로 선정하고 2017년 말 기준 436명의 장군정원을 2022년까지 360명으로 감축하는 「장군정원 조정 계획」을 수립하였다. 2020년까지 조정 계획을 강력히 시행하여 46개의 장군정원을 감축하였고, 2022년까지 최종 감축 목표를 달성해 나갈 것이다.

3. 예비전력 정예화

동원준비태세 확립 국방부는 전쟁 억제력을 확보하고 전쟁지속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시·사변 또는 국가 비상사태 시 가용한 모든 인적·물적자원을 효율적으로 동원하여 군사작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국방동원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병력동원 분야는 군구조 개편, 예비군 자원 감소 등의 국방환경변화를 고려해 예비군 전체 규모는 유지하되 연차조정 및 연차별 훈련대상을 재판단하는 등 선택과 집중에 따라 예비군 편성·관리 방안을 정립하고 있다. 그리고 병무청과 협업하여 전시 초기에 주요 전투부대 위주로 우수자원을 지정하는 등 동원지정방법을 개선하여 자원관리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있다.

또한 물자동원 분야는 동원집행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각 군의 소요제기 단계부터 자원의 가용성, 업체 생산능력 등 전시 동원능력을 고려하고, 소요제기에 대해 관련 부처가 합동 소요 심의를 통해 검증함으로써 동원소요를 최적화하고 있다.

특히 2018년 창설된 육군 동원전력사령부의 임무수행체계를 정립함으로써 상비전력 수준의 전투력이 발휘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유사시 동원위주부대[3]가 즉각적인 임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부대의 전력증강 소요를 국방기획문서[4]에 지속 반영하고 전투긴요물자 관련 예산을 획득하고 있다. 또한 정예자원 위주의 동원지정, 예비군간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는 예비군

3) 동원전력사령부의 예하부대로 평시 편성률이 10% 미만인 동원사단, 동원지원단(동원보충대대), 동원자원호송단을 의미

4) 합동군사전략서(JMS : Joint Military Strategy),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JSOP : Joint Strategic Objective Plan)

부 비상근 복무제도, 실전적 훈련 강화 등을 통해 임무수행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예비군 편성 및 자원관리

예비군은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 편성·관리되고 있으며, 평시에는 동원훈련을 실시하고 지역방위와 재난에 대비하면서, 전시 등 유사 시에는 현역부대의 증·창설과 손실병력에 대한 보충, 민관군 통합방위작전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예비군은 「예비군법」과 「군인사법」에 근거하여 예비역 간부는 현역군인 계급별 연령 정년까지, 병사는 전역 후 8년까지 예비군에 편성되어 복무한다.

2020년 12월 기준 예비군의 규모는 275만여 명이며, 이 중에서 여성예비군과 특전 예비군 6천여 명이 지원예비군[5]에 편성되어 있다. 예비군부대는 행정구역 단위로 설치되는 지역예비군부대가 3,194개, 직장 단위로 설치되는 직장예비군부대가 823개 편성되어 있으며, 각 수임군부대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자연재해, 코로나19 등 사회재난 시 예비군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다.

예비군 훈련체계 발전

실전적인 훈련을 통한 예비군의 임무 수행능력 향상과 훈련장 관리,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4년까지 전국에 산재한 208개 예비군훈련장을 40개의 과학화 예비군훈련장으로 통합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과학화 예비군훈련장은 영점·기록사격, 분대전투사격 등이 가능한 영상 모의 사격장과 훈련장 주변 소음방지를 위한 자동화된 실내사격장, 교전훈련장비[6]를 활용하여 분대 단위 팀훈련이 가능한 시가지전투훈련장을 운용하고 있다.

또한 입소부터 훈련평가, 퇴소 등의 모든 훈련 과정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 예비군훈련관리체계를 통해 훈련성과를 제고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총 12개소의 과학화 예비군훈련장을 구축하고 가상현실(VR) 기반 영상모의사격시스템을 추가 도입하였다.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훈련이 없는 주말에는 훈련장을 개방하여 안보체험 등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가상현실(VR) 모의사격

5) 「예비군법」 제3조에 따라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예비군에 지원한 자 중에서 선발된 인원

6) 레이저 발사총기, 감지기, 훈련통제·분석시스템, 전광판 등으로 이뤄진 쌍방 교전훈련장비 일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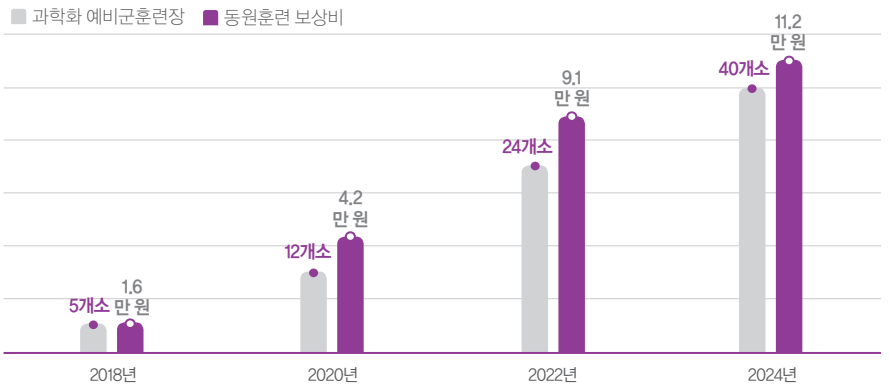
[도표 4-6] 스마트 예비군훈련관리체계



아울러 동원훈련장 시설을 현대화하기 위해 2025년까지 동원생활관, 예비군 식당, 안보교육관 등 116개소에 대해 신축 또는 리모델링을 완료할 예정이며, 2019년까지 56개소, 2020년에는 7개소의 신축 및 리모델링을 완료하였다.

예비군의 임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예비군 편성조정과 연계하여 훈련대상 및 시간 개선, 훈련모델 정립 등 전시임무 중심의 훈련체계로 개선할 것이다. 또한 예비군의 사기진작 및 훈련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동원훈련 보상비를 2022년까

[도표 4-7] 과학화 예비군훈련장 및 동원훈련 보상비 변화



지 병장 봉급 수준[7]으로 증액하는 방안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교통비 및 중식비 등 실비만 지급되고 있는 지역예비군훈련도 보상비가 지급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평시 복무 예비군제도 도입

국방부는 현역 규모 감축에 따른 전투력 저하 등에 대비하고 더 높은 수준의 동원준비태세를 갖추기 위해 2014년부터 '예비군간부 비상근 복무제도'[8]를 시행하였고, 실제 운영 결과 전투준비 시간 단축, 부대 전투력 향상 등의 성과가 검증[9]되었다. 2020년에는 현재 제도에서 소집 및 훈련기간을 늘리고 대상에 퇴역자를 추가하여 확대 운영하는 '평시 복무 예비군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평시 복무 예비군제도'의 이론적 배경과 도입방안 등을 정립하였고 「병역법」 및 「예비군법」 개정을 통해 입법화[10]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여 제도 도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 확산시키고자 한다. 향후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육군에 시험 적용한 뒤 점진적으로 전군에 확대 적용할 것이다.

7) 병장 봉급을 2022년까지 2017년 최저임금(6,470원)의 50%까지 인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동원훈련 보상비도 2022년까지 동일한 수준인 91,000원으로 인상을 추진

8) 동원사단 등 동원위주부대의 대대급 이하 부대에서 대위급 이하 동원지정된 간부를 30일 이내 소집 및 훈련하는 제도로, 2014년에 육군 79명을 시작으로 2020년 현재는 1,769명(육군 1,749명, 해군 20명)을 운용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는 공군 및 해병대 등 전군이 운용하도록 추진 예정

9) 육군 분석평가단 분석결과 (2018년 9월~2019년 1월) : 전투준비시간 16시간 단축 (75시간 → 59시간), 전투력 13% 향상 효과

10) ① 평시 복무 예비군 편성 및 운용 근거 마련
② 직무값에 따라 선발된 평시 복무 예비군 병력동원훈련소집 기간을 현 연간 30일 이내에서 30일을 초과하여 운용하도록 기간 연장
③ 지원 시 퇴역자를 예비역으로 편입 허용 등을 위해 「병역법」, 「예비군법」 일부개정 추진

제3절

합동성에 기초한 전력증강 추진

우리 군은 전방위 안보위협 대비 튼튼한 국방태세 확립을 위해 합동성에 기초한 전력증강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북한 핵·WMD 위협을 포함한 전방위 위협에 대응하는 핵심전력을 확충하고 있다. 또한 방위력개선사업을 통해 전력증강을 뒷받침하고 있다.

1. 전력증강 기본방향 및 주요 전력증강 사업

전력증강 기본방향

국방부는 전방위 안보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력을 구축하기 위해 전략적 억제능력, 작전적 대응능력, 포괄적 대응능력 등 핵심군사능력 중심으로 주요 전력을 증강하고 있다. 우선 북한 및 잠재적 위협에 대비하여 우리 군 주도의 감시·정찰, 지휘통제·통신 체계 등의 기반전력과 핵·WMD 대응 전력 등 전략적 억제능력을 최우선 구축하고, 군구조 개편을 위한 전장 기능별 필수전력을 보강하여 외부 군사도발을 조기에 격퇴하고 유사시 전승을 위한 작전적 대응능력을 확보할 것이다. 또한 사이버, 우주, 테러, 재난 등 비군사적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확대하고 재외국민 보호 등 국익수호 능력을 확보해 나갈 것이다.

전장 기능별로 보면, 전장인식전력은 군정찰위성, 다목적위성, 중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 다출처영상융합체계 등을 단계적으로 확보하여 한반도 및 관심권역 감시능력을 보강하고, 각 제대별 전장가시화 능력과 주·야간 감시능력 향상을 위해 정찰용무인항공기, 열상감시장비(TOD-Ⅲ), 다기능관측경 등을 확보해 나갈 것이다.

지휘통제·통신전력 분야는 합동 및 각 군 C4I[11]체계 성능개량을 통해 전구 및 합동지휘통제 능력을 보장하고, 대대급 이하 C4I체계를 구축하여 전술제대까지 전장상황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며, 합동전술데이터링크, 공지(空地)통신무전기, Link-16[12] 성능개량 등을 통해 고속·대용량 정보유통 능력을 구비하고 연합·합동작전 간 상호운용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지상전력 분야는 북핵·미사일 및 장사정포 위협에 대비하여 고위력·초정밀 지대

11) Command, Control, Communication and Computer Intelligence

12) 한미 연합전력 간에 사용되는 디지털 전술데이터링크

지미사일 및 대화력전 수행 전력을 조기에 확충하고, 고속종심기동전 수행을 위한 기갑 및 기계화, 육군항공전력을 보강할 것이다. 또한 신속대응 및 결정적 작전 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지상 및 공중기동능력을 보강하고, 전투원의 생존성 보장을 위한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구축할 것이다.

해상전력 분야는 구축함(KDX-Ⅲ), 호위함(FFX), 잠수함(KSS-Ⅲ), 해상초계기-Ⅱ, 해상작전헬기 등을 확보하여 북한과 잠재적 위협에 대비함은 물론 한반도 주변 해양우세를 유지하고, 원해(遠海) 해양권익 보호 능력을 확충해 나갈 것이다.

공중전력 분야는 전방위 위협에 대한 주도적 억제 및 대응이 가능하도록 은밀침투, 장거리 정밀타격 능력을 구축하고 작전지역 내 공중우세를 달성하기 위해 차기전투기(F-X 2차), 한국형전투기(KF-X), KF-16 성능개량, 대형수송기, 전천후 정밀유도무기 등을 점진적으로 확보해 갈 것이다.

방호전력 분야는 탄도탄 및 항공기 방어 능력과 장사정포탄 요격능력 등 다층방어능력을 구비하고, 전자기펄스(EMP)[13] 및 화생방 방호 능력을 점진적으로 향상시키며, 전쟁 초기 생존성 보장을 위한 개인·시설·장비의 방호 능력을 보강할 것이다.

2019년 전력증강 사업

2019년 국방비 46조 6,971억 원 중 방위력개선비는 2018년보다 13.7% 증가한 15조 3,733억 원이었으며, 2019년에 추진한 주요 전력증강 사업은 [도표 4-8]과 같다.

[도표 4-8] 2019년 주요 전력증강 사업

전장 기능별 무기체계	계속사업	신규사업
전장인식/지휘통제·통신	· 군정찰위성 ·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 고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HUAV)	· 다출처영상융합체계 · 탄도탄작전통제소성능개량 · 지상전술데이터링크(KVMF)
기동/화력	· K2전차, 차륜형장갑차 · 230mm급 다련장 · 소형전술차량	· 장애물개척전차 · 자주도하장비 · 레이저대공무기 Block-Ⅰ
해상전력	· 광개토-Ⅲ급 구축함 Batch-Ⅱ · 장보고-Ⅲ급 잠수함 Batch-Ⅰ/Ⅱ · 울산급 Batch-Ⅱ	· 수중자율기뢰탐색체
공중전력	· F-35A, KF-16 성능개량 · 공중급유기 · 한국형전투기(KF-X)	· 전술입문용훈련기 2차 · T-50 시뮬레이터

13) Electro-Magnetic Pulse

2020년 전력증강 사업

2020년 국방비 50조 1,527억 원 중 방위력개선비는 2019년보다 8.5% 증가한 16조 6,804억 원이었으며, 2020년에 추진한 주요 전력증강 사업은 [도표 4-9]와 같다.

[도표 4-9] 2020년 주요 전력증강 사업

전장 기능별 무기체계	계속사업	신규사업
전장인식/지휘통제·통신	· 군정찰위성 · 중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MUAV) ·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 한국형 합동전술데이터링크체계 (JTDLS) 완성형 · 이동형장거리레이더
기동/화력	· K2전차, 차륜형장갑차 · 230mm급 다련장	· 개인전투체계 · 120mm자주박격포 · 경기관총-Ⅱ
해상전력	· 광개토-Ⅲ급 구축함 Batch-Ⅱ · 장보고-Ⅲ급 잠수함 Batch-Ⅰ/Ⅱ · 해상초계기-Ⅱ	· 구축함(KDDX) · 검독수리-B Batch-Ⅱ
공중전력	· F-35A, KF-16 성능개량 · 한국형전투기(KF-X)	· GPS유도폭탄(2000lbs급) 4차

2. 2021~2025 국방중기 전력증강 계획

「국방개혁 2.0」 추진을 가속화하고 전방위 안보위협 대비 튼튼한 국방태세 확립을 위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100.1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다양한 핵·WMD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전력을 확충하고, 첨단전력 중심의 군구조 개편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또한 사이버·테러, 재난 등 비군사적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4차 산업혁명 관련 국방 R&D 역량 강화와 국내 방위산업 활성화를 위한 여건을 보장하는 한편 국제평화유지와 재외국민 보호 등 국익수호 전력을 확충해 나갈 것이다.

먼저 핵·WMD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군정찰위성, 중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 등을 전력화하여 첨단·광역화된 원거리 감시정찰 능력을 구축하고, 군 위성통신체계-Ⅱ,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전구합동화력운용체계(JFOS-K) 등을 통해 감시·정찰 정보를 통합·전파하여 실시간 타격 체계와 연동할 수 있도록 지휘통제체계를 지능화·고도화할 것이다. 또한, 장거리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 전력과 은밀 타격이 가능한 F-35A, 장보고-Ⅲ 잠수함 등을 확보할 것이다. 그리고, 적 탄도탄 공격에 대한 다층방어가 가능하도록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 개발, 중거리지대공유도

무기·패트리어트 성능개량을 통해 한국형 미사일 방어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다.

첨단전력 중심의 군구조 개편 추진을 위해 지상 전력은 정찰용 무인항공기, 대포병탐지레이더-Ⅱ, 230mm급 다련장, 전술지대지유도무기-Ⅱ 등을 확보하여 감시 및 타격 범위를 확장할 것이다. 81밀리 박격포-Ⅱ, 120mm 자주박격포, 중형전술차량 등의 신규 장비를 전력화함으로써 생존 및 기동성, 전투수행능력을 극대화하여 운용 병력을 절감해 나갈 것이다. 해상 및 상륙 전력은 한국형 구축함·호위함, 군수지원함-Ⅱ, 함대함·대공·대잠 유도탄 등을 전력화하여 수상 및 수중, 대공작전 능력을 강화할 것이다. 상륙기동헬기, 고속상륙정 등도 확보함으로써 입체고속상륙작전 능력을 향상시켜 나갈 예정이다. 공중 전력은 F-35A 스텔스기, 한국형전투기(KF-X), 항공통제기 등을 전력화하여 공중우세를 확보하고, 전자전기(電子戰機), 대형수송기 등을 전력화하여 전자공격능력을 확보하는 한편 공중 수송능력을 증대시켜 나갈 것이다.

사이버·우주·테러·재난 등의 비군사적 위협에 대비해 초소형위성체계, 우주기상 예·경보체계, 레이저대공무기, 대형수송함 등을 전력화함으로써 실효적 우주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테러 신속대응, 재난 시 수송 및 구조능력을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국방 R&D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초고속·고위력 정밀타격, 유·무인 복합 전투수행 등 8대 국방전략기술[14]과 4차 산업혁명 첨단 국방과학기술에 집중투자하여 방위산업 증진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3. 방위력개선사업의 효율적 추진

방위사업 관련 법령 정비

국방부는 전력증강을 위한 방위사업의 투명성, 전문성, 효율성을 제고하고 방위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있다.

먼저 방위사업과 관련하여 기존에 하나의 방위사업법 체계로 되어 있던 것을 방위산업 육성 분야와 국방과학기술 분야에 각각 개별법을 만들어 3개의 분법체계로 구조화하였다. 2020년에 방위산업 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이를 통해 사업 규모가 크거나 위험도가 높은 사업 등을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으로 지정하고, 지체상금 감면 등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연구개발 분야에서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을 제정하여 계약방식으로만 추진해왔던 국방 R&D에 협약 방식을 도입하고, 기술

14) 8대 국방전략기술
① 자율·인공지능 기반 감시정찰
② 초연결 지능형 지휘통제
③ 초고속고위력 정밀타격
④ 미래형 추진 및 스텔스 기반 플랫폼
⑤ 유·무인 복합 전투수행
⑥ 첨단기술 기반 개인전투체계
⑦ 사이버 능동대응 및 미래형 방호
⑧ 미래형 첨단 신기술

개발에만 적용했던 성실수행인정제도를 일부 무기체계 연구개발까지 확대하는 등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개발 지원책을 마련하였다. 국방부는 2020년에 제정된 두 법률에 포함된 제도의 세부 운영방안을 담은 하위법령을 제정하여 2021년 시행할 계획이며, 향후에도 원활한 방위사업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할 것이다.

2019년에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4개 분과위원회 중 방위사업 추진단계(사업기획, 사업관리, 군수조달 등 후속관리)별로 운영했던 3개 분과위원회를 방위사업청 소관 1개 위원회로 통합하여 의사결정을 효율화하였다. 사업기획단계부터 집행 및 계약 관리에 이르기까지 주요 사안을 하나의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사업 전반에 대해 종합적인 관점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분과위원회는 국방부 소관 전력정책분과위원회와 방위사업청 소관 방위사업기획·관리분과위원회 2개로 조정되었다.

방산업체의 원가절감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이루어졌다. 기존의 방산원가는 실제 발생한 비용을 업체에 보상해주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업체에 원가절감 유인을 제공하지 못했다. 이에 1974년 방산원가 기준을 도입한 이후 45년 만에 최초로 방산분야에 표준원가[15] 개념을 도입하여 업체의 원가절감 노력이 이윤으로 보상될 수 있도록 원가구조를 전면 개선함으로써 방위사업의 투명성, 효율성을 더욱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복잡한 방산원가 이윤 구조를 단순화하고 방산업체의 수출과 연구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관련 활동에 대한 적정원가를 보상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2018년에는 지체상금 상한제[16] 적용 대상을 기존의 시제품 생산 계약에서 최초 양산 계약까지로 확대하였다. 고도의 정밀성이 요구되는 방위사업의 특성상 최초 양산 단계에도 예기치 못한 위험요소가 다수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지체상금 상한제 적용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방위산업 참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였다.

소요검증 및 분석평가 수행

국방부는 국가 재정과 국방예산 획득 여건을 고려하여 합참이 결정한 무기체계 소요의 적절성 등을 검증하는 소요검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19~2020년 동안 총 34건의 소요검증을 시행하여 소요 조정의 필요성을 제시하거나 사업추진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요소를 조기에 식별하였다. 또한, 2019년부터 소요 검증 후 필요한 후속조치 결과를 국방중기계획에 반영하도록 관련 절차를 개선하였다.

이와 더불어, 사업추진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2019~2020년 동안

15) 일정한 조업에 대해 과학적 연구에 의한 물량 및 가격 표준에 의해 산정된 원가를 말하며, 업체가 표준원가보다 작은 비용으로 해당 조업을 수행한 경우에도 원가는 표준원가로 산정하므로 절감액이 업체의 이윤으로 귀속 가능

16)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확보 수단으로 계약금액에 일정 비율의 지연배상금을 부과하는 지체상금 제도가 계약상대자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지체상금 총액 한도를 계약금액의 10%로 규정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572건의 분석평가를 수행하였다. 국방부의 분석평가를 통해 도출된 개선 소요들은 야전운용시험 제도 도입 등과 같이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 효율적인 방위력개선 사업 추진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2019년에는 합참에서 필요로 하는 분석과제에 대해 연구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등 합동성 구현을 위해서도 노력하였다.

시험평가 수행 시험평가(Test & Evaluation)는 구매 혹은 연구개발로 획득하고자 하는 무기체계, 또는 핵심기술이 군의 요구성능 등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실시한다.

국방부는 2014년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시험평가 업무를 이관받아 업무를 수행 중이며, 2019~2020년 동안 총 181개 사업에 대해 시험평가를 수행하였다.

향후 국방부와 합참 간의 시험평가 업무 중복성을 해소하기 위해 시험평가 계획 수립 및 판정 권한을 국방부에서 합참으로 이관할 예정이며, 한미 간 시험평가 협력 및 시험시설 상호사용을 위한 합의각서(TEP)[17]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시험평가 업무를 효율화하고 시험평가 기술을 발전시키며 국내 시험평가 제한사항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7) Test and Evaluation Program

제4절

4차 산업혁명 기술 기반 '디지털 강군, 스마트 국방' 구현

국방부는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을 국방 전 분야에 적용하는 국방혁신을 통해 '디지털 강군, 스마트 국방'을 구현하고자 2019년 '4차 산업혁명 스마트 국방혁신 추진단'을 구성하여 각 군과 함께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초연결·초지능·초융합의 국방인프라 조성을 위한 기술·기반 혁신 분야, 투명하고 효율적인 국방운영 구현을 위한 국방운영 혁신 분야, 무기체계 지능화·고도화를 통해 미래전을 대비하는 전력체계 혁신분야 등 3대 혁신분야에 관련 과제 및 사업을 선정하여 예산을 반영하고 체계적 사업관리로 가시적 성과를 창출할 것이다.

1. 미래 사회 변화에 대비한 국방인프라 조성

첨단 정보통신기술의 국방분야 적용

국방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기술(ICT)[18] 인프라와 국민적 공감대를 기회 요소로 삼아 4차 산업혁명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국방 분야에 적용한 '스마트 국방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국방자원을 신경망과 같이 연결하는 초연결·초융합 국방인프라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차기 국방 광대역통합망, 국방 모바일 환경, 국방 클라우드 환경 구축 등 네트워크 기반환경을 고도화하고 있다. 그리고 초연결의 국방환경 조성에 발맞추어 무선 데이터 통신의 보안성과 융통성을 확보하기 위해 무선 암호정책 개선에 대한 다양한 발전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술을 적용하여 국방운영 전 분야를 지능화할 것이다. 지휘소를 중심으로 '지능형 상황공유 및 통합감시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다양한 센서에서 수집된 정보를 분석·공유하여 실시간으로 전장정보를 제공하고, '인공지능 기반의 의사결정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인공지능 기반의 지휘통제 능력을 확보할 것이다. 또한 인공지능 기반 '사이버 방어체계'를 고도화하고 '사이버작전 상황 가시화 체계'를 신규 구축하여 사이버 위협을 차단하고, 첨단 무기체계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할 것이다.

스마트 국방혁신

18)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초연결·초지능 네트워크 기반 고도화

국방부는 변화하는 안보환경과 정보통신기술 발전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초연결 광대역통합망을 구축하고, 클라우드 기반으로 데이터를 수집·융합하여 언제, 어디서든 활용이 가능한 지능화된 공통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국방부는 초연결된 전장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미래 지향적인 차기 국방 광대역통합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1년에 민간투자사업(BTL)[19]으로 구축된 국방 광대역통합망은 현재 8,000여 회선을 수용하여 야전부대의 정보화 기반환경을 크게 개선하였으나, 장비의 노후화와 대용량 영상 서비스 수요 증가 등 한계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미래 전장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연하고 지능화된 망구성 및 운영분석과 초고속·대용량의 정보유통이 가능한 차기 국방 광대역통합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이동성, 보안성, 생존성이 강화된 무선네트워크와 단말기를 도입하여 평문 및 비밀업무가 가능하도록 국방 모바일환경을 구축하고, 스마트한 군사력 운용이 가능하도록 이동통신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초연결된 네트워크망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저장·활용하기 위한 국방정보체계 서비스 통합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방 클라우드 확산전략과 국방통합데이터센터 고도화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하여 노후화된 기반환경과 정보자원을 교체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또한 국방부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인공지능을 체계적·전략적으로 국방에 적용하기 위한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발전계획에는 인공지능의 국방 분야 적용을 위해 생태계 조성, 인공지능 윤리·문화 등 관련 전 분야의 발전전략이 포함될 예정이다. 또한 인공지능 활용의 근간이 되는 국방데이터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국방부는 국방분야 인공지능 도입과 효율적 활용을 통해 한국형 국방 인공지능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상호운용성 강화

미래전에서는 군사과학기술 발전에 따라 감시·지휘통제·타격체계와 정보체계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고 전장상황을 동기화해야 하므로 체계 간 상호운용성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우리 군은 감시·지휘통제·타격체계에 대한 자체적인 '전술데이터링크[20] 표준 적합성 시험' 인증 능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 간 연동 효율

19) Build Transfer Lease

20) 무기체계와 무기체계 운용을 위해 정보시스템 간 정보 교환을 위한 실시간 디지털통신망

화와 상호운용성 표준화를 위해 자원관리정보체계별로 구축된 연동시스템을 단일 시스템으로 통합할 계획이다. 또한, 정보통신기술 발전 추세와 국방안보 환경에 따라 국방 정보화표준[21]을 최신화하고, 최신화된 표준이 적용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등 상호운용성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스마트한 정보화 서비스 구현

국방 업무의 신 가치를 창출하고, 빅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스마트한 정보화 서비스 구현을 위해 인사, 군수, 재정 등 주요 분야의 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있다. 또한, 국방 정보화 서비스의 접근성과 호환성을 개선하여 국민이 양질의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공개 소프트웨어 도입을 확대하고 국방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융합 교육으로 간부와 장병들의 소프트웨어 운용역량을 극대화하고 있다.

아울러 우리 군 주도의 연합연습 및 훈련, 분석능력 향상 등을 위해 다양한 모의체계를 활용하고 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모의분석 시범체계를 구축하고 최첨단 통신기술을 융합한 합성전장훈련체계(LVC)[22]를 개발하는 등 국방 M&S[23]체계를 발전시키고 있다.

2. ICT 기반 고효율 선진 국방운영 실현

합성전장훈련체계 기반의 실전형 워리어 및 부대 육성

우리 군은 다양한 전쟁 양상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도시화 등 사회적 환경변화에 따른 교육훈련 제한사항을 극복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 첨단기술을 적용한 과학화 교육훈련체계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각 군은 인원·장비의 기동과 실사격, 과학화 시스템이 통합된 과학화훈련장을 구축하고 있으며, 레이저 빔 특성을 이용하여 실사격과 유사한 모의 사격이 가능한 마일즈 장비를 개발 및 보급하고 있다. 또한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기술을 기반으로 한 가상모의훈련체계를 확대하여 실전적 교육훈련 여건을 보장하고 있다. 향후 각종 과학화 교육훈련체계를 통합·연계하는 합성훈련환경 구축 또한 계획하고 있다.

21) 정보시스템 개발 시 체계 간 호환성과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용되는 정보기술 표준

22) Live(실기동 모의훈련), Virtual(가상 모의훈련), Constructive(워게임 모의훈련) 체계를 하나의 합성환경으로 구성하여 통합운영이 가능한 최첨단 실전적 훈련체계

23) 전장과 유사한 특성과 기능을 모형화(Modeling)한 환경에서 모의(Simulation)를 통해 실험 결과를 예측·검증하는 과학적 기법 (M&S : Modeling & Simulation)

빅데이터를 활용한 장병 삶의 질 개선

국방부는 급식·피복·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빅데이터(Big Data)를 활용[24]해 안전하고 건강한 병영 생활을 지원함으로써 장병 삶의 질을 개선하고 있다.

장병 급식과 관련해서는 급식 운영데이터를 활용해 최적의 급식 수요 예측체계를 구축하고 '급식자동측정시스템'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장병들의 급식만족도를 제고하고 있다.

피복과 관련해서는 장병들의 실제 신체 사이즈에 적합한 피복·개인장구류 지급을 위해 훈련소 병사를 대상으로 '3D 스캐닝'을 통한 치수 측정을 시범 추진하고 있다.

향후에도 '급식자동측정시스템'과 '3D 스캐닝'을 더욱 확대하여 장병들의 입맛을 충족시키는 급식과 체형에 최적화된 피복·개인장구류를 제공할 것이다.

의료 분야에서는 이송 중인 응급환자의 정보를 의료종합상황센터와 실시간 공유하여 신속 대응할 수 있는 이동형 원격진료체계와 군 의료정보 빅데이터로 의료진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분석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동형 원격진료체계는 국군의무사령부와 외상센터, 8개 군병원 등을 대상으로 LTE 기반체계를 활용하여 시스템을 구축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코로나19로 격리된 장병의 진료접근성 향상과 감염차단을 위해 격리시설과 간이 선별진료소에 한시적으로 확대 운영하였다. 군 의료정보 빅데이터 분석체계는 국방의료정보체계(DEMIS)[25]를 기반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조하여 흉부 X-Ray 진단체계, 약제처방지원체계 등 분석체계 기술개발을 추진하였고, 이 중 흉부 X-Ray 진단체계는 군병원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향후에도 국방의료정보체계의 빅데이터를 통해 진료 의사의 최적 결정을 지원함으로써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고, 이동형 원격진료를 확대하여 각종 응급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군 의료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다.

이외에도 입대 전부터 전역 후까지 장병 복무주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 인재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군 특성에 적합한 최적의 인재 획득 및 육성, 적임인사, 전역 후 취업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계획이다.

국방자원 수명주기 관리를 통한 효율성 향상

국방부는 다양한 첨단기술을 군수품, 군사시설 등과 같은 국방자원의 수명주기(Life-Cycle) 관리에 활용하여 국방운영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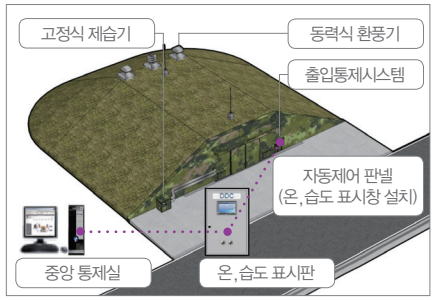
장비 정비 측면에서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장비수명과 수리부속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부품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센서데이터, 첨단정보통신 기술 등을

24) 기존 데이터베이스 관리 도구의 능력을 넘어서는 대량의 정형 또는 데이터베이스 형태가 아닌 비정형의 데이터 집합까지 포함한 데이터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

25) 수기로 기록되었던 의무기록을 통합 전자의무기록으로 전환, 네트워크로 연결해 어느 부대에서도 동일한 의무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DEMIS : Defense Medical Information System)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한 장비정비



스마트탄약고(이글루형)

활용한 상태기반정비체계 및 원격정비지원체계가 적용된 스마트팩토리[26]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장비수명 및 수리부속 수요 예측과 관련해서는 수리부속 수요 예측의 정확도 향상을 위해 수요 예측모델을 개발해 적용 중이며, 부품단종으로 인한 비용증가 및 장비가동률 감소에 대처하기 위한 부품단종관리정보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육·해·공군의 주요 장비에 센서를 부착해 얻은 센서데이터를 기반으로 상태기반정비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전문정비부대 투입이 어려운 해상 함정 및 격오지 부대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활용한 원격정비지원체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에도 무기 획득단계에서부터 상태기반정비체계 적용 기반을 마련하고, 원격정비체계 대상 부대 및 장비를 확대하여 군 정비 분야에서 스마트팩토리의 기능을 증대해 나갈 것이다.

탄약 관리와 관련해서는 탄약 성능 및 안전 보장을 위해 사물인터넷(IoT)[27]을 활용하여 탄약고 내 온·습도를 자동 조절하고 화재를 감시하는 스마트탄약고[28]를 구축하고 있으며, 유도탄 수요 예측의 정확도 향상을 위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유도탄 수명주기 관리체계를 조성하고 있다. 이를 위해 탄종별 스마트탄약고 적용 기준을 정립하고 시범사업으로 스마트탄약고 7개 동을 건립 중에 있으며,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 내 유도탄 데이터 전산화를 구축하고 있다.

향후에는 스마트탄약고의 저장관리 성능을 분석한 후 부족한 부분을 보강하여 2025년 이후 전군에 확대할 계획이며, 유도탄별 수요 예측모델을 개발하여 수요예측의 정확도와 가동률을 지속 향상시켜 나갈 것이다.

군 물자류 관리에서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적정 수명주기를 예측·산정하여 적기 교체를 지원하고 있으며, 로봇·자동화기기 등이 적용된 스마트 물류센터를 구축하여 상·하역, 색출, 포장 업무를 자동화함으로써 인력절감과 물류 운영 효율화를 모

26) 설계 및 계발, 제조 및 유통 등 생산과정에 디지털 자동화 솔루션이 결합된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하여 생산성, 품질, 고객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지능형 생산공장으로 공장 내 설비와 기계에 사물인터넷을 설치하여 공정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이를 분석해 스스로 제어할 수 있게 만든 미래의 공장

27) 각종 사물에 센서와 통신 기능을 내장하여 인터넷에 연결하는 기술로, 무선통신을 통해 각종 사물을 연결하는 기술 (IoT : Internet of Things)

28) 생체 출입통제센서, 자동 CCTV 및 감시센서, 온도·습도 자동화 설비, 화재감시센서 등을 설치하여 중앙통제실에서 원격 자동제어가 가능한 탄약고

색하고 있다. 현재 개인장구류와 침구·일반물자류 6개 품목을 대상으로 빅데이터 예측모델 시범사업을 시작하였으며, 군수품 현장관리 자동화체계 시범사업과 로봇 및 빅데이터 기반 스마트 물류센터 운용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스마트 물류센터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향후에는 수명연한 분석 품목을 확대하고, 스마트 물류센터를 점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주요 기술분야 민·관·군 상생 발전

나날이 발전하는 첨단기술을 효율적으로 군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전문인력과 기술 활용이 필수적이며, 이는 민간에게도 실험의 장이자 이익 창출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먼저 국방부는 3D 프린팅[29] 기술을 국방 분야에 조기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과제로 민·관·군이 함께 국방 금속부품 제조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3D 프린팅 국방인력 양성을 위해 각 군의 3D 프린팅 제조기술을 보유한 업무종사자를 대상으로 국방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지속하고 있다.

향후에는 각 군별 특성에 맞춰 특화된 3D 프린터를 확보하여, 단종되어 조달이 어려운 국방부품을 생산해 군수지원 효율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또한 인적자원 감소와 작전지속분야의 고중량·반복 작업에서 오는 피로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작전지속지원용 로봇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육군 탄약·공병 부대에서 근력보조형 로봇[30]의 시험평가를 시행하여 작업시간 단축 등의 성과를 얻었으며, 패시브형 웨어러블 로봇[31]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에는 민·군 기술협력사업과제로 기술개발을 추진할 것이며, 시험부대를 선정해 웨어러블 로봇 시범사업을 시행할 것이다.

주요 선진국이 주목하는 첨단기술인 드론 역시 국방 분야의 활용성이 높다. 이에 국방부는 유사시 접근이 제한되는 격오지, 고립부대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수송용 드론 전력화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군수품 수송용 드론에 대한 전력화 선행 연구, 우수 상용 드론의 활용성 평가, 민·군 겸용 기술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육군 종합군수학교, 군수지원여단 등에서 활용할 군수품 수송용 드론을 확보하고 실증 평가 및 검증을 수행할 것이다.



상지근력보조 웨어러블로봇

29) 3D 프린터는 3차원 설계도를 바탕으로 입체적으로 물건을 인쇄하는 기계 자체를 의미하며, 3D 프린팅은 3D 프린터로 입체적인 물건을 인쇄하는 모든 과정으로 입체적인 물건을 인쇄하는 것뿐만 아니라, 물건을 인쇄하기 위해 디자인하고 설계하는 모든 과정을 통하여 원하는 결과를 만드는 과정

30) 인간의 육체적, 물리적 한계를 보완해 근육을 보조하고 신체능력(근력, 지구력 등)을 강화할 수 있는 로봇으로 구조와 동작방식에 따라 외골격형 시스템과 슈트형 시스템으로 분류

31) 인간의 신체로부터 신호를 측정 후 구동부 제어나 기계적 매커니즘을 통해 착용자의 신체능력을 향상시켜주기 위한 로봇으로 동력을 사용하지 않는 수동형 로봇

3. 첨단기술을 적용한 군사력 첨단화

4차 산업혁명 기술 적용 무기체계 확보

미래 안보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독자적인 방위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첨단무기체계와 핵심·원천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동시에 이에 대한 국방연구개발 추진전략이 필요하다.

방위사업청은 무기체계 연구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하여 매년 무기체계별 핵심기술 로드맵을 수립하여 과제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중장기 핵심기술기획을 위해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서」의 국방전략기술 8대 분야[32]에 따라 매년 「핵심기술기획서」를 작성하고 있다.

「2020-2034 핵심기술기획서」에서는 국방전략기술 8대 분야별 주요기술 확보 전략 및 중점사항 분석을 통해 140개 국방전략기술별 핵심기술을 제시하였다. 또한 「2019년 국방과학기술조사서」[33]에서는 33개 중점 무기체계를 대상으로 업무분할구조(WBS)[34] 조사·분석 기법을 활용해 핵심기술 개발 소요를 도출하였으며, 국방전략기술 8대 분야와의 연계성을 분석하여 첨단기술의 무기체계 확보에 필요한 국방기술기획을 강화하였다.

또한 미래전장 혁신에 필요한 민간 R&D 역량을 국방 분야에 활용하기 위해 10개 분야(첨단센서, 인공지능, 가상현실·증강현실·혼합현실(MR)[35], 양자정보, 사이버보안, 사물인터넷·만물인터넷(IoE)[36], 에너지, 신소재, 3D/4D프린팅, 무인로봇)에 대해서는 국가 R&D와 다양한 방식으로 협력하여 국방기술 및 무기체계 개발로 그 적용 범위를 넓혀나갈 예정이다.

미래도전국방기술[37]개발사업 추진

국방부는 무기체계의 첨단화와 기술발전 속도의 증가에 따라 군 소요에 기반한 기존 국방 R&D 기획체계와는 다르게 무기체계 소요를 창출하는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국방 R&D 수행이 가능하도록 과제기획 여건을 조성하고 그 수행체계를 마련해 오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2018년도부터 미래도전국방기술개발사업을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국방과학연구소에서 13개 과제를 공모로 선정하고 기술경연을 실시하는 등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9년에는 미래도전국방기술개발사업의 유형을 PM기획[38], 기술경진대회, 과제경연 등으로 다양화하여 민간 산·학·연 전문가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32) 국방목표 달성을 위해 전략적 연구개발이 필요한 기술분야로서 국방에 적용 가능한 성숙한 민간 신기술도 포함. 8대 분야는 ① 자율·인공지능 기반 감시정찰, ② 초연결 지능형 지휘통제, ③ 초고속·고위력 정밀타격, ④ 미래형 추진 및 스텔스 기반 플랫폼, ⑤ 유·무인 복합 전투수행, ⑥ 첨단기술 기반 개인전투체계, ⑦ 사이버 능동대응 및 미래형 방호, ⑧ 미래형 첨단 신기술로 구성

33) 「방위사업법」제32조 및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37조에 따라 국방기술품질원이 3년마다 발간하는 문서로 미래 무기체계 핵심기술기획과 선행연구의 조사·분석에 활용하기 위해 국내외 국방과학기술수준, 무기체계와 기술의 개발현황/발전추세, 미래 소요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방향 등을 제시

34) Work Breakdown Structure

35) Mixed Reality

36) Internet of Everything

37) 「방위사업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소요가 결정되지 않거나 소요가 예정되지 않은 무기체계에 대한 적용을 목적으로 하는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국방과학기술

또한, 2020년 3월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이 제정되어 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안정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되었다. 향후에도 사업예산 증액, 신규 과제 발굴 등을 통해 미래도전국방기술개발사업을 확대하여 도전적·혁신적 기술개발과 이를 활용한 신개념 무기체계 소요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38) 사업관리자(PM : Project manager)가 프로그램의 세부 기술과제를 직접 기획하고 주관연구기관 선정, 관리 및 평가 등 제반의 업무를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기획방식



제 5 장

공정·투명하고 효율적인 국방운영체계 확립

제1절 효율적 국방인력운영체계 혁신
제2절 국방 문민화 및 개방형 국방운영
제3절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공정·투명한 국방운영
제4절 방위사업 투명성 제고 및 방위산업 경쟁력 확보
제5절 책임국방 구현을 위한 적정 국방예산 확보 및 예산 운용 효율화



육군 코로나19 방역 지원

제1절

효율적 국방인력운영체계 혁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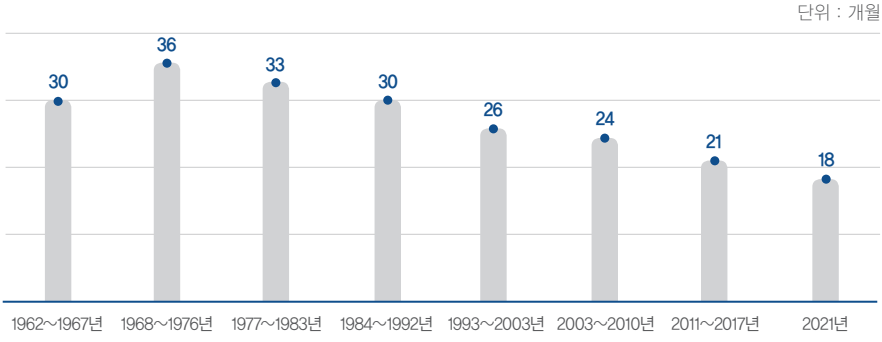
국방부는 병역의무 부담 완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병 복무기간 단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병 복무기간 단축으로 예상되는 병력자원 부족에 대비해 여군 비중을 확대하고 그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있으며, 전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군사 전문성 중심의 인사관리를 정착시키고 있다.

1. 병 복무기간 단축

병 복무기간 단축 추진

국방부는 우리 군을 기술집약형 강군으로 정예화하기 위해 2018년 10월 1일부터 병 복무기간 단축을 시행하고 있다. 육군과 해병대는 21개월에서 18개월, 해군은 23개월에서 20개월로 단축하였으며, 공군의 경우에는 24개월에서 22개월로 단축한 후 「병역법」을 개정하여 1개월을 추가 단축하였다. 복무기간은 입대시기에 따라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2주 단위로 1일씩 단계적으로 단축한다. 육군을 기준으로, 2018년 10월 1일 전역자(2017년 1월 3일 입대자)부터 단축을 시작하여 2021년 12월 14일 전역자(2020년 6월 15일 입대자)까지 완료되며, 개인의 입대일자별 전역일은 병무청 홈페이지 '전역일 계산기'에서 조회할 수 있다. 병 복무기간 단축을 통해 장병들의 사회진출 시기를 앞당겨 국가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표 5-1] 군 복무기간 변화(육군 기준)



전력 저하 방지 대책 병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전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현대전에 맞는 첨단전력을 증강하고, 숙련도가 필요한 직위는 부사관으로 대체하는 등 간부 중심의 인력구조로 개편할 계획이다. 또한 신병 교육훈련체계 개선 및 과학화 훈련을 통해 병 숙련도를 조기에 향상시킬 수 있도록 실전적 교육훈련을 강화하는 동시에 병사들이 군 복무 중에는 전투 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군무원과 민간근로자를 증원하여 비전투임무를 최소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러한 국방인력운영체계의 개혁을 통해 군 전력은 오히려 강화될 것이다.

2. 여군 비중 확대 및 근무여건 보장

여군 우수인력 획득 여성의 사회적 역할 증대와 기술집약형 군 구조 개혁 등에 따라 여군 인력의 확대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국방부는 군 간부 중 여군의 비중을 2022년까지 8.8% 이상으로 높이는 「2018~2022 여군인력 확대 추진계획」에 따라 여군 초임 획득인원(소위, 하사)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여군 비중을 높이고 있다.

2020년 11월 말 기준 여군 인력은 총 13,665명으로, 2020년 확대 목표인 전 간부(장교·부사관)의 7.4%를 달성하였다. 2022년 말 기준 여군 인력을 8.8%까지 확대한 이후에는 국방개혁 추진 방향과 현역자원 획득여건 등을 고려하여 추가 확대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양성평등한 여군 인사관리 국방부는 여군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여군 보직규정을 남군과 동일하게 하고, 임신·출산·육아 여건을 보장하되 이를 이유로 한 인사상 불이익을 금지하고 있다. 2018년 7월에는 「국방 인사관리 훈령」을 개정하여 여군의 보직 및 배치 부대 관련 제한을 폐지하고, 성별과 관계없이 동일한 경력관리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2019년 5월에는 정책부서와 전투부대에 여군 보직확대 기준을 마련하였고, 여군의 경력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국방부, 합참, 연합사, 각 군 본부 등 정책부서에 근무하는 여군 비율이 영관급 장교 중 여군 비율 이상이 되도록 하였다. 또한 매년 각 군 전투부대 지휘관/참모 보직 현황을 국방부에 보고하도록 규정하였다.

대한민국 여군 70년 발자취

일-가정 양립 지원 국방부는 군 내 임신·출산·육아 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여 남녀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있다. 2019년 말에는 임신·출산과 관련하여 배우자 유·사산휴가(3일)와 임신검진휴가(10일)를 도입하였다. 또한, 육아 지원을 위해 2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 돌봄휴가를 연간 2일에서 3일로 확대하였다.

2020년 말 기준 군 어린이집 139개소, 공동육아나눔터 45개소의 보육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법령기준과 보육소요를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2019년부터 20인 이상 군 어린이집 시설 89개소에 야간보육교사 1인 인건비를 지원하여 훈련, 당직근무, 업무 등으로 야간보육이 필요한 경우에도 군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군 부대에 가족친화인증 제도[1]를 도입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일-가정 양립여건 조성에 대한 지휘관의 책임을 강화하고, 조직문화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근무여건 조성 국방부는 성폭력 예방활동을 통해 안전한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성폭력 사건처리 담당자의 전문성과 피해자 보호·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군내 성폭력 근절을 위해 성인지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이수 여부를 진급, 보직심사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 지원 전문인력인 성고충전문상담관과 전문 수사인력을 연차적으로 증원하고, 성폭력 근절을 위한 민·관·군 통합 워크숍을 매년 개최하는 등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와 협력하고 있다. 아울러 성범죄자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엄중하게 적용하여 형사처벌 후 반드시 징계절차에 회부하고 중징계를 기본으로 한 징계양정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2019년에는 각 군 사관학교에 성인지교육을 정규과정으로 반영하고, 「2019년 군 성폭력 실태조사」 연구를 통해 군 내 성폭력 양상을 파악하고 정책개선 소요를 도출하였다. 전군 성폭력 예방 특별 강조기간을 하절기와 연말연시에 운영하여 군 내 성폭력 예방 활동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향후 군내 성폭력 사고 양상의 변화를 반영하여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보완하고 성인지력 향상 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1) 가족친화제도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등)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공공기관 및 기업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여성가족부 운영)

[도표 5-2]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체계

구분	상담/신고	진료	법률
군 내부	· 국방헬프콜/양성평등정책과 · 각 군 양성평등센터 · 성고충전문상담관(군단급) · 양성평등담당관(사단급)	· 국군수도병원정신건강증진센터 * 성폭력피해자 의료지원 전담병원	· 국선변호인 · 증인지원관 (신뢰관계인 동석 등)
군 외부	· 해바라기센터(31개소) : 상담, 진료(비급여 치료 일부 유료), 법률 무료지원 · 성폭력상담소(전국 168개 상담소)		

여성 필수시설 확충

국방부는 여군배치 제한부대·직위 폐지, 여군 초임획득·장기복무 선발 확대로 여군 인력이 증가함에 따라 각 군에 여성 필수시설(화장실, 샤워실 등)을 확충하고 있다. 여성 필수시설 전수조사와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확충소요를 파악한 후에 2019년에는 여군이 보직된 부대 중 필수시설이 미설치된 부대를 대상으로 121동을 설치하고, 육군 전방부대(GOP)에 총 210개소의 독립 소초장실을 확보하였다.

또한 2021년까지 여성 인력이 근무할 수 있는 모든 부대(육군, 해병대 : 독립 소대급 이상, 해·공군 : 대대급 이상)를 대상으로 여성 필수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노후화된 간부숙소를 집중적으로 개선하고, 부족한 숙소를 확충하여 점차 증가하는 여군 초급간부의 복무여건을 개선해 나갈 것이다.



여성 필수시설(외부)



여성 필수시설(내부)



GOP 소초 화장실

3. 군사 전문성 중심의 인사관리 정착

성별·출신별, 병과·특기별 균형된 인재 육성

특정 성별·출신, 병과·특기에 편중되지 않는 균형인사를 통해 다양한 특성을 가진 인원으로 조직을 구성하는 것은 미래 조직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실적주의 인사관리의 한계를 극복하고 조직구성의 다양성·

형평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선 성별 균형인사를 위해 여군 우수인력 선발을 확대하고 있다. 그에 따라 2016년 대비 2020년 여군 중·대령 진급 선발자가 22명에서 79명으로 360% 증가하였다. 또한 2019년에는 최초 여군 소장이 탄생하였고, 정보병과 최초로 여군이 준장으로 진출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도표 5-3] 최근 5개년 계급별 여군 진급자 현황

단위 : 명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대위 → 소령	159	146	212	215	236
소령 → 중령	20	35	51	63	71
중령 → 대령	2	6	7	5	8
대령 → 준장	0	3	2	2	1

출신별 균형인사를 위해서는 정책부서 등 주요 직위에 사관학교 졸업 장교 위주로 보직하던 인사관리를 개선하여 일반 장교들의 보직을 확대하고 있고, 2018년부터 일반 장교들의 진급률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앞으로도 출신 구분 없이 모든 장교들의 경력과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출신이 아닌 능력과 자질을 고려한 자유경쟁 진급심사를 실시하여 조직 경쟁력을 제고할 것이다.

병과·특기별 균형인사를 위해서 특정 병과·특기 위주로 진급을 하는 기존의 관례에서 벗어나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복무한 우수자가 진급할 수 있도록 하여 복무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또한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군 발전을 선도할 역량이 있는 자를 선발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의 균형 인재가 육성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국방부는 향후에도 미래 안보환경에 적합한 균형인사를 위한 정책연구 등을 실시하여 정책방향, 추진체계, 정책 내용 등을 더욱 구체화해 나갈 것이다.

분야별 우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인사관리체계 구축

국방부는 미래전 양상 변화와 기술집약형 군 구조 개편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분야별 우수 전문인력 양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국방개혁 2.0」과 연계하여 사이버 전문인력, 연합·합동 전문인력, 획득 전문인력의 전문성과 활용성 제고를 중점으로 인사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있다.

먼저 급증하는 사이버위협에 대한 대응능력 및 사이버전 수행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사이버 전문인력'의 개념을 재정립하였다. 그리고 사이버 전문인력을 장교 외

에 부사관, 군무원까지 전 신분으로 확대하여 현역은 사이버 전문특기 또는 자격을 부여하도록 했고, 군무원은 2020년 3월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사이버 직렬을 새롭게 신설했다. 2021년까지 신분별 획득목표에 따라 점진적으로 전문인력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며, 매년 부대개편 및 편제변동 등을 고려하여 사이버 전문직위를 지정하고 전문인력이 해당 직위에 순환보직하게 하여 전문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연합·합동 전문인력'은 전작권 전환 과정과 이후의 연합작전을 주도할 인재를 육성하고 활용하기 위한 제도로 합동성과 어학능력의 수준에 따라 전문직위를 2개 등급으로 구분[2]하여 지정하도록 했다. 먼저 전문직위 지정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여 직위지정이 객관적으로 이뤄지도록 하였고, 과도하게 높게 설정되어 있던 어학능력 기준을 등급에 맞게 현실화하였다. 또한, 영어권 국가에서 6개월 이상 위탁교육을 이수한 인원에게도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전문인력 풀(Pool)을 확대하였다. 앞으로 연합·합동 전문인력의 합참, 연합사, 합동부대, 야전부대 간 순환근무를 활성화하고 지정된 연합·합동 직위에 우선 보직되도록 보직관리를 강화하며, 단기 해외연수, 각종 훈련과정, 개인파병 기회 등을 확대하여 어학능력을 지속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획득 전문인력의 경우, 국방부·합참·방사청 및 각 군 내에 획득·전력직위를 지정하고 직위 내 순환보직을 강화하여 '소요제기–획득–운영'의 전력업무체계 전 단계에서 전문성을 갖춘 전력전문가를 육성하고자 한다. 우선, 국방부·합참·방사청·각 군의 획득·전력직위를 정례적으로 지정하여 해당 직위 내에서 업무 연계성을 유지하도록 인사관리를 개선하였다. 또한 방사청 내 획득 전문인력이 '소요제기'와 '운영' 분야에 대한 이해도와 야전 실무부대 전력운영 경험이 비교적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방사청과 국방부·합참·각 군 간 순환근무를 강화하고, 순환근무의 상한기간(5년)을 엄격하게 통제하여 각 군의 전력특기자들이 골고루 방사청 내 사업 관련 직위 보직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방부는 이러한 개선방안이 잘 시행되도록 획득 전문인력 및 각 군 전력특기자의 순환보직 실태도 점검할 예정이다.

2)
- A그룹 직위 : 고수준의 합동성과 어학능력이 필요한 직위(49개 직위)
- B그룹 직위 : 일반수준의 합동성과 어학능력이 필요한 직위(320개 직위)

제2절

국방 문민화 및 개방형 국방운영

국방부는 국민이 선출한 대표가 군을 민주적으로 관리·운영한다는 문민통제 원칙을 확립하고 군이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방 문민화와 정치적 중립 보장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국방정책 홍보 활성화, 정책과정에서의 국민 참여, 민·관 협력 반부패 청렴 대책 등을 통한 투명한 국방운영으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 국방 문민화 추진

국방 문민화[3)] 국방부는 국방정책에 대한 문민통제의 원칙을 확립하고, 군이 본연의 전투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방 문민화를 추진하고 있다.

군에 대한 문민통제는 헌법과 법률에 명확히 규정된 민주국가의 기본원칙이며, 국방 역시 경제·사회·문화 등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정부 정책의 큰 틀에서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2017년 출범한 현 정부는 문민통제 원칙 확립과 군의 정치적 중립 보장을 전제로 국방부와 각 군 간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선진 민주국군'으로 거듭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문민통제의 원칙을 확립하여 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한 가운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방업무를 추진하고, 군은 본연의 전투 임무에 전념하는 여건을 마련한다는 목표 아래 국방 문민화 추진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과거 예비역이 보임하던 실장급 직위 3개를 일반직 공무원으로 대체하고, 현역 군인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를 제외하고 행정 전문성이 요구되는 국·과장급 직위 6개를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문민화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국방·군사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민간인력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군사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를 중심으로 군인을 보직하게 된다면, 국방부는 군사력 발휘를 위한 최적의 국방정책을 수립하고 군은 전투 임무에 전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3)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대통령 및 행정부 각료인 국방부 장관과 민간전문가 집단이 국방에 관한 주요 정책을 결정하고 국가의 정치·외교적인 정책적 결심에 입각하여 군사력 사용을 보장하는 체계

또한 국방 교육·연구 분야 전문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국방 교육·연구기관의 주요 직위 문민화를 위해 2017년 한국국방연구원장에 민간출신을 보임한 데 이어서, 국방대학교 총장 직위도 장성에서 민간출신을 보임할 수 있도록 「국방대학교 설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국방대학교와 사관학교의 교육역량 강화를 위해 우수 교수진을 확보하고자 교수 직위 일부를 현역에서 민간교수로 전환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국방부 공무원의 안보·군사 분야 전문성 강화

국방 문민화 흐름에 따라 안보·군사전문성을 갖춘 민간 관료와 직업군인이 상호 발전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방부 본부 소속 공무원은 각 군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그들의 군사전문성을 제고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소속 공무원의 군사전문성 강화를 위한 직급별 맞춤형 교육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공무원이 상위 직급으로 진출하기 위해선 군사작전과 무기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필수교육과정으로 이수하여 군사전문지식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특히 고위공무원 등 관리직을 대상으로는 국제관계·안보전략에 특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의사결정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방부는 국방 문민화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공무원의 군사전문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2. 군의 정치적 중립 보장

정치개입 근절을 위한 법령 정비

군은 국가 안전보장을 통해 국토를 방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신성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헌법과 법률에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를 명문화하여 군 본연의 임무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수직적인 계급구조와 상명하복 등 군 조직 특성상 상급자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에서 군인의 정치개입을 유발시킬 수 있는 요인이 남아있다.

따라서 국방부는 정치적 압력에 의한 정치관여 행위를 근절하고 정치적 중립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외부공직자가 군인에게 정치개입을 지시한 경우 이를 강력히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며, 부당한 정치관여 지시 등에 대한 신고의무와 신고자 보호 조항이 없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국방부는 외부공직자가 군인에 대하여 부당한 정치개입을 지시할 경우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정치관여 지시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며, 신고자 비밀보장과 신고 시 포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과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군의 정치적 중립 행동수칙'과 '세부 행동기준'을 보완하여 「부대관리훈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군 전투력의 근간이며, 국민의 신뢰는 군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때 비로소 보장된다. 따라서 향후에도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의 법적 토대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군 내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치개입을 근절함으로써 군은 본연의 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정치적 중립 준수를 위한 장병의식 개선

우리 군은 장병 개개인의 인권과 기본권이 보장되는 병영문화 조성의 일환으로 장병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장병들이 언제든지 정치 현안에 대해 댓글 등으로 개인 의견을 게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그 댓글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따라서 이전보다 정치적 중립 준수에 대한 장병의식 개선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국방부는 이러한 병영환경 변화에 발맞춰 명확하고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제시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교육하는 등 장병들의 의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먼저 장병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법령과 지침에 대해 사안별로 실제 사례를 들어 설명하는 교육자료를 만들어 장병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기존에 있었던 장병 휴대전화 사용지침에 정치적 중립 유지를 위해 소셜네트워크(SNS)상에서 준수해야 할 필수사항들을 추가하였고, 이를 통해 장병 휴대전화 사용 후 실시되었던 재보궐선거 및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온라인상 정치적 중립 저해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그리고 연중 정치적 중립 준수에 대한 교육과 강조로 장병들의 의식을 개선하고 있다. 망각주기와 병력 순환주기를 고려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장병들이 휴대전화 사용지침을 생활화하여 스스로 정치적 중립 준수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개방형 국방운영

정책홍보 활성화 국방부는 국민 신뢰도 제고를 위해 「국방개혁 2.0」을 비롯한 주요 정책을 언론매체, 디지털 미디어 및 현장소통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국민과 직접 소통하고 국방정책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위해 스마트·혁신, 언론·문화, 의료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소통전문가단'[4]과 대학생으로 구성된 '온라인 서포터즈(M-프렌즈)'[5]를 통해 국민 참여형 홍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먼저 국민 공감대 조성을 위해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온라인 및 모바일 기반의 홍보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다. 2020년에는 유튜브를 통한 정보확산력이 높아지는 상황에 맞춰, 기존 'K-Weapon'에 이어 '레알군대썰전' 영상을 신규 제작하여 군 무기체계 및 병영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국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였다.

온라인 미디어의 강세 속에서도 여전히 파급력이 높은 방송 매체를 통한 홍보[6]도 지속 추진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민의 군대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2019년 4월에는 「9·19 군사합의」와 관련한 특별전시회인 '강한 국방이 열어가는 평화의 길'을 개최하여 3만 5천여 명의 군 내외 관계자들이 관람하였고,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고 수준 높은 문화콘텐츠로 구성되었다는 호평 속에서 막을 내렸다. 특히 전시회에서 활용한 국군의 강인함을 보여주는 '평화를 만드는 강한 힘' 광고 영상은 한국광고학회에서 주관한 제27회 올해의 광고상 심사위원 특별상을 수상하였다. 또한 「9·19 군사합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MBC '선을 넘는 녀석들 – 판문점 특집방송'을 추진하였다.

매년 군인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장병사랑 캠페인 '고마워요 우리국군'은 대국민 소통행사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20년에는 제72주년 국군의 날을 기념하고 코로나19 상황에서 국군 장병들과 국민들이 응원과 감사의 메시지를 나누기 위해 온라인 캠페인인 '마음까지 따뜻하게 안부를 전하세요 1001 챌린지'[7]를 기획하였다.

또한, '다음 카카오'와 협업하여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검역·방역·의료 등의 대민지원 활동 사진을 '카카오갤러리'에 게시하여 50만 건 이상의 조회 수를 기록하였고, 국민 수호에 앞장서는



1001 챌린지-장병 응원 편지

평화를 만드는 강한 힘, 국군

M-프렌즈 5기 출범

제72주년 국군의 날 챌린지

4) 2015년부터 국방정책 홍보 아이디어 발굴과 스마트·혁신, 문화, 의료, 언론 및 홍보분야 전문가들의 재능 활용을 위해 운영 (2019년 27명 → 2020년 31명)

5) 주요 정책에 대해 국민 소통 중심의 온라인 홍보 강화를 위해 2016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국방정책에 관심이 있는 대학생 및 일반인들로 구성된 온라인 기자단 (2019년 45명 → 2020년 50명)

6) 2019년 6월 '군 의료시스템 개편'편(SBS), 2019년 7월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편(KBS), 2020년 4월 '다큐 3일, 국군간호사관학교 72시간'편(KBS), 2020년 6월 '6·25전쟁 70주년 기념 특집 다큐멘터리' (지상파 3사) 등

7) 제72주년 국군의 날을 맞아 일반 국민 및 장병이 챌린지 웹페이지에 응원과 격려의 안부 메시지를 게시하는 대국민 참여 캠페인

군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심어주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각 지역 방문이 어려운 상황에서 코로나19 현장 기록을 보여주는 전시를 통해 정부 활동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조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을 통한 소통이 증대되면서 유튜브 등 디지털 미디어의 영향력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국방부는 이러한 변화에 맞춰 정책 수요자별 맞춤형 홍보전략을 수립하여 쌍방향 국민소통 홍보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정책과정에 국민의 참여 강화

국방부는 '참여와 신뢰를 통한 공공성 회복'이라는 목표 아래 국민과 함께 국방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혁신 전략 중 하나인 '참여와 협력'을 통해 국방정책의 투명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요 정책과정에 국민의 참여와 의견수렴의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국방부는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민의 관심도가 높은 정책의 개요와 주요 추진내용 등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정책실명제'를 시행해오고 있다. 이전에는 공개대상 사업을 국방부가 일방적으로 선정했으나, 2018년부터 일부 사업은 국민의 신청을 받아 선정하는 '국민신청 실명제'를 도입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은 물론 국민과 함께하는 국방정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외에도 국방부에서 공개한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의견을 제시하여 정보공개의 품질 향상에 기여하는 '국방정보공개 국민참여단'을 매년 공모를 통해 선정하여 운영 중이고, 국방정책의 형성 과정에 정책수요자인 국민과 서비스디자이너가 함께 참여하는 '국민디자인단'을 매년 구성하여 운영함으로써 공공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

민관 협력을 통한 반부패 청렴 대책 마련

국방부는 청렴국방 구현을 위해 국방운영 전반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참여를 확대하고, 민관이 협력하는 부패방지체계를 구축하는 등 강화된 반부패 청렴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는 민간전문가가 독립적인 지위에서 군 내부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접수, 감사, 개선권고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청렴옴부즈만' 제도, 국방기관과 시민단체 등 사회 각계각층이 협력하여 군의 부패방지 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청렴국방 민관협의회' 등 국민이 직접 참여하고 감시하는 부패방지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청렴을 공직자의 핵심가치로 인식하도록 전군 차원의 주기적인 청렴 교육과 '국방 청렴 에세이' 공모전과 같은 다양한 청렴문화 확산 활동을 추진하였다. 또한 공직자 스스로 청렴을 내면화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신고자의 신상정보 유출 우려를 차단한 익명신고시스템을 운영하여 내부공익신고를 활성화하였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국방부의 청렴도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매년 향상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할 수 있도록 더욱 실효적인 반부패 청렴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내부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공익신고를 방해하거나 신고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강화된 처분기준을 수립하고, 국방 발전에 기여한 내부 신고자에게는 적극적인 보상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나아가 '청렴옴부즈만', '청렴국방민관협의회'와 같이 국방운영 전반에 국민의 감시와 참여를 제도적으로 확대함으로써 투명하고 청렴한 개방형 국방운영을 구현해 나갈 것이다.

제3절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공정·투명한 국방운영

국방부는 공정한 병역의무 이행 환경을 조성하고 병역이행의 형평성과 적극성을 제고하기 위해 병역제도를 발전시키고 있다. 또한 국민의 불편을 제거하고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투명한 절차에 따라 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군 공항 이전,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국방 규제 개혁, 친환경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1. 공정한 병역의무 이행 및 병무행정 개선

사회적 관심계층 병적 별도관리 제도 운영

정부는 4급 이상 공직자와 그 자녀, 체육선수, 대중문화예술인 및 고소득자와 그 자녀의 병역사항을 별도로 관리하는 병적 별도관리 제도를 도입한 이후 이들의 병역이행 과정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고의적인 체중 증량 의심자를 적발하였고, 일부 대중문화예술인, 체육선수들이 제도를 악용하여 병역의무를 미루는 불공정 사례를 확인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관련 제도와 규정을 개선하였다.

[도표 5-4] 불공정 제도개선 사례

구분	기존	변경
단기국외여행 허가 제도	· 1회 1년 범위 내, 통틀어 3년	· 1회 6개월 범위 내, 통틀어 2년(최대 5회)
입영일자 연기제도	· 민간 자격시험 등 응시 시 연령제한 없이 연기	· 민간 자격시험 등 응시 시 28세 이상자는 연기 제한
	· 대학원 진학예정 시 연령 제한 없이 졸업 다음해 5월 말까지 연기	· 대학원 진학예정 시 28세 이상자는 연기 제한

또한 정부는 병역의무에 대한 인식과 문화를 개선해 공정 병역에 대한 국민의 공감과 신뢰를 얻고자 노력하고 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를 대상으로 사회적 관심계층 병적 별도관리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일반 국민 대상으로도 유튜브 등을 통해 해당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려 공정 병역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있다.

인사청문 시 병역사항 사전 공개

1999년 병역공개 제도가 도입된 이후 국회의 임명동의안이나 선출안이 제출되는 공직후보자[8]만을 대상으로 국회에 병역사항을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공개해 왔다. 그러나 국무위원과 같은 공직후보자에 대한 사전검증과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018년 5월 29일부터 국무위원 후보자도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되면 병역사항을 국회에 신고하고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2019년 10월 24일부터는 병역사항 공개항목에 복무부대 및 병과를 추가하였다. 이를 통해 자발적으로 병역을 이행하는 병역문화를 정착하고 확산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병역판정검사 개선

공정하고 정확한 병역판정검사를 위해 최신 의료장비를 도입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민간병원 위탁검사 제도를 운영하여 검사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였다. 2017년부터 잠복결핵검사를 해마다 실시하여 군부대 내 결핵환자 발생률을 줄였으며, 2019년부터는 결핵검사결과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심리검사 도구를 개선하고 3단계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등 심리검사 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대체복무 제도의 합리적 개선

1973년 국가 기간산업 육성, 국위선양, 병역 잉여자원의 효율적 활용 목적으로 도입한 대체복무 제도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병역자원의 급격한 감소, 국가 위상변화에 따른 도입 취지 약화, 현역병 등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2018년 12월 정부는 국방부와 관련 부처 간 협의체를 구성하였으며, 2019년 11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병역 대체복무 제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하였다.

정부는 「병역 대체복무 제도 개선방안」에서 [도표 5-5]와 같이 4가지 추진과제와 그 세부과제를 선정하였고, 2020년부터 제도개선 및 법령개정 등을 통해 이러한 과제들을 차질없이 이행해나가고 있다.

대체복무제도 개선

[도표 5-5] 병역 대체복무 제도 주요 개선방안

	추진과제	세부내용
1	병역자원 확보	· 대체복무 배정인원 감축 · 복무강도 측면 형평성 제고
2	국가 인적자원의 전략적 활용	· 대체복무요원 국가 전략 산업 지원 · 소관 부처별 활용 계획 수립
3	복무관리 강화	· 복무관리 전담부서 지정 및 인력 편성 · 부실복무자 처벌 강화 등
4	대체복무요원 권익·인권 보장	· 기초군사훈련 기간 보수지급, 통합신고센터 설치 · 고용주 부당 대우 방지 등

8)
-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는 공직후보자 : 국무총리, 감사원장, 헌법재판소장, 대법원장, 대법관 후보자
- 선출안을 제출하는 공직후보자 : 헌법재판소 재판관(3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3명) 후보자

신체·경제적 취약 병역의무자 병역이행 지원 신체적 또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병역의무자가 병역의무 이행에 동참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병역의무자가 병역판정검사에서 민간병원의 추가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 무료 위탁검사를 지원하고, 모집병 지원 및 산업기능요원 편입 시 가산점 또는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등 혜택을 주어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를 통해 2019년에는 1,894명의 경제적 취약 병역의무자를 지원하였다. 2020년부터는 백혈병 등 악성 혈액 질환이 있는 사람은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고 서류 심사로 병역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여 신체적 취약자에게도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병역명문가 선양사업 병무청은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사람이 존경받고 자긍심을 갖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2004년부터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3대 가족(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모두가 현역 복무 등을 마친 가문을 병역명문가로 선정하고 있으며, 그 대상에 2013년에는 한국광복군을, 2020년에는 독립유공자를 추가하였다. 선정된 가문에는 병역명문가 증서와 표창을 수여하고, 국·공립 및 민간시설 이용 시 이용료 할인·면제 등의 우대 혜택을 제공하여 성실한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자발적으로 병역을 이행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하고 있다.

[도표 5-6] 병역명문가 선정현황

단위 : 년, 개, 명

구분	계	2004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가문	6,395	760	302	301	545	497	466	560	492	714	741	1.017
병역 이행자	32,376	3,431	1,426	1,444	2,642	2,520	2,490	2,932	2,670	3,779	3,820	5,222

2. 공정한 절차에 따른 군 공항 이전

국방부는 군 공항 인근 주민의 소음피해를 해소하고 도시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2013년에 제정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구·수원·광주 군 공항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대구 군 공항은 2018년 3월 경상북도 군위군 우보면 일대와 의성군 비안면·군위

군 소보면 일대 등 2개 지역을 이전후보지로 선정하였다.

2019년에 지역사회의 합의를 바탕으로 이전주변 지역을 결정·고시하였고,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 결과를 반영한 이전부지 선정기준과 절차를 심의·의결하였으며,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을 심의·의결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하였다.

2020년 1월 군위·의성 군민을 대상으로 대구 군 공항 이전 찬반 주민투표를 실시한 후 7월에 군위군수와 의성군수가 대구 군 공항 이전유치를 신청함으로써 8월에는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서 공동후보지인 의성비안·군위소보 지역을 이전부지로 최종 선정하였다. 향후 국방부는 대구시의 군 공항 건설 기본계획 수립과 대구시와의 기부대 양여 합의각서 체결 등 대구 군 공항 건설 및 이전사업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수원 군 공항은 2017년 2월 경기도 화성시 화옹지구를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하였으며, 화성 지역 내 군 공항 이전에 대한 우호적 여건과 공감대를 형성한 후 이전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광주 군 공항은 2016년 8월 광주시에서 제출한 이전건의서 타당성 평가를 완료하였으며, 전라남도 내 군 공항 이전이 적합한 지역 지자체와 소통과 협의를 통해 우호적 여건을 조성한 후 예비이전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국방부는 대화와 설득을 기반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군 공항 이전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민·관·군 협의체, 시민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다.

3.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해·강안 경계철책 철거

군 경계작전을 위해 해·강안 지역에 설치한 철책은 관광자원 개발의 저해 요소로 작용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철거를 요구하여 왔다. 과거에는 지자체가 철거를 요청할 경우 군 작전성 검토를 통해 승인된 구간에 한하여 지자체 예산(또는 국비 50% 지원)으로 경계철책을 철거하거나 감시장비로 대체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지역사회의 요구에 적극 부응하는 것과 동시에 첨단장비에 의한 과학화 경계체계로의 전환을 위해 군 주도로 해·강안 경계철책 철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18년 해·강안 경계철책에 대한 작전성 검토를 실시하여 그에 따라

[도표 5-7] 해·강안 철책 작전성 검토 결과

단위 : km

구분	대상	기존 철거 승인구간	작전성 검토 결과			
			계	존치	즉시 철거	감시장비 보강 후 철거
계	413.3	114.62	298.68	129.08	34.67	134.93
지작사(동부)	183.55	92.02	91.53	52.36	0.31	38.86
지작사(서부)	178.52	22.6	155.92	49.84	24.24	81.84
2작전사	51.23	-	51.23	26.88	10.12	14.23

이미 철거가 승인된 구간 외에 추가적으로 169.6km의 경계철책 철거를 추진하였다. 즉시철거 구간 34.67km의 철책을 철거하였고, 감시정비 보강 후 철거구간[9]에 대한 첨단 감시장비 설치를 2020년 완료하였다. 국방부는 향후에도 국민의 편익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 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유휴·방치시설 철거

국방부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을 위해 전국에 사용·관리하지 않고 방치된 군 유휴시설에 대한 철거 및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군에서도 지속적으로 유휴·방치 군사시설을 정리하여 왔으나, 감시장비의 발달과 군 병력 감소로 인해 사용빈도가 줄어들거나 부대 해체·축소 이후 활용계획이 없어진 유휴 시설물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국방부는 유휴·방치시설의 체계적 철거를 위해 2018년 말 현장 확인과 작전성 검토 등을 병행하여 영내외 유휴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자체 개발계획에 저촉되거나 장기간 방치에 따른 경관 훼손 및 우범지대화 우려가 있는 시설, 부대 장병 안전 등 긴급성과 작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철거 필요성이 있는 유휴시설을 적극적으로 철거해 나갈 예정이다.

무단점유 사·공유지 정리

6·25전쟁 이후 군부대 창설·정비 과정에서 경계측량 미실시, 긴급한 작전수행, 토지 소유자 거소불명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군이 사·공유지를 점유하게 되었다. 국방부는 국민의 재산권 보장 및 군 신뢰도 제고를 위해 군이 적법한 보상 없이 사용하고 있는 사·공유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정상화하고 있다.

2019년 초 기준으로 군이 사용하고 있는 사·공유지 5,458만㎡ 중 무단점유 사·공유지는 2,155만㎡이다. 국방부는 군이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는 토지는 매입하고 한

9) 국방부·군에서 2020년까지 감시장비를 설치한 이후 2021년까지 지자체에서 철책철거 및 지역복원을 시행하는 구간

시적으로 사용하는 토지는 임차하고 있으며, 부대이전·재배치 등으로 사용하지 않는 토지는 시설물 철거 및 토양오염 정화 등의 원상회복 절차를 거쳐 반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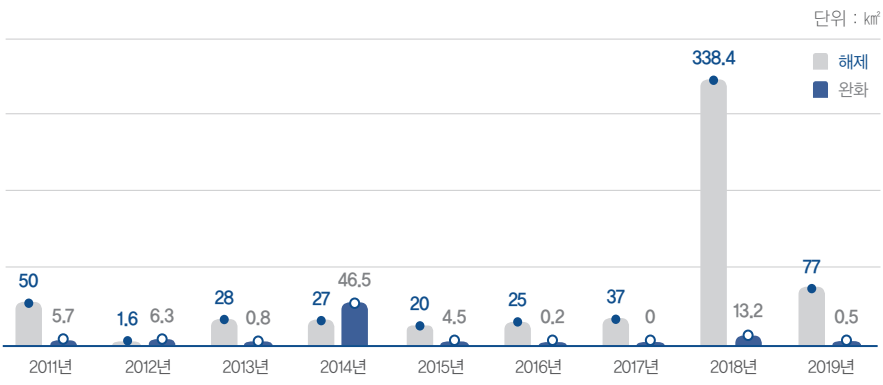
또한 국방부는 민원이 제기된 경우에 한해 대응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2019년 군 무단점유지의 소유자 12,000여 명에게 선제적으로 무단점유 사실과 국가배상 절차를 안내하였다. 그 결과 연평균 15억 원 내외에 그치던 무단점유에 대한 국가배상금이 2020년 11월까지 총 136억 원 지급되어 국민의 재산권이 더욱 보장받게 되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관련 예산 증액, 반환 대상 확대 등을 통해 무단점유 사·공유지를 조기에 정리하여 토지 사용의 적법성을 확보함으로써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 완화

국방부는 군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불편을 해소하면서 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거나 완화(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그에 따라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군이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보호해야 할 군사시설 주변 지역만 유지하고 그 이외 지역은 해제 또는 완화하고 있다. 그 결과 2018년에는 여의도 면적 121배의 351.6㎢를, 2019년에는 여의도 면적 27배에 달하는 77.5㎢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완화하였다.

[도표 5-8]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 현황



아울러 국방부는 군사시설 해제가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 등에 관한 군 협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고 있다. 이러한 협의 위탁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함으로써 협의 기간을 단축시켜 국민의 행정편의를 도모하고자 한다.

[도표 5-9] 협의위탁 지역 현황

단위 : ㎢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면적	55	40	93	47	344	57	8	25	37	64

또한 국방부는 군사시설 주변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노력도 병행 추진하였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10]하여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에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할 때 군 협의를 면제[11]하도록 하였고, 폭발물 보호구역 내에서 소규모 시설의 증축과 재축을 허용[12]하였다.

「군소음보상법」 제정 및 후속 조치 추진

그동안 군 작전 및 훈련 시 발생하는 소음으로 지역주민이 피해를 입더라도 피해 주민은 주민소송을 제기해 법원 판결을 받아야만 배상금을 받을 수 있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군소음보상법)」을 제정하여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청구만으로도 소음피해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국방부는 법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 사업으로,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소음지도를 작성하기 위한 소음영향도 조사, 소음대책지역 소음저감 대책 마련을 위한 자동소음측정망 설치, 소음보상금 지급을 위한 매뉴얼 작성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 추진 간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 대상 설명회, 국회 설명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군소음보상법」 제정과 일련의 후속 조치로 국방부는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고 군사 활동의 안정된 기반을 조성할 것이다.

접경지역 군-지자체 상생 노력 지속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에 따라 과거의 양적·병력 위주 구조에서 첨단형 부대구조로의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5년까지 기존 2개 이상 지역에 위치한 부대들을 지역별 한 곳으로 통합·조정(해체·신편·증편)할 예정이다.

부대개편 추진 과정에서 군이 지역 인구 및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강원도 등 접경지역은 부대와 병력 감축이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국방부는 접경지역이 군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안보를 위해 군과 희생을 분담해 왔다는 점을 인식하고 접경지역 주민들과의 상생협력 방안 모색을 위해 2019년 광역단체별

10)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 (2019. 6. 2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개정 (2019. 7. 8.)

11) 건축물 용도 변경 시, 건축법상 29개 용도군 중 3개 용도군 (위험물·발전·통신시설)을 제외한 나머지로 용도 변경 시 군 협의 면제

12) 폭발물 보호구역 내 연면적 660㎡ 이하 소규모 공동이용시설과 농림수산업용 시설의 증축과 재축 추가 허용



상생발전 업무협약 체결 (2019년 12월)



강원도 접경지역 상생발전협의회 (2020년 1월)

로 지자체장과 국방부 장관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국방부는 병력 및 부대 감축으로 특히 어려움이 큰 강원도 내 접경지역(고성, 양구, 인제, 철원, 화천)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장관–강원도지사 및 접경지역 5개 군수와 상생발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실질적 현안 해결을 위해 제1회 국장급 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하였다. 국방부는 앞으로 국장급 상생발전협의체를 경기도, 인천으로도 확대·정례화하여 생산적인 상생협력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방개혁 2.0」의 안정적 추진기반을 마련하고 접경지역은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사시설 민군 공동사용 활성화

지역사회의 공공 체육·복지시설 부족으로 군 시설에 대한 개방 요구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에 국방부는 군 보유시설을 주민친화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2018년에 군 시설을 민간에 개방하기 위한 추진근거와 구체적 운영방법을 규정한 지침을 제정하는 한편, 개방시설의 관리를 지자체 등에 위탁하는 경우 적용할 표준계약서도 마련하였다. 또한, 군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개방 가능한 24개소의 시설을 발굴하여, 2020년 말 기준으로 이 중 16개소를 개방 완료하였다.

이를 통해 체육·복지시설이 부족한 지역의 생활여건이 개선되어 지역 간 복지 인프라 편차가 완화되고 국가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개방 가능한 군 시설을 적극 발굴하여 주민들에게 개방함으로써 주민복지와 민군상생 기틀 마련에 기여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4. 국방 규제 개혁

국방 분야 규제 개선

국방부는 국정과제인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 재설계' 추진에 따라 그간의 개별 과제 발굴 중심의 규제혁신 방식을 개선하여 국민의 규제혁신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2019년에는 규제개혁의 새로운 추진방식인 규제 정부입증책임제[13]를 도입하여 현 정부 출범 이후 지방자치단체나 규제개혁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된 건의과제 중 수용 불가했던 과제를 국민의 입장에서 재검토하였다. 그 결과 접경지역의 출입통제 완화, 비행 금지구역에서의 드론 비행 및 촬영 규제 완화 등 국민 생활 불편사항을 개선하였다. 또한 적극적 법령해석[14]을 적용하여 적극행정을 지원함으로써 규제혁신에 대한 공직자의 인식을 개선하고 이를 국방 분야 법령 및 규정 개정에 반영하여 국민의 권익을 증진하였다.

2020년에는 정부의 규제혁신 핵심 방향인 신산업 분야의 규제정비를 지원하고, 국방 분야 중 국민 생활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과제를 집중 발굴하여 개선하였다. 드론 촬영 자유구역 지정· 촬영 승인 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하여 드론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서울지역에서만 실시해 온 국방부 주관 군무원 채용 필기시험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지방에 거주하는 수험생의 이동에 따른 불편 및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였다.

이 외에도 군 운전면허를 사회 면허로 전환하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를 완화하는 등 국민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고 있다.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하여 규제개선을 추진하고,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규제는 국방부 규제개혁심사위원회[15]에서 규제의 적절성을 엄격하게 판단하여 국민의 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이다.

탄약 안전거리 조정

국방부는 탄약 저장시설 주변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소한의 안전거리를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하여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은 주민들의 건물 신축 및 증축 제한, 공공도로 건설 제한 등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지역 개발과 상충되고 있다.

국방부는 탄약시설 주변 주민들의 제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전체 탄약고의 31%를 차지하고 있는 노후된 지상형 탄약고를 최대한 지하형과 이글루형 탄약고로 바꾸는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하형 탄약고가 국토를 가장 효율적으로

13) 기업이나 국민이 규제의 불필요함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이 어려운 경우 규제를 개선하는 '갑(甲)'과 '을(乙)'을 바꾼 규제혁신 추진 방식

14) 법령해석 시 '법률에 금지되어 있지 않다면 할 수 있는 것'으로 탄력적으로 해석·적용하는 것으로, 국방부는 군 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기술 발전 등 사회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적극행정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

15) 행정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경우 규제의 대상·범위·방법 등을 정하고 그 타당성에 대해 심사하기 위해 「규제업무운영훈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 위원은 6명 이상 15명 이내의 내부위원 및 민간위원(법률·규제개혁 전문가 등)으로 구성

사용하면서도 탄약저장지원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인식하에 지질상 신축 가능성 등의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중장기 정책에 적극 반영해 신축을 추진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재산권 행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5. 환경친화적인 군 운영

군 환경오염방지시설 확충 및 개선

국방부는 군에서 배출된 오·폐수[16]로 인해 수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20년 11월 기준으로 오수처리시설, 폐수처리시설, 지자체 관로연결 등 군 환경오염방지시설 총 4,422개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토양환경의 보전을 위해 4,107개의 특정토양오염대상시설[17]에 대해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오염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오염정화사업 등 토양환경 복원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유류 누출 사고 등으로 인한 토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2020년까지 식별된 드럼야적장[18], 방유조[19] 등 토양오염 방지 시설 소요 20,709개 중 18,095개소를 설치하였고, 2020년에는 328개소, 그 이후에는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총 2,286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친환경적인 국방시설사업 추진

국방부는 장병들이 석면, 라돈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석면함유 건축물 정비, 라돈 저감사업, 유해환경작업장 개선 등의 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9년 3월부터 9월까지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석면함유 건축물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11,612동의 석면함유 건축물을 확인했다. 이 중 부대이전, 유휴시설 철거공사 등 다른사업과 중복되는 3,909동을 제외한 7,703동을 대상으로 군 석면함유 건축물 관리 및 정비계획을 보완하고, 2019년 604동, 2020년 779동에 대해 석면함유 자재를 제거하였다. 이후 2025년까지 석면함유 건축물 해체 및 자재 제거를 완료하여 장병 건강피해를 예방할 것이다.

라돈 저감사업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병영생활관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기준이 초과된 583동에 대해 토양배기법·실내환기법[20] 등을 적용하여 2019년까지 저감사업을 완료했다. 2020년부터는 「군인복무기본법」상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시설에 대해 2년 주기로 라돈을 측정하여 기준치 초과 시 라돈 저감시설을 설치하고 있다.

16) • 오수(하수) :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 물질이 섞이어 오염된 물 (「하수도법」제2조)
• 폐수 : 물에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수질오염물질이 섞여있어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 물 (「물환경보전법」제2조)

17) 토양을 현저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관리 대상시설 (「토양환경보전법」제2조)로 20,000ℓ이상 유류저장시설이 포함됨

18) 부대 내 드럼을 보관하는 야외 유류고에 유류 유출로 인한 토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바닥을 포장한 장소

19) 지상 유류탱크의 기름유출을 차단하는 욕조 형태의 구조물

20) • 토양배기법 : 건물하부의 토양 공기를 외부로 배출하는 공법 (토양의 압력이 낮게 되어 실내로의 라돈 유입 방지)
• 실내환기법 : 환기장치를 설치하여 실내공기를 외부로 배출 시키고, 실외 공기를 내부로 유입 시키는 공법

유해환경작업장 환경개선을 위해 탄약창 등의 도금·정비를 수행하는 2,500여 개 동을 대상으로 연 1회 작업환경을 측정하고 5년 주기로 작업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기준치 초과 시설을 확인하고 있다. 기준치를 초과한 시설에 대해서는 국소배기장치와 환기설비 및 집진기[21] 등을 설치해서 유해물질을 제거하고 있다. 또한, 특수건강검진을 지원해서 이상이 있는 경우 작업 인원을 교체하고 필요시 입원치료 등을 지원하고 있다.

군, 미세먼지 예방 및 관리 종합대책 추진

국방부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점차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정책에 부응하고 장병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2018년 「군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였으며, 부대운영 분야, 군내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 분야 등 총 2개 분야에서 13개 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다.

부대운영 분야의 주요 대책으로 2020년에는 연간 미세먼지 예보 '나쁨'(PM-2.5) 일수를 기준으로 50일 분량의 미세먼지 마스크를 보급하였다. 또한 2018년 육군 훈련소에 공기청정기를 처음 설치한 이후 2019년에는 각 군 신병교육대, 지휘통제실, 전 병영생활관, 병원 병실에 확대 설치하였으며, 2020년에는 예비군 생활관과 식당, 교육기관의 강의실에도 공기청정기를 설치하였다.

군내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 분야의 주요 대책으로 2019년에는 2005년 이전에 등록된 상용 지프와 버스, 트럭 등 노후 경유 차량 교체를 완료하였다. 친환경차량 보급확대를 위해 승용차 구매 시 친환경차 의무 구매비율을 80% 이상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2028년까지 업무용 승용차의 50%를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압축천연가스(CNG)[22] 및 전기 차량은 시범사업 후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21) • 국소배기장치 : 분진, 가스, 증기 등 발생물을 처리하는 장치
• 집진기 : 기체 속에 부유하고 있는 고체나 액체의 미립자를 모아서 제거하는 장치

22) Compressed Natural Gas

제4절

방위사업 투명성 제고 및 방위산업 경쟁력 확보

정부는 방위사업 비리 예방대책을 고도화하고 적극적인 방위사업 추진 환경을 조성하여 방위사업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무기체계 획득절차 개선 및 협업체계 구축 등을 통해 국방획득체계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또한 국방 R&D 수행체계 개선과 국가 R&D 역량의 국방분야 활용으로 국방 R&D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방위산업 성장기반을 구축하는 등 방위산업 경쟁력 확보와 방산수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1. 방위사업 투명성 제고

방위사업 비리 예방대책 고도화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방위사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사업추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비리 예방대책을 고도화하고 있다. 군산(軍産) 유착을 근절하기 위해 방산 분야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사적 접촉 신고를 의무화하였으며,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이력 관리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국방 출연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에서도 비리예방을 위하여 내·외부 감시·감독 체계를 강화하고, 소속 임직원의 청렴성 제고를 위해 정부부처 수준의 행동강령을 마련함과 동시에 윤리감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출연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평가·검사·판정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을 정립하고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또한 방위사업의 입찰 및 계약 이행을 돕는 모든 업체를 법적·제도적 관리 아래 활동하도록 기존의 군수품무역대리업[23]에 적용하던 등록 제도를 모든 방위사업중개업[24]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등록하지 않고 활동하는 중개업자에게 과태료, 과징금을 부과하고 무단으로 중개업자와 접촉하는 공직자를 징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것이다. 그리고 방위사업 비리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부정·비리에 연루된 업체에 부과되는 '징벌적 가산금'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한 번 비리를 저지르면 등록을 취소하고 영구히 등록을 불허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도입하며, 관련된 공직자에 대해서는 형법상 정의된 양정기준의 1.5배 가중처벌을 적용하는 등 방위사업 특성을 고려한 처벌·제재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23) 외국기업과 방위사업청장 간의 계약체결을 위하여 계약체결의 제반과정과 계약 이행과정에서 외국기업을 위해 중개 또는 대리하는 행위를 하는 기관 및 단체

24) 방위사업 입찰 및 계약 체결·이행 과정에서 특정 업체를 위하여 조력하는 모든 무역 대리·중개·컨설턴트 기관 및 단체

적극적인 방위사업 추진 환경 조성

방위사업 종사자들이 소신있게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연구개발 중 발생하는 시행착오에 대해서는 재도전의 기회를 부여하는 '성실수행인정제도'[25]를 도입하였으며, 부정·비리 없이 법령에 따라 정상적으로 수행한 업무 결과에는 책임을 묻지 않는 '적극행정면책제도'[26]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업무수행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수사·감사·조사 등을 받는 경우 개인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내부 법률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업무환경 개선은 방위사업 종사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책임감을 강화하여 우수한 무기를 획득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2. 효율적 국방획득체계로 개선

신속·효율성에 기초한 무기체계 획득절차 개선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급변하는 안보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신속히 무기체계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국방획득절차를 개선하고 있다.

민간 선도기술이 접목된 무기체계를 군이 최소물량으로 구매하여 현장에서 시범운용한 후, 적합한 품목은 신속하게 전력화하는 '신속시범획득사업'을 2020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사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관련 법령과 규정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며, 연구개발 및 개량의 성격이 가미된 '신속시제개발(가칭)' 제도 도입도 추진 중이다. 무기체계별 특성에 맞게 해당 사업을 적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획득모델을 제도화하여 '신속획득제도(가칭)'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또한, 사업 선행절차인 소요검증, 사업타당성조사, 방위사업감독관 검증 등에 있어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행정절차는 생략하고, 중복업무는 통합하는 등 무기체계 획득절차를 간소화하여 적기에 전력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 및 협업체계 구축

최근 방위사업 환경이 점점 복잡해지고 고도화되고 있는 한편, 방위력개선사업의 수는 증가하고 있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 및 협업체계 구축이 더욱 필요하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증가하고 있는 방위사업 현안을 신속히 해결하고, 투명하게 소통·협업함으로써 정책·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2019년 4월부터

25) 연구개발을 성실히 수행했음에도 기술적 한계 등으로 인해 성과를 달성하지 못한 이른바 '성실한 실패'에 대해서는 업체에 부과되는 제재를 감면하는 제도

26) 공직자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는데 결과가 잘못되었을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이상 책임을 면제·감경해 주는 제도

방위사업협의회를 운용하고 있다.

방위사업협의회는 국방부 차관과 방위사업청장이 공동 주관으로 실시하여 그동안 해결하기 어려웠던 현안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 아울러 국방획득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무기체계 획득 전(全) 단계의 정보를 관리·공유할 수 있는 협업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다.

방위사업청은 '전문직 공무원제도'를 도입하여 방위사업의 직원 전문성을 강화하고 기존의 사업·계약관리본부를 무기체계별 특성을 고려하여 기반전력사업본부와 미래전력사업본부로 개편하였으며 사업부장이 사업과 계약을 동시에 수행하는 등 실질적인 통합사업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사업관리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였다. 향후에는 사업·계약 통합을 기반으로 업무절차를 간소화하는 동시에 일반물자류 관련 업무를 조달청으로 이관하는 등 방위사업청의 역량을 방위력개선사업에 집중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국방획득인력 전문역량 강화

방위사업 관련 기관 종사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공무원들의 잦은 순환보직 문제를 해소하는 동시에 군인들의 현장 감각 및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19년에는 방위사업청 사업관리 분야에 전문직 공무원 직위를 반영하고, 국방부·합참·각 군 및 방위사업청 내에 군인들의 전문인력 직위를 지정하여 획득 특기와 각 군 전력 특기 간 순환보직을 강화함으로써 방위사업 역량 향상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향후 국방대와 방위사업청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국방획득 교육체계를 통합하여 국방획득 전문 교육기관을 설립하고, 무기체계 총수명주기 관점에서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을 구축하여 획득인력의 전문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3. 국방 R&D 역량 강화

국방 R&D 수행체계 개선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첨단기술이 전쟁 양상을 주도하는 미래전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국방연구개발체계를 혁신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현재 국방 R&D는 소요가 결정된 무기체계에 필요한 기술개발에 중점을 두는 '추격형 R&D'의 형태이나,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첨단기술이 무기체계 소요를 선도하

는 창의·도전적인 기술개발이 가능하도록 '선도형 R&D' 수행체계로 개선해 나갈 것이다. 이와 더불어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 근거한 '미래도전국방기술개발' 제도를 확대해 나가고, 미래의 중점 기획대상 무기체계를 선정하여 선택과 집중에 의한 전략적 기술기획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기관별 역할 분담을 통해 국방과학연구소는 미래도전국방기술개발을 포함하여 미래 핵심·신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역량에 집중할 것이다. 국방기술품질원은 국방 품질관리 및 신뢰성 평가, 국방기술에 대한 조사·예측, 기술기획·분석·평가 업무를 전담하여 군수품과 국방기술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이다.

국가 R&D 역량의 국방 분야 활용 확대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국방 R&D 제도를 개방하여 민간 참여를 유인하고, 민간 우수기술의 군사적 활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먼저 기술개발 분야에 민간과의 협약 방식을 도입하고, 성실수행인정제도의 적용 범위를 확대할 것이다. 아울러 국가와 영리기관을 포함한 개발기관과의 지식재산권 공동소유, 국방 R&D 인프라의 민간 개방, 정부-민간 공동 연구개발을 통한 부족기술 지원 등 민간부문의 역량이 적극적으로 국방분야에 유입되도록 하는 수단을 제공할 것이다.

국가적 R&D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협력체계도 구축하고 있다. 우선, 2018년 4월 국방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위사업청이 상호 협력하여 마련한 「과학기술 기반 미래국방 발전전략」 틀 속에서 기초연구 분야의 국가 R&D 역량을 국방 R&D에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국가 R&D와 국방 R&D의 장점을 상호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협업 체계도 마련하고 있다.

4. 방위산업 경쟁력 확보 및 방산수출 활성화

방위산업의 도약적 성장기반 구축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방위산업은 국가안보의 초석이며 군이 요구하는 성능과 품질의 무기체계를 적기에 획득·공급함으로써 군사력을 증강하고 자주국방을 구현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러한 방위산업은 정부가 유일한 수요자라는 수요독점의 특성과 다른 민간산업에 비해 방산업체가 소수인 특성을 띠고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국내 방산 분야 생산규모가 정책기조 변화에 밀접하게 연동되는 등 방위산업 육성 및 발전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지난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 이후 정부가 유일한 수요자인 방위산업의 특성에 맞춰 차별화된 지원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방위산업의 발전과 관련된 부분을 「방위사업법」에서 분리하고 다양한 제도를 담은 「방위산업의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0년 제정되었다. 이로써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내수 중심에서 수출형 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폭적인 정책지원 수단이 마련되었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5년 단위로 「방위산업육성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방위산업을 합리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한 기본정책 및 중·장기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2018~2022 방위산업육성기본계획」은 첨단 무기체계 개발능력 확보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목표를 두고 방위산업의 발전적 생태계 조성, 국방 R&D 역량 강화, 유망 중소벤처기업 육성, 수출형 산업구조로의 전환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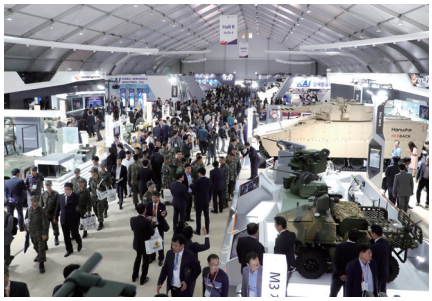
세부적으로 무기체계의 국내 개발·생산지원 강화, 방산원가구조 개선, 방산물자·업체 지정제도 개선, 방산통계 조사·분석능력 강화, 방산업계와 효율적인 소통 및 정보교류 방안 수립 등을 진행 중이다. 또한 유망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국방벤처 지원사업, 글로벌 방산강소기업 육성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업들이 융합하여 수행될 수 있도록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은 방위산업 생산체계, 과학기술체계, 기업지원체계, 군사체계 등이 효율적으로 결합된 집합체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러한 집합체는 지역특화 방산부품 로드맵 수립, 국산화 협의체 구성·운영, 방산부품 국산화 연구실 운영 등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종합지원 창구 및 지역 중심 일자리 특화사업을 추진하는 등 중소·벤처기업 육성 지원 허브로서의 역할도 하게 된다.

또한 품질·안전관리 정착을 통해 무기체계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예방적 품질관리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안전시스템 강화를 위해 관리영역을 확장하고 사전 예방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방산수출 활성화

방산수출은 시장 확대를 통해 수요부족 문제를 해결하여 방산업체의 가동률을 유지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국방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으며, 나아가 우방국과의 국방협력 확대에도 기여하고 있다.

그간 정부는 방산협력 양해각서 체결, 방산군수공동위원회 등과 같은 정부 간 협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Seoul ADEX, 2019년 10월)

력 채널을 구축하고, 우리 방위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수출용 개조·개발사업의 지원, 수출 시 기술료 감면,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개척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해 왔다. 격년으로 개최되고 있는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Seoul ADEX)[27]와 국제해양방위산업전(MADEX)[28] 그리고 대한민국 방위산업전(DX-Korea)은 방위산업을 수출형 글로벌 산업으로 발전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2019년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는 29만 명이 전시회장을 관람하고 역대 최고인 34개국 430개 업체가 참여하여 210억 불 이상의 수주와 상담이 이루어지는 등 성공적인 국제 방산협력의 장을 마련하였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최근 방산수출의 규모는 과거에 비해 크게 성장하였다. 또한 수출대상 지역은 북미지역에서 아시아·중동·중남미 지역까지, 품목은 탄약·총포 위주에서 기동화력·항공·함정·유도무기 등 첨단무기체계까지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글로벌 방산수출 시장 내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구매국의 요구사항은 점차 다양화되고 있어 방산수출 활로를 모색하기 위한 정책 전환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출형 방위산업으로의 도약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술획득 중심의 절충교역[29] 제도를 산업협력[30] 제도로 전환하여 중소기업의 수출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또한, 중고 무기체계의 수출, 교환·대응구매, 임대 등의 다양한 수출방식을 추진하고, 금융지원, 정부 간 판매, 타 분야 산업협력과의 연계 등 정부 차원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그리고 범정부적 방산수출 지원 협의를 위한 '국방산업발전협의회'를 실시하여 정부 부처 간 유기적 협업을 활성화할 것이다.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부정적인 방산수출 여건에 대비하여 정부는 가격경쟁력 및 핵심부품 기술력 강화 등 근본적인 수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19 서울 ADEX

27) Seoul Aerospace and Defense EXhibition

28) International Maritime Defense EXhibition

29) 국외로부터 무기, 장비 등을 구매할 때 계약상대자로부터 기술을 이전받거나 수출물량을 확보하는 등 일정한 반대급부를 제공받는 교역

30) 국외로부터 무기, 장비 등을 구매할 때 계약상대자에게 부품·기술의 공동개발과 생산, 합작투자 등을 권장하거나, 국내 부품·기술 등을 수출하게 하는 등 일정한 협력관계를 의무적으로 요구하는 것

제5절

책임국방 구현을 위한 적정 국방 예산 확보 및 예산 운용 효율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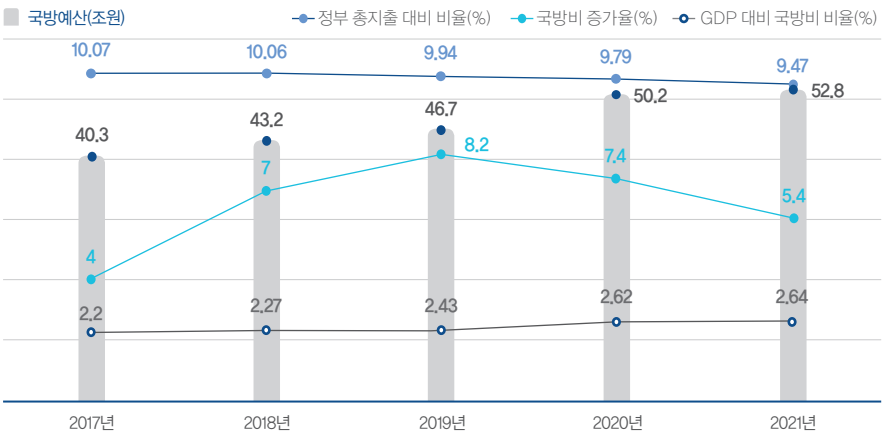
다양한 안보위협에 대응하는 국방태세를 굳건히 하고 국방개혁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적정 국방비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국방부는 적정 수준의 국방비를 확보하는 한편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국방 전 분야에서 강도 높은 경영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다.

1. 국방비의 현실

국방비는 국가방위라는 공공재화를 생산하기 위해서 국방정책과 연계된 각종 사업들을 집행할 때 지출하는 비용을 말한다. 국방비의 적정 규모는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군사력을 건설하고 운영·유지하는데 수반되는 비용과 국가의 재정적 부담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지난 5년간 국내총생산(GDP) 및 정부재정에서 국방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다. 2021년 국방비는 국내총생산 대비 2.64%, 정부 총지출 대비 9.47% 수준이며 최근 5년간 국방예산 추이는 [도표 5-10]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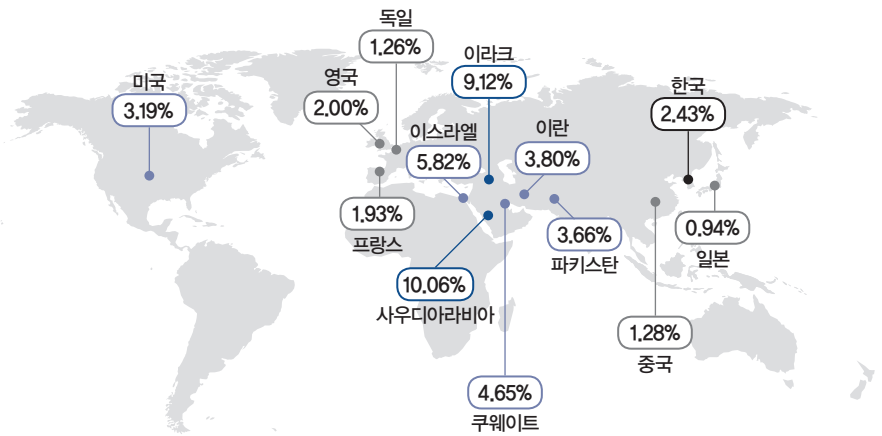
[도표 5-10] 최근 5년간 국방예산 추이 (본예산 기준)



각국의 국방비 부담률은 그 나라가 처한 안보위협의 정도와 비례하는 경향이 있다. [도표 5-1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프랑스, 영국, 일본, 중국, 독일 등 안보위협이 비교적 낮은 주요 국가들의 국방비 부담률은 국내총생산의 1~2% 수준이지만 이스라엘,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파키스탄과 같은 주요 분쟁국 및 대치국들은 국내총생산의 3% 이상을 국방비로 부담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 대비 국방비 비율은 2019년 기준 2.43%로서 세계 평균인 2.02% 및 주요국에 비해서는 높지만 주요 분쟁국 및 대치국들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다.

[도표 5-11] 주요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규모(2019년 기준)



* 출처 : 「The Military Balance 2020」(국제전략문제연구소, 2020년 2월)

2. 적정 국방비 확보의 중요성

우리 안보환경은 북한의 지속적인 군사위협과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 등 다양한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에 대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방력 우위 확보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동북아 주변국의 군사력 강화 추세에서 남북한 현안을 자주적으로 이끌어나가기 위해 적정 수준의 군사력을 갖춰야 한다.

다양한 안보위협에 대비한 튼튼한 국방태세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군수·시설·교육훈련 등 전력운영의 필수소요에 국방비를 지속 투자하는 한편, 군 구조를 정예화하고 무기체계를 첨단화하는 「국방개혁 2.0」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기 위한 적정

수준의 국방비 확보가 필수적이다. 또한, 과거에 비해 감염병·테러 등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이 증대되는 등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방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인건비, 급식비 등 경직성 경비 외에 적정 수준의 재량적 경비 확보가 필요하다.

다양한 안보변수가 산재한 상황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에 걸맞은 국방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적정 국방비가 뒷받침될 때 가능하다.

3. 국방예산 및 국방중기계획

2021 국방예산

2021년 국방예산은 강력한 국방력 건설을 위한 「국방개혁 2.0」 추진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2020년 대비 5.4% 증가한 52조 8,401억 원을 편성하였다. 이 중 병력과 현존 전력의 운영·유지를 위한 전력운영비는 35조 8,437억 원으로 국방예산의 67.8%를 차지하며, 무기체계 획득·개발을 위한 방위력개선비는 16조 9,964억 원으로 국방예산의 32.2%를 차지하고 있다. 2021년도 일반회계 기준 국방예산 규모와 배분 현황은 [도표 5-12]와 같다.

[도표 5-12] 2021년 국방예산(일반회계 기준)

단위 : 억 원, %

구분		2020년 예산(A)	2021년 예산(B)	증감(B-A)	증가율
국방비 계		50조 1,527	52조 8,401	2조 6,874	5.4
전력운영비	소계	33조 4,723	35조 8,437	2조 3,714	7.1
	병력운영비	19조 8,600	20조 5,872	7,272	3.7
	전력유지비	13조 6,123	15조 2,564	1조 6,441	12.1
방위력개선비		16조 6,804	16조 9,964	3,160	1.9

전력운영비는 2020년 대비 7.1% 증가한 35조 8,437억 원으로 군수·시설·교육훈련 등 우리 군의 100% 역량 발휘를 위한 필수소요와 함께, 감염병·테러 등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에 대비한 포괄안보 역량 확충과 주둔지 및 해안 경계작전태세 확립을 위한 예산을 적극 반영하였다. 또한, 국방인력구조 정예화와 국방운영 첨단화, 장병 복무여건 개선 등에도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

첨단장비의 전·평시 효율적 가동을 위해 장비유지비를 2020년 대비 7.7% 증액하였고, 시설유지보수비를 100% 현실화했으며, 장병들의 실전적 전투력 유지를 위해

과학화 훈련체계를 지속 구축하는 등 안정적인 국방운영을 위한 필수소요에 국방비를 우선 투자하였다.

아울러, 감염병·테러 등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비축용 마스크 구매, 방제용역, 군 병원 내 의무장비·물자 보강 예산을 편성하였고, 대테러·대화생방 특수임무대 추가지정에 따른 관련 장비·물자 보강 예산을 반영하였다. 또한, 군의 주둔지 및 해안 경계작전태세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경계시설을 보강하고, AI 기반 고성능 감시장비를 도입하는 예산을 대폭 증액하였다.

2022년까지 상비병력이 감축됨에 따라 첨단장비 운용과 숙련된 전투력 확보를 위한 부사관·군무원 증원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국방분야에 적용한 육군 스마트부대, 해군 스마트 항공기지, 공군 스마트 비행단 구축 등 전력운영 전반을 첨단화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다.

장병 복무여건 개선과 관련하여, 2021년 병 봉급을 2017년 최저임금의 45% 수준까지 인상하였고, 1인당 급식단가를 3.5% 인상하여 장병의 선호가 식단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병사 군 단체보험 지원비와 이발비를 신규 편성하였고, 어학 공부, 자격증 취득 등 복무 중인 장병의 자기개발 활동을 위한 예산을 확대 편성하였다.

이 밖에 사이버공간에서의 감시·방어 등 사이버작전 제반 요소에 고르게 예산을 편성하고, 동원훈련 보상비 현실화, 예비군훈련 과학화, 동원부대 부족 장비·물자 보급 등 예비전력을 정예화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다.

방위력개선비는 2020년 대비 1.9% 증가한 16조 9,964억 원으로 전방위 위협에 대비한 대응체계 구축 및 국방 R&D 역량 강화와 안정적인 방위산업 생산여건 보장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

핵·WMD 위협 대응 전력 확보와 감시·정찰·지휘통제 기반전력 구축을 위해 6조 1,979억 원을 편성하였고, 연합방위주도를 위한 한국군 핵심군사능력을 지속적으로 보강하기 위해 2조 2,653억 원을 편성하였다. 또한, 국방개혁에 따른 군구조 개편 추진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6조 3,455억 원을 반영하였고, 국방 R&D 역량 강화를 위해 4조 3,314억 원을 편성하였다.

사이버·우주·테러 위협 대응 및 국가 재난 지원능력 강화에 2,099억 원을 편성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 선도를 위한 미래 전략기술, 유·무인 복합체계 등 첨단무기 개발 역량 강화에 1조 470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국내 방위산업의 수출형 산업구조 전환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방산육성·지원 분야에 968억 원을 편성하였다.

2021~2025 국방중기계획

국방중기계획은 현재와 미래의 예상되는 위협과 안보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향후 5년간의 군사력 건설 및 전력운영에 대한 청사진이다.

「2021~2025 국방중기계획」은 「2019~2033 국방기본정책서」, 「국방개혁 2.0 기본계획」, 국정과제의 기조를 유지하되 코로나19 등 변화된 안보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정책과제를 추진할 수 있도록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였다.

「2021~2025 국방중기계획」의 총 재원 규모는 300.7조 원으로 연평균 6.1% 증가하는 수준이다. 국방중기 재원 규모는 [도표 5-13]과 같다.

[도표 5-13] 국방중기 재원 규모

단위 : 조 원

구분	2020년	대상기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계
국방비 (증가율)	50.2 (7.4%)	53.2 (6.0%)	56.5 (6.3%)	59.8 (5.9%)	63.6 (6.3%)	67.6 (6.3%)	300.7 (6.1%)
전력운영비 (증가율)	33.5 (6.9%)	36.1 (7.8%)	38.3 (6.3%)	40.1 (4.7%)	42.0 (4.7%)	44.0 (4.8%)	200.6 (5.6%)
방위력개선비 (증가율)	16.7 (8.5%)	17.1 (2.5%)	18.2 (6.2%)	19.7 (8.4%)	21.6 (9.5%)	23.6 (9.3%)	100.1 (7.2%)

「2021~2025 국방중기계획」 전력운영 분야 주요 반영 내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쟁수행능력 유지를 위한 전력지원 강화 및 경계력 보강으로 튼튼한 군사대비태세를 확립할 계획이다. 성과기반 군수지원(PBL) 확대 및 F-35A, 고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HUAV) 등 첨단전력 도입·운영을 위한 후속 군수지원 강화로 현존 전력 운용능력을 극대화하며 주둔지 경계력 강화를 위해 울타리, 경계초소, 경계등을 보강하고 경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항·포구 및 부대 주둔지에 고성능 CCTV를 확대 설치하여 경계작전 준비태세를 강화할 것이다.

둘째, 감염병 발생 시 환자의 격리·치료 및 민간지원이 가능한 전방위적 의료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테러·화생방 공격이나 대규모·긴급 재난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장비·물자를 보강할 계획이다. 또한, 사이버 정보 및 감시능력 확충을 위한 사이버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등 사이버·재난·테러 등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을 확보할 것이다.

셋째, 병력 감소에도 전투력은 더 강한 스마트 군으로 육성하기 위해 군 구조를 정예화하고 4차 산업 기술을 국방 분야에 적용할 계획이다. 상비병력 감축에도 전

투력 유지를 위해 전투부대는 장교, 부사관 중심으로 보강하고 비전투 분야는 민간인력으로 대체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간부 획득·운영체계 개선으로 숙련된 전투력 확보를 위해 간부 계급구조는 기존 피라미드형에서 '소수획득-장기활용'이 가능한 항아리형으로 개편할 것이다. 또한, 병력감축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비전력 정예화를 추진하고 실전적 과학화 훈련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전국 202개 예비군훈련장을 2024년까지 40개 과학화 예비군 훈련대로 통폐합하여 훈련 효과를 극대화하고 예비군 동원훈련 보상금을 병장 봉급 수준으로 인상하여 사기를 증진하고 훈련 참여 여건을 보장할 것이다. 병 복무기간 단축에도 단기간 숙련도 향상을 위해 시·공간의 제약 없이 실전과 유사한 환경에서 훈련할 수 있도록 실전적 과학화 훈련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넷째, 국민의 기대와 사회 수준에 부합하도록 장병의 인권과 복지, 근무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군 복무에 대한 합리적 보상을 위해 병 봉급을 2022년까지는 병장 기준 2017년 최저임금의 50%인 67.6만 원, 2025년까지 병장 기준 96.3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더불어 제초·청소 등 장병 사역임무는 민간인력으로 전환하여 전투임무 전념 여건을 보장하고 병 자기개발비용 지원을 확대하는 등 자기개발 기회를 제공해 생산적 군 복무여건을 조성할 것이다. 또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군 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민간병원 이용 시 의료비의 개인부담 비율을 낮출 수 있는 병사 단체 실손보험을 도입하고, 안정적 복무여건 조성을 위해 군 간부를 위한 주거시설 19.7만 세대/실을 확보하고 노후된 주거환경을 지속 개선할 예정이며, 일-가정 양립을 위하여 2020년 155개소인 군 어린이집을 2025년까지 187개소로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안전하고 국민 친화적인 국방환경 조성을 통해 장병과 국민 신뢰를 높여나갈 것이다. 전염병 및 미세먼지로부터 장병을 보호하기 위한 방지마스크를 확보하고 군 구매물량 승용차를 친환경차로 보급하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오·폐수 처리시설, 관로 등의 노후시설을 개선하여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유류배관 지상화로 토양오염을 방지하며 석면함유 건축물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미군기지 반환에 따른 철거 및 환경정화 사업, 사용하지 않는 군 유휴시설 철거, 군 소음대책 지역 거주민 보상금 지급 등을 통하여 군사시설 주변의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군사시설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방위력개선 분야는 전방위 안보위협에 주도적 대응이 가능한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정예화된 군사력 건설을 위해 먼저, 우리 군의 독자적 감시·정찰능력을 확보하고 핵·WMD 위협 대응 등 전략적 억제능력 확충에 최우선 중점을 두어 재원을

배분하였다. 또한 전작권 전환 및 군구조 개편 등을 통한 작전적 대응능력과 사이버·우주, 테러·화생방, 재난 등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 대응 전력을 보강하고 국방 과학기술 및 국내 방위산업을 육성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먼저, 감시·정찰 및 핵·WMD 위협 대응 등 전략적 억제 구현을 위한 핵심전력 확보를 위해 35.2조 원을 배분하였다. 우리 군의 독자적 감시·정찰 및 전략표적에 대한 정밀타격 능력 구비를 위해 군정찰위성, 중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MUAV), 차기 잠수함, 장거리 공대지유도탄, 신형 미사일 등을 확보하여 감시능력과 장거리타격능력을 확충해 나갈 것이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을 위해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Ⅱ,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 등을 전력화하고, 패트리어트와 철매-Ⅱ의 성능개량 등을 통해 탄도탄 탐지와 핵심시설 방어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미사일 전력 보강을 통해 압도적 대응능력을 확보해 나갈 것이다.

둘째, 전작권 전환 및 군 구조 개편 추진을 위한 필수전력 확보를 위해 50조 원을 배분하였다. 전작권 전환 관련 핵심군사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대화력전 수행능력, 정밀유도무기, 통신 능력 보강에 약 11.6조 원을 편성하였고, 군 구조 개편을 위한 전장기능별 필수전력에 38.4조 원을 투입하여 230㎜급 다련장, 차륜형장갑차, 차기 이지스구축함, 한국형전투기(KF-X), 상륙기동헬기 등 지·해·공 작전능력을 질적·양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다.

셋째, 코로나19 등과 같은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1.9조 원을 배정하여 대테러, 재난 구호, 재외국민 보호 능력을 향상해 나갈 것이다. 대테러 분야에서는 특수타격 및 주·야간 감시능력 보강을 위해 굴절총, 폭발물 탐지 및 제거로봇, 신형 화생방정찰차, 건조식 제독기 등의 맞춤형 장비·물자를 확보함으로써 광역시·도별 책임부대 지정에 따른 대테러부대 및 화생방부대의 임무수행을 보장하고, 의무후송 전용헬기, 대형수송함 등의 전력화로 재난 시 구호활동 및 재외국민 보호능력을 강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방 R&D 구현 및 방위산업 활성화를 위해 24.8조 원을 편성하였다. 국방비 대비 국방 R&D 점유율을 중기기간 8.3%까지 확대하고 특히, 국방분야 4차 산업혁명 신기술 획득을 위해 중기 초기 집중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자율·인공지능 등 국방전략기술 8대 분야 중심으로 기초연구 및 핵심기술 개발에 집중투자하고, 창조적인 연구개발 보장을 위한 R&D 기관 재구조화 및 인프라 보강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투자할 것이다.

4. 국방경영 효율화

국방 재정개혁 추진 국방부는 2013년부터 국방운영의 효율성·효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차관 주관으로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방경영기획 평가단'을 운영하고 있다. 국방경영기획 평가단은 전력운영사업의 사전 타당성 검토 및 심층평가를 처음으로 실시하였고, 민간 전문가 그룹을 활용하여 조달, 수리부속, 물류 등 군수혁신 분야의 과제를 추진하였다.

2015년부터는 국방경영의 단순 효율화를 넘어서 근본적인 재정개혁에 집중하기 위해 '국방경영기획 평가단'을 '국방재정개혁 추진단'으로 전환하고 국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선정하여 개선상황을 점검·관리하고 있다.

2016년에는 국방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한정된 국방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운영하기 위해 기획문서체계를 최적화하는 등 국방기획관리제도 발전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였다. 2017년에는 군마트 판매병 및 부대복지회관 관리병 등 전투근무지원 분야에서 복무하는 병력을 민간인력으로 대체함으로써 병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적극 기여하였다.

2018년에는 우수한 군수품 조달을 위해 군수품 상용화 등 조달지원 체계를 개선하였고, 주둔지 단위 시설사업을 조정·통합하였으며, 군 주거시설 관리운영을 민간위탁하여 병력의 효율적 운용과 재정 절감의 성과를 거두었다. 2019년에는 국방 클라우드 서비스 확대, 빅데이터를 이용한 부대 누수 개선 등 미래 핵심기술을 활용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국방운영 체계를 구축하고 예산 절감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2020년에는 사물인터넷, 스마트 물류창고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국방운영에 적용해 운영체계를 개선하고 재정 절감을 도모하였다. 또한, 민간 자원을 활용하여 국방자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방 제도·운용 방식을 개선하여 운영 전반의 효과성을 제고하였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국방 전반에서 비효율적인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고효율의 국방경영을 위한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추진할 것이다.

군 책임운영기관제도 운영

국방부는 운영의 효율성·전문성과 국방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사업적, 집행적 업무 성격의 기관을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군 책임운영기관 제도는 군 내외에서 기관장을 공개 채용하여 기관장에게 조직, 인사, 재정상의 자율권을 부여하고, 조직 운영의 성과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 제도다. 2009년 시범 운영한 이후 지속적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2020년 현재 정비, 보급, 의료, 인쇄, 정보화 분야에서 16개 기관이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군 책임운영기관 현황은 [도표 5-14]와 같다.

[도표 5-14] 군 책임운영기관 지정 현황 : 16개 기관

지정 연도	계 16개	국직(6개)	육군(2개)	해군(5개)	공군(3개)
2009년	3개	국군인쇄창 국군수도병원		보급창	
2011년	3개	국군대전병원		제1수리창	83정비창
2012년	3개	국군의학연구소		제2수리창	82정비창
2013년	3개		종합정비창	제3수리창	종합보급창
2014년	3개	합동상호운용성기술센터 국방통합데이터센터		정비창	
2017년	1개		종합보급창		

군 책임운영기관들은 생산성 증가, 서비스 수준 향상 등 가시적인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있다. 국군인쇄창은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되기 전 오류인쇄율이 2.03%에 달했으나 지정 이후 0.23%로 낮추었으며, 육군종합정비창은 외주정비 대상품목 545건을 자체정비 대상품목으로 전환하는 등 정비역량을 강화하였다. 또한, 국군수도병원은 운영의 효율성 향상과 우수한 전문의료인력 확보를 통해 2015년 종합병원으로 인증을 받았으며 2021년부터는 국군외상센터를 개원·운영할 예정으로 군 의료서비스의 향상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 책임운영기관들은 능동적이고 성과중심적인 업무수행[31]으로 기관의 경쟁력을 높이고 생산품과 서비스의 품질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향후 국방부는 복지, 시설분야에서도 군 책임운영기관을 지정하는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여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31) 6개 기관 관련 분야에서 특허출원 226건, 출판저작권 261건, 대외기관 인증 78건, 논문 게재 611건 등의 성과 달성

제 6 장

상호보완적 굳건한 한미동맹 발전과 국방교류협력 증진

제1절 상호보완적 굳건한 한미동맹 발전
제2절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
제3절 국방교류협력 내실화 및 외연 확대
제4절 국제평화유지 기여 및 재외국민 보호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 (2020년 10월)

제1절

상호보완적 굳건한 한미동맹 발전

한미동맹은 한반도 및 역내 평화·번영의 핵심축으로 기능하며, 공동의 가치와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지속 발전해 나가고 있다. 한미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해 확고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동맹협력의 범위와 수준을 지속 심화·확대하고 있다. 한미는 이와 같은 연합방위태세와 동맹협력을 통해 공동의 국가안보이익을 보호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상호보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1.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의 지속적인 발전

한미동맹은 지난 67년간 외부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방위하는 것은 물론 우리 정치·경제·사회·문화 발전에도 크게 기여해 왔다.

지금의 한미동맹은 한반도 방위의 핵심 역할을 다하고 있으며, 나아가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 번영에도 기여하고 있다. 한미 정상은 2019년 6월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은 안보뿐만 아니라 지역, 글로벌 이슈에서도 함께하는 동맹으로 확고하다고 평가하고, 한미동맹을 역내 평화와 안정, 번영의 핵심축으로 삼아 양국 공조를 긴밀히 이어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양 정상은 위대한 동맹의 역사와 정신을 잊지 않고 한미동맹을 더욱 견고하게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이와 같은 합의를 바탕으로 한미 국방당국은 한미안보협의회의(SCM)[1], 한미군사위원회회의(MCM)[2],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3] 등 다양한 고위급 안보협의체를 통해 주요 정책을 논의하고 한미동맹 현안들을 관리하며, 한미동맹의 발전 방안을 논의해 나가고 있다.

2020년 10월 개최한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한미 국방당국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달성하기 위해 긴밀한 공조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하였으며, 한미 국방장관은 남북이 「9·19 군사합의」 이행을 통한 지상·해상·공중 등 접경지역에서의 적대행위 중지와 유엔사의 정전협정의 지속 이행 및 관리를 통해 안정성이 유지되고 우발적 충돌 가능성이 현저히 감소되었다는 점에 공감하였다.

또한, 한미 국방장관은 한미동맹이 강력하다고 평가하며,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합의된 대한민국을 방어한다는 연합방위에 대한 양국 상호 간의 공약을 재확

1) 한미 국방장관과 국방·외교 고위관리가 참여하는 양국 간 최고 안보협의체 (SCM :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2) 양국 합참에서 연례적으로 개최하는 한미 군사당국 간 최고위급 협의체 (MCM : Military Committee Meeting)

3) 다양한 한미 국방협의체들을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일 목적으로 2012년부터 운영 중(KIDD : Korea-U.S. Integrated Defense Dialogue)

인하였다. 특히, 미국은 핵,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하여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할 것임은 물론, 상호방위조약에 명시된 대한민국의 연합방위에 대한 미국의 흔들림 없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양 장관은 한미동맹의 억제태세를 제고하고 맞춤형 억제전략을 이행하기 위한 방안들을 공동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 (2020년 10월)

아울러, 한미 양국 정상이 개방성, 포용성, 투명성이라는 역내 협력 원칙에 따라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 간 조화로운 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임을 표방한 데 이어, 한미 국방부는 미래 안보환경 변화를 고려한 「미래 한미동맹 국방비전」 공동연구를 수행하여, 미래의 새로운 도전과 안보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양 국방당국의 공동원칙과 분야별 국방협력 방안을 도출하였다. 나아가 양국은 동맹의 국방협력을 상호보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한반도 평화정착 이후에도 한미동맹이 동북아와 범세계 영역에서 공동 국가안보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미동맹은 한반도는 물론 지역 및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포괄적인 전략동맹으로 지속 발전해 나가고 있다. 범위 면에서는 사이버·우주·방산·과학기술·해양안보 등 새로운 분야로 협력 지평을 지속 넓혀나가고 있고, 지역적으로는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 및 범세계적 안보 사안으로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2020년 전 세계에 닥친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여 긴밀한 한미 공조체제를 가동한 것과 같이, 한미는 평화유지활동, 대해적작전, 안정화 및 재건 노력, 지역안보협력구상, 인도적 지원 및 재난 구호 등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국방협력을 지속 증진해 나가고 있다.

특히, 한미는 우주에서의 점증하는 위협에 대한 효과적인 공동 대응을 보장하고자 우주상황인식 정보공유, 전문인력 교류, 우주분야 연합연습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긴밀히 추진하고 있다. 2013년부터 시작된 한미 국방 우주협력 실무협의체를 통해 이러한 노력을 구체화시키고 있으며, 2020년 제15차 회의에서는 기존 교류 분야를 지속 발전시키는 한편, 한미 공동 우주정책 방향 수립 연구 추진 등 협력을 심화해 나가고 있다.

국방과학기술 및 방산분야에서도 한미는 양국의 비교우위를 상호보완적으로 활

용하기 위해 협력을 지속해서 강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미는 방산기술협력위원회(DTICC)[4], 방산기술보호협의회(DTSCM)[5], 안보협력위원회(SCC)[6], 군수협력위원회(LCC)[7] 등 다양한 고위급 정례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도 한미 국방부는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 지원할 것이며, 글로벌 파트너로서 동북아와 범세계적 영역에서 안보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굳건한 한미동맹을 상호보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2. 강력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유지

한미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지속 유지해 나가고 있다.

한미는 전·평시 우발상황에 대비하여 연합작전계획을 지속해서 발전시키고 있으며, 특히 한미 연합 전구급 지휘소훈련을 통해 작전계획을 검증·보완하고 있다. 또한 한미 연합 야외기동 훈련은 '연중 균형되게 연합준비태세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한다'는 원칙하에 연합작전 수행능력과 상호운용성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다.

한미는 한반도에서의 역동적인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지속 중점을 두면서, 공동의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포괄적인 동맹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 있다. 특히 한국군 주도의 미래연합사로의 전작권 전환 준비에 실질적인 성과와 진전이 이루어지도록 긴밀히 소통하고 있으며, 현재와 같은 공고한 연합방위체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연례 한미안보협의회의와 한미군사위원회회의를 통해 전작권 전환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점검해 나가고 있다.

한편 2018년 한미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에도 한미 연합군사령부 체제를 지속 유지하기로 합의하고, 현재 수준의 연합성 및 작전효율성과 대비태세를 지속 유지하여 연합방위태세를 확고히 유지하기로 하였다.

한미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정책의 진전이나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강력한 연합방위체제를 유지하고, 정책·전략·전술 등 모든 수준에서 양국 군 간 상호운용성을 지속 발전시키는 등 공조체제를 지속해 나갈 것이다.

4) Defense Technology and Industrial Cooperation Committee

5) Defense Technology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6) Security Cooperation Committee

7) Logistics Cooperation Committee

3.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여건 보장

주한미군 기지이전 주한미군 기지이전사업은 전국에 산재해 있는 미군기지를 통폐합하여 평택, 대구 등 2개 허브 기지로 재배치함으로써, 주한미군에게는 안정적인 주둔 여건을 보장하고 국내적으로는 국토의 효율적인 활용과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주한미군 기지이전사업은 서울에 위치한 주한미군사령부 등 부대를 평택으로 이전하는 '용산기지이전계획(YRP)'[8]과 한강 이북의 동두천과 의정부 등에 위치한 미2사단을 평택 등으로 이전하는 '연합토지관리계획(LPP)'[9], 그리고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군이전평택지원법)을 통해 추진되고 있다.

국방부는 2007년 11월 미군기지 이전공사에 착수한 이후 2013년 8월에 학교 시설을 시작으로 이전대상 건물의 준공이 완료되는 대로 대상 미군부대의 이전을 진행하고 있다. 2018년에는 주한미군사령부·유엔군사령부·미2사단 본부 등 주요부대가 이전을 완료한 데 이어, 2019년에는 병원 등 지원부대들이 이전했으며, 앞으로 연합사본부를 포함한 잔여 부대의 이전을 완료할 예정이다. 기지이전이 완료되면 주한미군은 보다 안정적인 주둔여건하에서 한반도에서 무력분쟁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며 나아가 세계 평화에도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지속 수행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국방부는 「미군이전평택지원법」에 근거하여 평택 주민들을 위해 도로 개설, 상하수도 설비, 마을회관 건립 등 주민편익 지원사업도 지속 추진하고 있다. 기지이전사업과 함께 미군기지 반환도 함께 추진되고 있다. 2020년 12월 기준 68개의 미군기지가 반환되었으며, 12개의 미군기지도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절차에 따라 점차 반환될 예정이다. 한미 국방부는 적시적인 기지 반환을 위해 환경 여건 등 제반 사항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국방부는 주한미군 이전과 기지 반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용산기지이전계획과 연합토지관리계획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도록 미측과 지속하여 긴밀히 협조해 나갈 것이다.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방위비분담금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여건을 보장하고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주한미군 주둔에 수반되는 비용의 일부를 우리 정부가 분담하는 것이다. 방위비분담

8) Yongsan Relocation Plan

9) Land Partnership Plan

금은 '주한미군 유지에 따른 경비를 미국이 부담한다'는 내용의 「주한미군지위협정」 제5조[10]에 대한 예외조치로서,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11]에 따라 1991년부터 지원하기 시작[12]하였다.

방위비분담금은 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의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미 양국은 협정 체결 당시 양측이 합의한 절차에 따라 연도별 방위비분담금 총액을 세 가지 항목에 배정 및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다. 연도별 방위비분담금 총액 규모는 주한미군의 한반도 방위에 대한 기여도,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여건 제공, 우리의 재정적 부담능력과 한반도 안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국 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이고 공평한 수준에서 결정하고 있다.

한미 양국은 2019년 8월부터 새로운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는 국민과 국회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공평한 협상 결과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10) 「주한미군지위협정」 제5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
• 제1항 : 미측은 한측에게 부담을 과하지 아니하고 주한미군 유지에 따른 경비를 부담한다.
• 제2항 : 한측은 미측에 부담을 과하지 아니하고 시설과 구역을 제공한다.

11) 정식 명칭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SMA : Special Measures Agreement)

12) 미국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제5조에 따라 1991년 이전까지는 우리 정부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주둔 유지 경비뿐만 아니라 한국이 제공해야 할 대부분의 시설까지 자국 부담으로 건설하여 왔으나, 재정여건 악화와 동맹국인 한국의 경제성장으로 인하여 1991년부터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체결하여 주둔경비 일부를 지원받고 있음

[도표 6-1] 방위비분담금 연도별 합의액

단위 : 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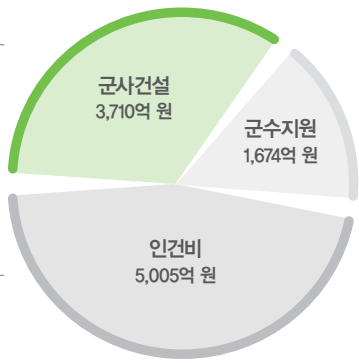
차수	1·2차					3차			4차			5차		
연도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액수	1.5	1.8	2.2	2.6	3.0	3.3	3.6	3.9	3.3	3.9	4.4	4.7	5.5	6.2

단위 : 억 원

6차		7차		8차					9차					10차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6,804	6,804	7,255	7,415	7,600	7,904	8,125	8,361	8,695	9,200	9,320	9,441	9,507	9,602	10,389

* 제6차 협정 이후로는 원화로 지급방식 변경

[도표 6-2] 방위비분담금 배정액 현황(2019년 기준)



36%
막사·환경시설 등 주한미군의 시설 건축지원 (설계·감리비 12% 외 현물지원)

48%
주한미군의 한국인 고용원에 대한 임금지원(전액 현금지원)

16%
탄약 저장, 항공기 정비, 철도·차량 수송지원 등 용역 및 물자지원 (전액 현물지원)

방위비분담금 대부분은 우리 경제로 환원됨으로써 일자리 창출, 내수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인건비의 100%는 주한미군사령부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에게 지급되고 있으며, 약 12%의 설계·감리비를 제외한 군사건설비의 88%와 군수지원비의 100%는 우리 업체를 통해 현물(시설물, 장비, 용역 등)로 지원되고 있다.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은 지난 30년 동안 수많은 변화를 거듭하여 왔다. 특히 한미 양국 정부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발전과 시민사회의 성숙에 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해왔다. 방위비분담금 집행 과정에 우리 정부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함은 물론, 주한미군에 소속된 우리 근로자들의 권익보호 및 고용안정성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우리 정부는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따라 지원되는 방위비분담금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직·간접적으로[13] 주한미군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주한미군에 대한 직·간접지원은 안보환경 변화에 따라 세부항목 구성과 규모도 변화해 왔다. 예를 들어, 주한미군기지 주변 정비, 미 통신선·연합 C4I 체계 지원 등의 직접지원과 각종 세금 면제 및 감면 등의 간접지원을 지속해오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앞으로도 합리적이고 공평한 수준에서 방위비분담금이 결정될 수 있도록 협의를 지속하는 한편, 우리 정부의 각종 지원이 굳건한 한미동맹의 발전과 연합방위태세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한미 상호 이해 증진 노력

한미는 양국간 신뢰 및 우호 증진을 위해 한미 친선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국방부는 주한미군 장병들의 한국문화 이해증진을 위한 주한미군 장병초청 한국문화 체험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1972년부터 지금까지 1만 9천여 명의 주한미군 장병들이 참여하였다. 2019년에는 5회에 걸쳐 약 240여 명의 주한미군 장병들이 태권도 캠프와 역사 탐방, 문화 체험 및 안보 현장 견학 등 다양한 경험을 통해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또한, 국방부는 2019년 11월 제51차 한미안보협의회의를 계기로 한미 대표단과 정부 주요인사, 주한미군 및 한미 연합군사령부 장병, 카투사 등 500여 명을 초청하여 '한미동맹의 밤' 만찬을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국방부 장관은 제7회 백선엽 한미동맹상 수상자로 선정된 존 틸렐리 예비역 대장[14]에게 한미동맹상을 수여하였다.

한편, 2020년 제8회 백선엽 한미동맹상 수상자로는 제임스 매티스 미국 전 국방부 장관[15]이 선정되었다. 백선엽 한미동맹상은 한미동맹 60주년인 2013년부터 동

13) 직접지원과 간접지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
- 직접지원 : 정부지출을 직접적으로 수반하는 형태의 지원
- 간접지원 : 정부지출을 수반하지는 않으나, 주한미군에 재정·자원 절감효과를 발생시키는 형태의 지원

14) John Tilelli, 제8대 한미연합사령관 역임, 대표적 지한파 인사로 '한국전참전용사 추모의 벽' 건립 등 굳건한 한미동맹 유지에 기여(2019년 수상)

15) James N. Mattis, 제26대 미국 국방장관 역임, 재임기간 한미동맹 기반의 흔들림 없는 안보공약을 강조함으로써 한반도 방위에 기여함은 물론, 2018년 연합방위지침 공동 서명을 통해 전작원 전환 이후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체제의 청사진을 마련



백선엽 한미동맹상 시상 (2019년 11월)

맹의 가치와 의의를 제고하기 위해 한미동맹과 대한민국 방위에 헌신한 미국 인사를 매년 선정하여 수여해 온 포상 행사로 지난 7년간 월튼 워커 예비역 대장[16], 윌리엄 웨버 예비역 대령[17], 제임스 밴플리트 예비역 대장[18], 존 싱글라브 예비역 소장[19], 존 베시 예비역 대장[20], 마크 클라크 예비역 대장[21], 존 틸렐리 예비역 대장이 수상의 영예를 차지한 바 있다.

주한미군도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2003년부터 공식적으로 시작된 '좋은 이웃 프로그램(Good Neighbor Program)'은 부대 개방행사, 지역축제, 친선 만찬, 미군 함정 방문, 영어교실 등을 통해 지역사회와 문화를 교류하고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있다. 또한 주한미군 장병들은 태풍 피해 복구, 연탄배달 등 각종 대민지원 및 사회복지시설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한편, 국방부는 2020년 6·25전쟁 발발 70주년을 범정부적으로 추모하기 위해 출범한 국무총리 소속 '6·25전쟁 70주년 사업추진위원회'의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국방부 장관은 2020년 2월 방미 계기로 미국 보훈요양원과 워싱턴 D.C. 인근 참전용사를 위문하였으며, 6·25전쟁 인천상륙작전 미군 주력인 해병1사단을 방문하여 캘리포니아 지역 참전용사를 격려하는 등의 보훈 행사를 주관함으로써 전쟁의 포화 속에서 70여 년간 이어온 한미동맹의 정신을 고양함은 물론 굳건한 한미동맹을 대내외에 알렸다.

특히, 미국 국방대학교를 방문하여 우리 국방부 장관으로는 처음으로 교수진과 학생, 한반도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한미동맹의 발전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해 연설함으로써 한반도 안보정세 및 우리의 국방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임과 동시에 한미동맹의 가치와 의미를 제고하였다.

16) Walton Walker, 한국전쟁 초기 낙동강 전선 사수로 인천상륙작전의 기틀을 마련(2013년 수상)

17) William Weber,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재단 회장으로서, 한국전쟁이 미국에서 '잊혀진 전쟁'이 되지 않도록 적극 활동(2014년 수상)

18) James Van Fleet, 미 8군사령관으로 한국전 참전, 전후 한국군 훈련체계 정비 등 한국발전을 위해 꾸준히 활동(2015년 수상)

19) John Singlab,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으로 야기된 한반도 위기상황 극복 및 한미 연합군사령부 창설에 크게 기여(2016년 수상)

20) John Vessey, 초대 연합군사령관 역임, 주한미군사령관으로서 한미연합군사령부 창설에 결정적 역할(2017년 수상)

21) Mark Clark, 제3대 유엔군사령관 역임, 유엔군 대표로 정전협정 협상 및 체결(2018년 수상)

제2절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위협에 대한 독자적 대응능력을 확충하는 가운데, 우리 군 주도의 새로운 연합방위체제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계획'에 따라 전환 준비를 체계적·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 군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필요한 방위역량을 조기에 확충하면서, 주기적인 준비상황 평가를 통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가속화해 나갈 것이다.

1. 추진배경 및 경과

우리 군은 '대한민국의 국력과 군사력에 걸맞은 책임국방 실현'이라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22]을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미 양국은 2017년 6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조속한 추진에 합의하면서 우리 군 주도의 새로운 연합방위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2018년 10월 제50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한미 국방장관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연합방위지침」에 서명함으로써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추동력을 확보하였다.

우리 군은 한국이 주도하는 연합방위체제 구축을 통하여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증진하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여건을 마련하는 데 전군 차원의 노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국방개혁 2.0」과 연계하여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필요한 방위역량 확충에 매진하고 있다. 아울러, 한미 양국은 안정적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해 미래지휘구조 및 전략문서 발전, 연합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군사적 능력 및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 확보,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임무수행능력에 대한 3단계 연합검증평가[23] 등 전환조건의 충족 현황을 면밀히 확인하고 있다. 2018년 한미 양국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적용될 연합방위체제와 미래지휘구조 기본안에 합의하였고, 2019년에는 한국군 핵심군사능력을 중점적으로 평가하고 미래연합군사령부의 기본운용능력(IOC) 검증평가를 실시하였다. 2020년에는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을 중점적으로 평가하고 후반기 한미 연합연습을 통해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평가에 대한 예행연습

22) 능력과 안보환경을 전환조건으로 설정하여 조건이 충족되는 시기에 전시작전통제권을 전환하는 방식

23) 1단계 기본운용능력(IOC : Initial Operational Capability) 검증평가 →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 Full Operational Capability) 검증평가 → 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 Full Mission Capability) 검증평가

을 실시하는 등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주요과업을 추진하였다.

향후 우리 군은 한반도 안보상황 변화를 면밀히 고려하면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필요한 방위역량을 조기에 확충하여, 전환조건이 충족되는 시기에 전시작전통제권이 전환될 수 있도록 협의 절차를 가속화해 나갈 것이다.

2.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체계적·적극적 추진

전략문서 발전

한미 양국은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서 조속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지휘구조, 임무와 역할 등을 규정하는 전략문서를 발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2018년 제50차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한미 국방장관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에도 현재 한미연합군사령부와 유사한 체제를 유지하면서 한국군 4성 장성이 미래연합군사령관 임무를 수행하도록 합의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한미 연합방위체제를 규정하는 전략문서를 발전시켜 왔다. 또한, 2019년 6월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통해 '합참의장을 겸직하지 않는 별도의 한국군 4성 장성'이 미래연합군사령관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추가적으로 합의함으로써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지휘구조 기본안을 확정하였다. 한미 양국은 2020년에는 미래연합군사령관의 임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권한, 역할, 책임 등을 세부적으로 발전시켜 완전운용능력 검증평가를 위한 전략문서 공동초안에 합의하였다.

향후 한미 양국은 한미동맹과 연합방위체제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략문서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며, 전략문서는 연합검증평가를 통해 지속 보완되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에 최종 완성될 예정이다.

연합방위 주도를 위한 능력확보

우리 군은 「국방개혁 2.0」과 연계하여 연합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군사적 능력과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특히 「2021~2025 중기계획」에 300여조 원의 재원을 반영하였으며, 지속적으로 국방예산 중 방위력개선비를 증액하여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핵심 군사력 건설 소요를 빠짐없이 반영하고 있다.

한미 양국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조건 평가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매년 특별상설군사위원회(sPMC)[24]를 개최하여 전환조건에 대한 평가결과를 면밀하게 검토하

고 있다. 특히, 2019년에는 특별상설군사위원회를 5차례 개최하여 한미가 공동으로 우리 군의 핵심군사능력을 확인하였고 2020년에는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을 중점적으로 평가하였다. 향후에도 연합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군사적 능력과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을 조기에 확보하여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전방위 안보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한미 연합검증평가 시행

한미 양국은 3단계의 연합검증평가를 통해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임무수행능력을 점검 및 보완하고 있다. 한미 양국은 평가결과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한미 연합검증단을 편성하여 동일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한미 양국은 체계적인 준비를 통해 2019년 1단계 기본운용능력 검증평가를 성공적으로 시행하였다. 한미는 기본운용능력 검증평가를 위해 2019년 3월 동맹연습 간 예행연습을 실시하여 한미 연합검증단의 평가능력을 향상시켰으며, 사전에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상설군사위원회(PMC)[25] 등을 통해 기본운용능력 검증평가에 대한 준비상태를 지속 확인하였다. 아울러 우리 군은 국방부 장관이 주관하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평가회의'를 통해 전군의 노력을 통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 결과 2019년 8월 한미 연합지휘소훈련 간 실시된 기본운용능력 검증평가를 성공적으로 시행하였다. 한미 국방장관은 2019년 제51차 한미안보협의회의를 통해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 검증평가를 2020년에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코로나19 상황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2020년 후반기 한미 연합연습 간 미래연합군사령부 구조를 적용한 예행연습 병행 등 완전운용능력 검증평가 시행을 위한 여건 마련에 집중하였다.

향후 우리 군은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임무수행능력을 보다 내실있게 보완해 나갈 것이다.

24)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조건의 평가를 위한 한국 합참의장과 주한미군선임장교 간의 4성급 군사회의체 (sPMC : Special Permanent Military Committee)

25) 한국 합참의장과 주한미군선임장교 간의 4성급 상설 군사회의체 (PMC : Permanent Military Committee)

제3절

국방교류협력 내실화 및 외연 확대

우리 군은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 정착을 위해 중국·일본·러시아 등 주변국과 전략적 국방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역내 안보분야에서 아세안·인도의 역할·비중 증대와 유라시아 대륙의 잠재력을 고려하여 국방 차원의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서유럽·대양주 등 전통적 우방국과의 교류협력을 지속 증진하는 한편, 중동·중남미 등으로 국방외교 대상을 다변화하고 있다.

1. 주변국과의 전략적 국방교류협력 추진

한중 국방교류협력

한중 양국은 1992년 수교 이래 28년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였다. 양국은 수교 시 우호협력관계를 설정한 이래, 2008년에는 양국 관계를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격상하였다.



한중 국방장관회담 (2019년 6월)

2017년 12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한중간의 협력을 정치, 외교, 안보 등의 분야로 확대하고 다양한 고위급 수준의 교류를 활성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중 국방당국은 2018년 12월 국방교류협력 완전 정상화에 합의하고 2019년 6월 아시아안보회의, 11월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를 계기로 열린 두 번의 한중 국방장관회담과 2019년 10월 제5차 차관급 국방전략대화 개최를 통해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였다.

2020년 1월 제18차 국방정책실무회의에서 양국 군 고위인사 교류, 국방전략대화, 국방정책실무회의 등 정례회의, 각 군 간 부대교류, 중국군 유해송환, 군사 연구기관 간 학술회의 및 교육기관의 위·수탁 교육, 해·공군 직통전화 양해각서 개정을 통한 직통전화 추가 개설 추진 등에 합의하면서 국방교류협력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다.

중국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진입에 따른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해 국방당국간 대화와 더불어 해·공군 간에 설치된 직통전화를 통한 정보공유가 이뤄지고 있으며, 향후 합의한 직통전화의 추가 개설이 완료되면 양측 간 소통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0년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양국 간 국방교류협력은 새로운 환경과 도전에 직면하고 있지만, 한중 국방당국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내실화를 위해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2020년 9월 양국 간 우호협력 사업인 제7차 중국군 유해송환식을 개최하는 등 다양한 수준 및 분야에서의 국방교류협력 활성화를 지속 추진함으로써 양국 관계의 안정적 발전과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한일 국방교류협력

일본은 양국 관계뿐만 아니라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도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이웃 국가이다.



한일 국방장관회담 (2019년 11월)

한일 양국은 1994년부터 정례적으로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해 왔으며, 2009년 제14차 국방장관회담에서 「한일 국방교류에 관한 의향서」를 체결하여 양국 간 국방교류협력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2015년 한일 국방장관회담 이후 아시아 안보회의 등 다자회의를 계기로 장관회담이 지속 개최되었으며, 2019년 11월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 시에도 한일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여 국방교류협력을 미래지향적으로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그러나 일부 일본 정치지도자들의 왜곡된 역사 인식과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비롯하여 2018년 12월 구조활동 중이던 우리 함정에 대한 일본 초계기의 위협적인 근접비행, 그리고 당시 상황에 대한 사실을 호도하는 일방적인 언론 발표[26]로 양국 국방관계는 난항을 겪었으며, 2019년 7월 일본이 안보상의 문제를 이유로 들어 우리에게 취한 수출규제 조치는 양국 국방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에 장애 요소가 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조치에 따라 우리 정부는 2019년 8월 23일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을 종료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통보하였으나, 양국 간 현안 해결을 위해 2019년 11월 22일 언제든

26) 구조함정에 대한 일본 초계기의 근접 위협비행을 정상적인 비행이라고 주장하고, 우리 함정이 추적레이더를 조사(照射)하지 않았음을 수차례 확인시킴에도 불구하고 사실 확인 없이 일방적으로 조사가 있었다고 발표

지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종료통보의 효력을 정지하였으며, 일본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면서 동 협정의 종료통보의 효력정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앞으로도 일본의 역사 왜곡,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 현안문제에서의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처하는 한편, 공동의 안보현안에 대해서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다.

한러 국방교류협력

러시아는 신북방정책[27]의 핵심 파트너로서, 2018년 6월 19년 만의 대통령 러시아 국빈 방문을 포함하여 2017년 이후 5차례 양국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등 한러 양국은 러시아가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에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전략적 소통 및 상호 협력을 지속 발전시키고 있다.



한 합참의장–러 지상군사령관 회담 (2019년 10월)

국방 분야에서는 2019년에 합참 본부장급 회의, 합동군사위원회, 각 군 회의체 등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군사당국 간 소통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러시아 지상군 사령관이 2019년에 방한하여 육군 총장급 교류가 16년 만에 재개되었다.

한편 국방부는 2019년 7월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에 대해 단호한 대응과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강력히 요구하였으며, 현재 KADIZ 진입에 따른 우발충돌 방지를 위해 직통망 설치 관련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

2020년은 한러수교 30주년의 해로 범정부 차원의 다양한 교류협력 방안이 강구되어 국방분야에서도 의미 있는 사업들을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코로나19로 교류협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방부는 향후 여건이 마련되는 대로 러시아와의 다양한 국방교류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27) 유라시아 지역과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한반도를 포함한 유라시아 대륙의 공동번영과 평화를 도모하는 정책

2. 지역별 주요국가와의 국방 교류협력 확대

동남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아세안 국가들과는 역내 안보위협 요소에 대한 다자간 협력을 맺음으로써 역내 안보 증진에 기여하도록 지속 노력하고 있다. 또한, 아세안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정부의 '신남방정책'[28] 기조에 맞춰 국가별 특성을 고려한 호혜적·맞춤형 국방·방산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2년여 만에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아세안 10개국을 모두 방문하면서 신남방정책의 모든 파트너 국가들과 우호 협력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특히 6·25전쟁에 파병한 전통적 우방국이자 주요 방산협력 국가인 태국 방문 시 「한-태국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여 양국 간 국방·방산분야 협력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였다. 2018년 9월 한-아세안 대화조정국인 브루나이를 방문하여 「국방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양국 국방협력 발전의 추동력을 확보하였다.

국방부는 정부의 이러한 신남방정책 추진에 발맞춰 장·차관급 회의 및 각종 정책실무회의와 각 군 간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국방 및 방산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먼저 우리 국방부 장관은 2019년 5월 제18차 아시아안보회의를 계기로 베트남 및 싱가포르 국방장관과 장관회담을 개최하여 한반도를 포함한 지역 안보정세 및 국방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또한, 2019년 11월 태국에서 개최된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참가를 계기로 베트남, 인도네시아 국방장관 및 태국 안보부총리와 양자회담을 개최하여 국방·방산협력 발전방안을 논의하였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인 평화정착에 대한 적극적 지원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그리고 2019년 12월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활발한 방산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여 국방장관 및 정치법률안보조정장관과 회담을 개최하고 「한-인니 국방협력협정」을 기반으로 국방·방산협력을 한 단계 더 강화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싱가포르와는 우리 국방부 차관이 2019년 1월 싱가포르 풀러톤 포럼(Fullerton Forum)[29] 참석을 계기로 싱가포르 국방부 차관과 만나 양국 간 국방 현안 및 방산·기술 협력 제고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베트남과는 2019년 6월 개최된 차관급 제8차 한·베트남 국방전략대화에서 군 고위급 교류, 사이버안보 협력 및 방산·군수협력 등 양국 국방 현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또한, 2019년 9월 서울안보대화를 계기로 필리핀, 라오스 국방부 차관과 양자회담을 개최하여, 필리핀과는 한반

28) 아세안 10개국 및 인도를 정치, 경제, 문화, 인적교류 측면에서 주변국 수준으로 우호 협력을 강화하는 외교정책

29)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주관으로 2002년 창설되었으며,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아태 지역 30여 개국과 유럽연합(EU),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등이 참석하는 아시아안보회의 사전준비 회의 성격의 1.5트랙(정부+민간 참가 회의) 국장급 다자안보협의체

도 안보정세와 양국 간 국방교류협력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고, 라오스와는 주라오스 한국 무관부 개설을 축하하고 이를 토대로 양국 간 국방협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한편 말레이시아와는 2019년 10월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9차 향산포럼을 계기로 국방차관회담을 갖고 사이버안보 협력, 방산 협력 등 국방교류협력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하였고, 캄보디아와는 2019년 10월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를 계기로 국방 고위급 회담을 개최하여 2018년에 체결된 「한-캄보디아 국방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기반으로 국방협력을 활성화하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그 밖에 정책실무회의 및 각 군 간 정례회의를 통해서도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베트남과는 2019년 10월 제7차 한·베트남 국방전략대화에서 합의한 국방정책실무회의를 처음 개최하여 국방협력의 기본 틀을 제도화화고 세부분야에 대한 협력 계획을 구체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필리핀과는 양국 수교 70주년이 되는 2019년을 '상호 교류의 해'로 지정하고 국방분야에서도 교류협력을 활발하게 추진하면서, 2019년 2월과 5월에는 공군참모총장의 필리핀 방문과 필리핀 합참의장의 방한이 각각 이뤄졌고, 양국 군 간 정례회의체 또한 개설되었다. 6월에는 「방산·군수협력 양해각서」를 개정하고 8월에는 우리의 도태함정을 양도하였으며, 11월에는 호위함 진수식 참석을 위해 필리핀 국방장관이 방한하는 등 방산·군수 협력도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미얀마와는 2017년 9월에 「한-미얀마 국방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국방교류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국방·방산협력 증진을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한편, 오세아니아 지역은 6·25전쟁 참전국이자 전통적 우방국인 호주와 뉴질랜드를 중심으로 국방부 및 각 군 간 정례협의체·연합훈련 등을 통하여 국방협력 활성화 및 다변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호주와는 2019년 12월 제4차 한·호주 외교·국방장관회의를 개최하여 한반도 및 아태 지역 안보정세와 양국 간 PKO 협력 등 안보·국방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한국전쟁 실종자 관련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참전용사 유해의 조속한 송환을 약속하였다. 또한 양국 국방장관은 같은 날 개최된 국방장관회담에서 해돌이·왈라비훈련(한·호주 해군 연합훈련) 등 양국 간 연합훈련 활성화와 2019년 11월 체결된 「국방 연구, 개발, 시험 및 평가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기반으로 한 과학기술협력 및 방산협력 강화 등에 대한 심층적 논의를 진행하였다.

뉴질랜드와는 2019년 11월 아시아 확대 국방장관회의를 계기로 한·뉴질랜드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였다. 양국 국방장관은 한반도 안보정세와 양국 간 안보·국방

협력 추진 상황 등에 대해 평가하였으며, 연합훈련·방산협력·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방협력 증진을 위해 긴밀히 노력하기로 하였다.

인도 등 서남아시아

우리 정부가 역내 평화와 번영을 위한 신남방정책 추진을 통해 인도와 다양한 협력을 강화하면서 서남아시아 지역 국가와의 국방분야 협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인도를 비롯한 서남아시아 주요 국가와 고위급 인사 교류, 정례협의체 개최 등을 통해 국방교류협력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특히 한국과 인도는 그동안 자유무역·투자 확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공동의 가치, 그리고 평화와 번영을 향한 공통된 열망을 토대로 양국 간 교류협력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관계를 발전시켜왔다. 이러한 양국 관계는 2015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이후 2018년과 2019년 양국 정상이 상호 국빈 방문함으로써 더욱 긴밀한 관계를 맺게 되었다. 이러한 양국 간 긴밀한 관계는 국방협력 발전으로 이어져서 양국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군 고위급 간 교류도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2019년 9월 서울안보대화(SDD) 계기로 방한한 인도 국방부 장관과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였고, 2020년 2월 우리 국방부 장관이 인도 국방부 장관의 초청으로 인도를 공식 방문하였다. 양국 국방부 장관은 군사분야 교류를 높이 평가하면서 한·인도 외교·국방(2+2) 차관회의를 비롯한 여러 정례협의체 개최와 연합훈련, 군사교육, PKO 활동, 군의료·재난구호협력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특히 우리 국방부 장관의 인도 방문을 계기로 양국의 실질적인 방산협력의 토대가 될 '한·인도 방산협력 로드맵'을 교환하면서 양국의 공동생산 및 개발, 공동수출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였다.

중앙아시아

중앙아시아는 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유라시아 공간의 핵심지대이며,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향후 높은 경제발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2017년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발족하고 유라시아경제연합(EAEU)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추진하는 등 중앙아시아를 신북방정책의 주요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다.

국방부는 2015년부터 서울안보대화에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초청하여 소통을 강화하고 교육교류 및 방산협력을 활성화하여 우리 정부의 신북방정책을 국방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2018년 서울안보대화를 계기로 중앙아시아 5개국과 몽골이 참여하는 국방차관급 회의체인 한·중앙아시아 플러스 국방차관회의

를 개설한 이래 지속적으로 중앙아시아와의 안보협력을 논의하고 있다. 2019년 개최된 제2회 회의에는 우즈베키스탄 국방차관, 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 총참모부 부총참모장, 주한 키르기스스탄 대사 등 고위급 인사가 참석하여 외교·안보·경제 채널을 통한 협력관계 강화 및 역내 안보정세 공유 등을 논의하였으며, 국방교류협력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우즈베키스탄은 신북방정책의 핵심 국가 중 하나로, 2019년 대통령 순방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었으며, 서울안보대화에 우즈베키스탄 국방차관이 참석하고 국방정책실무회의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으로 협력 증진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2017년부터는 합동군사대학교 교관요원이 우즈베키스탄 군사 아카데미에 파견되어 작전술 등 군사학 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전수하고, 한국 육군사관학교, 육군대학, 공군대학에서 우즈베키스탄 장교의 수탁교육이 이루어지는 등 교육 분야에서도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2020년에는 양국 군 의료진 간 화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교류협력 분야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카자흐스탄과는 2019년 양국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이 카자흐스탄을 방문하였으며, 국방정책실무회의를 7년 만에 재개함으로써 국방분야에서도 교류협력의 심화·발전이 기대된다.

중동

중동 지역은 세계 에너지 자원의 주요 공급처로서 중요한 가치를 지니며 국방부는 중동 국가들과의 국방 및 방산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랍에미리트(UAE)와는 1980년 수교 이후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관계를 발전시키고 있다. 2006년 양국은 「한-UAE 간 군사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이후 국방분야에서 다양한 협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2011년 1월부터 국회의 동의를 거쳐 아크부대를 아랍에미리트에 파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3월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하여 모하메드 왕세제와 정상회담을 열어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외교·국방 협의체 신설과 함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으며, 2019년 2월에는 왕세제가 방한하였다. 2019년 2월에는 우리 국방부 장관이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하여 국방특임장관과 회담을 실시하였고, 10월에는 우리 국방부 차관이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하여 외교·국방 차관급회의 및 양자회담을 실시하였다. 또한, 12월에는 아랍에미리트 국방특임장관이 방한하여 우리 국방부 장관과 회담을 실시하고 국방·방산협력을 더욱 확대·강화하

기로 합의하는 등 상호 활발한 교류를 통해 안정적인 협력을 지속해 나가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와의 협력도 지속 발전하고 있다. 우리 국방부 차관은 2019년 4월 사우디를 방문하여 제1차 한-사우디 국방협력위원회 회의를 통해 사우디 국방장관 보좌관과, 2019년 9월 제8차 서울안보대화 참석을 위해 방한한 사우디 총참모장과 각각 양자회담을 실시하였다. 2019년 10월 우리 국방부 장관은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에 참가한 사우디 총참모장과 양자회담을 하고 우리나라의 우수한 방산제품에 대한 관심을 당부하는 등 방산수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였다. 2019년 11월에는 우리 국방부 장관이 사우디를 방문하여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 겸 국방장관과 양자회담을 실시하고 양국 간 국방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해 상호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2019년 2월 우리 국방부 장관은 'UAE 국제방산 전시회'에, 2019년 5월 우리 국방부 차관은 '터키 국제방산 전시회'에 각각 참석하여 오만 및 이집트 등 중동지역 주요국 대표단 및 군 관계자들과 양자회담을 갖고 국방방산협력 증진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2019년 9월 개최된 제8차 서울안보대화 참석을 위해 방한한 이집트 국방장관 보좌관은 우리 국방부 차관과 양자회담을 실시하고 한-이집트 간 국방교류협력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2019년 10월에는 우리 국방부 장관이 오만을 방문하여 「한-오만 국방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양국 장관은 한·오만 간 국방협력 확대를 위해 상호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특히 방산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국방부는 중동 지역의 정세와 역학관계 변화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면서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이집트를 비롯한 중동지역 주요 국가들과 군 고위급 회의와 실무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국방·방산 협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유럽·캐나다

유럽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지속적 지지와 지원 의사를 표명해 온 전통적 우방국을 중심으로 우리의 안보 분야 주요 파트너이자 국방외교의 주요 축을 형성하고 있다. 국방부는 유럽 각국과 양자 및 소다자 협의체를 중심으로 국방 및 방산 분야 협력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유럽연합(EU)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의 우호협력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유럽 지역과의 관계를 다각도로 심화해 나가고 있다.

2019년 3월에는 우리 국방부 장관이 벨기에 국왕 내외 등과 함께 벨기에 6·25전쟁 참전용사 추모식에 참석해 벨기에 참전용사들의 헌신에 감사함을 전하였고, 6·25전

쟁 참전을 기반으로 형성된 전통적 우호협력 관계를 높이 평가하였다.

우리 국방부 장관은 2019년 6월 한·영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여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실현을 위한 양국의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였고, 국방부 차관은 2019년 5월 영국 국제안보국장과 대담을 갖고 양국의 국방·방산 협력 현안과 미래 협력 방향을 논의하였다.

프랑스와는 2018년 10월 문재인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한-프랑스 국방·안보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공동 로드맵」을 추진하고 있다. 2019년 5월에는 프랑스군이 대테러 활동 중 우리 국민을 구출한 계기로 실시한 양국 국방장관 간 전화회담이 개최되었으며, 동 회담에서는 양국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협력 사안의 구체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2019년 6월에는 비무장지대 화살머리고지 유해발굴 중 발굴한 프랑스군 인식표 전달행사를 양국 장관 참석하에 개최하였다.

또한 국방부는 2016년부터 한·비세그라드 그룹[30] 국방차관회의 참석 등 고위급 교류를 통하여 유럽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평가받고 있는 중유럽 국가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국방·방산 협력방안을 도출하고 있다. 2019년 9월에는 서울에서 제4차 한·비세그라드 그룹 국방차관회의를 개최하여 지역 안보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국방·방산 협력 증진방안을 논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슬로바키아 차관회담, 한·헝가리 및 한·체코 양자회담을 개최하여 국가별 협력방안도 구체화하였다.

2019년 11월에는 한·헝가리 수교 30주년을 맞이하여 방한한 헝가리 국방부 장관과 한·헝가리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였다. 양국 간 국방정보 및 경험 교류, 국방정책 사안 협의, 군사기술 협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한·헝가리 국방협력 양해각서」에 서명함으로써 양국 간 국방·방산협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한-헝가리 국방협력양해각서 서명식 (2019년 11월)

불가리아는 2019년 9월 불가리아 총리 방한 당시 정상회담 및 총리회담에서 방산협력을 주요 의제로 논의하는 등 우리나라와의 방산 협력에 관심을 표하고 있으며, 우리 국방부 차관은 동년 9월 불가리아 국방차관과 회담을 개최하여 국방·방산 분야에서 양국 간 실질적인 교류협력 방안을 모색하였다.

국방부는 6·25전쟁 당시 한국에 전투파병을 한 전통적인 우방국인 그리스와 2018

30) 체코,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 등 4개국으로 구성된 중유럽 지역협력체를 의미하며, 1991년 최초 회의가 헝가리 비세그라드시에서 개최된 데서 명칭이 유래



한-그리스 국방차관회담 (2020년 11월)

년 6월 주한 그리스 무관부 개설 이래로 양국 간 소통과 교류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2019년 2월에는 한·그리스 국방장관회담을, 2019년 10월과 2020년 11월에는 한·그리스 국방차관회담을 개최하여 양국 국방·방산·군수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2019년 5월 우리 국방부 차관은 터키 국제방산 전시회에 참석하여 터키 국방차관 및 방산차관과 회담을 갖고 한-터키 국방 및 방산 분야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터키군 6·25전쟁 참전용사를 격려하는 보훈외교를 전개하였다.

2019년 6월 문재인 대통령의 북유럽 순방을 계기로 개최된 한·핀란드, 한·노르웨이, 한·스웨덴 정상회담에서 각 나라와의 포괄적·전면적 협력관계를 심화하기로 하였으며, 특히 노르웨이 참전기념비 헌화 및 군수지원함 방문, 스웨덴 참전기념비 제막식 참석 및 「한-스웨덴 방산군수협력 양해각서」 체결 등을 통하여 국방·방산협력 기틀을 공고히 하였다.



국방부 장관-스웨덴 총리 면담 (2019년 12월)

우리 국방부 장관은 2019년 12월 방한한 스웨덴 총리를 면담하고 한반도와 유럽의 지역 안보정세 및 양국 간 국방·방산 교류협력 방안에 대하여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였다. 또한 우리 국방부 차관은 제8회 서울안보대화 참석을 위하여 방한한 핀란드 국방차관과 국방차관회의를 갖고 국방분야 협력과 K-9 자주포 등 방산분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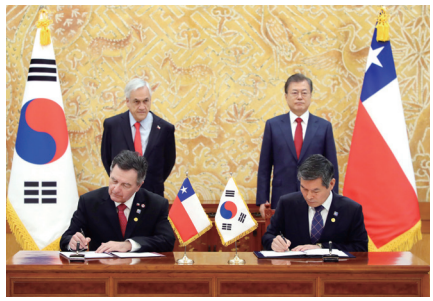
우리 국방부 장관은 2019년 5월 북대서양조약기구 군사위원장과 대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우리의 노력에 대한 북대서양조약기구 측의 공조를 당부하고, 사이버 협력 및 군사협의체 개설 등 주요 관심사항을 바탕으로 한 협력 강화 방안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특히 2019년에 북대서양조약기구 국제군사참모단에 한국군 장교를 파견하여 한·북대서양조약기구 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유럽연합과의 협력 증진을 위해 2016년 말에 발효된 한·유럽연합 위기관리 기본협정에 따라 우리 청해부대가 2017년부터 유럽연합의 대해적작전에 참여하고 있다.

우리 국방부장관은 2019년 6월 유럽연합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와 대담을 실시하고, 2019년 11월 제3차 한·유럽연합 안보국방대화를 개최하는 등 한국과 유럽연합 간 실질적인 안보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캐나다 또한 북대서양조약기구의 주요 구성국이자 6·25전쟁 참전국이면서 한반도 평화정책에 지속적인 지지를 표명해 온 전통적 우방국으로, 우리 국방부 차관은 2019년 9월 서울안보대화를 계기로 캐나다 국방차관과 회담을 개최하여 양국 국방협력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중남미 우리나라는 중남미 지역 국가와 경제 분야 협력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며, 국방 분야에서도 국방외교 외연 확대 및 우리 국방정책에 대한 지지 기반 확충을 위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국방협력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한-칠레 국방협력협정 서명식 (2019년 4월)

2019년 4월 칠레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한-칠레 국방협력협정」을 체결하여 향후 양국 간 국방·방산협력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했으며, 2019년 5월 정부합동 중남미 방산협력사절단이 콜롬비아, 페루를 방문하여 해당국의 방산분야 현황과 우리와의 방산협력 가능성을 확인하는 계기를 가졌다. 2019년 10월 우리 국방부 차관은 파라과이 국방차관 방한 계기 양자회담을 실시하고 한반도 안보정세와 양국 간 국방·방산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2019년 10월에는 칠레 훈련함인 에스메랄다호가 순항훈련 차 부산기지에 방문하여 상호 긴밀한 협력관계를 다졌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중남미 지역의 주요국들과 군 고위급 인사의 정례적 교류를 활성화하여 우호관계를 유지해 나가면서 적극적으로 방산협력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프리카 아프리카는 주요 자원의 신규 공급처이자 신경제 협력 파트너로서 전략적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에 따라, 방산수출 여건 마련 및 국방외교 외연 확대를 목표로 군 고위급 교류, 각 군 간 교류, 방산협



한-세네갈 국방협력양해각서 체결 (2019년 10월)

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방교류협력을 활성화해 나가고 있다.

우리 국방부 장관은 2019년 10월 세네갈 국방장관 방한을 계기로 「한-세네갈 국방협력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양국 간 국방·방산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우리 국방부 차관은 2019년 9월 에티오피아 국방차관과, 2019년 10월 보츠와나 국방차관과 각각 양자회담을 실시하여 양국 간 국방·방산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남수단에 파병 중인 한빛부대의 병력 교대가 제한되는 상황에서 에티오피아의 공항 개방 등 적극적인 협조로 병력 교대가 원활하게 이뤄졌다.

국방부는 향후 아프리카 주요국과의 국방 분야 협력 기반을 구축하고, 상호 추진 가능한 구체적인 협력 사안을 발굴하는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비대면 국방외교

각국은 코로나19 유입 방지를 위해 출입국 규제를 강화하였으며, 이로 인해 국방외교를 위한 국가 간 상호방문에도 많은 제한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2020년 대부분의 주요 양자·다자 대면 회의가 순연되거나 취소되었다.

국방부는 대면 국방외교 시행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대안으로 주요 파트너 국가들과 전화·화상회의 형식의 비대면 국방외교를 적극 실시하고 재외 및 주한무관단의 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2020년 3월 이후 우리 국방부 장관은 미국·중국·인도·아랍에미리트·캐나다·에스토니아 국방장관과, 우리 국방부 차관은 영국·베트남·뉴질랜드 국방차관 등과 전화·화상회담을 실시하여 우리 정부의 K-방역 및 군의 코로나19 대응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양국 간 국방·방산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6·25전쟁 70주년 기념 국방외교

2020년은 6·25전쟁이 발발한 지 70주년이 되는 해로, 국방부는 유엔참전국과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은 다양한 사업을 추진 및 협조하였다.

2020년 6월 우리 국방부 장관은 6·25전쟁 참전국 국방장관에게 6·25전쟁 참전에 대한 감사 서한을 송부하였다. 우리 국방부 장관은 감사 서한을 통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 참전용사에 대한 감사를 표하고,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 대해 참전국들의 변함없는 지지를 당부하였다. 또한, 우리 국방부 장관과 미국 국방부 장관은 6·25전쟁 70주년을 기념하는 한미 공동발표문을 발표함으로써, 장병들의 희생과 용기에 대해 감사를 표하

고 한반도 평화를 지키려는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정부는 70년 전 6·25전쟁 참전국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보답의 의미로 2020년 5월 유엔참전국 참전용사에게 마스크 100만 장을 지원하였다. 국방부는 참전용사에게 신속하게 마스크를 전달할 수 있도록 수송기를 지원하였으며, 재외무관이 참전용사에게 마스크를 직접 전달하여 감사의 마음을 표하였다.

3. 다자간 국제안보협력 강화

전통적·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다자간 국제협력의 중요성이 점증하고 있으며, 특히 2020년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에 따른 대응 과정에서 국제적 공조 필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국제환경을 기반으로 우리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K-방역 경험을 공유하는 등 활발한 국제협력을 추진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국방부는 다자간 국제안보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 아시아 안보회의 등 역내 주요 다자안보회의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견인하는 한편 우리 주도 다자안보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서울안보대화를 개최하고 있다. 특히, 2021년 4월에는 '2021년 유엔 평화유지장관회의'를 국방부와 외교부가 공동 주관하여 개최할 예정이다.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개최되는 동 회의는 전 세계 150여 개국 국방·외교장관들이 참석하는 평화유지활동 분야 최대·최고위급 회의체로서 우리 주도로 평화유지활동 분야의 국제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방부가 참여하는 역내 주요 다자안보협의체는 [도표 6-3]과 같으며, 이외에도 2021년부터 역외 다자안보협의체인 뮌헨안보회의에 참석하여 다자협력의 외연을 확대할 예정이다.

31) 지역·세계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고 국가 간 안보 공동관심사 등을 논의하기 위한 각국 정부 간 다자안보회의
※ ADMM-Plus(ASEAN Defense Minister's Meeting-Plus), ARF(ASEAN Regional Forum), TDF(Tokyo Defense Forum)

32) 지역·세계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고 국가 간 안보 공동관심사 등을 논의하기 위한 각국 정부와 민간단체·학자 등이 참여하는 다자안보회의
※ SDD(Seoul Defense Dialogue), ASS(Asia Security Summit), HISF(Halifax International Security Forum), NEACD(Northeast Asia Cooperation Dialogue)

[도표 6-3] 국방부가 참가하는 아태 지역 다자안보협의체

Track 1[31] 다자안보회의	Track 1.5[32] 다자안보회의
·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 아세안 지역안보포럼(ARF) · 동경방위포럼(TDF)	· 서울안보대화(SDD) · 아시아 안보회의(ASS) · 핼리팩스 국제안보포럼(HISF) · 동북아 협력대화(NEACD) · 풀러톤 포럼

서울안보대화(SDD)

국방부는 아태 지역의 다자안보협력과 한반도 평화정착에 기여하기 위해 차관급 국방관료와 민간 안보전문가가 참여하는 다자안보회의체인 '서울안보대화(SDD)'[33]를 2012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서울안보대화는 한반도 및 아태 지역의 안보정세뿐만 아니라 국제적 공통 관심 사안에 관한 대화와 논의의 장을 제공하여 국방 분야 신뢰구축과 다자협력 증진에 이바지하고 있다. 또한 동 회의를 계기로 참가국들과 다양한 양자·소다자 회의를 개최하여 상호 국방교류협력 증진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최근에는 아태 지역을 포함하여 미주, 유럽, 중동, 아프리카 등 전 세계 주요국 대표단이 참석함으로써 역내 주요 고위급 다자안보회의체로서의 위상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2019년 제8회 서울안보대화는 '함께 만드는 평화 : 갈등에서 협력으로'라는 대주제 하에 53개 국가와 2개 국제기구가 참가하여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되었다. 「9·19 군사합의」 이후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우리의 노력을 설명하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에 대한 참가국 간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아울러 '한·비세그라드 그룹 국방차관회의', '한·아세안 국방차관회의', '한·중앙아시아 국방차관회의' 등 소다자 회의를 개최하고, 인도·캐나다·싱가포르·프랑스 등 25개 참가국과 양자회담을 통해 국방·방산협력 증진방안을 모색하였다.

2020년 제9회 서울안보대화는 전 세계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화상 토론회 방식의 특별세미나 형태로 개최되었다. 국내 및 해외 민간 안보전문가들을 화상으로 연결하여 세미나를 진행하고, 세계 각국의 국방관료 등 안보 분야 관계자들이 시청할 수 있도록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생중계하였다. '새로운 안보 도전 : 연대와 협력을 통한 극복'이라는 대주제 하에 저명한 안보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세계질서와 국제협력 방안, 비전통적 안보위협이 국방에 주는 함의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아울러 K-방역의 성과를 국제사회와 적극 공유하고,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정착 노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올해 서울안보대화는 코로나19 제약 속에서도 개최되어 연례 다자안보협의체로서의 추동력을 유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방 분야의 대화와 소통을 이어나가는 데에도 기여하였다.



2020 서울안보대화 화상세미나 (2020년 10월)

2020 서울안보대화

33) Seoul Defense Dialogue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2019년 3번째로 개최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는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0주년을 기념하여 지난 30년간의 협력 성과를 조망하고 향후 30년 미래 협력 비전을 제시하였다. 국방·방산 분야에서는 테스크포스(TF)를 가동해 특별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였다. 먼저,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등 국제다자회의와 주한무관단 정책설명회 등에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였다. 또한 아세안 10개국 해경 초청 수출 상담회를 개최하고, 군 운용부대 및 방산업체를 방문한 아세안 정상들에게 우리 무기체계의 우수성을 홍보함으로써 방산 수출을 지원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신남방정책 관련 협력 확대를 통한 외교의 다변화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아세안 지지 강화라는 성과를 달성하는 데 기여하였다.

한-아세안 국방차관회의

2017년 서울안보대화 개최 시 처음 열렸던 한-아세안 국방차관회의는 2019년까지 매년 개최되었다. 2017년 첫 회의에서는 한-아세안 국방협력 발전 방향을 토대로 한-아세안 간 국방협력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 2018년에는 신남방정책 추진에 따른 우리의 방위산업 발전 경험을 공유하면서 한-아세안 간 상생의 방산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2019년 회의에서는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0주년을 맞아 향후 한-아세안 간 국방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아울러 최근 강조되고 있는 사이버안보 위협에 대한 대응과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세 차례에 걸쳐 개최된 한-아세안 국방차관회의는 서울안보대화의 부대행사를 넘어 국방분야에서 아세안과 연례적으로 개최되는 중요한 협의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2010년부터 시작된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에 국방부는 매년 참가하고 있다. 2020년 제7차 회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화상회의로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 우리 국방부 장관은 변화된 안보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다자안보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연대와 협력'에 기반한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응 사례를 소개하였다. 또한 아세안 국가들과 국방협력 발전을 위해 PKO 수탁교육 확대, 역내 사이버위협 대응 협력 강화, 아세안 국가 주관 연합훈련 참가 등을 충실히 이행하기



제7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 (2020년 12월)

로 하였다. 아울러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이 아태 지역의 평화 조성에 기여한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회원국들의 지지와 협력을 당부하였다.

한편 2017년 4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싱가포르와 함께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 7개 분과 중 하나인 '해양안보 분과회의' 공동의장국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그리고 2020년 4월부터 새롭게 말레이시아와 함께 '사이버안보 분과회의' 공동의장국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기타 다자안보협력회의 국방부는 아태지역 국가 고위 국방관료 및 안보전문가들과 안보이슈를 논의하는 풀러톤 포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그리고 아태지역 국장급 안보협의체인 동경방위포럼(TDF)과 중국에서 개최되는 향산포럼 등에도 매년 참가하여 다자안보협력 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또한 6자회담 참가국이 주요 회원국인 동북아협력대화(NEACD)에도 매년 참가하여 국가 간 군사적 신뢰구축과 동북아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다자안보협력 활동을 강화하여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관련 국가들과 공유하고, 우리 안보정책에 대한 지지를 확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4. 국제 비확산·대확산 활동 강화

국제 비확산 활동[34] 탈냉전 이후 국제사회는 대량살상무기와 운반수단, 재래식무기, 관련 물자 및 기술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제 비확산 체제를 강화해 왔다. 국제 비확산 체제는 국제협약과 협약 이행을 감독하고 검증하기 위한 국제기구, 관련 물자·장비·기술 이전을 통제하는 수출통제체제로 구성된다. 이와 더불어 국제사회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통해 비확산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메커니즘을 도입하고, 비회원국 및 비국가 행위자에 대한 적용 문제를 보완하면서 비확산 체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34) 대량살상무기 및 운반수단, 재래식무기 등 다양한 형태의 군비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 (Non-proliferation)



화학무기금지협약 당사국 회의 (2019년 11월)



국방부 화학정기검사 (2019년)

우리나라는 1991년 유엔에 가입한 이래 핵무기, 화학·생물무기, 미사일, 재래식무기 등을 규제하는 다양한 국제 비확산 체제 및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35] 국방부는 우리나라가 가입한 비확산 분야 협약과 국제기구 내 의무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내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 국가 신뢰도와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핵 무기 분야와 관련, 우리나라는 주요 '핵비확산체제'[36] 가입국으로서 국제원자력기구(IAEA)[37]와의 전면안전조치협정을 착실히 이행하고 핵공급국그룹(NSG)[38] 회원국과의 정보 교환을 통해 군사적으로 전용 가능한 핵물질과 기술의 이전을 방지함으로써 국제사회의 핵 비확산 노력에 기여하고 있다. 국방부는 정부의 핵 비확산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유관부처와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화학·생물무기 분야에서 우리나라는 1987년 생물무기금지협약(BWC)[39], 1997년 화학무기금지협약(CWC)[40]에 가입하고, 협약 이행을 위하여 관련 법령[41]을 제정하였다. 국방부는 군 연구기관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시행하여 안전관리체제를 유지하는 등 국방 차원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으며, 관련 국제회의에 국방 전문가를 파견하여 확산 우려국 정보를 공유하고 최신 정보와 기술을 습득하고 있다. 1996년 화학·생물무기 수출통제체제인 호주그룹(AG)[42]에 가입한 이래,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보다 체계적인 수출통제 의무 이행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등 유관부처와 관련 법령 정비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43]

대량살상무기의 위협은 운반수단인 미사일 능력과 직접 연관된다는 점에서 미사일에 대한 확산 통제도 중요하다. 이에 우리나라는 2001년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44], 2002년 헤이그 행동규약(HCOC)[45] 등 자발적 성격의 수출통제체제에 참여하여 미사일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는 데 적극 동참하고 있다. 국방부는 관련 국제회의에 국방 전문가를 파견하여 정책이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미사일 발사 사전 통보 및 연례보고서 제출 등 관련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 투명성 제고

35) 일반부록 20 '국제 군축 및 비확산 협약 및 기구(339p)' 참조

36) 우리나라는 1957년 국제원자력기구(IAEA), 1975년 핵비확산조약(NPT)에 가입한 이래 1995년 쟁거위원회(ZC), 1995년 핵공급국그룹(NSG), 1999년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에 차례로 가입

37)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증진을 위한 기술 지원, 핵물질의 군사적 목적 전용 방지를 위한 국제기구 (IAEA :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1957년 설립, 172개국 가입)

38) 핵물질·기술·장비·이중용도 품목 관련 수출통제체제로 쟁거위원회(ZC)와 달리 핵비확산조약(NPT) 회원국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핵 비보유국에 대해 수출통제 실시 (NSG : Nuclear Suppliers Group, 1978년 설립, 48개국 가입

39) 생물무기(작용제 및 독소)의 개발·생산·비축 전면 금지 (BWC : Biological Weapons Convention, 1975년 설립, 183개국 가입)

40) 화학무기 개발·생산·비축·사용·이전을 전면 금지하는 협약으로 가입 후 10년 내 모든 화학무기·시설 완전 폐기(CWC : Chemical Weapons Convention, 1997년 설립, 193개국 가입)

41)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 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화학·생물무기금지법) 등

에 기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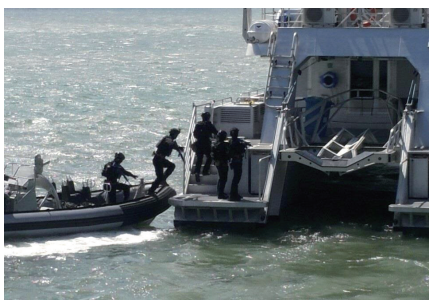
국제사회의 비확산 활동은 핵무기, 화학·생물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뿐만 아니라 재래식무기 분야로도 확대되어 왔다. 바세나르체제(WA)[46] 회원국들은 재래식무기와 이중용도 물품[47], 기술의 이전 통제를 위한 지침과 통제목록에 합의하고 이를 국내적으로 이행한 후 자발적으로 이행정보를 교환한다. 우리나라는 1996년 가입하였으며,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바세나르체제 사무국에 반기별로 무기 이전 실적을 통보하고 우리 방위산업 보호를 위하여 통제목록 제·개정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2014년 발효된 무기거래조약(ATT)[48]은 재래식무기 분야 최초의 법적 구속력 있는 단일조약으로서, 7대 무기체계[49]와 소형무기·경화기, 탄약 부품의 국가 간 이전을 통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원서명국으로서 2017년 조약이 발효되었다.[50]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한층 강화된 국제기준과 국내 법·제도에 따라 관련 조약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51]에 모두 가입한 국가로서 국제수출통제 원칙에 따라 수출허가 등 거래 제한이 필요한 물품과 기술을 전략물자[52]로 지정하여 이를 통제하고 있다. 특히 국방부는 수출허가 시 수출대상국의 통제규범 준수 여부, 수출 관련 군사적 사항에 대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53]

향후에도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의 비확산 노력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지역안정 및 국제평화에 기여하고 동시에 한반도 안보를 위한 국제공조 기반을 더욱 튼튼히 해 나갈 것이다.

국제 대확산 활동[54]

2001년 9·11 테러 사건 이후 대량살상무기와 테러의 연계 위협이 대두되면서 수출통제 등 전통적인 수단만으로는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방지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되며 보다 적극적인 대확산 정책이 강조되었다.[55] 국방부는 대량살상무기 등의 확산을 방지하고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공조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국방부는 2009년 이후 현재까지 총 11회에 걸쳐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56] 훈련에 참가하였으며, 해군 함정과 검색팀을 파견하여 국제공조에 이바지하고 있다. 또한, 2017년부터는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의 대량살상무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훈련

42) 화학·생물무기 관련 물질, 이중용도 품목 및 기술 등이 화학·생물무기 사용 및 제조 우려국가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수출통제체제 (AG : Australia Group, 1985년 설립, 43개국 가입)

43) 대외무역법에 규정된 화학·생물작용제 및 그 제조·장비기술 관련 사항은 호주그룹의 통제사항을 이행, 전략물자수출입고시는 호주그룹이 통제목록으로 규정한 모든 물질을 통제목록으로 지정. 개정 화학·생물무기금지법은 화학무기금지협약, 생물무기금지협약, 유엔 안보리 결의 1540호의 요구사항을 이행

44) 대량살상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로켓, 무인비행체, 관련 장비·기술의 확산을 자발적으로 통제하는 체제 (MTCR :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1987년 설립, 35개국 가입)

45) 탄도미사일 확산방지를 위한 정치적·자발적 성격의 통제 행동지침으로,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획득할 우려가 있는 국가들의 미사일 개발계획 지원을 금지 (HCOC : Hague Code of Conduct against Ballistic Missile Proliferation, 2002년 설립, 143개국 가입)

46) 재래식 무기와 이중용도 품목 및 기술에 관한 수출통제체제 (WA : Wassenaar Arrangement, 1996년 설립, 42개국 가입)

47) 일반산업 분야와 군사 분야에 모두 사용될 수 있는 물품

[도표 6-4]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훈련 주관 국가 현황

연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국가	싱가포르	한국	미개최	한국·일본	UAE	미국

연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국가	뉴질랜드	싱가포르	호주	일본	한국	미개최

기 검색팀도 참가하여 의심화물에 대한 검색훈련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특히 2010년과 2012년에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훈련을 주관하여 확산방지와 압류처리 등에 대한 토의식 연습과 해양차단·승선검색 훈련을 진행하였으며, 2012년 9월에는 연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운영전문가그룹(OEG)'[57]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였다.

2014년부터는 한국, 미국, 일본,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6개국이 아태지역에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훈련을 순차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우리나라가 확산방지구상 '동방의 노력(Eastern Endeavor) 19' 행사를 개최하여 학술회의 및 도상연습을 중심으로 대확산 역량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앞으로도 국방부는 대확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5. 국제 군수협력 강화

국제 군수협력

국방부는 적극적인 국제 군수협력을 통해 전·평시 안정적인 군수지원 능력을 확보하고, 예측하지 못한 위협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는 군수협력위원회(LCC)[58], 전시지원연합운영위원회(WCSC)[59] 등의 양자 회의체와 태평양 지역 고위군수장교세미나(PASOLS)[60] 등 다자 회의를 통해 협력하고 있다.

2019년 7월 제51차 한미 군수협력위원회를 미국 하와이에서 개최하여 최종사용자 확인(EUM)[61]제도 절차 일부 개선과 물자분야 협력 등에 합의하였다.

또한, 2019년 4월에는 제26차 전시지원연합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유사시 미 증원군의 원활한 전개에 필요한 공병, 정비, 보급 등 12개 분야 전시지원계획발전 방안에 대해 토의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전시지원계획 발전을 위해 한미 상호 간 일정

48) 재래식무기의 불법거래 및 전용을 방지하고자 재래식무기의 국제거래 규제에 관한 공통기준을 수립한 조약(ATT : Arms Trade Treaty, 2014년 설립, 110개국 가입)

49) 전차, 장갑차, 대구경 야포, 전투기, 공격용 헬기, 전함, 미사일 및 발사대를 포함

50) 주요 미서명국은 북한, 러시아, 인도,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등이며 미국은 서명하였으나 비준하지 않은 상태

51) 핵공급국그룹(NSG), 호주그룹(A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바세나르체제(WA)로 구성되며, 현재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한 국가(Clean Country)는 총 30개국으로 아시아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해당

52)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수출통제대상으로 지정한 재래식무기와 대량살상무기, 미사일, 이외 제조 개발에 이용 가능한 물품, 소프트웨어 기술

53) 현재 군용 전략물자에 대한 최종 허가는 국방부의 위임에 따라 방위사업청이 담당

54) 대량살상무기의 실질적 위협을 감소 또는 제거하거나 적의 사용 의지를 억제함으로써 자국 영토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반 노력(Counter-proliferation)

55) 비확산이 전략물자의 이전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면 대확산은 이미 이동 중인 자원(물자, 자금)의 물리적 차단 등을 상정



제51차 한미 군수협력위원회 (2019년 7월)



제26차 한미 전시연합운영위원회 (2019년 4월)

및 계획수립에 관한 지침 개정 등을 논의하고 적극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한미 간 군수협력 강화는 향후 한국군의 대비태세 및 전투력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호주, 이스라엘, 싱가포르 등과는 정례협의체를 바탕으로 탄약 지원, 군수혁신, 군수정보화체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군수 협력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특히 2019년 11월 뉴질랜드와 제1차 군수협력실무회의를 최초로 개최하여 양국 간 군수혁신 분야 협력을 증진해 나가기로 합의하는 등 국제 군수협력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

국제 군수협력은 상호군수지원협정을 기반으로 한다. 따라서 효율적인 상호군수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군수지원협정을 신규체결 또는 개정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현재까지 17개국과 상호군수지원협정을 체결하였고, 2019년 3월에는 「한·불 군수교류협력 증진 의향서」를 체결하여 프랑스와 군수협력을 증진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2020년 6월에는 호주와의 상호군수지원협정을 개정하였다.

[도표 6-5]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 현황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 국가(체결연도)
미국(1988), 태국(1991), 뉴질랜드(2007), 터키(2008), 필리핀(2009), 이스라엘·호주·캐나다(2010), 인도네시아·싱가포르(2011), 캄보디아·스페인·영국(2012), 몽골(2013), 독일(2016), 베트남(2018), 프랑스(2019)

2019년 9월 군수분야 최고위급 다자회의체인 제48차 태평양 지역 고위 군수장교 세미나가 파푸아뉴기니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는 28개국 및 2개 기관의 대표단이 참석해 재난 분야의 경험을 공유하고 상호군수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56) 대량살상무기의 국제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협력 활동으로 2003년 6월 미국 주도로 발족. 가입국 간 정보의 공유, 대량살상무기와 운반수단, 불법무기 등의 수출금지, 합동작전 등을 포함(PSI :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57) PSI 운영은 21개 주요 회원국들로 구성된 운영전문가그룹 (OEG : Operational Experts Group)이 담당

58) 한미안보협의회의(SCM) 분과위원회인 군수협력위원회(LCC)는 군수협력 사안들을 논의하는 군수분야 최고위급 회의로서 매년 교차 개최하는 정례협의체(LCC : Logistics Cooperation Commitment)

59) 1991년 한미 간 체결된 전시지원 일괄협정을 근거로 미 증원군 전시지원에 대해 논의하는 회의로서 매년 한국에서 개최하는 정례협의체(WCSC : WHNS Combined Steering Committee)

60) 태평양·인도양 지역 국가 간 군수정보 및 운용 경험을 공유하는 다자 회의체로서 매년 회원국이 순환 개최(PASOLS : Pacific Area Senior Officer Logistics Seminar)

61) 미국에서 FMS로 판매된 탄약·장비가 최초 판매 목적과 부합하게 사용되는지 여부를 직접 미측 담당자가 확인하는 활동(EUM : End User Monitoring)

우리나라는 회의에서 재난 안전망에 대해 발표하여 재난 분야 미래시스템 구축과 관련해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참석국 대표단으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군수품 양도

국방협력을 확대하고 방산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우리 군이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된 군수품을 소요 국가에 적극적으로 양도하고 있으며, 동남아 국가는 물론 남미·아프리카 등으로도 무상양도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양도 품목 또한 함정, 항공기, 기동장비, 화력장비, 공병장비 등 다양해지고 있으며, 군수품 양도 현황은 [도표 6-6]과 같다.

향후에도 국방부는 다양하게 변화하는 국내외 안보상황을 고려하여 적시적소에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군수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을 증진해 나갈 것이다. 또한, 양·다자 국제군수회의에 적극 참여해 한국군의 역량을 홍보하고, 상호군수지원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도표 6-6] 군수품 양도 현황

시기	지역	양도품목
1993~1999년	아시아	함정, 항공기, 차량, 장구류 등
2000~2009년	아시아, 남미	함정, 항공기, 공병장비, 기동장비 등
2010년~현재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대양주	함정, 공병장비, 기동장비, 화력장비, 상륙장비, 탄약 등

제4절

국제평화유지 기여 및 재외국민 보호

유엔과 국제사회의 지원으로 6·25전쟁의 비극을 극복한 우리나라는 눈부신 경제 성장과 민주화를 바탕으로 도움을 잊지 않고 도움을 주는 나라,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국제평화유지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나라가 되었다. 우리나라는 2020년 11월 기준 약 1,030여 명이 다양한 파병활동[62]을 통해 국가위상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해외 재난 시 군 자산을 적극 활용하여 선제적으로 재외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1. 유엔 평화유지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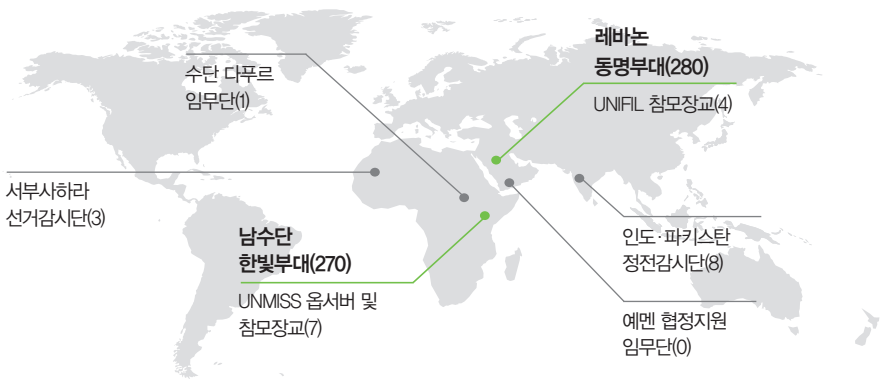
유엔 평화유지활동 현황

유엔 평화유지활동은 1948년 정전협정 감시를 목적으로 팔레스타인 정전감시단(UNTSO)[63]을 설치하면서 시작되었다. 현재 13개 임무단[64]이 세계 곳곳의 분쟁지역에서 정전감시, 재건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1년 유엔에 가입하였으며 1993년 소말리아에 공병부대를 파견한 이후 서부사하라 국군의료지원단, 앙골라 공병부대, 동티모르 상록수부대, 아이티 단비부대를 파견하였고, 지금도 전 세계 분쟁지역에서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2020년 11월 기준 레바논 동명부대 280명, 남수단 한빛부대 270명과 개인단위 파병 등 7개국에서 573명이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참여 현황은 아래 [도표 6-7]과 같다.

[도표 6-7] 유엔 평화유지활동 참여 현황

2020년 11월 기준, 단위 : 명



62) 다양한 국제평화유지활동 비교

1. 유엔 평화유지활동
- 주체 : 유엔이 직접 주도
- 지휘통제 : 유엔 사무총장이 임명한 평화유지군 사령관
- 소요경비 : 유엔에서 경비 보전

2. 다국적군 평화활동
- 주체 : 지역안보기구 또는 특정국가 주도
- 지휘통제 : 다국적군 사령관
- 소요경비 : 파견국 부담

3. 국방교류협력활동
- 주체 : 파견국 주도
- 지휘통제 : 파견국 군지휘관
- 소요경비 : 파견국 부담

63) United Nations Truce Supervision Organization

64) 현재 아프리카에 7개 임무단(서부사하라,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말리, 콩고민주공화국, 수단, 아브예이, 남수단), 중동에 3개 임무단(레바논, 시리아, 팔레스타인), 유럽에 2개 임무단(코소보, 사이프러스), 아시아에 1개 임무단(인도·파키스탄)이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120여 개 국가에서 약 7만 명을 파견

레바논 동명[65]부대 유엔은 1978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425호와 427호가 채택됨에 따라 유엔 레바논평화유지군(UNIFIL)[66]을 설치하고 레바논과 이스라엘에 대한 정전감시 임무를 시작하였다. 2006년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충돌로 사태가 악화되자, 유엔은 평화유지군 규모를 2천 명에서 1만 5천여 명으로 확대하고 회원국에 참여를 요청하였다.



기동순찰 활동 (2020년 7월)

우리 정부는 국회 동의를 받아 2007년 7월에 350여 명 규모의 레바논 평화유지단(동명부대)을 레바논 남부 티르 지역에 파견하였다. 동명부대는 정찰과 감시활동을 통해 불법무기와 무장세력이 레바논 남부 작전지역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고 있으며, 정전 감시활동 이외에도 피스웨이브(Peace Wave)라는 다기능 민군작전과 인도적 지원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현지 주민 의료지원, 공공시설과 학교시설 개선, 태권도 교실운영 등의 인도적 지원활동을 통해 현지 주민의 생활여건을 개선하였다. 동명부대의 성공적인 민군작전은 레바논 현지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레바논 남부 지역의 정세 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또한 2020년 8월 레바논 베이루트항 인근에서 대규모 폭발사고가 발생하여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자 동명부대가 보관 중인 마스크 등 생필품 6천 세트와 현지에서 구매한 의료품 4천여 세트를 레바논 총사령부에 긴급 지원하였다. 동명부대의 주요 활동은 [도표 6-8]과 같다.

[도표 6-8] 동명부대 주요 활동

2020년 11월 기준

작전 활동	· 작전지역 감시 정찰 : 11만여 회 · 도보·기동정찰 및 EOD(폭발물 처리반 : Explosive Ordnance Disposal) 정찰 : 6,400여 회 · 레바논군과 연합정찰 : 11만여 회
민군 작전 및 인도적 지원	· 현지 주민 의료지원 : 15만여 회 · 가축 진료 : 3만 5,000여 두 · 태권도 교실 : 2개 마을(압바시아, 부르글리아) / 비누 아트 교실 : 5개 마을 순회 · 한글 교실 : 원격 교육 · 주민 숙원사업 : 417건(공공시설, 학교시설, 하수시설 등) · 레바논군 지원 : 105건 · 베이루트항 폭발사고 관련 지원 : 마스크 등 생필품 6천 세트/의료품 4천여 세트 레바논 총사령부에 전달

65) 동쪽 나라에서 온 동쪽의 밝은 빛, 밝은 미래와 평화를 소망한다는 의미

66) United Nations Interim Force In Lebanon

남수단 한빛[67]부대

영국과 이집트의 공동 통치로부터 벗어난 수단에서는 1955년 정치·종교적 이유로 내전이 시작되었고 두 차례의 평화협정을 거쳐 2011년 7월 남수단은 수단으로부터 독립하였다. 유엔은 신생 독립국인 남수단의 재건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엔 남수단임무단(UNMISS)[68]을 설치하고 회원국에 파병을 요청하였다.



보르-피보르 구간 도로보수 완공

우리 정부는 2012년 9월 국회의 동의를 받아 2013년 1월 공병부대인 남수단 재건지원단(한빛부대)을 창설하고 2013년 3월 31일 300명 규모의 병력을 남수단 현지로 파병하였다.[69]

한빛부대는 내전으로 황폐해진 남수단 보르 지역에서 도로, 비행장, 교량 건설 및 보수, 나일강 차수벽 설치 등 재건지원 활동과 난민 보호, 식수 및 의료지원 등 인도적 지원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또한 남수단 현지 주민들의 생활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한빛직업학교에 농업, 목공, 토목 등 7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한빛부대의 주요 활동은 [도표 6-9]와 같다.

[도표 6-9] 한빛부대 주요 활동

2020년 11월 기준

재건지원 작전	· 보르 공항 개선 공사, 헬기 정비고, 주기장 및 터미널 신축 · 보르-피보르 간 도로 유지보수 및 배수시설(배수로, 칼바이트 설치) 개선 · 보르-망겔라 간 도로 유지보수 및 유실지역 긴급보수 지원 · 보르 지역 도로보수, 배수시설 개선, 수몰지역 배수 및 복구 장비지원 · 종글레이 주립병원(산부인과) 태양광 발전 설치
민군 작전 및 인도적 지원	· 종글레이주 피스센터 설립, 보르병원 의약품·물자 지원 · 종글레이주 홍수피해 복구물자 공여(14인용 텐트 3동) · 보르 피보르 지역 초등학교 교육물자 지원, 존가랑 대학교 평생교육원 강의장 리모델링 · 한빛농장 운영 : 8,700평, 작물 12종 재배 · 한빛직업학교(농업 등 6개 분야) 운영 : 588명 수료, 현지인 교관 양성 중 · 방한연수 : 코로나19 확산 전까지 7회차 79명 방한, 한국의 농업기술 교육 이수 · UNMISS 태권도·한국어 교실 운영 · 코로나19 대응 : 남수단 정부에 방역마스크 2만장, 코로나19 진단키트 1만회 분 지원
난민 보호	· 내·외부도로 보수 및 우기 수몰지역 배수 지원 · 난민보호소 시설보수, 방호벽 보강 및 경계초소(14개소) 신축
유엔 임무단 시설공사 지원	· 보르 기지 유엔 직원 숙소설치(12동), 보르 공항 경계초소 및 숙소설치, 보르 공항 위생 및 편의시설 설치(정화조, 체육시설, 유류고 등) · 보르 기지 방호벽 및 내부도로(4.8km) 보강 · 피보르 및 아코보 독립작전기지 방호벽, 외부 해자 및 순찰로(1.8km) 보강 · 보르 기지 유엔 임무단(5개 부대) 시설개선 지원 등

한빛부대

67) 남수단 재건지원과 인도주의적 활동을 통해 '세상을 이끄는 환한 큰 빛'이 되라는 의미

68) United Nations Mission In South Sudan

69) 남수단 파병은 소말리아(1993~1994, 재건지원), 서부 사하라(1994~2006, 의료지원), 앙골라(1995~1996, 재건지원), 동티모르(1999~2003, 치안유지 및 국경선 통제), 레바논(2007~현재, 정전감시), 아이티(2010~2012, 재건지원)에 이어 일곱 번째 유엔평화유지군 파병

한빛부대는 다양한 종류의 재건지원 활동을 통하여 남수단 내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교류를 촉진함으로써 종족 간 갈등 완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또한 주민 친화적 민군작전은 유엔 및 현지 관계자들로부터 매우 모범적인 활동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유엔 남수단임무단에 소속된 모든 부대의 교대가 잠정적으로 중지된 상황에서 한빛부대만이 유엔 및 남수단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 끝에 유일하게 교대(11·12진)를 실시할 수 있었다. 한빛부대 12진은 철저한 방역조치를 거쳐 안전하게 교대를 완료하였으며 남수단 정부에 방역마스크와 코로나19 진단키트를 지원하였다. 이를 통해 국제사회로부터 한빛부대 임무의 중요성과 우리나라의 방역능력에 대한 신뢰성을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다.

유엔 임무단 옵서버 및 참모장교

우리 정부는 인도·파키스탄, 레바논, 남수단, 서부 사하라 등 주요 분쟁지역에 설치된 유엔 임무단에 정전감시 요원인 옵서버와 유엔 임무단 참모장교 등 20여 명을 파견하고 있다. 또한, 2019년 1월 창설된 예멘 협정지원임무단(UNMHA)[70]에 한국군 옵서버를 최초로 파견함으로써 유엔 평화유지활동 분야 이외 유엔 정치임무단까지 기여 영역을 확대하였다. 옵서버는 현지 임무단의 통제하에 정전협정 위반 여부를 감시하고 순찰, 조사, 보고, 중재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참모장교는 각 사령부의 정보, 작전, 군수 등 주요 참모부에 소속되어 담당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2. 다국적군 평화활동

다국적군 평화활동은 특정 국가나 지역기구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 등을 근거로 다국적군을 구성하여 수행하는 평화활동을 의미하며 유엔 평화유지활동과 함께 분쟁지역의 안정과 재건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2001년 이후 아프가니스탄에 해성·청마·동의·다산·오쉬노부대, 이라크에 서희·제마·자이툰·다이만부대를 파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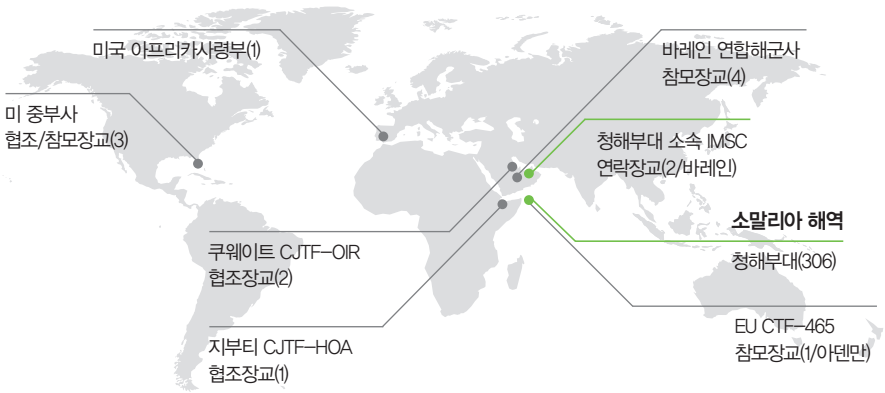
특히 아프가니스탄의 안정화와 재건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10년 파견된 오쉬노부대는 2014년 6월까지 1,800여 회에 달하는 호송작전과 정찰작전을 수행하여 지방재건팀의 재건활동을 보호하고 아프가니스탄의 안정과 재건에 크게 기여하였다.

2020년 11월 기준 우리나라는 다국적군 평화활동을 위해 청해부대 306명과 개인단위 파병 12명 등 5개국에 총 318명을 파견하고 있다. 참여 현황은 [도표 6-10]과 같다.

70) 예멘 정부와 후티반군 간 체결된 후데이다 협정(2018년 12월) 및 그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UN 안보리 결의안 2452호에 따라 창설된 유엔 임무단으로 예멘 국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위해 협정이행 감시 등을 수행하며, 유엔 평화유지활동을 위한 13개 임무단에는 속하지 않음 (UNMHA : UN Mission to Support Hudaydah Agreement)

[도표 6-10] 다국적군 평화활동 참여 현황

2020년 11월 기준, 단위 : 명



소말리아 해역 청해부대

소말리아 내전으로 2004년부터 인근 해역에서 해적 피해가 급증하자 유엔은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838호[71]를 채택하고 회원국들에게 함정과 항공기 등의 파견을 요청하였다. 우리 정부는 국회 동의를 거쳐 2009년 3월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청해부대를 파견하였다.

청해부대는 2020년 11월 기준으로 구축함 1척, 헬기 1대, 고속단정 3척과 306명의 병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덴만 지역의 해적활동은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아덴만 해역은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 등 전략물자의 주요 수송로로 우리나라 전체 물동량의 30%가 인근 해역을 통항함에 따라 이 지역의 안전 확보는 여전히 중요하다.[72] 청해부대의 임무는 국내외 선박을 호송하고 안전항해를 지원하며 연합해군사령부와 유럽연합의 해양안보 작전에 참여하여 유사시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다.

청해부대는 2011년 1월 해적에게 피랍된 우리 선박과 선원을 구출하기 위한 '아덴만 여명작전'과 2011년 3월과 2014년 8월에 리비아에 있는 우리 국민과 외국인을 인접 국가로 안전하게 철수시키는 '리비아 재외국민 철수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2015년 4월에는 예멘에 체류 중이던 우리 국민 6명을 안전하게 철수시키고 예멘에 잔류한 우리 국민과 연락을 유지하고 보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왕건함'에 대한민국 최초로 함상 대사관을 개설하였다. 이는 우리 군과 외교부가 유기적인 공조를 통해 재외국민 보호에 앞장선 대표적인 모범 사례가 되었다. 또한 2018년 4월에는 가나 해역에서 해적에게 피랍된 후 석방된 우리 국민 3명을 나이지리아에서 가나까지 안전하게 이송하는 작전을 실시하였다. 청해부대는 2017년 2월 이후 총 6회 유럽연합 대해적 작전에 참여하여 소말리아 북부 해안으로부터 해적이 아덴만 해역으로

청해부대 파견지역 한시적 확대

71) 1.청해부대 작전구역 : 남위 11° 이북, 동경 68° 이서
2.회원국들의 해군 함정 및 군용 항공기 파견 촉구
3.해적 퇴치를 위해 해군 함정 및 군용 항공기들이 국제법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조치 사용 가능
4.소말리아 과도정부와 해적퇴치를 위해 협력할 것을 촉구
5. 관련 국가 및 국제기구는 세계식량계획(WFP)의 식량이 안전하게 수송될 수 있도록 호송

72) 아덴만 해역에는 중국의 구축함 2척과 군수지원함 1척, 일본의 함정 2척과 초계기 2대, 한국의 함정 1척(청해부대)이 대해적작전에 투입 중이며 2019년에는 한국이 CTF-151 사령관직 임무를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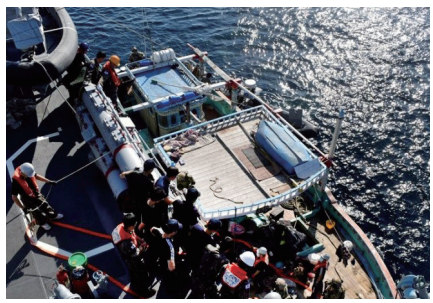
진출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작전을 실시하고 있다.[73] 청해부대의 주요 활동은 [도표 6-11]과 같다.

[도표 6-11] 청해부대 주요 활동

2020년 11월 기준

선박 호송		안전항해 지원		해양안보 작전	해적 퇴치
우리 선박	타국 선박	우리 선박	타국 선박		
510척	1,875척	19,570척	2,968척	703회(1,731일)	21회 / 31척

국민 보호	
2011년 1월	아덴만 작전(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된 삼호주얼리호 선원 21명 전원 구출)
2011년 3월	리비아 재외국민 철수 작전(우리 국민 37명 몰타 및 그리스로 철수 지원)
2011년 4월	한진텐진호 선원 구출 작전 (해적 공격을 받은 한진텐진호 선원 우리 국민 14명, 인도네시아인 6명 전원 구출)
2012년 12월	제미니호 선원 구출 작전(해적에게 피랍 후 석방된 우리 국민 선원 4명 호송)
2014년 8월	리비아 재외국민 철수 작전(우리 국민 18명, 외국인 86명 몰타로 철수 지원)
2015년 4월	예멘 재외국민 철수 작전(우리 국민 6명, 외국인 6명 오만으로 철수 지원)
2018년 4월	가나 해상 피랍 국민 호송 작전(해적에게 납치된 우리 국민 3명 가나로 호송)
2018년 8월	리비아 무장단체에 피랍된 우리 국민 구출 작전 지원
2019년 11월	예멘 인근 해상 우리 국민 2명 나포 시 출동



한시적 확대지역에서의 이란 표류선박 인도적 지원 (2020년 2월)

한편, 우리 정부는 2019년 5월부터 호르무즈 해협 일대를 포함한 중동 지역의 긴장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의 안전과 선박의 자유항행을 보장하기 위해 2020년 1월 청해부대 파견지역을 기존의 아덴만 일대에서 오만만, 아라비아/페르시아만 일대(호르무즈 해협 포함)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하였다. 2020년 2월에는 왕건함(31진)이 확대된 파견지역에서 약 1주일간 해상 표류 중이던 이란 국적 선박에서 10명을 구조하고 유류·식량 등을 제공하였다. 호르무즈 해협은 우리나라 원유 수입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우리 선박이 연 900여 회 통항하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다. 청해부대는 한시적으로 확대된 파견지역에서 독자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되, 우리 국민과 선박 보호를 위해 필요시에는 국제해양안보구상(IMSC)[74]과 협조된 작전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정보공유 등 제반 협조를 위해 2020년 2월 청해부대 소속 연락장교 2명이 국제해양안보구상에 파견되어 임무 수행 중이다.

73) 유럽연합 대해적작전(Atalanta 작전)은 소말리아 인근 해역을 통행하는 선박 보호를 위한 유럽연합(CTF-465)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해적작전으로 2008년에 시작되었으며, 청해부대는 2017년부터 유럽연합의 대해적 작전에 참여

74) 호르무즈 호위연합으로 바레인에 주둔하고 있으며, 회원국은 미국, 영국, 호주, 사우디아라비아, UAE, 알바니아, 바레인, 리투아니아로 8개국 (IMSC : International Maritime Security Construct)

다국적군 참모 및 협조 장교 우리 군은 바레인의 연합해군사령부, 지부티의 연합합동기동부대(CJTF-HOA), 쿠웨이트 다국적군 지원사령부(CJTF-OIR)[75], 미국 중부사령부와 아프리카사령부 등에 총 10여 명의 참모 및 협조 장교를 파견하고 있다. 이들은 연합해군사령부 참모업무 수행, 연합작전계획 수립, 한국군 해외파병부대 교대 및 전투근무지원, 현지 동맹군 협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2019년 12월에는 ISIS 진압작전을 수행하는 쿠웨이트 다국적군 지원사령부에 협조장교 2명을 신규로 파견하는 등 다국적군 평화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3. 국방교류협력 활동

우리 군은 특정 국가의 요청에 따라 전투 위험이 없고 장병의 안전이 확보된 지역을 중심으로 우리 군을 파견하여 교육훈련, 인도적 지원, 재난구호 등 비전투 분야에서의 국방교류협력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13년 11월 심각한 태풍 피해를 입은 필리핀의 복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아라우부대를 파견하였다. 아라우부대는 피해지역 복구 임무를 훌륭히 완수하고 2014년 12월에 철수하였다. 2014년 3월에는 말레이시아의 실종 여객기에 대한 탐색 지원을 위해 다국적 연합탐색작전 임무를 수행하였다. 또한 우리 정부는 에볼라 바이러스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2014년 12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서아프리카 주요 발병국가인 시에라리온에 민간 의료인력과 함께 군의관 6명과 간호장교 9명으로 구성된 에볼라 대응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76]를 파견하였다.

UAE 아크[77]부대 UAE는 우리 군의 교육훈련체계를 벤치마킹하여 UAE군의 교육훈련 수준을 높이고 국방체계를 선진화하기 위해 2010년 8월에 우리 군의 파병을 요청하였다. 우리 정부는 국회 동의를 거쳐 2011년 1월에 1진 130여 명 규모의 'UAE 군사훈련협력단(아크부대)'을 알 아인 지역에 파견하였으며, 5진부터는 150명 규모의 병력을 파견하였다. 2016년 9월 28일 UAE 총참모부에서 아크부대 이전을 국방부로 요청하여 스웨이한으로 이전하였으며, 공사 및 이전비용 320억 원을 UAE에서 전액 부담하였다.

아크부대는 UAE군 특수전 부대의 교육훈련을 지원하고, 연합훈련·연습을 실시하며 유사시에는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우리 군은 UAE군의 교

75) 이라크/시리아 내 ISIS 격퇴 작전 수행 (CJTF-OIR : Combined Joint Task Force-Operation Inherent Resolve)

76) Korea Disaster Relief Team

77) 아크(Akh)는 아랍어로 '형제'라는 뜻으로, UAE 국민에게 친밀감을 표시하는 의미임



아크부대 고공강하

육훈련체계를 개선하고, 특수전 작전 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 우리 군 역시 국내에서 경험할 수 없는 고온·건조한 사막훈련과 UAE군의 첨단시설·장비를 활용한 실전적 훈련을 통해 특수작전 능력을 향상시키는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고공·야간 강하 훈련 등 국내에서 제한되는 훈련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수 있고 무상으로 제공되는 UAE군의 첨단시설과 장비를 이용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도 얻고 있다.

아크부대는 우리나라와 UAE 간 신뢰와 협력의 상징이 되어 양국이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하는 데 기여하였다. 2020년 6월 아크부대 16·17진 교대는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 상황에서 이루어졌고, 특히 해외 파병부대 중 최초로 2019년 말에 도입된 다목적 공중급유수송기(MRTT) KC-330를 이용해 교대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교대 비용 절감, 탄약·총기 수송 등을 통한 임무 수행 여건 개선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한국과 UAE는 아크부대 파병을 계기로 특수전 훈련, 사이버·군수 분야 등에서의 육·해·공군 대표단 상호방문 등의 활발한 교류협력을 실시하여 양국 간 군사적 신뢰를 강화해나가고 있다. 아크부대 주요 활동은 [도표 6-12]와 같다.

[도표 6-12] 아크부대 주요 활동

2020년 11월 기준

UAE군 능력 향상	· UAE군의 특수전 수행능력 향상을 통해 UAE군 정예화에 기여 · UAE군 교육훈련체계 개선
우리 군의 능력 향상	· UAE의 첨단 시설과 장비를 활용한 특수작전 능력 향상 · 악조건 하(50℃ 이상 고온, 사막) 생존능력 강화 훈련 실시 · 장거리 사격훈련 및 고공강하 훈련, 산악전 훈련 실시
국방교류 확대	· 한국군 주요훈련 시 UAE군 참관 및 양국 연합훈련 시행 · 각 군 교육과정에 UAE장교 수탁교육 및 한국군 위탁교육 실시 · UAE군 · 가족의 국내 민간병원 진료 등 의료협력 · 방산수출 협력 등 중동지역의 국방외교 허브 구축

4. 국제평화유지활동 기반 확충·발전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개최 추진

2021년 우리나라에서 개최 예정인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는 우리나라가 국제평화

를 선도하는 국가로서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강화해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지난 2019년 3월 뉴욕 유엔 본부에서 개최된 제3회 평화유지 장관회의에서 동 회의의 한국 개최를 제안하였으며, 같은 해 9월 제74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2021년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를 아시아 최초로 한국이 개최할 것을 선언하였다.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는 국제평화유지활동 분야 현안을 논의하고 각국의 기여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유엔 평화·안보 분야의 최대·최고위급 정례회의체로서 150여 개국[78]의 국방·외교장관이 참석한다. 2016년 영국, 2017년 캐나다에서 개최된 제1·2차 회의와 2019년 유엔에서 개최된 제3차 회의에는 약 110여 개국에서 참가하였다. 제4차 회의에서는 10개 공동의장국[79]과 협의하여 선정한 3개 평화유지활동 분야의 핵심 의제[80]를 다룰 예정으로 관계 국제기구 대표 및 학계, 언론 등 민간 분야에서도 다수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정부는 평화유지 장관회의 개최를 계기로 신기술, 평화구축 등 한국이 비교우위를 지니는 분야에서 새로운 평화유지활동 국제규범과 공약을 도출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한다. 또한 2021년은 한국의 유엔 가입 30주년이 되는 해로서 최고위급 연설을 통하여 한반도 평화에 대한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전달하고 우리 한반도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해 나갈 것이다.

국방부는 지난 회의를 통하여 유엔 교육과정의 한국 주관 개최, 지뢰방호차량 등 장비 기여, 여성 평화유지군 비율 확대 등의 공약을 제시하였고, 제4차 회의에서도 기술 강국으로서 한국의 강점을 활용한 다양한 기여공약을 제안할 계획이다.

국방부와 외교부는 제4차 회의의 체계적인 준비를 위하여 국방·외교부장관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2021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준비위원회'와 실무 지원조직인 '준비기획단'을 출범시켰다. 5월과 11월 2차례 개최된 준비위원회에서는 국방부와 외교부를 포함한 10개 관련 부처가 모여 주최국으로서 유엔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기여 공약을 발굴하고 회원국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는 등 성공적인 장관회의 개최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준비기획단은 4개의 팀[81]을 갖추어 평화유지 장관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내실 있는 준비를 지속할 것이다.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준비기획단 출범 (2020년 7월)

한편, 2020년 7월 국방부와 외교부는 코로나19 상황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아프리카의 2

78) 유엔 총회 산하 평화유지활동 특별위원회(C34) 회원국

79) 한국, 미국, 영국, 캐나다, 에티오피아, 르완다,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네덜란드, 파키스탄, 우루과이

80) ① 임무수행능력 강화 ② 평화의 지속화 ③ 민간인 안전 및 보호

81) 기획총괄, 대내협력(공약발굴), 행사운영, 홍보

개 유엔 임무단[82]에 2021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의 홍보문구가 담긴 방역마스크를 각각 3만 장씩 지원함으로써, 내년 개최되는 장관회의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하는 동시에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우리나라의 기여 의지를 보여주기도 하였다.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 국제평화유지 분과 및 해양안보 분과 공동의장국 수행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우리나라는 캄보디아와 공동으로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국제평화유지 분과[83] 의장국 임무를 수행하였다. 2014년 9월과 2015년 9월에는 우리나라 주관으로 국제평화유지활동 분과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여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하였으며 2019년 9월에는 인도네시아 보고르에서 실시한 국제평화유지활동 훈련에 참가[84]하여 우리의 우수한 역량을 전파하고 국제사회에 국제평화유지활동 선도국가로서의 이미지를 확산시켰다. 동시에 싱가포르와 공동으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 해양안보 분과 의장국 임무를 수행하였다.

2019년 5월에는 양국 주도로 역대 최대 규모[85]의 해양안보 분과위 실기동훈련을 한국 및 싱가포르해역에서 실시하였다. 또한 해양안보 국제회의를 통해 국제해역 내 해양안보 및 신뢰구축방안을 논의하고 국제사회에 우리 군의 해양안보 역량과 다자 협력 활동을 소개하였다. 이를 통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해양안보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로서의 위상을 강화하였다.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 해양안보 분과회의

국제평화유지 양해각서 체결 등 협력 추진

2020년 8월 국방부는 영국·베트남 2개국과 국제평화유지활동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인도네시아·캄보디아 2개국과 체결을 추진 중이다.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인 베트남과는 2015년 9월 「한-베트남 국제평화유지활동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2015년 12월과 2018년 9월에는 베트남 국제평화활동센터에 우리 공병 전문가를 파견하여 국제평화유지활동 파견지에서 위기상황 발생을 가정한 부대방호와 생존기술 관련 교육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2016년 9월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우리 국제평화활동센터에서 운영하는 유엔참모과정과 군사전문가 과정

82) 유엔남수단임무단(UNMISS), 유엔콩고민주공화국 안정화임무단 (MONUSCO)

83) ADMM-Plus 분과회의는 ①국제평화유지활동, ②대테러, ③해양안보, ④군 의료, ⑤재난 구호 및 인도적 지원, ⑥인도적 지뢰 제거 분과회의로 구성되며, 아세안 10개국(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베트남, 부르나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필리핀, 캄보디아, 태국) 중 1개국과 Plus 8개국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호주, 뉴질랜드, 인도) 중 1개국이 공동으로 의장국 임무를 수행

84) 인도네시아 보고르 PKO센터에서 개최된 PKO훈련(2019.9.14.~23.,18개 회원국 총 370여 명이 참가)에 국제평화지원단 훈련팀 및 옵서버 12명이 6개 분야(성적착취확대, 지뢰사고, 불법검색, 아동무장, 보안검색, IED)에 대한 훈련 참가

85) 군함 18척, 항공기 10기, 3,500명 이상 병력이 참가 (2019.4.30.~5.13.)

에 7명의 베트남 장교를 초청하여 관측·감시, 조사·검증, 협상·중재 등의 노하우를 전수하여 베트남군의 국제평화유지활동 역량 강화에 기여하였다.

영국과는 2017년 3월의 영국 공병부대 남수단 파병을 계기로 2018년 1월 「한-영 국제평화유지활동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관련 정보공유는 물론 국제평화활동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엔참모과정에 2020년 현재까지 3명의 영국군 장교를 대상으로 수탁교육을 하는 등 협력을 지속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캄보디아, 인도네시아와도 양해각서 체결을 추진 중이다. 캄보디아는 지뢰제거 분야에서 다년간의 경험을 갖고 있어 선진 장비를 갖춘 우리나라와 협력 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이를 새로운 파병모델로 발전시킬 수 있다. 인도네시아는 국제평화유지활동 분야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와 위·수탁교육, 훈련과 정보교류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아세안 국제평화유지활동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협력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국제평화활동센터 기능 강화

국제평화활동센터는 국제평화유지활동을 준비하는 교육전담기관으로서 1995년 8월 합동참모대학 내에 설립되었다. 국방부는 2015년 「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에 따라 'PKO센터'를 '국제평화활동센터'로 명명하고 국방대학교로 소속을 변경하여 교육과 연구기능을 강화하였다. 국제평화활동센터는 파병부대의 주요 간부와 개인 파병요원에 대한 파병 전 사전교육을 전담하고 있으며, 유엔 평화활동국(DPO)[86], 외교부 유엔과, 타 국가의 국제평화활동센터, 경찰대학 평화유지 교육센터 및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교류협력을 추진하면서 교육체계를 발전시키고 있다. 파병부대와 개인 파병요원이 임무를 마치게 되면 파병부대 성과 교훈집과 파병요원 귀국보고서를 관련 부서에 배포하고 있다. 2013년 11월 국제평화활동센터의 유엔참모과정이 유엔 평화활동국으로부터 최초로 '유엔교육인증'을 획득 후, 2018년 11월에 재인증을 받았으며 현재는 유엔 옵서버과정에 대한 인증을 추진하고 있다.

[도표 6-13] 국제평화활동(PKO)센터 교육 인원

2020년 기준

계	유엔 평화유지활동	다국적군 평화활동	국방교류협력활동
1,657명	8개 과정 1,066명	5개 과정 38명	2개 과정 553명

국제평화활동센터는 국제평화유지활동 연구, 교육, 훈련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기능과 역할을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가고 있다. 국제평화활동센터는 2017년

86) Department of Peace Operations

에 유엔 통합훈련처(ITS)와 협조하여 유엔 등 12개국이 참여하는 교관교육을 실시하였고, 2018년 5월에는 아시아-태평양 국제평화활동센터 협의체 연례회의를 개최하였다.[87] 2019년 11월에는 국방부에서 주최한 '유엔 현장임무단 고위자 과정'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였다. 유엔 고위직책 후보군 양성을 위한 유엔 핵심 교육 프로그램인 이 과정을 최초로 개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평화유지활동 기여를 다변화하고 우리나라 장교의 유엔 고위직 진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2019년 제3차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유엔 주관 교육 프로그램을 한국에서 개최하겠다는 공약에 따라 국제평화유지활동에 관한 유엔 교육 프로그램을 연 1회 개최할 예정이며,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하여 개최 시기, 프로그램 운영 여부 및 방식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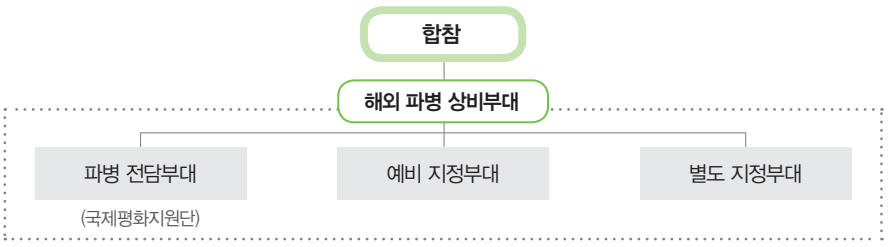
해외파병 상비부대 운영

우리 군은 국제평화유지활동 참여 임무가 부여되면 1~2개월 이내에 파병이 가능하도록 2009년 12월부터 4,000명 규모의 해외파병 상비부대를 운영하고 있다. 상비부대는 각각 1,000명의 파병 전담부대, 예비 지정부대와 2,000명의 별도 지정부대로 편성된다. 파병 전담부대는 파병 소요가 발생할 때 우선적으로 파병을 준비하는 부대로서, 2010년 7월 '국제평화지원단(온누리부대)'[88]을 창설하여 파병 전담부대로 운영하고 있다. 예비 지정부대는 파병인원 교대나 추가 파병에 대비하기 위한 부대이며 별도 지정부대는 다양한 파병 소요에 대비하기 위해 운영되는 기능부대이다. 유엔을 통해 공병·의무부대 파병요청이 오면 별도 지정부대로 기 지정된 모체부대(공병·의무)를 중심으로 필요 인원을 충원하여 파병하게 된다. 해외파병 상비부대 편성과 파병 인원은 [도표 6-14] 및 [도표 6-15]와 같다.

87) 아시아·태평양 국제평화활동센터 협의체 연례회의는 2010년에 시작되었으며 이번 회의는 9차 회의로 회원국(20개국)과 유엔 본부 참모장 등 70여 명이 참가하여 국제평화활동의 발전 방향을 토의

88) 전체, 전부를 뜻하는 '온'과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을 뜻하는 '누리'의 합성어로 세계를 누비며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를 의미

[도표 6-14] 해외 파병 상비부대 편성



* 별도 지정부대 : 공병, 의무, 군사경찰, 무인항공기 소대(해병), 해·공군 수송부대, 헬기부대 등

[도표 6-15] 상비부대 파병 인원

2010년~2020년 11월

동명부대	오쉬노부대	아크부대	한빛부대	계
7,607명(24개진)	1,745명(8개진)	2,234명(17개진)	3,403명(12개진)	14,989명

5.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대응체계 정립

재외국민 보호 활동

우리 군은 해외에서 대규모 재난·테러 등 위기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함정·수송기 등 군 자산을 활용하여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주로 소말리아 아덴만에 파견된 청해부대를 활용하여 피랍 국민 구조·이송과 리비아, 예멘 등에서 내전 발생 시의 재외국민 철수 등을 지원하였으나, 최근에는 다양한 자연재해와 재난 상황들에 대응하여 군 수송기와 구조대를 투입하는 등 재외국민 보호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군 자산을 활용한 국방부의 최근 재외국민 보호 주요 활동사례는 [도표 6-16]과 같다.

[도표 6-16] 최근 우리 군의 재외국민 보호 주요 활동 사례

2020년 11월 기준

구분	국방교류협력활동
2018년 10월	사이판 태풍 발생으로 고립된 한국인 799명 대피를 위한 군 수송기(C-130) 지원
2019년 5월	헝가리 유람선 침몰사고로 실종된 국민 수색 지원을 위한 구조대 파견
2020년 2월	일본 크루즈선에 승선한 한국인 6명, 일본인 배우자 1명 국내 이송 지원(도쿄→김포) (대통령 전용기, 공군 3호기)
2020년 5월	아프리카 지역 내 교민 60명 귀국 지원(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인천) (한빛부대 12진 투입 후 복귀 전세기)
2020년 7월	다목적 공중급유수송기(MRTT) KC-330 2대를 투입하여 이라크 파견 근로자 290여 명 국내 이송 지원

우선, 2018년 10월 사이판에서 태풍 위투가 발생해 현지 여행객 등 우리 국민이 고립되자 국방부는 공군 수송기(C-130)를 최초로 투입하여 총 799명을 인근 괌으로 안전하게 이송하는 등 재외국민 보호 임무 수행 영역을 넓혔다.

2019년 5월 헝가리 유람선 침몰사고[89] 발생 시에 국방부는 외교부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해군 해난구조대(SSU)[90] 요원 7명을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의 일원으로 현지에 급파하고 구조장비를 지원하였다. 또한, 국방부 본부에 24시간 지원 상황실을 운영하고 헝가리 현지 국방무관을 구조대장으로 임명하여 실종된 우리 국민 수색 작

89) 헝가리 다뉴브강에서 우리 국민 33명이 탑승한 유람선 허블레아니호가 현지 크루즈선과 충돌. 생존 7명, 사망 25명, 실종 1명

90) Sea Salvage & Rescue Unit

업에 총력을 다하였다. 이는 해외에서 발생한 대형 사고에서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군 구조대를 파견한 최초의 사례가 되었다.



헝가리 유람선 침몰사고 실종자 수색 (2019년 5월)



KC-330을 활용한 이라크 파견 근로자 귀국 지원 (2020년 7월)

2020년에는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각국의 출입국 통제가 강화됨에 따라 귀국에 어려움을 겪는 교민들의 국내 이송을 적극 지원하였다. 2월에는 일본 크루즈선에 승선한 우리 국민 6명과 일본인 배우자 1명 등 총 7명을 한국으로 이송하기 위해 대통령 전용기(공군 3호기, VCN-235)를 투입하였다. 또한, 5월에는 임무 수행을 위하여 남수단에 투입되는 한빛부대(12진)를 수송한 후 복귀하는 전세 항공기를 활용하여 아프리카 대륙 각지의 재외교민 60명의 귀국을 지원하였다. 교대 과정에서 한빛부대가 남수단 내 우리 교민들에게 방역 마스크도 지원하여 감염 예방활동에 힘을 보탰다.

그리고 7월에는 이라크 내에 일일 2천여 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다목적 공중급유수송기(MRTT) KC-330 2대를 투입해 이라크 파견 우리 근로자 290여 명의 신속한 귀국을 지원하였다. 이는 재외국민 이송을 위해 공중급유수송기를 투입한 최초 사례로 국방부, 외교부, 군 의료진, 검역관 등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은 근로자들의 안전한 입국을 지원하였다.

재외국민 보호 대응체계 정립

국방부는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군의 긴급구호 인력·자원 투입과 관련한 대응체계를 정립해가고 있다. 이를 위해 해외에서 위기 상황 발생 시 국방부의 대응절차와 조치사항을 규정한 「재외국민 보호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2019년 9월 전면 개정하였다. 개정 매뉴얼은 발생 가능한 위기 유형을 최신화하고, 군 자산 지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절차를 구체화하여 신속히 조치하도록 하였다. 또한 2020년 7월에 실시한 이라크 파견 근로자 국내 이송 지원을 계기로 다목적 공중급유수송기(MRTT) KC-330 투입 세부절차를 마련해 코로나19에 따른 우리 국민 이송 등 관련 상황 발생

시 적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방부는 재외국민 위기상황에 대비한 정부 합동 상황조치 훈련과 회의를 통해 관련 기관과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앞으로도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위기상황에서 어려움에 처한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외교부, 각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며 대응체계를 보완·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제 7 장

국민과 함께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 내 포용문화 정착

제1절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선진병영문화 정착
제2절 장병 복지 향상 및 복무여건 개선
제3절 군 의료시스템 개편
제4절 장병 인권보호 강화
제5절 제대군인 지원 및 참전용사 예우 강화





6·25전쟁 70주년 국군전사자 유해봉환 행사 (2020년 6월)

제1절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선진병영문화 정착

우리 군은 병영문화 혁신을 통해 인명사고, 근무 이탈 감소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국방부는 군의 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장병들의 자율성과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선진병영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한다.

1. 자율과 책임의 병영문화 조성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병영

2014년부터 추진해 온 병영문화 혁신은 인명사고, 군무 이탈 감소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복무환경이 조성되었다는 긍정적인 인식을 얻고 있다. 하지만 장병 인권·복지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가 높아짐에 따라 군의 대비태세를 확립한 가운데 자율과 책임이 조화되는 병영문화 조성에 대한 요구는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장병들의 창의적인 생각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건전한 병영생활을 만들고, 그들이 자신의 행동에 책임질 줄 아는 '군복 입은 민주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자율과 책임의 병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병사 개인 휴대전화 사용

2015년부터 수신용 공용휴대전화와 영상 공중전화기를 도입하여 병사들의 고립감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리고 보다 폭넓게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범운영을 거쳐 2020년 7월 '일과 후 병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시행하였다. 휴대전화 사용은 병사들에게 있어 사회와의 단절감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부대원 간의 소통을 활성화함으로써 부대 전투력 향상과 단합에 기여하였다. 또한, 병사들이 휴대전화를 이용해 원격강좌 수강, 자격증 취득, 취·창업 정보 획득 등 자기개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면서 건전하고 생산적인 병영 생활의 기반이 구축되었다.

한편, 병사 휴대전화 사용으로 우려되었던 보안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규정

병사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병 휴대전화 사용 모습(자기개발, 외부와의 소통)

을 제정하고, 사진 촬영 기능이 통제되는 보안통제체계 '국방 모바일보안 앱'을 개발하여 활용 중이다.

이와 함께 불법 도박, 디지털 성범죄 등의 부작용을 사전에 근절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과 함께 관련 콘텐츠를 제작하고 군 전문교관을 양성하는 등 역기능 최소화를 위한 예방 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평일 일과 후 외출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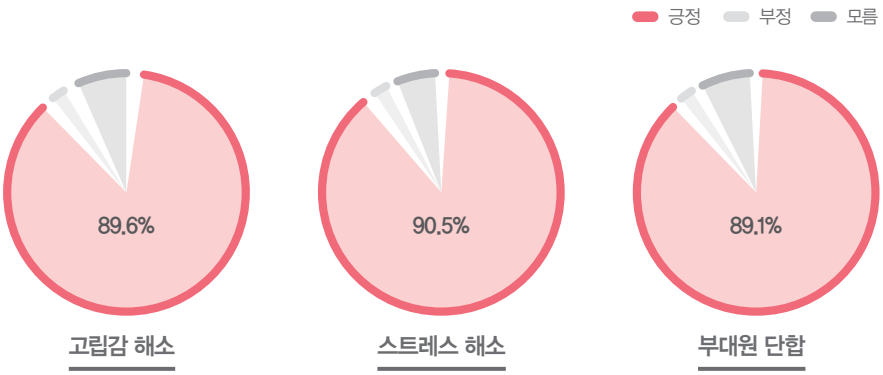
전투임무 준비를 위한 충분한 휴식과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군사대비태세 유지와 부대별 특성을 고려하여 평일 일과 후 병사 외출을 2019년 2월 전면 시행하였다.

군사대비태세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휘관 승인하에 개인별 월 2회 이내로 시행하며, 소규모 단결 활동, 병원 진료, 가족 면회, 자기개발 및 개인용무를 목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평일 일과 후 외출 중인 병사

[도표 7-1] **평일 일과 후 외출에 대한 장병 인식도 조사**



* 출처 : 한국국방연구원(KIDA, 2019)

평일 일과 후 외출은 고립감과 스트레스 해소, 부대원 단합 등으로 군 내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의 상생 강화 등 군 외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앞으로도 장병들의 휴식과 자율성 보장을 위하여 평일 일과 후 외출을 지속해서 유지해 나갈 것이다.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병영문화 조성

국내에 등록된 외국인이 2008년 85만여 명에서 2019년 127만여 명으로 증가하는 등 다문화 사회로 급격히 변화하는 상황에서 군에서도 다양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하다. 따라서 국방부는 다문화 가정 출신 장병 등 사회적 소수자들이 차별받지 않고 다른 장병들과 전우로서 함께 생활할 수 있는 병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방부는 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장병들의 이해를 높이고 차별적 대우로 구성원 간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관련 제도를 마련할 것이다. 이를 통해 병영 내 문화 다양성이 창의적인 병영문화 조성에 이바지하도록 할 것이다.



어린이날 다문화 가정 자녀 초청행사

2. 기본권과 생명이 존중되는 병영문화 확산

부조리 척결 활동 강화

우리 군은 '국민과 함께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사기충천한 군문화 정착'을 위해 군 내 부조리를 척결하여 장병들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국방부는 불합리한 관행과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부대운영 핵심계층에 대한 교육과 현장 확인점검을 지속해서 실시하고, 병사 스스로 규율을 지키고



병 자치위원회(공군 으뜸병사제도)

자정 활동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병 자치제도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 더불어 불합리 관행 및 부조리 척결 우수부대를 선발해 포상하는 등의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장병 사적 지시 및 운용 금지

군은 임무 특성상 엄격한 상하 관계가 잘 유지되어야 하지만 위법한 명령과 사적인 지시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은 상관이 직무와 관계가 없거나 권한 밖의 사항에 대해 명령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국방부는 「부대관리훈령」과 각 군 규정에 장병에 대한 사적 지시 및 운용 금지 조항, 위반자에 대한 처리지침을 마련하였다.

또한, 사적 지시 근절을 위하여 2019년 5월 '국방분야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고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을 개정하여 엄중한 처벌기준을 마련하였다.

올바른 언어사용

인권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고, 폭언, 욕설 등의 언어폭력은 군 내 각종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되므로 우리 군은 병영 내 올바른 언어를 생활화하여 상호 인격을 존중하고 소통과 배려가 넘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강의

국방부는 장병들의 올바른 언어사용 활성화를 위해 병영 언어지침서와 병영 언어 순화 만화책 발간, 국방일보 웹툰 기획연재 등을 추진하였으며, '병영 언어 선도부대'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국립국어원과 협업하여 장병들이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강의를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도 밝은 병영문화는 상호 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말에서 시작된다는 인식하에 장병들이 올바른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지속해서 마련해 나갈 것이다.

고충 식별 및 해소

장병들이 군 복무를 건강하게 마칠 수 있도록 군 생활에서의 고충을 식별하고, 적기에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자유로운 환경에 익숙한 장병들은 상대적으로 통제된 병영환경



찾아가는 상담실

과 단체생활로 고충을 겪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 국방부는 복무 적응에 장애가 되는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인성검사를 4단계로 실시하고 있고, 심리상담과 치유를 위한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을 대대급까지 확대하여 배치하였으며, 고충을 겪고 있는 장병을 대상으로 상담과 심리치유를 위한 그린캠프도 운영하고 있다. 또한, 24시간 고충 상담과 신고를 할 수 있는 국방헬프콜센터 상담창구를 확대하고 소원 수리제도와 각종 신고 창구 등을 운영하여 고충을 조기에 식별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는 보다 예방학적 관점에서 한국국방연구원과 함께 인성검사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보수교육 등을 확대하며, 국방헬프콜센터 상담 내용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사고 예방 자료로 활용할 것이다.

[도표 7-2] 국방헬프콜센터 연도별 일일 평균 상담 건수

2020년 11월 기준, 단위 : 건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상담 건수	47	111	159	176	170	134	159

* 2018월 9월 1일부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이버 공개상담은 중단

[도표 7-3]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연도별 증원 현황

2020년 기준, 단위 : 명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인원	95	148	207	246	297	346	383	383	522	633

장병 자살 예방 역량 강화

군의 비전투 손실 예방과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전 장병이 자살 예방 '게이트키퍼(Gate-Keeper)'[1]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인증받은 각 군별 맞춤형 '보고-듣고-말하기' 교육콘텐츠[2]를 제작하고 자살 예방 전담교관을 활용해 반기 1회 이상 자살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장병들의 군 복무 적응을 지원하고 자살 예방을 위해 '식별-관리-분리'의 3단계 자살 예방 종합시스템을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병무청, 보건복지부와 협업하여 정신과적 문제 등 복

1) 자살 위험 대상자를 조기에 발견해 전문기관(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상담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고, 위급상황에서 자살 위험 대상자의 자살 시도를 방지하기 위해 관리·지원하는 사람

2) 자살 위험자들의 자살 징후를 '보고', 그들의 생각을 '듣고', 그들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도록 '말하는' 교육컨텐츠

무 부적응으로 조기 전역한 장병을 대상으로 심리·복지·취업 등 사회보장서비스를 통해 전역 후에도 지속해서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육군) 자살 예방 전담 교관 양성

국방부는 자살 예방 전담교관 양성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그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있으며, 이들을 활용해 지휘관 등 부대 관리 핵심계층을 대상으로 권역별 순회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지휘관이 반드시 자살 예방 교육에 동참하게 하고, 자살사고 부대의 조기 안정화와 관련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사후관리 치유프로그램 모델을 정립하는 등 생명존중 문화 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도표 7-4] **연도별 자살 예방 전담 교관 양성현황**

2020년 기준, 단위 : 명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인원	540	434	550	534	653	664	668	822	650	808	377

제2절

장병 복지 향상 및 복무여건 개선

군인복지는 장병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기를 증진하는 것은 물론 전투력 발휘 수준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이에 국방부는 병 봉급 및 수당 인상, 병영생활관 개선, 자기개발 지원 확대, 피복 및 급식 개선, 직업군인 주거지원 제도 발전 등 군인복지의 획기적 개선을 통해 장병들이 오직 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는 복무여건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

1. 장병 복무여건의 획기적 개선

병 복무에 대한 합리적 보상

국방부는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합리적 보상과 국가책임 강화 차원에서 2022년 기준 2017년 최저임금의 50%까지 병 봉급을 연차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020년 현재 병 봉급은[3] 2017년 최저임금의 40% 수준까지 인상되었으며 2022년에는 병장 기준 67만 6천 원까지 인상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병 봉급 인상과 연계하여 병사들이 전역 후 사회에 진출할 때 마중물로 활용할 수 있는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2018년 8월에 시중 14개 은행과 협약을 맺고 '장병내일준비적금'[4]을 출시하였다. 이후 가입인원과 적립금액이 꾸준히 증가하여 2020년 11월 기준 누적 가입인원이 32만 5천여 명을 돌파하였고, 개인별 월평균 28만 8천 원을 적립하고 있다.

또한, 군 특수성과 작전·근무환경을 고려하여 우수인력 획득·유지에 중요 요소인 군인 보수와 수당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수준으로 개선하고 있다. 2019년 유급지원병 보수를 일반 하사와 동일 수준으로 지급하였고, 단기복무부사관 장려수당을 기존 25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인상하여 부사관 획득의 어려움을 일부 해소하였다. 그리고 군 복무로 사회진출이 늦어지는 현역병 등 병역의무이행자에 대해서는 군 복무기간 중 6개월만 인정되는 현 국민연금 군복무 크레딧[5]을 군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 또한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3) 2020년 병 봉급 인상 (2017년 대비)
- 병장 216,000원 → 540,900원
- 상병 195,000원 → 488,200원
- 일병 176,400원 → 441,700원
- 이병 163,000원 → 408,100원

4) 장병내일준비적금은 5% 수준의 고금리와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개인별 월 최대 40만 원까지 적립이 가능

5) 군복무 크레딧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입대해서 6개월 이상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제도이며,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국가에서 부담

병영생활관 개선 병사들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쾌적한 병영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2003년부터 협소하고 노후된 생활관을 현대화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생활관을 단순 병사 수용 공간에서 병사들의 주거·생활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서 소대 단위(30~50명) 침상형 구조를 분대 단위(8~10명) 침대형 구조로 변경하고 있다. 이와 함께 1인당 생활면적을 2.3㎡에서 6.3㎡로 확장하면서 세면실, 화장실, 도서관, 체력단련장 등의 위생·편의시설을 생활관 내부로 통합하고 현대식으로 개선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국방개혁 2.0」과 연계한 연차별 개선계획을 세워 「국방개혁 2.0」에 따른 부대개편 완료와 함께 종료되도록 추진하고 있다.

한편 병영생활관 현대화사업이 제한되거나 해체·이전이 예정된 부대에는 시설 사용기간, 부대 여건을 고려하여 노후시설 보수를 최우선으로 지원하는 등 장병들의 주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도표 7-5] 병영생활관 현대화 전·후 비교

구분		현대화 이전	현대화 이후(통합생활관)
병영생활관 내 공간구분		· (병사)생활실(내무반) · (간부)중대장실, 중대 행정반	· (병사)생활실(내무반), 위생시설, 편의시설 등 · (간부)중대장실, 중대 행정반, 대대참모부 사무실 등
병사공간	생활실(내무반)	· 30~50명 소대단위 침상형 · 1인당 2.3㎡	· 8~10명 분대단위 침대형, 에어컨 설치 등 · 1인당 6.3㎡
	위생시설	· 생활관 외부 별도건물에 위치 · 샤워실, 군화세척실 없음	· 세면실, 화장실, 목욕탕 등을 현대식으로 개선하여 생활관 내부에 배치 · 샤워실, 군화세척실 신설
	편의시설	· 생활관 외부 별도건물에 위치 · 사이버지식정보방, 체력단련장, 탁구장 등은 없음	· 도서관, 사이버지식정보방, 체력단련장 등을 생활관 내부에 신설 또는 확충 · 생활관 내부에 매점을 배치
간부공간	행정, 작전·훈련시설	· 중대장실, 중대행정반만 생활관 내 위치 · 대대행정시설은 별도건물로 생활관 외부에 위치	· 지휘관실, 참모부 사무실, 지휘통제실, 통신실, 회의실 등 통합생활관 내부에 배치

피복·개인장구류의 품질개선 국방부는 장병의 전투임무수행 능력을 보장하고 병영생활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피복·장구류의 품질개선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먼저 전투 피복류와 관련하여, 궤도차량승무원의 생존성 보장과 착용편의성 개선을 위해 난연기능을 포함하여 투피스 형태로 개선된 궤도차량승무원복 2만

〈전투 피복류 품질개선/신규 보급〉



궤도차량 승무원복



해군 난연 함상복



컴뱃셔츠



전투용 안경

〈생활밀착형 피복류/장구류 품질 개선〉



트레일러 러닝화



패딩형 동계점퍼



운동모



수통

2,000여 벌을 2019년에 전체 승무원에게 보급하였다. 또한 혹서기 전투임무 여건 보장을 위해 컴뱃셔츠와 베레모를 대체하는 챙 있는 전투모(육군)를 2020년부터 신규 보급하고, 전투용 안경은 전 장병에게 확대보급할 예정이다.

한편, 생활밀착형 피복류와 관련하여 2019년 패딩형 동계점퍼를 최전방 부대 병사들에게 우선 지급하였고, 2020년 입소인원 전체로 확대 보급하였다. 또한 운동화 및 운동모 등의 품질을 개선하였고, 장병의 선호도를 고려하여 기능성 런닝과 드로어즈 팬티를 확대 보급하였다. 아울러 세척이 용이하고 보온보냉 기능이 강화된 수통과 충전재를 개선한 침낭 등 다양한 생활밀착형 보급품을 보급할 계획이다.

개인장구류는 대대급 전투력 발휘여건 보장을 위해 2015년까지 부대단위로 방탄복, 방탄헬멧, 개인천막, 전투배낭, 전투조끼 등을 패키지화하여 전 GOP사단(전투부대)까지 보급하였으며, 2022년까지 전 장병에게 보급할 예정이다. 그간 단품 위주의 개발 및 개선으로 인한 품목 간 기능 중첩을 최소화하고, 겹쳐 입더라도 보온성 및 활동성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도록 피복 레이어링 체계[6]를 연구하고 있다.

향후에도 미래 전장환경에 부합하고 장병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피복 및 개인장구류의 연구개발과 품질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개선된 피복 및 개인장구류를 조기에 보급하여 군의 전투력을 강화할 것이다.

6) 레이어링(Layering)은 '겹침'의 의미로 '여러 층의 옷을 입는 것'을 말하며, 레이어링 체계는 기상(기온, 바람, 우천), 신체조건(땀, 호흡) 등으로 인한 인간의 열손실을 차단하고, 쾌적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능성 의류 착용체계를 의미

건강하고 안전한 군 급식

우리 군은 장병의 건강과 전투력을 유지하기 위해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균형된 급식을 제공하고 있다. 장병들은 교육훈련 등으로 활동량과 체력소모가 많아 일반인 권장 열량 기준인 2,600㎉보다 높은 3,000㎉[7]를 적용한 식단을 편성하고 있으며, 신세대 장병의 선호를 반영한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장병 기본급식비[8]를 지속적으로 인상하고 있다.

[도표 7-6] 1인 1일 기본급식비 증가율

2019년 12월 기준, 단위 : 원, %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단가	7,190	7,334	7,481	7,855	8,012	8,493
증가율	5.0	2.0	2.0	5.0	2.0	6.0

매년 장병 급식만족도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식단에 반영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돼지고기, 삼계탕, 오리고기, 육우갈비 등 장병들의 선호도가 높은 품목의 급식량을 증가시켰다. 또한 시식회 또는 시험급식을 통해 바다장어, 블루베리, 샤인머스켓 등 20여 개 품목을 신규급식품목[9]으로 채택하여 장병들에게 다양한 음식을 제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19년에는 장병들의 만족도가 높은 '급식혁신 사업'[10]을 확대하여 브런치는 대상범위를 2개 부대에서 전 부대로 확대하였고, 병사식당 외 급식(푸드트럭, 외식 등)은 시행횟수를 연 2회에서 4회로 늘렸으며, 2020년에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경우 인센티브로 급식혁신 사업을 추가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급식의 맛을 개선하기 위하여 민간조리원을 소규모 취사장까지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전투근무지원 분야의 민간 개방 및 일자리 창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도표 7-7] 민간조리원 운영 현황

단위 : 명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총원	1,547	1,586	1,721	1,767	1,841	1,903	1,982	1,987
증원	74	39	135	46	74	62	79	5
운영기준 (식수인원)	140명 이상	130명 이상	120명 이상	110명 이상	100명 이상	90명 이상	80명 이상	

군 급식 업그레이드 프로젝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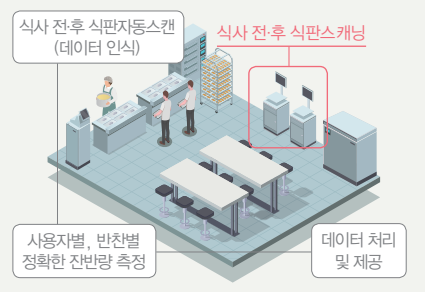
어머니 장병 급식·피복 모니터링단

7) 장병 영양섭취기준은 3,100kcal였으나 한국국방연구원 연구를 통해 장병 체위, 군 생활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3,000kcal로 재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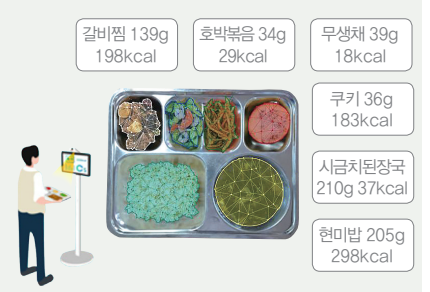
8) 주식비, 부식비, 후식비를 포함하는 순수 식자재비

9) 소양념갈비찜, 냉동볶음밥(잡채, 통새우), 소불고기 덮밥소스, 찹쌀탕수육, 치킨텐더, 라면밥류 6종(증식류), 깐밤, 샤인머스켓, 블루베리, 벌꿀, 우유(부식용), 바다장어, 우렁이, 꼬막, 가리비, 송어, 양미리, 북어머리, 까나리액젓, 천연해물팩 등

10) 브런치 제공, 병사식당 외 급식(푸드트럭, 외식 등), 복수·자율 메뉴 제공 등 부대별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



급식자동측정시스템 체계



급식 자동측정스캐너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인공지능, 3D 스캐너 등을 활용한 '급식자동측정시스템'을 최초로 도입해 1개 부대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였다. 쌀, 김치류, 오징어채 등 9개 품목의 장병 실제 섭취량과 잔반량 등을 측정하고, 데이터에 기반하여 품목별 기준량을 재설정하였다. 이를 통해 식자재의 효율적인 이용과 급식만족도 향상에 기여하였으며, 추후 사업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특정 음식에 알레르기가 있는 장병의 안전을 위해 2015년부터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11]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 채식주의·종교 등으로 일부 품목 급식이 제한되는 장병들에게 대체품목을 제공[12]하고 있다.

한편 2014년부터 군납 식품 제조공장에 대한 합동위생점검 현장을 참관하고 장병들의 급식실태를 확인하는 '어머니 모니터링단'을 운용하여 군 급식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어머니 모니터링단 급식현장 및 군 급식납품 업체 방문

군 급식은 많은 인원이 동시에 취식하므로 식자재 계약부터 급식까지 단계별 안전과 위생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업체를 우대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함께 군납업체를 대상으로 연 2회 위생점검 및 하절기 불시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점검 시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시정조치·과태료·영업정지 등의 관련 법상의 처벌과 함께 차년도 계약 시 감점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11) 표시대상: 난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

12) 2020년 급식방침 : "채식을 요구하는 장병, 특정종교 또는 식품 알레르기로 인한 식사제한 장병 등에 대해서는 밥과 김, 야채, 과일, (연)두부 등 가용품목 중 먹을 수 있는 대체품목을 부대 급식여건을 고려하여 매 끼니 제공하며, 채식병사에게는 우유 대신 두유를 지급할 수 있다."


전라권 급식유통센터
(장성, 2012년)


충청권 급식유통센터
(대전, 2016년)


경상권 급식유통센터
(대구, 2017년)


경기권 급식유통센터
(별내, 2018년)


강원권 급식유통센터
(신남, 2020년)

그리고 식재료의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현대화된 장비를 갖춘 군 급식유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 확대하여 급식안전과 위생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외에도 군 급식 발전을 위해 2019년 국방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장병이 선호하는 양질의 농·축·수산물 소비를 확대하고, 조리병 조리특강, 군인요리대회 등을 실시하여 군 조리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향후에도 급식의 질과 맛 향상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2. 군 복무 중 자기개발 확대

학력별 맞춤형 학습지원 및 자격증 취득 국방부는 복무 중인 장병들에게 학력별 맞춤형 학습기회 제공 및 자격취득 지원 등 다양한 자기개발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맞춤형 학습지원으로 대학 재학 중 입대 인원에게는 '대학 원격강좌'와 '군 복무경험 학점인정'을 지원하고 있다. 이 중 대학 원격강좌는 본인이 다니던 대학의 온라인 강좌를 수강해 학점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2020년 기준 서울대 등 161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으며, 수강 여건 보장을 위해 2019년부터 수강료의 50%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군 복무경험 학점인정은 장병들이 군 복무 중 교육·훈련을 통해 축적하는 교육적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받는 제도이다. 2019년 경인교대 등 11개 대학에서 최초 시행 이후 현재는 서울대 등 35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다. 고교 졸업 인원에게는 독학사 및 e-MU[13] 대학과 연계한 (전문)학사학위 취득을 지원하고 있으며, 고졸 미만 인원에게는 학력인정자격(검정고시 합격)을 취득하도록 학습교재비 및 1:1 학습도우미 등을 지원하고 있다.

복무 중 국가공인 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정보처리산업기사 등 81개 종목에 대해 연 2회 정기검정을, 지게차와 굴삭기운전기능사에 대해서는 상시검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 매년 1만 8천여 명의 장병들이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고 있다.

13)
- 독학사 : 독학자에게 학사학위 취득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국가가 4단계(교양→ 전공기초→ 전공심화→ 종합시험) 인정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제도
- e-MU(electronic-Military University) : 군특성화고 졸업자 대상으로 상병~전문하사 기간 중 군 협약대학(6개)에서 온·오프라인 교육으로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도록 하는 제도

[도표 7-8] 연도별 맞춤형 학습지원 및 국가기술자격 취득 현황

2020년 12월 기준, 단위 : 개, 명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대학 원격강좌 개설대학 수	134	141	145	154	161
군 복무경험 학점인정 참여대학 수	-	-	-	17	35
고졸학력인정(검정고시) 인원	1,838	492	258	117	89
국가기술자격 취득 장병	20,653	19,436	19,530	17,920	5,690

* 코로나19로 2020년 후반기 국가기술자격 취득 실기시험 미실시

병 자기개발 비용 지원 국방부는 장병들의 자기개발 여건 보장을 위해 자기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병 자기개발 비용 지원 제도[14]를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장병들은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료, 학습교재비 구입 등에 지출한 비용을 연간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자기개발 여건 보장을 위해 관련 예산을 꾸준히 확대할 계획이다.

3. 직업군인 주거지원제도 발전

직업군인의 안정적인 주거여건 보장은 군의 사기와 임무 수행 역량 제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군인복지기본법」에 따라 군 관사와 간부 숙소를 제공하고 전·월세 등 민간주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직업군인의 자가 보유율을 높이기 위해 민간주택을 우선·특별 공급하는 등 다양한 주거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2020년 4월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실 소속으로 군주거정책과를 신설함으로써 군 주거업무를 좀 더 종합적·체계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앞으로도 국방부는 국가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열악한 직업군인들의 상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주거의 만족도를 높임으로써 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맞춤형 주거지원 수요자인 직업군인의 요구를 고려한 주거지원을 위해 2018년 12월 수요자와 부대의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주거지원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노후한 관사를 개선하는 한편 초급간부의 안정적 복무여건 보장을 위해 간부숙소를 집중 개선하고 있다. 또한, 2020년 3월에는 전국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관사 및 간부숙소의 소요 기준을 현실에 맞도록 개선

14) 병 자기개발 비용 지원 제도는 2018년 시범사업(예산 1억, 개인별 연 5만 원, 본인 부담 50%)으로 시작하여 2019년에는 20억(개인별 연 5만 원, 본인 부담 50%), 2020년에는 80억 (개인별 연 10만 원, 본인부담 20%)으로 예산 확대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별 특성에 맞는 주거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직업군인의 자가보유율 제고를 위해 장기복무군인 청약제도 개선, 무주택 군인 주택공급사업을 위한 택지공급 활성화 등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며, 군인 특별공급 제도도 실수요자와 주택공급이 더 효율적으로 연계되도록 개선하고 있다.

주택 공급방식 다변화 민간주택을 활용한 다양한 형태로 공급방식을 전환하여 양질의 주거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과거 군 주거시설은 건립, 매입, 민간투자사업(BTL) 등 직접공급에 의한 방식이 주를 이루었지만, 이러한 방식은 막대한 재원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적절한 유지보수가 수반되지 않으면 급속한 노후화로 이어질 수 있다. 국방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세지원액을 현실화[15]하고 2019년 11월에는 월세 지원제도를 신설하는 등 민간주택을 활용한 주거시설 공급을 통해 수요자의 주거선택권을 확대하였다. 또한 수요자인 군인이 전·월세 지원제도를 활용하면서 경험하는 임차물건 확보,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담, 전세보증금 회수의 불확실성 등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관리운영의 전문성 제고 주거시설의 품질관리와 장기 활용을 위해 관리·운영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있다. 군 주거시설이 민간주택에 비해 빠르게 노후화되는 것은 군인·군무원 등 비전문가에 의해 부대별로 직접 관리하는 비효율적인 시설관리 방식에 기인한 바가 크다. 국방부는 주거시설의 품질 유지와 장기 활용을 위해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시설관리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민간위탁을 통한 권역별 통합관리 방식을 추진 중에 있다. 이를 위해 2018년 1월부터 1군단 지역 주거시설에 대해 시범적으로 위탁관리를 실시하였고, 2019년까지 약 3만 호를 위탁관리로 전환하였으며 점진적으로 그 대상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내실 있는 시설 유지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18년 10월 「군 주거시설 보수 책임기준」을 수립하여 그동안 불명확했던 국가와 개인의 보수책임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였다. 또한, 유지·보수 예산 현실화를 통해 주거시설을 양호한 상태로 관리함으로써 군인 및 군가족이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15) 전세대부 지원액 20% 상향
: 평균 1.38억(2018년)
→ 1.64억(2019년)

제3절

군 의료시스템 개편

우리 군은 장병과 국민 모두에게 신뢰받는 군 의료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필수분야를 중심으로 군 의료 역량을 강화하고 있는 한편, 의료서비스 공급에 있어 민간 의료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1. 장병 중심의 군 의료체계 개선

군 의무시설 현대화 국방부는 장병들이 부상 시 제일 먼저 진료를 받게 되는 사단급 이하의 의무대 및 전방 군단 지원병원 중 노후한 시설을 개선하여 장병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사단급 의무대 총 75동 중 노후한 의무대 24동은 2025년 말까지 순차적으로 개선하되, 해체·이전예정부대의 노후한 의무시설 7동에 대해서는 2020년에 시설 개선을 완료하였다. 또한 전방 군단 지원병원 중 홍천·강릉·양주·춘천 국군병원은 육군 부대개편 계획과 연계해 2024년까지 순차적으로 병원시설을 현대화할 예정이다.

군 의료기관 기능조정 및 특성화 한정된 군 의료역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장병들이 더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군 의료기관별 기능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 특성화하도록 조정하고 있다.

16개 군 병원은 수술집중, 정신건강, 외래·요양·검진 등 분야별로 특성화하여, 2020년 말까지 군 병원별 진료수준·진료과목에 따라 장비 및 인력을 단계적으로 재배치하였다. 국군부산병원은 2020년 10월에 해체하였고, 국군수도병원에는 총상·폭발창 등 군 외상환자에 대한 자체 진료 종결능력 확보를 위해 국군외상센터를 개원할 예정이다.

사단 의무대는 1차 진료 기능을 보강하기 위한 사단급 이하 의무부대 기능조정 시범사업을 2019년에 2개 사단, 2020년에 4개 사단 대상으로 실시 중이다. 또한, 노후 영상·검사장비 교체 및 성능개량을 실시하고, 2022년까지 단기군의관을 약

3~5명 추가 배치하는 등 외래진료 기능을 강화하여 '의원'급으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추진할 예정이다.

군 병원 이용 환경개선 다수의 장병들이 외진(外診) 버스를 이용해 군 병원을 방문함에 따라 특정 시간대에 환자가 집중되고, 장병 가족들이 군 병원 출입·방문 시 절차가 복잡하였다. 국방부는 이를 개선하여 군 병원 이용 편의성을 증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먼저 장병들이 이용하는 외진 버스를 보강하고 의료진 근무시간을 장병의 방문시간에 맞춰 조정하며, 수요가 많은 진료과목의 진료실을 추가 개설하여 장병들이 외진 시 만족할 수 있는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고 있다. 특히 전방에 있는 장병들의 의료접근성을 위해 전방 군단 지원병원의 외진 버스를 현재보다 2배 이상 증차하여 권역별 외진 체계를 재정립하였고, 2021년에는 교통환경이 열악한 전방 일부 지역의 사단 의무대에서 병사들이 전담하던 외진버스 운행을 민간에 위탁하여 추가 운행함으로써 군 의료기관 이용여건을 개선할 예정이다.

한편, 국군수도병원의 경우 출입통제가 필요한 군사보호구역을 제외한 병원시설에 대해서는 장병 가족들의 출입을 민간병원과 동일하게 완전 자유화하여 영문을 개방하고 안내 요원을 배치하였으며, 향후 전 군 병원 대상으로 확대 적용을 검토할 예정이다.

군 응급후송 역량 강화 응급처치를 위한 의료인력이 없는 전방, 격오지 등의 부대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신속한 응급후송이 필요하다. 따라서 국방부는 전군 응급후송체계 구축을 통해 환자후송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고자 한다.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하기 위해 상비사단 위주 중대급 부대에 '응급구조사'를 단계적으로 보강하고 있다. 그리고 전방 군단 지원병원의 응급진료 기능을 강화하고 중증환자는 국군수도병원까지 1시간 30분 내로 후송할 수 있도록 항공후송을 적극 실시하고 있다. 또한, 야간 및 악천후 운행이 가능한 의무후송 전용헬기 8대를 2020년에 도입하였으며, 환자 발생부터 병원 후송까지 체계적인 응급의료를 지원하기 위해 국군의무사 의료종합상황센터[16]의 기능과 인력을 보강하였다. 향후에는 항공 및 육로를 망라한 전군 응급후송체계를 통합·관제할 수 있는 '의료종합상황센터 통합 관제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이다.

16) 군 응급환자 발생 시 컨트롤타워로서 119상황센터와 유사한 역할을 담당하는 국군의무사령부의 부서이며, 24시간 365일 군 응급환자 처치·후송·치료에 대한 One-Stop 지원 임무를 수행

감염병 대응 및 질병 예방 역량 강화

군 내에서 감염병 발생 시 집단생활의 특수성으로 인해 다수의 환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전투준비태세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감염병은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비군사적 위협으로 이에 대한 군의 주도적인 대응과 준비가 필요하다.

국방부는 군 내외에서 지속 발생하고, 중증도가 높아 합병증 발생 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질병(신증후군출혈열 등)에 대해 예방접종 대상을 확대하고 있으며, 국군의무사령부의 예방의무 조직 및 기능을 보강하여 전군에서 발생하는 감염병에 대한 모니터링 및 대응능력을 강화하였다. 또한 국가 차원의 코로나19 대응 시 군의 인력과 자원을 투입하여 선별진료 및 검체 채취, 확진자 진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국군 대구·대전·고양병원을 국가감염병전담병원으로 전환하고, 이동진료소 및 이동원격진료장비 등을 지원하였다.

향후, 군의 감염병 대응 능력 제고를 위해 감염병 대응이 가능한 군 병원시설 개선, 의무부대별 방역 물자 및 장비 확충, 재난 의료 교육 강화 등과 함께 국군의무사 중심의 의무 대응체계 구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신임 간호장교 국군대구병원 의료지원 (2020년 3월)

2. 민·관 협력을 통한 의료접근성 및 전문성 강화

민간병원 접근성 강화

기존에 장병들이 민간병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군 병원 군의관의 소견과 부대장의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국방부는 민간의료의 발전으로 인한 민간병원 선호도 증가를 고려하여 민간병원 진료 승인절차를 간소화하였다.

2018년부터 2019년 6월까지 2차에 걸친 시범사업 후 2019년 12월 「현역병 등의 건강보험 요양에 관한 훈령」을 개정함으로써 전군에서 지휘관 승인만으로도 민간병원 진료 외출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군 병원의 진료를 대신하여 개인의 희망에 따라 민간병원 이용 시 병사 개인이 부담하던 진료비를 국가가 지원하기 위해 병사 군 단체보험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제도 신설을 위해 국방부는 2020년에 「병역법」 및 「군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근거 법령을 마련하였으며, 2021년부터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확보하였다.

향후, 국방부는 민간병원 진료 접근성을 높여 병사의 진료 선택권을 강화하고, 군 복무 중 질병이 발생하거나 부상을 입은 병사에게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고 의료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민간 의료인력 확보 및 군 의료인력 전문성 향상

국방부는 군 의료기관 내 의료 관련 자격이 없는 의무병의 의료보조행위를 해소하기 위해 군 병원 및 사단급 의무대에 무자격 의무병을 대체할 약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등의 민간의료인력 886명을 군무원으로 채용하였다. 또한 단기 군의관 위주의 인력배치 및 간호인력 순환보직으로 의료인력의 전문성과 숙련도가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군수도병원 및 수술집중병원에서는 임상 직위 근무 장기군의관과 주특기 직위 간호장교가 장기간 보직할 수 있도록 「국방인사관리훈령」을 개정하였다.

향후, 공공의료대학과 연계한 장기군의관 확보방안과 군의관 장기복무 지원확대를 위한 예산 확보 및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고, 부족 간호인력 확보를 위해 야간수당 지급 등의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국군외상센터 설립·운영

우리 군은 선택과 집중에 따라 군에서만 주로 발생하는 총상·폭발창 등 외상에 대한 자체 진료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군외상센터' 개원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보건복지부의 권역외상센터 지정 기준을 충족하도록 시설과 장비를 확충하였으며, 분당 서울대병원과의 협력운영을 통해 높은 수준의 외상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중에 있다.

이와 함께 배후병원인 국군수도병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가를 통한 '외상센터 및 배후병원 발전전략 수립 컨설팅'을 진행하였으며, 향후에도 배후병원의 능력 제고를 위한 민간협력 등을 지속할 예정이다.

범정부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 및 소방과의 협력 강화

군 내 응급환자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응급환자 후송자산 활용 및 전문인력 양성 관련 범정부 차원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먼저 범부처 의무헬기 공동활용체계에 참여하여 군 응급환자와 민간인의 항공후

송 여건을 향상시켰다. 또한 119 구급대의 신속한 군 부대 출입을 위해 「국방보안업무훈령」을 개정하였으며 소방학교 구급 전문교육에 군 의료인력이 참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다. 향후에도 군 응급구조사와 119구급 요원 간의 교환 근무를 도입해 군 응급구조사의 임상경험 향상을 도모하고, 소방방재센터와 의무사 의료종합상황센터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등 소방과의 협력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제4절

장병 인권보호 강화

국방부는 국민과 함께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군대를 만들기 위해 병영 내 악성사고, 인권침해 행위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인권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장병의 헌법상 권리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2019년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였다. 또한 장병들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군 항소심을 민간에 이양하고 병 징계제도를 개선하는 등 군 사법제도 개혁을 실시하고 있다.

1. 장병 인권보호 제도 개선

국방 인권정책 종합계획 수립 국방부는 인권 친화적인 병영문화 정착과 이를 통한 무형전력 극대화를 목표로 「2019~2023 국방 인권정책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국방 인권정책 종합계획」은 국방 인권정책의 중·장기 기본방향과 정책과제를 정리한 지침서로 5개 대과제와 군 인권보호관 설치, 장병 국선변호사 지원확대, 일과 후 병 휴대전화 사용 허용 등 35개의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군 인권보호관 설치 장병의 인권침해 예방과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해 군 인권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국가인권위원회 내에 군 인권보호관 신설에 적극 협력하고 군 인권보호관의 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이다. 군 인권보호관의 설치 등을 규정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조속한 개정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입법 과정에 적극 협력할 것이다. 또한 장병 인권보호 기능 강화를 위해 부대방문·조사권 등 군 인권보호관의 권한을 보장하고 군 지휘권과 군사보안에 지장이 없도록 군 인권보호관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이다.

군 인권교육 강화 군 인권교육의 목표는 군인으로 하여금 '군복 입은 민주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인식하게 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병영문화를 확산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국방부·각 군·국가인권위원회 간 유기적 협력 아래 체계적인 인권교육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병 복무주기와

부대 실정을 고려한 맞춤형 인권교육, 지휘관의 인권의식 함양을 위한 부대별 외부 인권전문가 초빙 교육, 의료·수사·교정·법무·훈육 등 인권 관련 업무종사자 및 인권교관 대상 역량강화 교육, 사이버교육 활성화 및 장병 참여형 군 인권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등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와 협업하여 부대별 장병 인권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교안을 개발하여 보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군인으로서의 인격과 권리가 존중되는 병영문화를 만들 것이다.

기타 인권보호 제도 개선

장병 인권의식 변화를 반영하여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외부와의 협력을 활성화하여 현행 군 인권보호 제도를 내실 있게 개선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인권 관련 법령·행정규칙 개정 시에만 실시하던 인권영향평가를 정책·제도에 대해서도 실시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고, 군 인권지키미시스템[17] 운영을 통해 장병들이 손쉽게 인권상담 및 진정조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인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국방 인권모니터단을 운영하고, 장병 인권실태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국방부·각 군 본부의 군인권자문위원회, 사단급 부대의 군인권자문변호사 제도 등의 외부전문가 자문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권정책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방부는 사회 인권의식 변화에 맞추어 장병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나갈 것이다.

군 의문사 진상규명 및 근원적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국방부는 군 복무 중 사망자의 유가족이 사망원인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고에 대해 근원적인 해결책을 마련함으로써 유가족의 의혹을 해소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특히, 2019년 4월 11일부터 군 사망사고 유가족을 위해 국선변호사 제도를 운영하여 사망사고 처리 과정에서 유가족이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2020년 5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을 개정하여 그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다.

또한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2018년 9월 대통령 소속으로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 위원회'를 발족하여 군 사망사고 유가족이 제기하는 의혹에 대해 군 외부기관이 객관적으로 조사를 진행하는 등 관련자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방부는 향후에도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군 복무 중 사망자에 대한 국가 책임과 예우를 다하여 국민의 군에 대한 신뢰회복과 장병 인권증진에 기여할 것이다.

17) 장병들이 인권상담 및 진정조사를 신청할 수 있는 국방통합인권시스템으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등 발생 시 상담·진정을 요청하고 이에 대한 진행상황과 결과를 시스템으로 확인

* 상담 및 진정 신청 방법 :
  인터넷 및 인트라넷 국방부 홈페이지를 통해 링크된 '군인권지키미시스템' 이용
  • 인터넷 : 국방부 홈페이지→주요정보 바로가기→ 군인권지키미→ '인권상담 및 진정' 클릭
  • 인트라넷 : 국방허브→ 상담/제안→ 군인권지키미→ '인권상담 및 진정' 클릭

2.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의 「병역법」 제5조에 대한 헌법 불합치[18] 결정에 따라 2018년 7월 9일 국방부, 병무청, 법무부 3개 기관은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추진하였다.

국방부는 2018년 12월 28일 '병역의 의무'와 '양심의 자유'가 조화되는 합리적인 대체복무제 마련을 위해 교정시설에서 36개월간 합숙하는 방안을 담은 대체복무 법률 제정안을 2019년 4월 국회에 제출하였고, 같은 해 12월 31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대체역법)이 공포되어 2020년 1월 1일부로 시행되었다.

같은 해 6월 「대체역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제·개정 및 대체역 심사위원회 구성을 완료한 후, 7월 15일 대체역 심사위원회 심사를 시작하여 11월까지 730명의 편입을 결정하였다. 2020년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인원은 106명이며, 현재 대전 교도소 등에 배치되어 복무 중에 있다.

3. 군 사법제도 개혁

독립성과 공정성이 보장되는 군 사법 시스템 구축

국방부는 장병들의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와 인권을 보장하고 군사법원과 군검찰의 독립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군 사법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8년 2월 12일 군 사법개혁 과제를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장병들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군 항소심을 민간으로 이양하기로 하였다. 1심 군사법원은 국방부 직속으로 5개 지역 군사법원으로 설치하고, 지역 군사법원장은 민간 법조인으로 임명하도록 하였다. 또한, 그동안 군사법원의 근간이 되어온 관할관 확인제도[19] 및 심판관 제도[20]를 폐지하기로 하였다. 군판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별도의 군판사인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진급추천, 재임용 심사 등을 실시하고, 군판사가 다른 법무 직역(법무참모, 군검사 등)으로 보직이 순환되는 것을 금지하기로 하였다. 국방부는 이러한 군 사법개혁 방안이 법제화되도록 「군사법원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18) "현행 병역의 종류는 모두 군사훈련을 전제로 하는 등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양심을 침해하므로, 「대한민국헌법」 제19조에 따른 양심의 자유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 제도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제5조제1항 등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며 2019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적용한다."

19) 관할관은 군사법원이 설치된 부대의 장인 지휘관(「군사법원법」 제7조)으로 군사법원의 판결을 확인하고, 피고인이 작전, 교육 및 훈련 등 업무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범죄에 한정하여 선고된 형의 3분의 1 미만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는 권한(「군사법원법」 제379조)인 관할관 확인조치권을 보유

20) 군사재판의 특유한 제도로서 법관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일반 장교를 심판관으로 임명하여 군판사와 함께 재판관으로서 형사재판에 참여하게 하는 제도

[도표 7-9] 군 사법개혁의 목표와 주요과제

군 사법개혁을 통한 군 장병의 공정한 재판 및 인권보장

군사법원 제도 개선		수사제도 개선	
조직	재판	군검찰	군사법경찰 등
· 고등군사법원을 민간법원으로 이관 · 국방부 직속 군사법원 설치 · 지역 군사법원장 민간화	· 확인조치권 폐지 · 군판사 순환보직 금지 · 군판사 신분보장 · 심판관 제도 폐지 · 순회 재판 실시 · 장병참여재판제 시행	· 각 군 검찰단 설치 · 구속영장 청구 승인권 폐지 · 군검사의 이의제기권 부여 · 군검찰에 대한 구체적 지휘권 제한	· 수사/작전 군사경찰 분리 · 민간경찰 인권강화 방안 도입 · 군사법경찰의 직무권한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 병사의 군사법경찰리 임명 금지 · 군 범죄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도입

투명하고 합리적인 수사제도 마련

국방부는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강화함으로써 투명하고 합리적인 수사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먼저 군검찰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사단급 이상에 설치되어 있는 보통검찰부를 폐지하여 각 군 본부 소속으로 검찰단을 창설하기로 하였고, 지휘관의 구속영장 청구승인권[21]도 폐지하기로 했다. 또한 군사법경찰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군사경찰을 수사와 작전으로 조직·기능을 분리하고, 병사에 대한 군사법경찰리[22] 임명 금지 등을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와 같은 수사제도 개선 내용 또한 「군사법원법」 개정안에 반영하였다. 한편, 군사경찰의 행정경찰활동에 대한 법률적 근거인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020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으로써 경찰행정과 같은 권력적 작용에 대한 법적 통제의 토대를 구축하였다.

수사절차에서 인권보장 강화

국방부는 군 수사절차에서도 인권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09년부터 「군 수사절차상 인권보호 등에 관한 훈령」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2018년 7월부터는 피의자 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면담에도 변호인 참여를 보장하여 피의자의 방어권을 강화하였고, 체포·구속·압수·수색 과정에서 피의자의 지인들이 받을 수 있는 정신적 충격을 최소화하도록 하였다. 또한 이전에는 명확하지 않았던 피의자의 휴식권 기준을 조사 시작 후 2시간마다 10분 이상의 휴식을 부여하도록 구체화하였고, 아울러 군 범죄 피해자가 법률적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국선변

21) 군검사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해당 군검찰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의 승인이 필요(「군사법원법」 제238조)

22) 군사법경찰리는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의 명령에 따라 수사를 보조하는 수사보조기관(「군사법원법」 제46조)으로 군사경찰인 병, 군사안보지원부대에 소속되어 보안업무에 종사하는 병이 있음(「군사법원법」 제46조)

호사를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다.

2020년에는 훈령을 전부 개정하여 피의자 압박을 목적으로 하는 별건 수사[23]와 불필요한 수사 지연을 금지하고, 12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조사 또는 21시부터 시작되는 심야 조사를 제한하였다. 한편, 각종 조사 절차에서 피의자뿐만 아니라 피내사자, 피해자 및 참고인도 변호인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고, 특별한 제한 없이 조사받은 내용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병 징계제도 개선

국방부는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24]에 위배된다는 위헌성의 시비를 해소하고 장병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병 징계제도를 개선하였다. 「군인사법」 및 「병역법」을 개정함으로써 병에 대한 징계의 종류 중 영창제도를 군기교육으로 대체하고, 감봉 및 견책 제도를 신설하였다. 특히 군기교육의 경우, 영창제도의 징벌적 효과가 유지될 수 있도록 그 처분일수가 복무기간에 미산입된다.

군기교육은 영창제도와는 달리 군 공동체 특성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한 준법·인권교육 중심의 인권 친화적인 교육으로 사(여)단급 이상 제대에서 실시되어 장병의 인권을 신장하면서 군 기강을 확립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표 7-10] 개선된 병 징계제도

개선 전		개선 후	비고
강등		강등	유지
영창		군기교육	영창 폐지/신설
		감봉	신설
휴가제한		휴가단축	유지(용어수정)
근신		근신	유지
		견책	신설

23) 수사기관이 특정의 범죄혐의를 밝혀내는 과정에서 이와 관련 없는 사건을 조사하여 원래 목적한 범죄혐의를 밝혀내는 수사방식

24) 법원 또는 법관이 발부한 적법한 영장에 의하지 않으면 형사절차상의 강제처분(압수·수색, 체포·구속)을 할 수 없다는 원칙(「헌법 제12조 제3항」)

제5절

제대군인 지원 및 참전용사 예우 강화

우리 군은 명예로운 군 복무 후 전역하는 모든 장병의 원활한 사회진출을 위해 복무 중 진로설정 및 취업 능력 배양, 군 복무가 좋은 일자리로 연결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적합한 군 내외 일자리 확대 등 다양한 취업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노고에 대한 예우를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 전역예정장병 취업지원 강화

의무복무장병에 대한 진로 및 취업지원 강화

국방부는 의무복무장병을 포함한 청년 장병 취·창업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입대–복무–전역 후까지의 군 복무 전 과정에서 단계별로 지원하는 '청년 장병 SOS프로젝트'[25] 사업을 2018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1단계는 교육과 상담을 통해 청년 장병들의 진로설정을 지원하고, 취업역량을 갖춘 장병은 곧바로 취업이 되게 하는 '진로도움교육'과 '1:1 진로 및 취업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진로도움 교육은 장병들의 편의를 위하여 민간 전문상담사가 부대로 직접 찾아가서 실시하며, 장병들은 '진로지도반'과 '취업역량강화반'으로 구분되어 개인의 희망에 따라 선택하여 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 교육은 진로 탐색 및 설계, 정부의 청년고용정책 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공통교육과 반별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된다. '1:1 진로 및 취업상담'은 전역 후의 진로와 취업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민간 전문상담사가 직접 부대로 찾아가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는 것으로, 취업역량을 갖춘 장병이 취업을 희망할 경우 희망직종에 맞는 일자리에 연결시켜 주고 있다.

2단계는 취·창업 역량이 부족한 장병들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과 협업하여 희망 교육 분야별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은 부대 외부 연수원에서 실시되어 현재 연 5,000여 명이 교육에 참석하고 있으며, 교육인원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좋은 일자리가 많은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희망하는 직종의 현장을 미리 체험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현장체험' 프로그램 등을 시행하고 있다.



2019 전역예정장병 취업박람회

25) 청년 장병들에 대한 취·창업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의무복무 장병들의 취·창업 역량을 강화하여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으로 연결시켜 주는 중소벤처기업부 및 고용노동부와의 협업사업 (SOS : Soldiers on SMEs & Startups, "청년 장병을 중소벤처기업으로")

3단계는 정부 유관기관 및 제대군인 우대채용 기업과 협력하여 1, 2단계를 거친 청년 장병을 대상으로 맞춤형 취업과정인 '취업사관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능력을 해당 기업에서 직접 교육 후 채용절차를 거쳐 취업하게 하는 '기업맞춤형 취업과정'과 '찾아가는 채용설명회'를 운영하여 더 많은 장병이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019년 범정부 창업경진대회 대상 수상

한편, 국방부는 정부의 정책과 연계하여 청년 장병 창업인재육성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다방면의 지원을 단계별로 시행하고 있다.

1단계는 부대별로 창업에 관심 있는 장병들이 '창업동아리'를 결성하여 일과 후 또는 주말·휴무일을 통해 관심 있는 창업 아이템에 대해 연구를 하고 의견을 교환한다. 2단계는 창업 관련 전문상담사가 부대로 찾아가 창업동아리가 연구한 아이템에 대해 전문적인 컨설팅을 지원한다. 3단계는 각 군, 국방부, 범정부 창업경진대회를 각각 개최하여 창업 붐을 조성하고, 우수한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팀들의 창업역량을 한층 강화시킨다. 마지막 단계로는 우수한 아이템을 보유한 팀을 대상으로 중소벤처기업부 등과 협업하여 추가적인 컨설팅, 기술·자금 등을 제공해 실제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러한 창업인재육성 정책은 청년 장병의 잠재적인 창업역량을 개발하고 군 복무를 생산적으로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다.

중·장기복무자에 대한 취업지원

국방부는 5년 이상 복무한 중·장기복무자를 대상으로 전직교육체계 개선, 전직지원기간 확대 등 생애별 맞춤형 전직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2019년부터는 군인의 생애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 장병 스스로 자기 주도적인 군 경력 설계를 할 수 있도록 군 복무설계 교육대상을 기존 대위, 중사에서 소위, 하사까지로 확대하였다.

2020년부터는 전역예정간부가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전직준비를 할 수 있도록 전직 목표별로 '맞춤형 전직 기본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기본교육 이수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추가 심화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2017년부터 중기복무자의 취업지원을 위해 복무연수에 따라 1~3개월의 전직지원기간을 부여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는 전역 2년 전에 진로교육 의무화를 통하여 모든 중기복무자들이 조기에 전직준비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자에게는 복무 중 진로설계 교육과 전역 2년 전부터 진로교육을 지원하고, 10~12개월의 전직지원기간에는 기본교육과 다양한 맞춤형 전문교육을 지원하여 강화된 취업역량으로 전직지원기간 내에 최대한 취업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대군인 일자리 확보

국방부는 정부 일자리 정책과 연계하여 군 내외 취업직위를 발굴하고 전역예정장병의 직무역량과 군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개발함으로써 국방 분야 일자리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먼저 군 내 일자리는 「국방개혁 2.0」에 따라 행정·교육 등 민간인력으로 대체되는 비전투 분야의 직위 등 적합한 직위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확보하고 있다. 군 외 일자리는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정책과 연계하여 경찰·소방·해경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으로 채용 자격요건 완화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해 경찰 항공정비·특공(전술)분야, 소방 구조 분야 등의 일자리를 확보하고 있다.

또한 국방부는 전역예정장병과 구인기업을 현장에서 연결해 취업을 지원하는 '전역예정장병 취업박람회'를 장병들의 요구를 반영해 2019년부터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향후에는 취업시장 변화에 맞추어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취업연결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기업의 전역장병 고용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전역장병 채용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국방부 장관 표창 및 감사장을 수여하고 있으며, 기업 최고경영자 및 인사담당자 초청 간담회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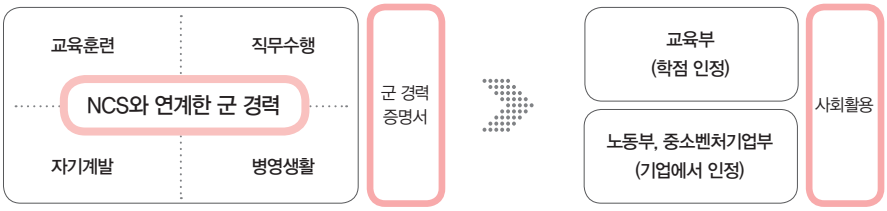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의 군 직무 표준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서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26]을 기반으로 직무능력 중심의 채용이 정착되고 있으나, 군에서 수행하는 직무는 국가직무능력표준의 직무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표준화가 되어있지 않아 장병들의 군 복무 경력 등이 전역 후 사회에서 경력으로 인정받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장병들이 전역 후 사회의 동종 분야에서 복무경력과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군에서 수행하는 직무를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따라 체계화하고, 국가직무능력표준과 연계된 직무경력을 군 경력증명서에 반영하여 해당 경력이 학점과 근무경력으로 학교, 기업 등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2018년부터 육군 2개 부대를 시작으로 각 군의 직무를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맞추어 표준화하고 있으며, 군 경력증명서 개선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등을 포함하여 2022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26)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지식·기술·소양 등의 내용을 국가가 산업부문별, 수준별로 체계화한 것 (NCS :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도표 7-11] 군 경력증명서의 사회연계 방안



2. 군의 특수성이 반영된 연금제도 운용

군인연금제도 의미 및 특성 군인연금은 군인이 상당한 기간을 성실히 복무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본인 및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인은 전투나 위험한 직무·훈련에 참가하는 등 생명을 담보로 임무를 수행하며, 대부분 격오지나 전방 지역에 거주하면서 작전 임무나 비상대기 등 열악한 환경에서 복무하다가 계급(연령)정년으로 인해 자녀 교육 등으로 많은 지출이 생기는 45~56세에 대부분 전역하게 된다.

이러한 군 복무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군인연금은 연금의 기본적인 목적인 노후 소득보장이라는 사회보험적 성격뿐만 아니라 다른 직업에 비해 조기 전역하는 군인의 생활 보장,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인에 대한 국가 보상적 성격을 동시에 띠고 있다.

또한 군인연금은 직업군인들이 전역 후 노후생활에 대한 걱정 없이 군 복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선진국들도 이러한 군인연금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른 공적 연금에 비해 군인연금을 우대하고 있다.

군인연금제도 개선 2019년 12월 「군인연금법」을 개정하여 군인과 이혼한 배우자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실질적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퇴역(상이)연금액을 균등분할하여 지급하는 분할연금 제도를 도입하였다. 또한 국가재정 부담 및 다른 직역연금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선출직 공무원에 취임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되어 일정 소득을 받는 경우에도 퇴역(상이)연금 전액을 지급정지하도록 하였다.

2019년 9월 「군인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외국에 거주하는 군인연금수급권자에 대한 신상관리를 강화하고 연금이 범죄 피의자의 도피자금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였다. 군인연금수급자가 1년 이상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와 동일하게 매년 신상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군 복무 중 발생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해 수사·재판이 진행 중인 자가 도주 등 소재불명이 되어 지명수배·통보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퇴역연금액의 2분의 1을 지급 유보하도록 하였다.

2019년 7월 실효적인 군인연금 수급권 보호와 수급권자의 생계기본권 보장을 위해 채권압류로부터 최저생계비 범위(185만원) 내의 연금 압류를 차단하는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도입하였다.

3. 군 복무에 대한 예우 및 사회적 보상 강화

6·25 전사자 유해발굴[27)] 국방부는 나라를 위해 희생한 전사자들의 넋을 위로하고 유가족들의 오랜 염원을 해소하여 그 명예와 자긍심이 고양될 수 있도록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 사업은 2000년 6·25전쟁 50주년 기념사업 일환으로 육군에서 시작되었으며, 2007년부터 국방부 인사복지실 산하에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하 국유단)'을 창설하여 확대·발전시켜 왔다.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을 통해 2019년까지 총 12,181구의 유해를 발굴하였으며, 53,341명의 유가족으로부터 유전자(이하 DNA) 시료를 확보하였다. 특히 2019년에는 「9·19 군사합의」에 따라 우리 지역 비무장지대에서 유해발굴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비무장지대에서 발굴한 261구를 포함해 총 630구의 유해를 발굴하였다. 이는 최근 5개년 중 가장 많은 발굴 실적이며, 휴전 후 70년간 수습되지 못했던 비무장지대의 유해를 발굴하여 이 중 신원이 확인된 8위(位)의 유해를 유가족 품으로 모셔드림으로써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확보하는 계기가 되었다.


화살머리고지 유해발굴


비무장지대 발굴현장 국무총리 방문

27) 6·25전쟁 당시 전사하였으나, 시신이 수습되지 못한 13만여 구의 유해를 찾아 가족의 품으로 모시는 호국보훈사업

또한, 2019년 국유단 내 발굴인력 및 유가족 탐문인력을 대폭 보강[28]하였으며, 유가족 DNA 시료 채취 활성화를 위해 「6·25 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시료 채취에 참여한 사람과 신원이 확인된 유가족에게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29]할 수 있도록 반영하였다. 그 결과, DNA 시료 채취 실적이 2018년 대비 2배 이상 향상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이외에도 국방부는 '신원확인센터'를 2020년 12월에 완공하였으며, 이를 통해 유해 관리의 효율성과 신원확인의 체계성·과학성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표 7-12] 연도별 유해발굴 현황

2019년 12월 기준, 단위 : 구

구분	계	2000~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발굴유해	12,181	5,599	1,387	1,041	736	913	622	429	448	376	630
아 군·경	10,607	4,705	1,300	989	671	809	561	387	420	362	403

* 유해발굴 누계 : 총 12,181구 / 2019년 비무장지대(화살머리고지) 유해 261구 포함
** 2019년 발굴결과는 최종 감식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도표 7-13] 유가족 DNA 시료 채취 및 6·25 전사자 신원 확인 현황

2019년 12월 기준, 단위 : 건, 명

구분	계	2000~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DNA 시료채취	53,364	13,572	4,252	4,765	4,005	2,645	2,921	4,041	4,072	4,155	8,936
신원확인	139	61	7	11	5	17	8	9	9	4	8

국방부는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 관련 국제적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미국과는 매년 한미 유해발굴 연례회의와 공동감식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연례회의에서는 유해발굴사업에 대한 소개와 참전 미군 유가족과의 대화 등을 통해 한미 간 유



미국 DPAA 국군유해봉환 (2020년 6월)


중국군 유해송환 (2020년 9월)

6·25전쟁 전사자 유가족 DNA 시료 채취

28) 발굴인력은 기존 8개팀에서 12개팀으로, 유가족 탐문인력은 기존 1개팀에서 4개팀으로 증편

29) 시료 제공자에게 1만 원, 유가족으로 판명된 자에게 10만 원, 시료 제공으로 발굴 유해 신원이 확인된 경우 1,0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 (「6·25 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시행령 별표 3)



유해발굴사업 관계기관 협의회 (2019년 10월)



국방부–농협중앙회 업무협약 (2019년 12월)

대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2019년 연례회의에서 합의된 미국 국무부 전쟁포로 및 실종자 확인국(DPAA)[30]에 보관 중인 유해 중 한국군으로 추정되는 유해의 국내 봉환식을 2020년 6월에 거행하였다.

2014년부터는 중국과도 유해발굴사업에 관한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2014년 한중 양국이 국제법과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발굴 유해의 송환에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2014년 437구를 시작으로 2020년 117구까지 총 716구의 중국군 유해가 송환되었다.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은 시간이 지날수록 국토개발 등 주요 격전지의 지형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사망하는 전사자 직계가족이 많아짐에 따라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또한 다수의 유해를 발굴하였지만, DNA 시료의 부족과 유전자 감식의 어려움으로 신원이 확인된 유해는 발굴된 유해의 1.3%에 불과하다.

이와 같이 6·25 전사자 유해발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참여가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국방부는 매년 실시하는 '6·25 전사자 유해발굴 사업 관계기관 협의회'[31]를 통해 각 관계부처에 사업의 중요성을 제기하고 협의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2019년에는 보훈복지의료공단의 전국 6개 보훈병원에서도 유가족 DNA 시료를 채취할 수 있도록 협의하여 국민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확대하였으며, '국방부–농협중앙회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전국 농협은행, 하나로마트 등을 통해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였다.

군인 재해보상법 제정 및 순직자 보상 강화

군인의 부상·질병·장해·사망에 대한 국가의 예우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2019년 12월 「군인 재해보상법」을 제정하여 장애보상금·순직유족연금·사망보상금을 인상하는 등 재해보상 수준을 현실화하였으며, 순직자에 대한 예우와 그 유가족의 권익 보호를 위해 급여 청구시효에 관한 특례를 신설하였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30) 미군 전사자 신원확인 전문기관으로 과거 미국이 참여한 전쟁에서 발생한 실종자/미수습 전사자를 찾기 위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활동하고 있음 (DPAA : Department of Defense POW/MIA Accounting Agency)

31) 2009년부터 「국무총리 훈령 647호」에 따라 매년 행정안전부 등 12개 부처 고위공무원이 참석하여 실시하는 협의체로 위원장은 국방부 차관

첫째, 병사의 일반장애 장애보상금 지급 수준을 인상하고 간부 및 병의 전상과 특수직무공상에 대한 장애보상금을 신설하였다. 2019년 기준으로 병사의 일반장애 장애보상금은 최소 577만 원에서 최대 1,732만 원 수준이었으나, 최소 1,590만 원에서 최대 4,770만 원 수준으로 인상하였다. 또한, 간부와 병사가 적과의 교전 등으로 부상을 입은 전상의 경우는 일반장애 장애보상금의 2.5배, 접적지역 수색·정찰, 대테러 임무수행 등 위험직무를 수행하던 중 부상을 입은 특수직무공상의 경우엔 일반장애 장애보상금의 1.88배를 지급하도록 하여 일반장애와 차등화하였다.

둘째, 사망보상금은 「공무원 재해보상법」과 일치시켰다. 전사(戰死)는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57.7배에서 60배로, 특수직무순직은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4.2배에서 45배로 사망보상금 지급액을 조정하고, 일반순직 사망보상금은 해당 군인의 개인 기준소득월액의 23.4배에서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4배로 조정하였다.

셋째, 순직한 하사 이상 군인의 유족에 대한 생활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순직유족연금의 지급률을 43%로 일원화하고, 유족가산제도를 신설하였다. 종전에는 20년 미만 복무한 후 순직한 경우는 군인의 기준소득월액의 35.75%, 20년 이상 복무 후 순직한 경우는 기준소득월액의 42.25%의 금액으로 순직유족연금을 차등지급 하였으나, 「군인 재해보상법」 제정으로 지급률을 복무기간과 관계없이 43%로 상향하여 일원화하였다. 또한, 유족 1명당 지급률을 5%씩, 최대 20%까지 가산하는 유족가산제도를 신설하여 유족 생계지원 성격을 강화하였다.

넷째, 2019년 4월 「군인연금법」을 개정하여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사망 재심사를 통해 순직을 인정받았음에도 급여의 청구시효 경과로 인해 관련 급여를 받지 못하는 유족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순직 재분류자에 대한 급여 청구권의 시효 기산일을 변경하였다. 기존에 급여 청구권의 시효는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기 때문에 '급여 사유 발생일'인 사망일로부터 5년이 지나게 되면,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로 순직이 결정되더라도 청구시효 경과로 순직유족연금·사망보상금·퇴직수당 등의 급여를 청구할 수 없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통해 순직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청구시효를 군인 '사망일'이 아닌 '순직 결정일'로부터 기산하도록 시효의 특례조항을 신설하였다.

제 8 장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군사적 뒷받침

제1절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 및 군비통제 추진
제2절 남북교류협력의 군사적 보장 및 국군포로 문제 해결





비무장지대 평화의 길

제1절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 및 군비통제 추진

남과 북은 2018년 4월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열린 9월 평양 정상회담에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로서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체결하였다. 남북군사당국은 「9·19 군사합의」 체결 및 이행을 통해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 여건을 실질적으로 마련하였다. 앞으로도 「9·19 군사합의」를 충실히 이행하며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 및 군비통제 조치들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다.

1.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추진

정부는 한반도에서의 전쟁위험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고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18년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고, 두 차례의 북미정상회담을 견인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2018년 4월 27일에 개최된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 정상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이하 판문점선언)」[1]을 통해 '한반도 평화시대' 개막을 선언하고 남북관계의 전면적·획기적 발전, 군사적 긴장완화 및 상호 불가침 합의 준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 등을 추진할 것을 천명하였다. 이어 남북 정상은 2018년 9월 18~20일 평양에서 세 번째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여 「판문점선언」 이행 과정에서 축적된 신뢰를 바탕으로 남북관계의 확대 및 발전을 위한 실천적 조치를 담은 「9월 평양공동선언(이하 평양공동선언)」에 합의하였다. 또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로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이하 9·19 군사합의)」를 채택함으로써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 및 전쟁위험 해소를 위한 실질적 조치에 합의하였다.



「9·19 군사합의」 체결 (2018년 9월)

1)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발표한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으로 핵 없는 한반도 실현, 연내 종전 선언,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성 설치, 이산가족 상봉 등을 천명

이러한 남북관계의 발전은 북미관계 개선과 비핵화 문제의 진전으로 이어져, 두 차례의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북미는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제1차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에 합의하였다. 하지만, 2019년 2월 27일부터 28일 사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된 제2차 정상회담에서 북미 간의 합의가 무산됨에 따라 북미관계뿐만 아니라 남북관계도 교착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정부는 이러한 교착상황에서도 한반도 문제의 직접적인 당사자로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국제사회의 지지 속에 추진될 수 있도록 미국 등 국제사회와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고 있다. 특히, 북미 대화의 교착상태 타개를 위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2019년 6월 30일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회동'이 역사상 최초로 이루어졌다. 우리 정부는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및 비핵화 문제'를 선순환적으로 모두 진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9·19 군사합의」 체결 및 이행

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선언」 제2조에는 군사적 긴장완화와 전쟁위험 해소를 위한 실질적 조치로서 '상호 적대행위 중지'와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지대화',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 평화수역 조성' 등이 명시되어 있다.

남북 군사당국은 「판문점선언」 제2조를 구현하고자 2018년 6월 14일 제8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과 7월 31일 제9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 그리고, 9월 13~14일 제40차 남북군사실무회담을 통해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포괄적인 군사분야 합의서 문안을 조율하였다. 마침내 2018년 9월 19일 남북 국방장관은 남북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로서 「9·19 군사합의」를 서명·체결하였다.

남북 군사당국은 「9·19 군사합의」 체결에 따라 상호 적대행위 중지,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비무장지대 내 상호 감시초소(GP) 시범 철수, 남북공동유해발굴,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9·19 군사합의」는 70년 넘게 지속된 남북 간 군사적 대결구도를 청산하고, 한반도에서 전쟁과 우발적 군사충돌 위험을 제거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제8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 (2018년 6월)

특히,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상·해상·공중 완충구역 내에

서의 상호 적대행위 중지를 통해 남북 간 접경지역 일대에서의 군사상황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지상에서는 남북 모두 군사분계선(MDL) 기준 각각 5km 폭의 완충구역 내 포병사격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전면 중지하였다. 해상에서는 완충구역 내 남북 모두 함포·해안포의 포구·포신 덮개를 설치하고 포문을 폐쇄하였으며, 함포·해안포의 실사격과 해상기동훈련을 중단하였다. 공중에서는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기종별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여 남북 간 사전 통보되지 않은 비행은 일체 실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우리 군은 산불진화와 응급환자 후송 등을 위해 비행금지구역 내 총 180여 회 헬기를 정상적으로 투입하였고, 「9·19 군사합의」에 따라 관련 내용을 북한 군사당국과 공유하고 있다.

남북 군사당국은 「9·19 군사합의」에 따라 '남·북·유엔사 3자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2018년 10월 27일부로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조치를 완료하였다. 남·북·유엔사는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최초로 공동경비구역 내 지하시설을 포함한 모든 초소와 시설물 등을 완전 개방하여 비무장화 조치 완료 상태를 현장에서 공동검증하였다. 또한, 공동경비구역 내 상호 감시장비를 조정 및 재배치하고, 영상정보 공유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상호 투명성을 보장하는 조치도 시행하였다. 우리 군은 공동경비구역 자유왕래를 위한 사전 준비 차원에서 2019년 5월 1일 우리 측 지역 견학을 재개하였으며, 같은 해 9월 30일 기준 총 2만 4천여 명의 방문객들이 '평화와 화합'의 장소로 탈바꿈한 판문점을 체험하였다. 특히, 2019년 6월 30일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회동'이 즉각 성사된 것은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조치가 선행되어 가능한 것이었다.


남북미 판문점 정상회동 (2019년 6월)

남북 군사당국은 2018년 12월 12일부로 비무장지대 내 상호 1km 이내 남북 22개의 감시초소를 시범적으로 철수하였다. 이후, 남북의 현역 군인들이 상대방 감시초소를 직접 방문하여 현장공동검증을 진행하였다. 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 철수는 유엔으로부터 군사적 신뢰구축 및 재래식 군비통제의 대표적인 모범사례로 선정되었다. 우리 정부는 상호 감시초소 시범철수 조치와 연계하여, 2019년 4월부터 단계적으로 고성, 철원, 파주지역에 'DMZ 평화의 길'을 개방하였고, 약 1만 5천 명의 국민들이 방문하여 접경지역에 조성된 평화를 체험하였다.

남북 군사당국은 남북공동유해발굴을 위하여 비무장지대 내 화살머리고지 일대의 지뢰·폭발물을 제거하고, 군사분계선을 관통하는 남북 연결도로를 개설하는 등 2018년 12월 7일부로 여건조성 작업을 완료하였다. 그러나, 남북공동유해발굴은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가 교착됨에 따라 2019년 4월부터 11월 말까지 화살머리고지 우리 측 지역을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지뢰제거 및 유해발굴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 군은 260여 구(잠정)의 유해와 6만 7천여 점의 유품을 발굴하였다. 또한, 2020년 4월부터 11월까지 남북공동유해발굴을 위한 사전 준비 차원에서 화살머리고지 일대 우리 측 지역에서 지뢰제거 및 유해발굴 작업을 진행하여 추가로 140여 구(잠정)의 유해와 1만 7천여 점의 유품을 발굴하였다.



비무장지대 화살머리고지 유해발굴

한강하구 공동이용과 관련하여 2018년 11월 5일부터 12월 9일까지 한강하구에 대한 남북공동수로조사를 실시하였다. 남북은 수로조사를 통해 20여 개의 암초를 찾아내는 등 600km 이상의 수로측량구간에 대한 제반 정보를 확인하였다. 우리 군은 남북공동수로조사 결과를 반영한 한강하구 해도를 제작하여 2019년 1월 30일 북한에 직접 전달함으로써 한강하구에서의 민간선박 자유항행 여건을 마련하였다.



한강하구 해도 전달 (2019년 1월)

남북 군사당국은 2018년 10월 26일 개최된 제10차 장성급군사회담에서 1992년 5월 남북 간 합의했던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준용하여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하였다. 남북군사공동위원회는 고위급 군사협의체로서 차관급 이상을 위원장으로 하여 구성될 것이며, 논의 의제는 「9·19 군사합의」에 명시된 사안을 포함하여 남북 군사당국 간 논의가 필요한 다양한 군사현안들이 될 것이다.

우리 군은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9·19 군사합의」의 실효적 이행 여건을 만들어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함으로써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추동력을 지속 유지해 나갈 것이다.

2.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및 군비통제 추진

평화체제[2] 구축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한반도에는 수많은 대결과 긴장의 불안정한 상황이 만들어져 왔다. 평화 없이는 안보도 경제도 보장할 수 없는 만큼, '평화공존'은 최우선으로 만들어가야 할 과제이자 비전이다.


대통령 유엔총회 기조연설 (2019년 9월)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7월 '베를린 구상'을 통해 북핵문제와 평화체제에 대한 포괄적 접근으로,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할 것을 천명하였다. 우리 정부의 이러한 평화체제 구축 의지에 북한이 호응해오면서, 남북 정상은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선언」을 통해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을 합의하였다. 이후 남북 및 북미 정상 간 수차례의 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함께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논의를 지속해온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9월 24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비무장지대(DMZ) 국제평화지대화」[3]를 제안하였다. 여기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접경지역에서 상호 적대행위를 중단하고 더 나아가 비무장지대를 평화의 상징으로 변모시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견인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강조하였다. 이는 남북 간의 신뢰구축 노력과 더불어 국제사회의 참여와 지지를 통해 냉전 시기 대결의 상징이었던 비무장지대를 국제사회와 함께 진정한 평화와 화해의 공간으로 전환하자는 것을 의미한다.

국방부는 이러한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을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정전협정을 성실히 준수하고 굳건한 한미연합방위체제 유지 및 「9·19 군사합의」의 이행을 통해 한반도의 군사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9·19 군사합의」의 충실한 이행을 통한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은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를 정착시켜 나가려는 우리 정부의 노력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군비통제[4] 추진 남북은 「판문점선언」에서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고 실질적인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가 진전됨에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이는 「7·4 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 「10·4 정상선언」 등 기존에 남북이 군사적 신뢰구축에 대해 합의한 사항

2)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대체되고 상호신뢰가 구축되어 법적·제도적·실제적으로 공고하게 평화가 보장된 상태

3) 「9·19 군사합의」에 포함된 「비무장지대(DMZ) 국제평화지대화」와 관련하여, 남북 당사자 외에 지뢰제거 등 관련 전문국제기구 및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남북 간 신뢰구축 노력을 국제사회가 같이 참여하고 보증하는 형태로 진행해 나가자는 제안

4) 잠재 적대국 간 군비경쟁의 안정화, 즉 군사력의 운용과 구조(병력·무기)를 통제하고 합의사항 위반을 제재함으로써 전쟁위험과 부담을 제거 또는 최소화시켜 안보를 증대시키려는 모든 노력

을 남북 정상이 「판문점선언」을 통해 그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판문점선언」을 군사적으로 철저히 이행하기 위하여 남북 군사당국은 「9·19 군사합의」를 채택하여 상호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강구해 나가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상호 우발적 충돌방지 및 군사적 신뢰구축 실천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한반도 군사적 긴장완화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국방부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안정성 제고를 위해 군비통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먼저, 남북이 여러 군사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합의한 '남북군사공동위원회'가 조기에 개설될 수 있도록 북한과 협의를 지속하면서, 안보환경의 변화와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의 진전상황을 고려한 실질적인 군비통제 추진을 위해 실현 가능한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아울러, 「판문점선언」에서 합의한 비무장지대의 실질적 평화지대화, 서해북방한계선 일대 평화수역 설정과 남북 군사당국자 간 상시 협의체계 구축 및 직통전화 설치 등 우발적인 무력 충돌방지 및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향후, 북한의 호응에 따른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의 성과를 바탕으로 주요 군사활동 제한·통제, 군사력 배치 제한·조정 등 운용적 군비통제[5]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의 진전에 따라 실질적인 평화보장을 위한 구조적 군비통제[6]를 점진적·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2020 서울안보대화 군비통제 세션 (2020년 9월)

또한, 국방부는 군비통제 관련 정책과 제도를 발전시키고, 군비통제 이행의 기본방향과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1991년부터 「군비통제정책서」를 발간하고 있다. 「군비통제정책서」는 「국가안보전략지침」과 「국방기본정책서」에서 제시된 국방정책 방향을 군비통제 차원에서 구현하기 위한 기획문서로서, 한반도 및 주변 안보상황 변화를 반영하여 2020년 1월에 개정·발간되었다. 한편, 군비통제 세미나를 개최하여 대내외 안보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군비통제 관련 자료집을 발간하는 등 군비통제정책 발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방부는 확고한 국방태세를 확립하고 군사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가운데, 철저한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군비통제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5) 군사력의 구조나 규모를 변경하지 않고 군사력의 운용과 배치에 대한 제한(Constraint)을 통해 기습공격과 전쟁발발의 위험성을 감소 및 방지하는 군사적 조치 (Operational Arms Control)

6) 군사력의 규모·편성 등 군사력을 구성하는 실질적인 요소인 병력과 무기체계를 구조적인 차원에서 제한 및 감축하여 군사적 안정성과 균형을 유지하려는 제반 군사적 조치 (Structural Arms Control)

제2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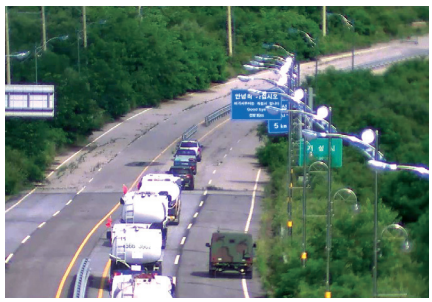
남북교류협력의 군사적 보장 및 국군포로 문제 해결

우리 군은 남북 정상이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한 남북교류협력 및 왕래와 접촉 활성화를 위해 육·해·공로를 통한 남북통행의 안전보장을 지원하고, 군 통신선을 운용하는 등의 군사적 보장대책을 시행해 왔다. 또한 우리 군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국군포로 문제 해결 및 정착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1. 남북교류협력의 군사적 보장

개요 남북정상은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남북 간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협력 활성화 및 접촉과 왕래 증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와 군사적 보장 대책을 강구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를 위해 남북은 개성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소하였고,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 등을 추진하였다. 다만,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은 남북회담 등에 응하지 않고 있으며, 2020년 6월 우리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빌미로 군 통신선을 일방적으로 차단한 데 이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였다. 우리 군은 향후 남북 간 교류협력이 재개될 경우 이를 군사적으로 즉각 지원할 준비를 지속해 나갈 것이다.

남북통행의 군사적 보장 남북 간 직접적인 통행은 대부분 육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해로와 공로 통행도 일부 실시되어 왔다. 육로 통행은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내의 도로와 철도를 통해 이루어져 왔으나, 철도 통행은 2008년 12월 이후 중단되었다. 육로 통행의 대부분도 개성공단 출입을 목적으로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에서 이루어졌으나, 2016년 2월 개성공단 폐쇄에 따라 중단되었다. 2018년 남북관계 진전에 따



남북관리구역 육로 통행 호송(서해지구)

라 2월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북한 대표단과 선수단, 응원단의 한국 방문 시에 경의선 육로를 이용하는 등 도로 통행이 재개되었다. 이를 계기로 2018년 8월 금강산에서의 이산가족 상봉행사와 2018년 8월 및 12월에 실시된 경의선·동해선 도로 공동조사, 2018년 11월에서 12월까지 경의선·동해선 철도 공동조사 등으로 동해선·경의선에서의 육로 통행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특히 남북이 「판문점선언」에 따라 2018년 9월 14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공단 내에 개소함으로써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을 통한 일일 정기통행이 재개되었다. 하지만 2020년 1월 말 코로나19 사태와 연계하여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운영이 잠정 중단되면서 경의선 육로 통행은 중단되었다. 향후 남북관계 개선 및 교류협력 활성화를 통해 남북 육로통행이 본격화 될 경우 우리 군은 유엔사 및 북한 군사당국과 협의하여 군사적 보장 조치를 이행하고, 비무장지대 내에서의 남북통행에 대한 경계와 호송을 지속 지원할 것이다.

해로 통행은 2010년 '5·24 조치'[7]로 인해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이 금지되면서 중단되었다. 하지만 2018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북한 예술단이 탑승한 만경봉92호가 북한 원산항에서 출항하여 우리 묵호항에 입항하면서 해로 통행이 일시적으로 실시된 바 있다. 향후 해로 통행이 본격적으로 재개되면 우리 군은 이에 따른 군사적 보장 조치를 실시할 것이다.

공로 통행은 주로 서해 임시 직항로를 통해 이루어져 왔다. 2018년 2월 북한 고위급 대표단의 방남, 3월 대북 특별사절단과 예술단의 방북,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방북 등은 서해 임시 직항로를 이용하였다. 한편 2018년 1월 올림픽 선수단 등의 북한 마식령스키장 남북공동훈련과 5월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취재 목적의 기자단 방북은 동해 임시 직항로를 이용하였다. 우리 군은 동·서해 임시 직항로 운항이 필요한 경우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한 공중감시와 군사대비태세 유지 등의 군사적 조치를 통해 이를 보장하고 있다.

남북 군 통신 운용

우리 군은 군사적 긴장완화 및 교류협력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남북 군사당국 간 직접 소통채널로서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에 군 통신선을 운용하고 있다. 남북은 2002년 9월 '제8차 남북군사실무회담'에서 남북 군 상황실 간 통신선을 설치하기로 합의함으로써 2002년 9월 24일 서해지구와 2003년 12월 5일 동해지구에 군 통신선을 구축하였다. 그러나 동해지구 군 통신선이 2010년 11월 산불로 소실되고, 2016년 2월 개성공단 중단 이후 북한이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차단함으로써 약 2년 동안 남북 간 군 통신선이 단절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은 2018년 1월 9일 '남북고위급회담'을 통해 서해 군 통

7)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응하여 정부가 발표(2010.5.24.)한 대북정책으로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불허, 남북교역 중단 (개성공단 제외), 우리 국민 방북 불허, 북한에 대한 신규투자 불허, 대북지원 사업 원칙적 보류 등이 주요 내용



남북통신실무접촉 (2018년 6월)

신선을 통한 연락 재개에 합의하면서 2018년 1월 10일부로 서해지구 군 통신선이 임시복구되었다. 이후, 2018년 6월 14일 '제8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서 동·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조속히 정상화하는 것에 합의하였고, 6월 25일에는 '남북통신실무접촉'을 통해 군 통신선 복구를 위한 구체적 조치 이행 방안을 합의하였다. 남북 군사당국은 2018년 7월 16일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8월 15일에는 동해지구 군 통신선을 완전복구하여 모든 기능을 정상화하였다.[8] 이후 남북 군사당국은 동·서해 군 통신선을 통해 일일 두 차례 정기통화를 시행했으며, 필요시 수시통화도 원활히 진행해 왔다. 또한, 남북은 서해 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6·4 합의서」[9] 복원·이행을 위해 2018년 7월 1일 '국제상선 공통망'을 이용한 남북 경비함정 간 정기교신을, 같은 해 11월 2일에는 남북 군 통신선을 통한 '제3국 불법조업 어선 정보교환'을 재개하여 정상적으로 시행해 왔다. 하지만 2020년 6월 9일 북한에 의해 군 통신선이 일방적으로 차단되었으나, 우리 군은 언제든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 연락이 재개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우리 군은 군 통신선을 통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 및 운영, 이산가족 상봉행사,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 등 다양한 교류협력사업을 원활하게 지원해왔다. 앞으로도 국방부는 군 통신선의 정상적이고 원활한 운용을 통해 남북 간 교류협력의 군사적 보장뿐만 아니라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에 중추적 역할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8) 정부는 군 통신선 정상화를 위한 대북 물품 지원 등 일련의 조치를 진행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는 2018년 7월 14일 남북 간 군 통신선 복원을 위해 북한에 지원하는 자재 및 장비에 대해 대북제재 예외를 승인

9) 「서해 해상에서 우발적 충돌방지와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에 관한 합의서」(6·4합의서)는 2004년 6월 4일 '제2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서 채택되었으며 서해 해상의 우발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①국제상선공통망 이용
②기류 및 발광신호규정 제정 및 활용
③제3국 불법조업선박에 대한 정보교환
④서해통신연락소 설치 등을 포함

2. 국군포로 문제 해결

국군포로 생사 확인, 상봉 및 송환

정부는 1994년 국군포로 고(故) 조창호 중위의 귀환 이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범정부 차원의 국군포로 송환 및 지원 대책을 마련하였다. 또한 남북 대화를 통해 국군포로의 생사 확인과 송환 문제를 남북 화해와 인도주의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협의·해결할 것을 북한에 지속적으로 제의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정전협정 체결 이래 일관되게 국군포로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어 관련 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도표 8-1] 귀환 국군포로 현황

2020년 11월 기준, 단위 : 명

연도	총계	1994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인원	80	1	1	4	2	9	6	6	5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2020
인원	14	11	7	4	6	3	1	-

이러한 가운데 1994년부터 2010년까지 자력으로 탈북하여 귀환한 국군포로는 80명에 이르며, 2011년 이후부터는 국군포로의 고령화, 북한의 탈북 감시 강화 등으로 국군포로 귀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귀환하여 국내에 생존해 있는 국군포로는 2020년 11월 기준 21명이다.

정부는 제3국으로 탈북한 국군포로와 그 가족들이 안전하게 국내로 송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국군포로와 그 가족의 탈북 사실이 확인되면 '범정부 국군포로 대책반'을 구성하여 재외국민 보호 차원에서 신변 안전을 보장하고 이들을 조속히 국내로 송환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2015년에는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국군포로의 유해 송환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남북은 2000년 6월 정상회담 이후 개최된 남북장관급회담과 남북적십자회담에서 국군포로 문제를 이산가족 문제와 함께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2006년 2월 제7차 남북적십자회담에서는 "전쟁 시기와 그 이후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에 대한 생사 확인 문제를 이산가족 문제에 포함하여 협의·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2007년 2월 제20차 남북장관급회담과 4월 제8차 남북적십자회담에서도 이러한 원칙을 재확인하였다. 지금까지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통해 생사가 확인된 국군포로는 56명이며, 이 중 18명이 가족과 재회하였다. 정부는 2019년 12월 '제3차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을 통해 국군포로를 이산가족의 범위에 명문화하는 등 국군포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방부는 각종 남북회담을 통해 국군포로의 생사 확인과 송환 등 근본적 문제 해결을 추진하는 한편, 국군포로와 그 가족이 탈북할 경우 안전한 국내 송환을 위해 제3국 및 유관부처와의 협조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귀환 국군포로 정착 지원

국방부는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환 포로가 조기에 안정적으로 국내에 정착하여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북한에서 사망한 국군포로의



귀환 국군포로 초청행사 (2019년 6월)

귀환 가족도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으로 등록하여 북한이탈주민으로서의 대우와 지원 이외에 세대별로 별도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국방부는 2012년부터 전문성을 갖춘 민간 업체를 선정하여 가정방문, 심리·법률상담 등을 통해 귀환 국군포로의 정착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등 정착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연금 형식의 위로지원금 지급과 공공임대주택 입주 지원 등을 통해 귀환 국군포로가 더욱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2013년에 개정하였다. 또한, 국방부는 국군의 날 행사 등 각종 행사에 국군포로를 초청하고 있으며 국군포로가 사망할 경우 장례를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방부는 귀환 국군포로의 안정적 정착지원을 위한 정책을 발전시키고 유관부처와 협조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제72주년
국군의 날
평화를 만드는
미래국군



제72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 (2020년 9월)

부록

특별부록

1. 「9·19 군사합의」 의의와 이행성과
2. 6·25전쟁 70주년 사업 추진
3.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
4. 일과 후 병 휴대전화 사용
5. 우리 군의 코로나19 대응

일반부록

1. 주변국 군사력 현황
2. 세계 주요 국가의 국방비 현황
3. 연도별 국방비 현황
4. 남북 군사력 현황
5. 남북 경제지표 현황
6.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결의 현황
7. 북핵문제 관련 주요 비핵화 합의
8.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경과 및 평가
9.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10. 남북 군사관계 일지
11. 북한의 대남 침투·국지도발 일지
12. 연합·합동연습 및 훈련 현황
13. 제51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
14. 미래 한미동맹 국방비전
15.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
16.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연합방위지침
17. 주한미군 주둔비용 직·간접 지원 규모
18. 국제 방산협력협정 체결 현황
19. 국방협력협정 체결 현황
20. 국제 군축 및 비확산 협약 및 기구
21. 우리 군의 해외파병 현황
22. 병사 봉급 변화 추이
23. 현역병 복무기간 변천
24. 국방기구도
25. 국방부 소관 법령 정비 현황
26. 국회 국방위원회 구성 및 주요 활동

특별부록 01

「9·19 군사합의」 의의와 이행성과

1. 의의

「9·19 군사합의」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서 역사적인 「판문점선언」의 군사분야 합의를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2018년 9월 19일 평양에서 남북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남북 국방장관이 서명·체결한 포괄적인 군사분야 합의서이다.



「9·19 군사합의」 체결 (2018년 9월)

「9·19 군사합의」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을 통해 한반도에서의 실제적인 전쟁위험을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판문점선언」, 「평양공동선언」의 정신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들을 담고 있다.

또한 「9·19 군사합의」는 현재도 남북 간에 지켜지고 있는 군사분야 합의서로서 1953년 7월 정전협정 체결 이후 가장 실효적이고 획기적인 합의서이다.

「9·19 군사합의」는 과거 남북 군사당국이 체결한 10여 차례의 군사분야 합의서들과 달리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고, 접경지역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 등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한 실제적 이행조치들을 명확히 포함하고 있으며, 합의사안별로 검증절차까지 명시함으로써 합의 이행 및 검증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9·19 군사합의」 체결 이후 남북 군사당국은 상호 적대행위 중지, 비무장지대(DMZ) 내 상호감시초소(GP) 시범 철수,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등을 완료하였고, 남북공동유해발굴,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의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지속 노력 중이다.

특히 남북 군사당국은 상호 적대행위 중지 조치를 충실히 지속 이행함으로써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었고 지상·해상·공중 접경지역에서의 군사상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또한,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이행조치를 통해 2019년 6월 30일 판문점에서 역사상 최초로 남북미 정상회동이 이루어질 수 있었으며, 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 철수는 유엔으로부터 군사적 신뢰구축 및 재래식 군비통제의 대표적인 모범사례로 선정되었다.

이렇듯 「9·19 군사합의」는 한반도에서 오랜 적대와 대립의 질서를 평화와 협력의 새로운 질서로 바꾸어 나가는 토대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지난 70여 년간 한반도에서의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꿈꿔왔던 우리 국민들의 염원과 이를 실현하고자 했던 역대 정부의 끊임없는 노력, 그리고 그것을 힘으로 뒷받침해왔던 우리 군의 강력한 대비태세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2. 주요 이행성과

| 상호 적대행위 중지 | 2018년 11월 1일부터 남북이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해 지상·해상·공중 접경지역에서의 상호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는 조치를 시행한 것이 「9·19 군사합의」의 가장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남북은 지상에서 총 10km(군사분계선 기준 남북으로 각각 5km)의 완충지대를 형성하여 상호 군사적 긴장 완화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남북은 지상 완충구역 내 포병사격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으며, 이러한 조치는 군사력이 집중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우발적 충돌 위험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북한군은 과거 군사분계선 5km 이내 구역에서 다수의 포병사격 및 야외기동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으나, 「9·19 군사합의」 이후에는 일체 실시하지 않고 있다. 또한 그동안 100여 회의 총격·포격도발이 발생하는 등 수많은 충돌이 발생했던 비무장지대에서 「9·19 군사합의」 체결 이후에는 2020년 5월에 중부전선 우리 측 감시초소를 향한 총격 사건[1]이 발생한 것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군사적 긴장행위도 발생하지 않았다.

해상에서는 무력충돌 방지를 위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의 일정구역을 해상 완충구역으로 설정하여 구역 내에서 포사격 및 해상기동훈련을 중지하고, 포구·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폐쇄까지 이르는 구체적 조치에 합의함으로써 무력충돌 가능성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자 하였다.

북한군은 과거 해상 완충구역 내에서 수많은 실사격 훈련을 실시하였으나, 「9·19 군사합의」 이후에는 2019년 11월 창린도 해안포 사격[2]을 제외하고는 우리 군과 마찬가지로 완충구역 내 함포·해안포의 실사격 및 해상기동훈련을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북한 해군함정의 북방한계선 침범 사례도 발생하지 않는 등 현재까지 군사적 도발을 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과거 연평해전, 대청해전, 천안함 피격 사건 및 연평도 포격 도발 등 북한의 도발에 따른 무력충돌로 긴장과 분쟁의 바다였던 서해가 「9·19 군사합의」 체결 이후 평화의 바다로 변모함으로써 남북간 군사적 긴장이 획기적으로 완화되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서해 5도 기존 어장에 여의도 면적의 84배(245㎢)에 달하는 추가 어장을 확장하였고, 1964년 야간조업을 금지한 이래 55년 만인 2019년에 야간조업도 1시간 연장하여 허용하였다. 또한 1974년 이후 45년 만에 연평도 등대도 재점등하여 연평도 해역을 이용하는 우리 선박의 안전한 항해를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어장 확장 및 조업시간 연장을 통해 서해 5도 어업인들의 어획량이 크게 증가하여 수익증대에도 기여하고 있다.



45년만에 재점등된 연평도 등대

1) 우리 군은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행위로 간주하고 남북장성급군사회담 우리측 수석대표 명의의 대북통지문을 통해 우려 표명과 즉각적인 중단을 북한에 요구

2) 우리 군은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행위로 간주하고 유감 표명 및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북한에 강력히 촉구

공중에서도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기종별로 비행금지구역[3]을 설정하여 쌍방 항공기 간의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과거 북한의 무인기가 10여 차례 우리 영공을 침범하기도 하였으나, 「9·19 군사합의」 이후 현재까지 북한의 정찰 및 감시 목적의 무인기 운용 사례가 전혀 없는 등 남북은 비행금지구역 내에서 사전 통보되지 않은 비행을 일체 실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우리 군은 「9·19 군사합의」에 따라 대북통보 후 산불진화와 응급환자 후송 등을 위해 비행금지구역 내 총 180여 회 헬기를 정상적으로 투입하였다.

이처럼 「9·19 군사합의」 체결 이후 남북 군사당국은 접경지역에서의 상호 적대행위 중지 조치를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지상·해상·공중에서의 군사적 안정성이 지속되고 있다.

앞으로도 우리 군은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9·19 군사합의」의 철저한 이행을 통해 과거와 같이 남북 간 접경지역에서의 무력충돌로 우리 장병과 국민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 상호 감시초소(GP) 시범철수 | 「9·19 군사합의」에서의 비무장지대 감시초소 철수는 현재 중무장화된 비무장지대를 1953년 정전협정 취지에 맞게 실질적인 비무장지대로 전환하기 위한 군사적 조치이다. 남북은 비무장지대 내 모든 감시초소를 철수하기로 합의하였고, 시범적 조치로 상호 1km 이내에 근접해 있는 남북 감시초소들을 우선 철수하기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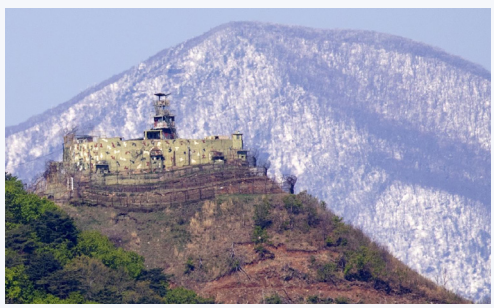
합의에 따라 남과 북은 2018년 11월 각각 비무장지대 내 11개 감시초소를 시범적으로 철수하였고, 역사적 상징성 및 보존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남북 각각 1개의 감시초소는 완전 파괴하지 않고 보존하기로 하였다. 또한 같은 해 12월 역사상 최초로 남북 공동검증단을 구성하여 우리 군과 북한군이 철수한 감시초소를 상호 교차 방문하여 철수 상태를 점검 및 검증하였다.

비무장지대 내 일부 감시초소가 철수되었지만 우리 군은 철수 감시초소의 경계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인접 감시초소와 일반전초(GOP) 철책선을 중심으로 무인 감시카메라(CCTV), 중거리감시카메라, 열상감시장비(TOD) 등 과학화 경계시스템을 통한 상호 중첩된 감시체계를 운영함으로써 경계작전에는 이상이 없도록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 우리 측 고성지역에 있는 보존 감시초소는 2019년 6월 문화재로 등록되었으며, 고성, 철원, 파주



감시초소 시범철수 상호 검증



보존 감시초소(강원도 고성군)

3) 기종 및 지역별 비행금지구역 : 고정익(서부 20km, 동부 40km), 회전익(10km), 무인기(서부 10km, 동부 15km), 기구(25km)

지역의 철수 감시초소는 '비무장지대 평화의 길'의 일부로 개방되어 2019년 4월부터 9월까지 약 1만 5천여 명의 국민이 철수 감시초소 현장을 방문하였다.

|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 남북은 정전협정 이행 및 준수를 위해 공동경비구역이 설정된 만큼 해당 취지와 명분에 맞게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를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원래 공동경비구역은 정전협정에 따라 비무장지대 내에서 유일하게 경비병들이 남북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장소였음에도 불구하고, 1968년 8·18 도끼만행사건 이후 공동경비구역 내 군사분계선이 설정되고 자유왕래가 중단되었다. 이후 공동경비구역은 중무장화된 남북 경비병들이 가장 근거리에서 첨예하게 대립함으로써 비무장지대 내에서도 제일 위험한 장소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9·19 군사합의」에 따라 '남·북·유엔사 3자 협의체'가 운영되었고, 공동경비구역을 비무장화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이 2018년 10월에 완료됨에 따라 현재 공동경비구역은 권총 한 자루 없는 완전 비무장화된 35명의 경비병만이 각각 임무를 수행하는 평화와 화합의 장소로 변모되었다.

이를 통해 2019년 6월에는 역사상 최초로 남북미 정상회동이 판문점에서 개최될 수 있었다. 또한 2019년 5월부터 9월까지 공동경비구역 내 남측지역 견학 재개를 통해 약 2만 4천여 명의 방문객들이 평화와 화합의 상징으로 변모된 공동경비구역을 체감하였다.


남북미 판문점 정상회동 (2019년 6월)


판문점 도보다리 견학

| 비무장지대(DMZ) 내 남북공동유해발굴 | 우리 군은 「9·19 군사합의」에 따라 2019년 4월부터 비무장지대 내 화살머리고지 우리 측 지역에서 지뢰제거 및 유해발굴작업을 실시하여 2020년 11월까지 400여 구의 유해와 8만 5천여 점의 유품을 발굴하였다. 발굴된 유해 중에는 국군 전사자뿐만 아니라, 유엔군(추


화살머리고지 우리측 지역 지뢰제거


DMZ 화살머리고지 유해발굴

정) 및 다수의 중국군 전사자도 포함되어 있다. 특히, 이 중에서 9위(位)의 국군 전사자 유해가 신원이 확인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6·25전쟁 당시 우리 국군의 전사자 수는 13만 7천여 명이고, 이 중에서 아직도 유해조차 찾지 못한 전사자 수가 12만 4천여 명으로 약 90%에 달한다. 특히 이 중 상당수는 6·25전쟁 당시 가장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비무장지대 내에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향후 우리 군은 북한이 호응해 올 경우 남북공동유해발굴단을 구성하여 공동유해발굴을 실시하고, 비무장지대 내 유해발굴 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면서 '비무장지대 평화지대화' 추진과 연계하여 남북 외에도 미국, 중국 등 6·25전쟁 참전국이 참여하는 방안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 한강하구의 평화적 이용 | 한강하구는 정전협정에 따라 남북 민간선박의 자유항행이 보장되는 수역이나 정전협정 체결 이래 특별한 몇 차례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남북 양측 모두가 사실상 출입을 금지했던 군사지역이다. 이렇듯 군사적 긴장상태가 지속되어 자유롭게 접근하지 못하였던 공간을 공동으로 활용하여 또 하나의 평화로운 공간으로 복원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강하구 공동이용을 위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강구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남북 양측은 2018년 11월 5일부터 12월 9일까지 한강하구에 대한 공동수로조사를 실시하고 총 600km 이상의 수로측량구간에서 20여 개의 암초를 찾아내는 등 선박의 안전항행에 필요한 중요 정보를 확인하였다. 우리 측은 남북공동수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제작한 해도, 조사결과보고서, 조석관측자료 등을 실무접촉을 통해 북한에 전달하였다.

남북공동수로조사는 정전협정 이후 남북 간 접근이 제한되었던 한강하구 중립수역에서 최초로 실시된 해양조사로 이를 통해 민간선박의 자유로운 항행에 필요한 항행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 측은 2019년에 한강하구의 중요성을 알리고 한강하구 중립수역에서의 지속적인 항행과 평화적 활용이 이루어지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강하구 항행 시범행사를 한강하구 이남의 우리 측 지역에서 2차례 실시하였다.

향후 남북 간 실무협의를 통해 민간선박의 자유항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반 준비절차를 마련하고, 우리 측이 한강하구 공동이용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정밀 수로조사 및 수산자원, 생태·환경 등에 대한 종합조사를 북한과 협의하는 데 있어 군사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다.



한강하구 남북공동수로조사



한강하구 해도 전달 (2019년 1월)

3. 향후 추진

우리 군은 힘을 통한 평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9·19 군사합의」를 지속 이행하여 적극적으로 평화를 만들어내고 만들어진 평화를 굳건하게 지켜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 군은 현재 준수 중인 「9·19 군사합의」의 합의사항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접경지역에서의 군사적 안정성이 지속 유지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북한이 호응하지 않고 있는 공동경비구역 내 남북 간 상호 자유왕래, 비무장지대 내 모든 감시초소 철수, 남북공동유해발굴 및 한강하구 내 민간선박의 자유항행 보장 등의 사안에 대해서는 북한이 호응해 올 경우 즉각 추진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또한 정부가 추진 중인 비무장지대 국제평화지대화 및 '남북협력'을 위한 군사적 지원 조치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9·19 군사합의」에서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가동·운영에 합의한 만큼 '남북군사공동위원회'가 조기에 구성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는 가운데,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9·19 군사합의」에 명시된 사안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보다 다양한 군사적 현안들이 남북 군사당국 간에 논의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갈 것이다.

앞으로도 우리 군은 상시 군사대비태세를 확고히 유지한 가운데, 「9·19 군사합의」를 적극적으로 이행함으로써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강력한 힘으로 뒷받침해 나갈 것이다.

특별부록 02

6·25전쟁 70주년 사업 추진

1. 추진개요

정부는 매년 6·25전쟁을 기억하고 평화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10년 주기로 범정부 차원의 대규모 행사를 기획하고 있다. 2020년은 6·25전쟁 70주년으로 생존해 계신 국내 참전용사들의 평균 연령이 90세인 점을 고려 시, 70주년 사업은 이분들의 기억에 남을 수 있는 마지막 행사가 될 수 있다. 따라서 6·25전쟁 70주년 사업은 다른 해보다 더욱 중요하고 큰 의미를 갖는다.



6·25전쟁 70주년 사업단 발대식 (2020년 1월)

이에 따라 정부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범정부 차원의 '6·25전쟁 70주년 사업추진위원회'를 2020년 1월 출범시켰으며, 국방부는 별도의 사업단을 조직[1]하여 정부 사업추진위원회의 사업과 연계해 국방부 6·25전쟁 70주년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였다.

2. 사업목적 및 추진방향

| 사업목적 | 6·25전쟁 70주년 사업은 국내외 참전용사의 헌신과 희생을 기억, 감사하고 대국민 안보의식을 고취하며, 대외적으로 한반도 평화와 번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 사업추진 방향 | 사업추진 방향은 국민을 대상으로 튼튼한 안보가 평화와 번영을 구현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참전용사에게는 대한민국의 평화를 지킨 희생과 헌신에 대한 감사를 표명하는 것이다. 또한 장병과 청소년들에게는 안보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6·25전쟁 70주년 정부 엠블럼

정부위원회는 6·25전쟁 70주년 사업 개념을 '기억·함께·평화'로 설정하였고, 국방부는 정부위원회 개념과 연계하여 6·25전쟁 70주년 슬로건을 '기억의 불꽃! 평화와 번영의 횃불!'로 정하였다. '기억의 불꽃' 에는 참전용사에 대한 감사와 그분들의 희생을

1) 사업단 조직 : 1단계(2019.9.11.~12.31./5명), 2단계(2020.1.1.~10.31./16명), 3단계(2020.11.1.~2021.6.30./5명)

기억하려는 마음을 담았고, '평화와 번영의 횃불'에는 작은 불꽃이 큰 횃불이 되어 전쟁의 상처가 평화와 번영으로 승화되기를 바라는 희망을 담았다.

3. 사업편성

6·25전쟁 70주년 사업은 전승행사와 호국보훈행사, 문화예술행사, 평화체험행사로 구분하여 총 15개 사업과제로 편성하였다. 세부적으로 전승행사는 국방부 3대 전승행사[2]와 가상현실(VR) 및 증강현실(AR)을 통한 주요 전투체험이며, 호국보훈행사는 호국영령 추모행사(유해봉환), 유엔 참전용사 현지 위로연, 참전 여군 메모리얼 전시회 및 상기행사, 한미동맹 기억 및 감사행사로 4개 과제이다. 문화예술행사는 6·25전쟁 특별전시회, 학술회의, 호국 문예활동, 군 창작 뮤지컬 제작 및 공연, 70주년 기장 제작, 6·25전쟁 스토리텔링 홀로그램 퍼포먼스로 6개 과제이며, 평화체험행사는 청년 평화 발걸음, 서바이벌 경연대회, 한미 태권도 어울림 한마당 행사로 3개 과제로 편성하였다.

4. 주요사업 추진

| 전승행사 | '전승행사'는 6·25전쟁 당시 전장의 국면을 전환시킨 계기가 된 3대 주요전투의 승전을 기념하는 행사로, 지자체 지역축제와 연계하여 참전용사 초청 및 보은행사로 진행을 계획하였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다수인원 집결이 제한됨에 따라 기념식 및 참배(충혼탑, 전사자 명비) 위주의 약식행사로 시행하였다. 전승기념식 또한 참전국 지휘관 영상메시지 등의 기념영상으로 대체하고 이를 온라인으로 홍보하였다.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 (2020년 9월)

이와 더불어 가상현실(VR) 및 증강현실(AR)을 통한 주요 전투체험을 위해 고정형 및 기동형 체험존을 제작하였다. 고정형 체험존은 전쟁기념관에 설치하였으며, 기동형 체험존은 전승행사 및 군 문화축제 등에서 참석자들의 안보관 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지원이 제한되었다. 하지만 향후 각종 행사 시 지원이 가능하도록 기동형 체험존을 제작하였기 때문에 향후에도 그 활용도는 매우 높을 것이다.

| 호국보훈행사 | '호국보훈행사'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게 국가의 책무를 다하기 위한 행사로, 국군전사자 유해봉환행사와 유엔 참전용사 현지 위로연, 참전 여군 메모리얼 전시회 및 상기행사를 추진하였다. 먼저 유해봉환행사는 6·25전쟁 당시 북한지역에서 전사하였다가 발굴되어 미국 전쟁포로 및 실

2) 3대 전승행사 : 인천상륙작전(9월), 낙동강방어선전투(10월), 춘천지구전투(11월)



유해봉환 행사 (2020년 6월)


참전국 대사관 감사의 마음 전달 (2020년 10월)

종자 확인국(DPAA)에 보관 중인 국군 전사자 유해를 국내로 모셔오는 것으로 유가족, 정부 및 군 주요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공항에서 실시하였다.

추모행사를 통해 참전용사의 넋을 기리고 그들의 고귀한 희생에 대해 감사를 표하면서 국가관 확립에도 기여하는 의미있는 행사였으며, 특히 송환된 유해 중 일부의 신원을 확인해 유가족의 품으로 모셔드릴 수 있어 더욱 뜻깊은 행사였다. 또한 유해봉환 과정을 '70년 만의 귀환'이라는 다큐멘터리로 제작 및 방영[3] 하여 국민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아울러 유엔 참전용사 현지 위로연은 6·25전쟁 유엔 참전국 7개국[4]을 해군 순항훈련 등과 연계하여 직접 방문함으로써 유엔 참전용사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자 계획하였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현지 방문이 제한되어 참전국 22개국 대사관을 통해 감사의 마음을 담은 기념영상 CD와 기념품(마스크, 형제의 상, 명함집)을 전달하였다.

또한 6·25전쟁 중에 창설된 여군 창설 70주년을 기념하여 참전 여군 활동상이 담긴 사진과 유물 전시회를 개최하였고,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감사오찬, 위로공연 대신 참전 여군분들에게 여군 보훈단체를 통해 기념품을 전달하였다.

| 문화예술행사 | '문화예술행사'는 6·25전쟁의 올바른 이해와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행사로 특별전시회, 학술회의, 호국 문예활동, 군 창작 뮤지컬 공연, 기장 제작, 스토리텔링 홀로그램 퍼포먼스를 실시하였다.

먼저 6·25전쟁 70주년 특별전시회는 6·25전쟁과 관련된 역사성이 있는 자료를 전시하였고, 많은 인원이 참석하는 전승행사 등에는 기동형으로 순회 전시를 함으로써 국민적인 관심을 유도하였다. 또한 국제학술회의를 통해 미래 세대에게는 6·25전쟁의 의의를 재조명하고, 참전국에는 감사를 전하며 한국의 발전상을 홍보하였다. UCC 및 웹툰 공모는 청년세대들에게 6·25전쟁에 대한 관심을 유도함과 동시에 나라의 소중함을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공모결과 32명



군 창작 뮤지컬 공연 (2020년 9월)

3) 2020. 7. 5. SBS 방영
4) 현지방문(캐나다, 벨기에, 프랑스, 영국), 순항훈련(태국, 호주, 뉴질랜드)

의 우수작을 선정하여 6·25전쟁의 의미를 상기하는 장병, 청소년 교육자료로 활용하였다. 더불어 6·25전쟁을 경험한 전쟁세대와 전후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군 창작 뮤지컬을 제작하여 공연을 온라인 생중계하여 많은 관객들의 호응을 얻었다. 스토리텔링 홀로그램 퍼포먼스는 6·25전쟁의 상흔 극복과정을 이야기 형식으로 구성한 마술공연으로, 6월 25일 전후하여 집중공연을 계획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7월 군부대 순회공연으로 대체시행하였다. 또한 온라인으로 공연내용을 홍보하여 6·25전쟁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와 관심을 제고하는데 기여하였다.



스토리텔링 홀로그램 퍼포먼스 (2020년 6~7월)

6·25전쟁 70주년 기장(旗章)은 6·25전쟁 70주년을 역사적으로 기억하고 간부들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하기 위해 현역 간부들을 대상으로 수여하였다. 기장 내부에는 6·25전쟁 70주년을 상징하는 '대한강군'이라는 휘호를 포함하였다.

| 평화체험행사 | '평화체험행사' 중 대표적 행사인 '청년 평화 발걸음'은 미래세대의 안보관 확립을 위해 전적지 및 안보현장(DMZ, 강화도일대)을 답사하는 행사로 통일부, 교육부와 함께 국민참여단을 공개 모집하고, 총 7개 기수로 편성하여 추진을 계획하였으나, 코로나19로 행사를 취소하였고 대신하여 참가 희망자들에게 참가복장과 기념품 등을 지급하였다.

또한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상호 간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계기가 된 '한미동맹 기억 및 감사행사'를 시행하였다. 행사는 한미동맹에 기여한 특별초청 대상자 70명을 초청하여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미군 평택기지에서 진행되었다.

그 외에 국내 민간동호회 및 현역장병, 미 8군 및 지역주민 등이 과학화 장비를 체험하기 위한 '서바이벌 경연대회'와 한미 친선활동으로 상호 화합 및 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한미 태권도 어울림 한마당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되었다.



청년 평화 발걸음 홍보자료 (2020년 6월)



한미동맹 기억·감사행사 (2020년 10월)

5. 향후 추진

6·25전쟁 70주년 사업은 유엔 참전국과 우리나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참전용사의 헌신에 감사하고, 전쟁의 상흔과 극복과정을 기억하는 등 다양한 성과를 거두었다. 향후 매년 지속 시행되는 6·25전쟁 사업 역시 이러한 취지를 계승하여 그날의 기억과 희생을 잊지 않도록 추진할 것이다.

특별부록 03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

1. 대체복무제 도입 배경 및 경과

우리나라에서는 이전부터 종교적 신앙이나 개인적인 신념 등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연평균 500명 이상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왔으며, 이들은 형사처분 대상으로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아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었다.

〈과거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 재판현황〉

2001년~2018년 6월, 단위 : 년, 명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379	825	561	755	828	781	571	375	728	721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계
633	598	623	565	493	557	461	71	10,525

*여호와의 증인 99.3%(10,454명), 개인신념 0.7%(71명)
*2018년 6월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병역거부자 발생 인원은 제도시행 전까지 입영연기 하였음

2018년 6월 28일 「병역법」 제5조 제1항(병역종류조항) 등에 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및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1] 결정을 내렸고, 2018년 7월 16일 국방부 주관으로 국방부, 병무청, 법무부 3개 기관은 대체복무제도 마련을 위해 '대체복무 도입 추진단'을 구성하였다. 추진단은 '병역의 의무'와 '양심의 자유'가 조화되는 합리적인 대체복무제를 마련하기 위해 사회복지·교정·소방 시설 등 복무분야 실태조사, 복무기간 등 관련 여론조사, 대국민 공청회, 전문가 자문 등[2]을 실시하였다.



1차 공청회 실시 (2018년 10월)



2차 공청회 실시 (2018년 12월)

1) "현행 병역의 종류는 모두 군사훈련을 전제로 하는 등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양심을 침해하므로, 「대한민국 헌법」 제19조에 따른 양심의 자유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 제도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제5조 제1항 등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며 2019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적용한다."
2) 대체복무제도 복무형태/분야 현장 실태조사(2018년 7~8월), 대체복무제 도입 자문위원회 회의(2018년 8~12월, 6회), 당·정·청 회의 등(2018년 9~11월), 대체복무제 도입 공청회(1차 : 2018.10.4. / 2차 : 2018.12.13.)

그 결과 2018년 12월 28일 국방부는 '대체복무자는 교정시설에서 36개월 간 합숙복무하고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국방부 소속으로 설치한다'는 내용의 대체복무제도 도입방안을 발표하였다.

2. 대체복무제 도입 근거 마련

국방부는 대체복무 법률 제정안을 2018년 12월부터 2019년 4월까지 2차에 걸쳐 입법예고[3] 한 후 2019년 4월 25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같은 해 7월 3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상정되었고 9월 19일 국방위원회 주관으로 대체복무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하였다. 11월 13일 국방위원회 법안심사 소위 의결에 따라 대체역 심사위원회를 병무청 소속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이후 12월 27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31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대체역법)」이 공포되었고, 2020년 1월 1일부로 시행되었다.

「대체역법」은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예비역 또는 보충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기 위한 대체역의 편입·심사와 복무 등에 관련된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헌법상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를 조화시키는 데에 의의가 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

〈「대체역법」 주요 내용〉

구분	주요내용
병역의 종류 신설	대체역 신설
복무기간	36개월
복무분야	교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복무형태	합숙근무
신청자격	현역병·사회복무대상자, 예비군
복무관리	소관중앙행정기관장 및 병무청장(실태조사권 부여)
예비군 대체복무	복무만료 후 8년차까지 교정분야 복무(연간 30일 이내)
위원회 소속	병무청장
위원장 직급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임기제 공무원
위원 수 / 상임위원 수	29명 / 5명 이내
위원 추천기관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국방부, 병무청, 국회, 대한변호사협회
위원 자격	교수, 법조인, 의사, 공무원, 비영리단체 근무자 등
사무기구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해 사무기구 설치

3) 1차 입법예고 : 2018.12.28. ~ 2019.2.7., 2차 입법예고 : 2019.4.9. ~ 2019.4.15.

3. 시행현황

대체복무 제도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하여 「대체역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제·개정 및 대체역 심사위원회 구성을 2020년 6월에 완료하였으며, 대체역 편입심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국방부, 병무청, 국회 국방위원회, 대한변호사협회 6개 기관에서 추천한 29명의 위원으로 대체역 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대체역 편입대상 여부는 신청인에게 거짓이 없는지 신청인의 의견을 청취하고 서면, 현장 및 대면조사 등 사실조사를 실시한 뒤, 사전심사위원회의 사전심사를 거쳐 대체역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심사·의결한다.

대체역 편입심사는 2020년 6월 30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으며, 7월 15일 대체역 심사위원회 심사를 시작하여 11월까지 730명의 편입을 결정하였다. 2020년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인원은 106명이며, 이들은 대체복무교육센터에서 3주 동안 교육을 받은 후 대전 교도소 등에 배치되어 복무 중에 있다.

특별부록 04

일과 후 병 휴대전화 사용

1. 추진배경과 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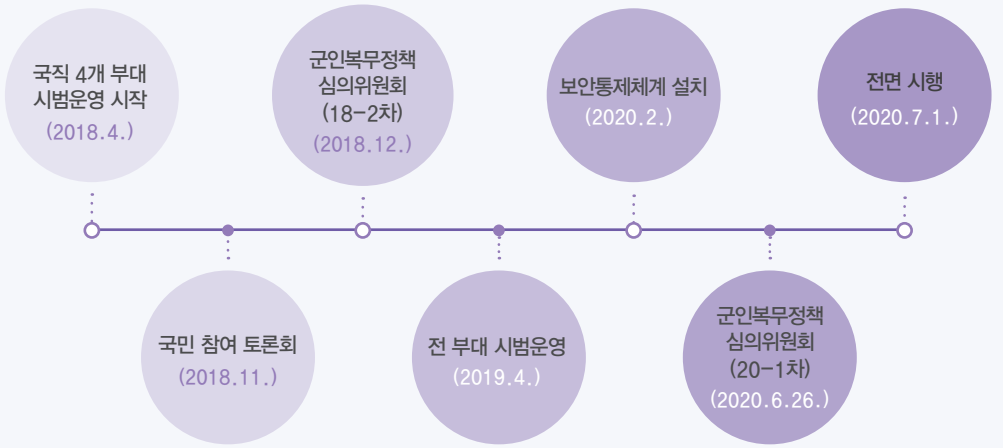
| 추진배경 | 국방부는 「국방개혁 2.0」 추진과 함께 의무복무 병사를 독립된 인격체로 대우하고 군 복무로 인한 고립감 해소, 자기개발, 건전한 여가 선용 등을 위해 일과 이후(휴일포함)에 한하여 휴대전화 사용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일과 후 병 휴대전화 사용'이 민·군 융합을 통한 개방형 국방운영과 인권 존중의 선진병영문화 정착 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정책을 도입하였다.

| 휴대전화 사용 의의 | 휴대전화 사용은 헌법상 기본권인 국민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통신의 자유와 직결된다. 따라서 병 휴대전화 사용은 '군복 입은 민주시민'인 병사들 또한 헌법상 기본권을 보장받고, 사회와의 상호작용을 강화하여 군과 사회를 연결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2. 추진내용

| 추진 경과 | 2018년 4월부터 국방부 직할 4개 부대를 대상으로 일과 후(18:00~21:00), 휴무일(08:30~21:00)에 휴대전화 시범운영을 시작하였고, 2019년 4월에는 GP, 훈련병을 제외한 전 부대를 대상으로 시범운영 후 각종 규정과 제도를 정비하고, 보안통제체계(국방 모바일보안 앱)를 개발 구축하였으며, 27개월간의 시범운영을 분석한 결과 다양한 긍정적인 측면이 확인되어 군인복무정책 심의위원회[1](2020.6.26.)를 거쳐 2020년 7월 1일부로 전면시행하였다.

〈일과 후 병 휴대전화 사용 도입 추진 경과〉



| 규정 및 제도 정비 | 건전한 휴대전화 사용 문화를 정착시키고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을 제·개정하였다. 제·개정된 규정은 자율과 책임 하에 휴대전화를 사용·관리하고, 휴대전화로 인한 사건·사고 발생 시 적절한 책임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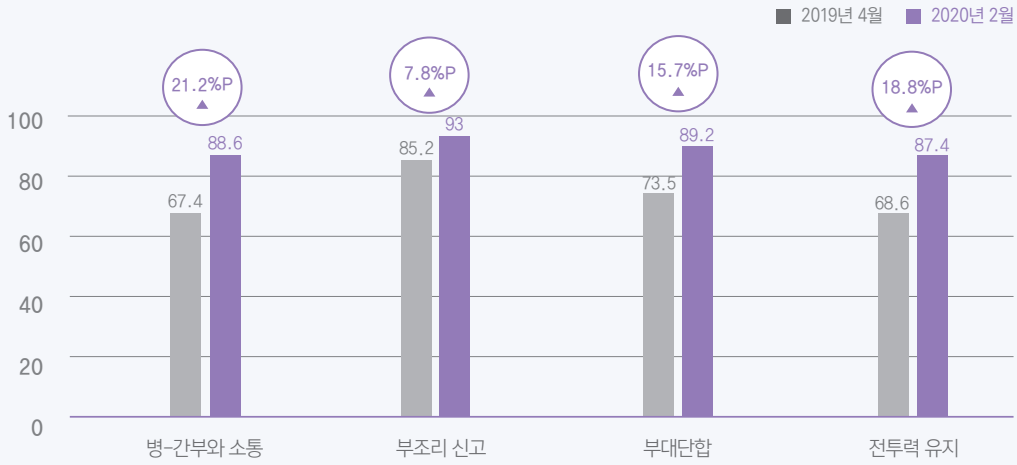
〈휴대전화 사용 관련 각종 제도 및 지침〉

1. 병 휴대전화 사용 「가이드 라인」 제정	4. 「국방보안업무 훈령」 개정
2. 「군 장병 SNS 활용 길라잡이」 개정	5. 「병 휴대전화 사용위반행위 징계처리 지시」 제정
3. 「국방사이버기강 통합관리훈령」 개정	6. 보안통제체계 '국방모바일보안' 설치

3. 성과 및 평가

| 지휘여건의 변화 | 휴대전화 사용을 통해 상호 소통과 병영 부조리 신고가 활성화되어 부대원 간 단합 및 전투력이 향상되었고, 휴대전화 사용을 통한 심리·정서적 안정이 무형의 전력에 영향을 미쳐 전투력 유지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 또한, 강압적 지시 탈피 등 지휘 활동의 투명성과 합리성 향상에 기여하였으며, 코로나19 등 비전투 위기상황에서 장병의 심리적 불안감 해소 등으로 전투력 유지가 가능토록 하여 지휘여건을 보장하였다.

〈휴대전화 시범운영 간 지휘여건 변화에 대한 영향분석 결과(1)〉



출처 : 한국국방연구원(KIDA), 조사대상 및 기간 : 병사 / 2020년 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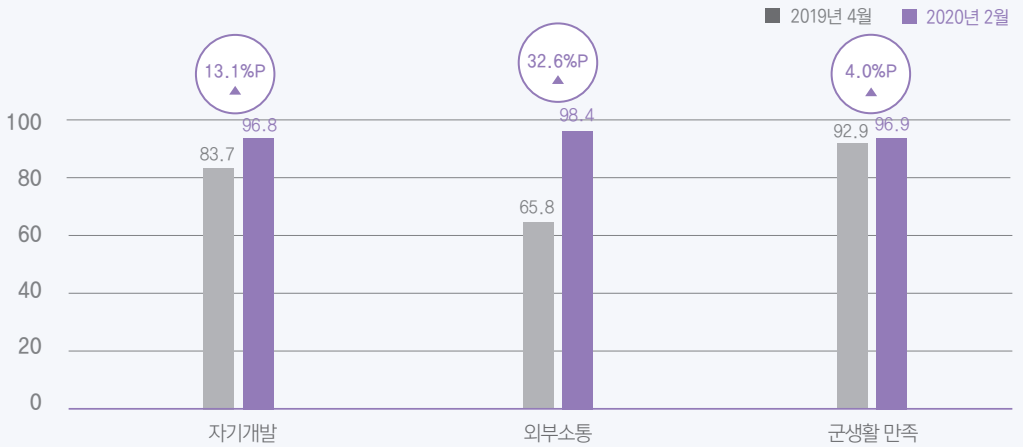
1) 군인복무정책 심의위원회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 8조에 따라 군인의 기본권 보장과 의무, 군인복무기본정책서 수립, 군인 복무와 관련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하고 심의하는 기구이며, 국방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 민간 위촉위원(6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

| 병영생활의 변화 | 휴대전화 사용은 인터넷 강의 및 실시간 정보 획득 등 자기개발 활동과 외부와의 소통을 활성화하여 우울·고립감·스트레스를 해소함으로써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고 대인관계 형성에도 도움이 되어 군 복무 적응에 매개 역할을 하였다. 휴대전화는 장기적으로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병영문화 정착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육군)

〈휴대전화 시범운영 간 지휘여건 변화에 대한 영향분석 결과(2)〉



출처 : 한국국방연구원(KIDA), 조사대상 및 기간 : 병사 / 2020년 2월

| 개인 편익 증대 | 통신비용 절감을 위해 병 맞춤형 요금제를 출시하여 평소 통신비용(공중전화 등)으로 무제한 통화 및 데이터 사용이 가능해짐으로써 상대적인 통신비용이 감소하였고, 대중교통 및 문화생활 예약, 온라인 활동 등의 편익 증대에 기여하였다.

| 역기능 예방 노력 | 일과 후 병 휴대전화 사용 도입에 앞서 사이버 불법도박, 게임중독, 음란물 시청 등 일부 역기능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이에 국방부는 방송통신위원회(한국정보화진흥원), 사행산업통합감독


국방 모바일보안 앱 사용현장 확인


휴대전화 사용 장병 간담회

위원회(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 등 외부 전문기관과 협업하여 전문강사를 통한 예방 교육, 군 맞춤형 콘텐츠 제작 및 활용, 군 전문강사 양성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특히 보안사고 예방을 위해 '국방 모바일보안 앱' 개발 및 설치로 휴대전화 촬영기능을 차단하는 등 보안통제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실효적인 성과를 달성하고 있다.

| 코로나19 극복 | 코로나19로 인해 장기간 휴가, 외출·외박이 통제되면서 병사들은 복무피로감과 스트레스 심화 등 코로나 블루(Corona Blue)[2]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휴대전화 사용은 감염병 관련 정보 검색, 온라인 종교예배, 병영생활전문상담관과의 원격심리상담, 부모 등 가족·친구들과의 영상통화 등을 지원함으로써 병사들이 코로나 블루를 극복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휴대전화 사용이 '코로나 블루'를 한 방에 날려버리는데 큰 역할"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육군 ○○사단에서 근무하는 양○○ 상병은 한시적인 영상통화 허용 덕분에 감염전담병원인 충주 의료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면서 코로나19 확진자들을 돌보고 있는 누나에게 응원 영상 메시지를 보낼 수 있었다. 또한, 프랑스인인 아내와 결혼한 지 2개월 만에 입대하여 육군 ○○사단에서 근무하는 이○○ 병장은 9개월 만에 프랑스 디종에 있는 아내와 영상통화를 함으로써 코로나19 상황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더욱 걱정되었던 아내의 안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

| 청년드림(DREAM), 국군드림 모바일 앱 개발 | 병영 내 휴대전화 사용이 전면 허용되었으나, 청년 장병 자기개발 및 행정 지원을 위한 국방 모바일 플랫폼이 부재하였다. 따라서 국방부는 병사들이 자기개발 및 군 복무 적응 등에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청년드림(DREAM), 국군드림' 모바일 앱을 2020년 1월 1일 개설하였다. '청년드림(DREAM), 국군드림' 모바일 앱은 '청년드림(DREAM), 국군드림' 정책[3]을 모바일로 지원하는 앱으로서, 복지혜택, 취업/창업, 학습, 건강, 리더십 콘텐츠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모바일 휴가증, 휴가 병사 철도예약 기능 등을 통해 편의성을 도모하고 건강한 군 복무를 위해 필요한 기능이나 각 실행기관·부서별로 분산되어 있던 성폭력 피해신고·상담, 병영생활부적응 상담, 심신 건강 테스트 사이트 등 고충 상담 및 소통공간을 앱에 통합하였다. 앞으로도 병사들이 휴대전화로 쉽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고충 상담 플랫폼을 개발하고, 다양한 온라인 복지혜택을 발굴하여 병영생활의 도우미로서 다양하고 질 높은 콘텐츠가 담긴 앱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2) 코로나 블루(Corona Blue)는 '코로나19'와 '우울감(blue)'이 합쳐진 신조어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상에 큰 변화가 닥치면서 생긴 우울감이나 무기력증 등을 의미

3) 장병들의 생산적 군 복무로 동기를 유발하고, 역량을 증진하여 전역 후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범국가적 차원의 정책으로 군 복무경험 학점인정 대학 확대, 병 자기개발 비용 지원, 진로도움프로그램, 창업경진대회 등 포함

특별부록 05

우리 군의 코로나19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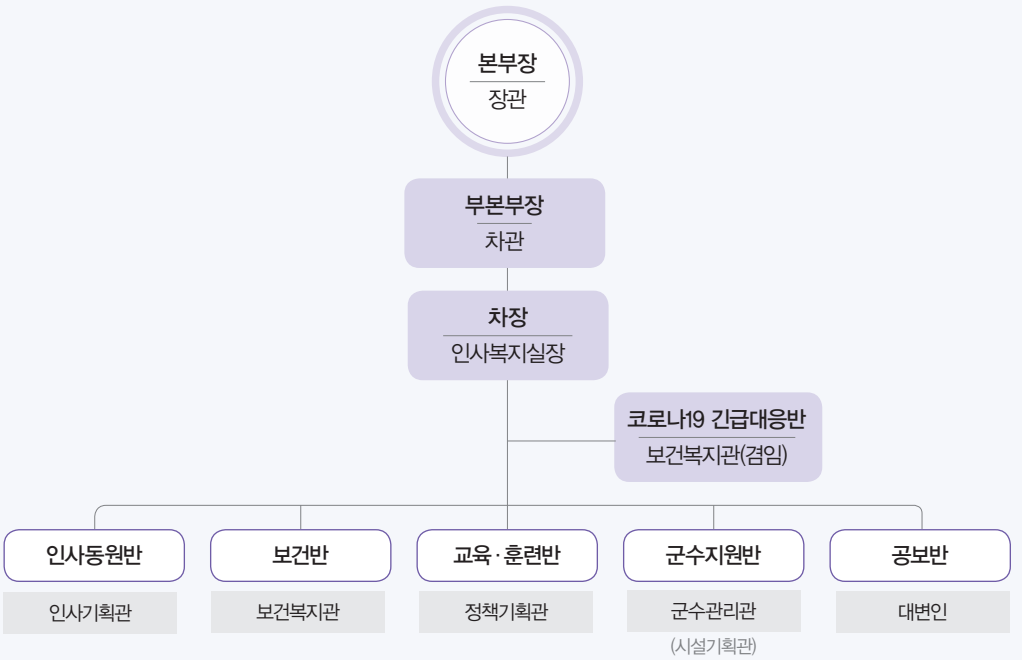
1. 군 코로나19 대응체계

| 국방부 및 각 군 대응체계 | 우리 군은 코로나19 사태를 '전시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군내 유입 및 확산 차단과 범정부 차원의 코로나19 대응 지원 등 국가적 재난 극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2020년 1월 보건당국이 감염병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국방부는 군 감염병 대응의 컨트롤타워로서 '국방부 방역대책본부'를 24시간 체제로 즉시 가동하였다. 또한 2월 대구·경북 지역 집단감염으로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자 '국방부 코로나19 대책본부'로 확대 개편하였다. 이후 7월에는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긴급한 현안에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코로나19 긴급대응반'을 정식 조직으로 신설하여 안정적으로 상황을 관리해 나가고 있다. 각 군과 국군의무사령부 또한 자체적으로 방역대책본부를 구성하여 군내 코로나19 유입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방부는 군내 코로나19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국내외 확진자 발생 현황과 정부의 주요 조치 동향을 공유 및 분석하기 위하여 매일 2회(오전, 오후) 회의를 개최하였다. 특히, 코로나19 관련 중요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방부 장관이 주관하고 주요 지휘관 및 기관장이 참석하는 '긴급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소집하여 전방위적으로 방역 및 대응태세를 면밀히 점검하였다.

〈국방부 코로나19 대책본부〉





제5차 긴급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 (2020년 11월)

| 대외 협력 체계 | 국방부 코로나19 대책본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상시 소통하였다. 또한, 보건당국과의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공무원 및 군 인력을 파견하여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나아가 국내외 민·관·군 전문가들과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하였다. 2020년 4월 방역·검역·의료 분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코로나19 방역전문가 자문 화상회의'를 개최하여 코로나19 발생 추이 분석을 통해 향후 발생 양상을 예측하고 군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방향 등을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아울러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상황에서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을 위해 국군의무사령부를 중심으로 미국, 우즈베키스탄 등과 '국제 군 의무 협력회의'를 개최하였다. 동 회의에서는 각국의 군 의료체계와 코로나19 발생 및 대응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공동협력 방안을 모색하였다.



코로나19 방역전문가 자문 화상회의 (2020년 4월)



한·우즈베키스탄 군 의무 협력회의 (2020년 6월)

2. 군내 감염 유입·확산 차단

| 예방적 격리 및 적극적 진단검사 | 군은 집단생활을 하는 특성상 감염병에 취약하고, 감염 확산이 곧 군의 전투력과도 직결되므로 우리 군은 보건당국 기준보다 더욱 강화된 '예방적 격리' 기준을 적용하고, 적극적인 진단검사를 실시하여 코로나19 유입 및 확산을 최소화하였다.

국방부 「코로나19 관련 장병 격리 및 PCR[1] 검사 지침」에 따르면 보건당국의 격리 기준에 확진자의 2차 접촉자, 확진자와 동선 일치자 등을 예방적 격리 대상자로 추가하고 있다. 예방적 격리자의 경우 1인 격리를 원칙으로 하고, 격리시설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코호트 격리[2] 조치하였다.

〈코로나19 격리 기준〉

보건당국 격리 기준	국방부 자체 예방적 격리 기준
① 확진자 ② 확진자의 접촉자 ③ 의사환자 ④ 조사대상 유증상자 ⑤ 해외귀국 후 14일 이내인 자	① 보건당국 격리 기준 ② 확진자의 2차 접촉자 ③ 확진자와 동선 일치자 ④ 조사대상 유증상자로서 검사결과 음성인 자 중 보건당국이 격리 지시하거나 의료진이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자 ⑤ 해외 귀국 후 14일 이내인 자의 접촉자

우리 군은 감염 유입 및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PCR 검사를 병행하였다. 보건당국 기준 격리자 외에 국방부 자체 예방적 격리 기준 대상자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여 신속히 확진자를 식별하였고, 이를 통해 군내 추가적인 감염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었다. 이 외에도 군내 감염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과 협조하여 5월부터 입영 장정 전원에 대한 PCR 검사를 시행하였고, 11월까지 총 16만여 명을 검사하였다. 해외파병부대 복귀자의 경우에는 입국 후 1차 PCR 검사 실시 및 2주간 격리 조치하고, 격리해제 전에도 2차 PCR 검사를 실시하여 해외로부터의 코로나19 유입을 차단하였다.

| 확진자 발생 시 대응 |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확진자 발생을 인지한 즉시 해당 부대에서 국방부 및 국군의무사령부에 보고하고 관할 지역보건소에 신고하도록 하였으며, 영내외 병력 이동을 통제하였다. 국군의무사령부와 각 군 의무부대는 군 중앙역학조사관을 편성하고 상황에 따라 관할 지역보건소와 합동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확진자 및 접촉자의 동선을 파악하였으며, 접촉자 분류 및 PCR 검사, 방역 및 소독 등 조치를 통해 감염경로를 확인하고 군과 지역사회로의 추가적인 감염 확산을 차단하였다. 확진자는 군 의료기관 또는 민간병원에 입원하거나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였으며, 군은 퇴원 및 부대 복귀까지의 건강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였다. 특히, 장기간 입원과 예방적 격리에 따른 확진자의 우울 및 고립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심리지원을 실시하였고, 부대원들의 완치자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과 차별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장병 대상 교육을 철저히 시행하였다.

| 탄력적 부대관리 | 우리 군은 보건당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맞춰 휴가, 장병 출타, 간부 이동을 통제하였으며, 회식 및 사적모임, 종교활동, 다중밀집시설 방문 등에 대한 부대관리 기본원칙을 수립하고, 현장지휘관 판단하에 세부사항을 유연하게 운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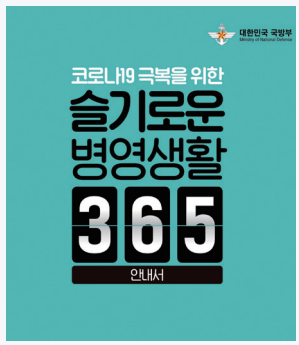
1) '중합효소연쇄반응(PCR) 검사'로 의심 환자의 침이나 가래 등 가검물에서 RNA를 채취해 확진자의 RNA와 비교하여 일정 비율 이상 일치하면 양성을 판정하는 검사방법
2) 감염병을 막기 위해 특정 집단이나 건물 등을 통째로 봉쇄해 격리하는 방역 조치

2020년 2월 21일 군내에서 확진자가 처음 발생하자 국방부는 2월 22일부로 모든 장병의 휴가, 외출, 외박, 면회를 금지하였다. 이는 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보건당국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보다 1개월 앞서 시행한 특단의 조치였다. 이후에는 국내 코로나19 발생 추이와 보건당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휴가와 외출 제한 등에 대한 부대관리 지침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였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고 휴가와 외출이 지속적으로 제한되는 상황에서 장병들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영내 체육 및 단결활동을 실시하고, 심리상담을 적극 지원하며 휴대전화 영상통화를 허용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였다.



공군 20전투비행단 e-스포츠 경연대회 (2020년 3월)

| 생활방역 실천 |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장병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개인 생활방역수칙 준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에 국방부는 2020년 4월 기본지침 이외 업무, 일상, 여가 분야별 세부 지침이 담겨 있는 「장병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수립하였다. 또한 '슬기로운 병영생활 3·6·5 캠페인'을 실시하여, 부대방역(3), 공공방역(6), 개인방역(5) 핵심수칙을 1년 365일 실천함으로써 정상체온 36.5℃를 유지하자는 취지에 대한 장병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슬기로운 병영생활 3·6·5' 캠페인 카드뉴스

〈「장병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개요〉

365일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하여 건강(정상체온 36.5℃) 유지

	부대방역(3)	공공방역(6)	개인방역(5)
기본지침	① 방역관리자 지정 ② 탄력적인 일과 시행 ③ 출입자 확인시스템 구축	① 매일 환기, 소독 ② 손소독제 비치, 활용 ③ 건강거리 두기(1~2m) ④ 부대출입 시 발열 체크 ⑤ 동료에 대한 배려 ⑥ 다중밀집시설 이용 자제	① 마스크 착용 생활화 ② 30초 손 씻기 생활화 ③ 기침예절 준수 ④ 개인 물품 사용하기 ⑤ 아프면 즉각 보고
세부지침	업무(7) ① 일반(사무·행정·작업 등) ② 회의장 ③ 지휘통제·훈련·경계 ④ 민원업무 ⑤ 행사장 ⑥ 교육장 ⑦ 시험장	일상(7) ① 생활관 ② 군 주거시설 ③ 교통수단 ④ 병영식당 등 ⑤ 병영도서관 등 ⑥ 의료기관 ⑦ 종교시설	여가(10) ① 군 숙박시설 ② 군마트 등 ③ 야외활동 ④ 이·미용실 ⑤ 목욕·샤워 ⑥ 공연·영화 ⑦ 노래방 ⑧ 실내체육시설 ⑨ 사이버지식방 등 ⑩ 면회실

| 혼합검체 분석법 채택 | 국군의학연구소는 대구·경북지역 확진자 급증에 따라 검사 정확도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대량 검사를 신속하게 실시하는 방안을 모색하였고, 코로나19 진단검사에 '혼합검체 분석법(Pooling method)'을 적용하였다. 일반적으로 검체를 채취하고 혼합하는 방식은 검체가 희석되어 정확도가 낮아지는 문제가 있었으나, 혼합검체 분석법은 검체 채취 단계에서 하나의 배지에 면봉을 혼합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하나의 배지에 최대로 들어갈 수 있는 면봉 개수를 최대 5개로 제한하여 정확도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군은 2020년 3월부터 장병 중 음성 확률이 높은 인원을 대상으로 혼합검체 분석법을 시행하였고, 이를 통해 검사 횟수는 줄이면서 검사량을 3~4배로 늘리는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도입 초기 군 안팎의 우려가 있었으나, 질병관리청에서 650회에 걸친 평가시험으로 혼합검체 분석법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또한 4월에는 질병관리청이 해당 분석법을 코로나19 정식 진단검사법으로 채택하여 요양병원 등 집단검사에 활용하고 있다.

| 교육·훈련 조정 시행 | 국방부는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국내 코로나19 확산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비군훈련 제도가 도입된 이래 최초로 2020년 예비군 소집훈련을 미실시하였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비대면 원격교육을 추진하였다.



예비군훈련 원격교육 시스템

이에 따라 2020년 예비군훈련 대상자 전원은 훈련 이수 처리되었고, 11월부터 화생방 등 전투기술 과제, 예비군 복무 등 소개교육 과제로 구성된 자율참여식 원격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필수 교육훈련 소요와 부대별 여건을 고려하여 각종 교육·훈련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시행하였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부대훈련, 신병교육, 학교교육, 외래강사 초빙, 견학·현장실습, 해외 연합훈련 등에 대한 기본원칙을 수립하였고, 세부사항은 현장지휘관 판단 하에 탄력적으로 운용하도록 하였다.

교육·훈련 중 외래강사와 민간인 접촉은 최소화하였으며, 실내교육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소규모 단위로 조정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였다. 해외 연합훈련의 경우에는 작전성 검토 외에 코로나19 영향도 평가를 반드시 실시하도록 지침을 강화하였다.

| 코로나19 앱 개발 | 국군의무사령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전 세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코로나19 관련 앱을 개발하고 누구나 무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였다.


'코로나19 체크업 앱'을 개발한 허준녕 대위

2020년 3월 현직 군의관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환자 중증도 분류 앱', 검사대상 여부에 대한 자가진단 앱인 '코로나19 체크업 앱', 지정한 사람들과 체온 등 건강상태를 공유하고 기록하는 '우리건강 지킴이 앱'을 개발하였다.

이 중 '코로나19 체크업 앱'은 세계보건기구 DHA 사업[3]의 코로나19 솔루션으로 등재되기도 하였다. 이후 국군의무사령부는 코로나19 관련 모든 앱 서비스를 종합 및 보완하여 '코로나19 체크업 앱' 통합버전을 개발하였고, 국내외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코로나19 체크업 앱' 화면

3. 범정부 코로나19 대응 지원

| 국방신속지원단 | 우리 군은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국민의 군대'로서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하여 범정부 차원의 코로나19 대응을 적극 지원하였다. 국방부는 전국적인 수송 소요 발생 등 기존의 재난과는 다른 양상의 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20년 3월부터 '국방신속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국방신속지원단은 지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민 지원체계를 일원화하고, 5개 전담팀(방역, 물자, 수송, 시설, 복지)과 지역전담부대를 상설화하여 가용한 인력과 장비, 물자를 즉각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전담팀은 전국을 4개 권역(서울·경기, 대구·경북, 대전·충청, 기타)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였고, 지역전담부대는 전국 시·도 단위에 '군 신속지원 협력관'을 파견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요청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지원 소요를 파악하여 적시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전담팀별로 군 지원 소요, 실적, 계획을 일일 단위로 점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였다.



국방신속지원단 일일 상황평가회의 (2020년 3월)

| 의료인력 및 병상 지원 | 국내 코로나19 확산으로 의료인력 및 병상 부족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우리 군은 2020년 1월부터 11월까지 4만 1천여 명의 군의관과 간호인력을 검역소, 병원, 임시생활시설, 선별진료소 등에 파견하였다. 특히, 지난 2월 대구·경북지역에 신규로 임용되는 공중보건의사 742명의 군사교육 시기를 조정하고 조기 임용하여 즉시 현장 대응인력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또한, 군의관으로 입영 예정인 의무사관후보생 중 대구·경북지역 의료지원 희망자 96명의 군사교육기간을 단축하여 파견하고, 국군간호사관학교 졸업식 및 임관식 일정을 조정하여 신임간호장교 75명 전원을 임관과 동시에 국군대구병원에 투입하는 등 확진자 치료에 적극 기여하였다. 군 의료인력은 현장에서 검체 채취, 진단검사, 역학조사, 확진자 치료 등의 임무를 수행하였다.

또한, 424개의 군 병원 음압병상을 코로나19 확진자 치료용으로 제공하여 병상 부족 문제 해소에 기여하였다. 국군수도병원은 국가지정음압병상(9병상)을 경증~중등증 환자용으로 지원하다가 중환자용으로

3) 최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의료 관련 분야에 도움을 주는 각국의 솔루션을 찾아 전 세계에 제공하는 사업 (DHA : Digital Health Atlas)



국군의무사령부 검체 채취 지원 (2020년 5월)



국군외상센터 음압병상 확진자 입원치료 훈련 (2020년 9월)

전환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국군수도병원 외상센터는 경증~중등증 환자용 음압병상(40병상)을 지원하고 있다. 국군대구병원(303병상)과 국군대전병원(72병상)은 지난 2월 국가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되어 대구·경북지역 확진자 치료에 기여하였다. 특히, 국군대구병원은 신속한 음압병상 확보를 위해 군사작전에 준하는 태세로 일일 최대 100여 명의 공병 인력을 투입하여 7일 만에 98개의 일반병상을 303개의 음압병상으로 전환하고 300여 명의 확진자를 입원 치료하였다.



마음방역 상담관 대구·경북 상담 지원 (2020년 4월)

| 인력 및 시설 지원 | 우리 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신설된 생활치료센터, 임시생활시설, 선별진료소 등의 운영을 위해 2020년 1월부터 11월까지 22만여 명의 인력을 지원하여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였다. 먼저, 경증환자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생활치료센터와 해외에서 입국한 단기체류 외국인 및 교민들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임시생활시설에서 식사 배달, 물품 분류 등 확진자의 생활편의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2~3월 대구·경북 지역에는 전국에서 자원한 병영생활전문상담관 13명이 '마음방역 상담관'으로 파견되어 자가격리로 심리적 불안감을 호소하는 시민 8천여 명에 대하여 총 2천여 시간 동안 심리상담을 지원하였다.

또한, 지난 2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교민이 귀국함에 따라 격리 기간 중 교민들의 생활 공간이 필요한 상황에서 공항 및 의료기관과의 접근성, 시설 규모, 편의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방어학원을 교민 임시생활시설로 제공하였다.

| 검역 및 방역 지원 | 우리 군은 해외 입국자에 의한 감염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2020년 1월부터 11월까지 전국 20개 공항·항만 검역소에 10만여 명의 검역 및 통역 인력을 지원하였다. 검역 지원인력이 가장 많이 투입된 인천공항은 수도군단과 9공수특전여단을 중심으로 현장지휘소를 운영함으로써 공항 내 범정부지원단과 원활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였고, 검역대별 인원 편성, 임무 부여 및 교육, 작전 지원 등 제반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였다. 나아가 지원 장병의 개인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단 한 명의 감염자 없이 무사히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

또한, 도로 및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 요양시설 및 학교 등 유동 인원이 많아 위험하고 코로나19 감염



인천국제공항 군 검역지원 (2020년 6월)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특수장비 활용 정밀방역 실시

에 취약한 곳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방역' 지원을 실시하였으며, 2월부터 11월까지 3만 3천여 명의 인력과 소독기, 제독차량 등 2만 4천여 대의 장비가 투입되었다. 3월에는 대구·경북지역의 방역 소요가 급증함에 따라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육군 7군단 및 미사일사령부를 중심으로 1천여 명의 인력과 3백여 대의 장비를 투입하여 코호트 격리시설 등 고위험지역에 대한 방역을 실시하였다. 이후에도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가 화생방 작전에 운용되는 특수장비를 이용하여 정밀방역을 실시하는 등 방역조치가 필요한 곳에 적극적으로 군의 인력과 장비를 투입함으로써 코로나19 방역을 지원하였다.

| 수송 지원 | 우리 군은 코로나19로 인한 긴급한 방역물자 수송, 재외교민 귀국 등 위급한 상황 발생 시 수송전담팀을 신설하고, 군 수송기, 대통령 전용기, 공중급유수송기 등을 투입하여 수송을 지원하였다. 2020년 2월 마스크 수급 문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보급하는 방역 및 구호물자를 전국에 신속히 전달하기 위해 우리 군은 360여 대의 차량을 동원하여 마스크 1천 3백만 장과 방호복 81만 세트 등 방역물품, 생수를 비롯한 각종 구호물품을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자치단체 등에 수송하였다. 3월에는 국방부, 외교부, 주미얀마대사관 간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공군 수송기를 긴급 투입하여 미얀마에서 제작된 방호복 8만 세트를 21시간 만에 수송하여 적시에 의료진에게 방호복을 보급할 수 있었다.

또한 해외에 소재한 우리 국민과 교민의 귀국을 지원하였다. 2월 일본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였을 때 대통령 전용기를 이용하여 크루즈선에 승선한 우리 국민 7명이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5월에는 아프리카 남수단에 파견된 한빛부대 11진과 12진 교대 과정에서 전세기로 아프리카 교민 60명의 귀국을 지원하였고, 7월에는 감염병의 위협에 노출된 이라크 파견



공군 수송기 미얀마 방역물자 수송 (2020년 3월)



일본 크루즈선 승선 국민 이송 지원 (2020년 2월)

건설근로자 293명의 무사 귀환을 위하여 최초로 다목적 공중급유수송기를 투입하였다.

| 영농활동 지원 | 농촌지역은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 근로자 유입 중단,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자원봉사 인력 감소 등 일손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우리 군은 2020년 4월부터 11월까지 2만 4천여 명의 인력을 투입하여 영농활동을 지원하였다. 각 군은 작전 및 임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모내기, 농기계 수리, 배꽃 인공수분 등을 지원하여 농가에 큰 힘이 되었다.


육군 귀리쌀 재배지원 (2020년 5월)

특히, 지원 과정에서 장병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전에 지원 지역의 안전도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장병 대상 안전교육을 철저히 시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작업 중에는 마스크 등 개인방역물품을 충분히 보급하고, 올바른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하였다.

| 군 단체헌혈 |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자 전국 혈액 보유량이 3일 이하로 감소하는 등 국가적으로 혈액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4]이 반복되었다. 우리 군은 '사랑의 헌혈운동 캠페인', '헌혈 릴레이' 등 다양한 방법으로 2020년 1월부터 11월까지 총 5천 3백여 개 부대에서 28만여 건의 단체헌혈을 실시함으로써 따뜻한 생명나눔을 실천하였다. 국방부는 헌혈 과정에서 장병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채혈전담팀을 구성하고 채혈직원은 반드시 사전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건강상태를 일일 2회 모니터링하고 채혈직원과 헌혈자의 마스크 착용을 면밀히 관리하였다.


육군 사랑의 헌혈운동 (2020년 9월)

4. 코로나19 상황에서의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유지

우리 군은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국가적 위기상황에서도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고강도 감염차단 대책을 시행하고 각종 작전·훈련을 탄력적으로 실시하였다. 먼저 지휘통제실, 비상대기실 등 핵심 군사시설에 대하여 차별화된 방역대책을 시행하고, 예비시설을 준비하여 기존 시설이 오염되더라도 지휘통제 및 비상대기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비상대기전력, 감시·대응전력 등 핵심전력은 시·공간을 분리 운영함으로써 감염 등으로 전력운영이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다른 대기전력

4) 적정 혈액 보유량은 5일 이상

이 정상운용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였다.

국내 확진자가 급증하던 시기에는 작전활동을 선별적으로 조정하여 시행하였다. 침투·국지도발 훈련은 감염 예방대책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주둔지 내에서 절차훈련을 시행하였고, 시기·규모·방법 등을 부대별 여건에 맞추어 실시하였다. 각급 부대순찰 및 점검 활동은 지휘관 위주로 실시하여 인원 이동을 최소화하였고, 녹음기 취약시기를 고려하여 민간인 접촉이 없는 범위 내에서 방역대책 강구 하에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하였다.



우리 군의
코로나19 대응

주변국 군사력 현황

총괄

구분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총 병력	1,373,050	900,000	2,035,000	247,150
육군	481,750	280,000	975,000	150,850
해군	337,100	150,000	250,000	45,350
공군	325,900	165,000	395,000	46,950
기타	해병대 186,300 해안경비 42,000	공수 45,000 전략미사일 50,000 지휘/지원 180,000 철도군 29,000 특수군 1,000 준군사 554,000	로켓군 120,000 전략지원군 175,000 기타 120,000	통막 4,000

육군

구분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사단		10		9(여단 98)		집단군 13		9(여단 6)
전차(대)	MBT	5,689		13,000		5,850		617
보병전투차량(대)	IFV	4,931		13,660		5,800		68
정찰차(대)	RECCE	2,545		2,700		350(경전차)		111
장갑차(대)	APC	18,547		12,100		3,950		795
견인포(문)		1,339		12,565		2,484		340
자주포(문)		998		5,870		2,140		172
다련장포(문)		600		4,082		1,570		99
박격포(문)		2,507		4,130		2,800		1,105
대전차 유도무기(기)	SP	1,133	GUN	2,526	SP RCL GUN	1,000 3,966 1,788	SP	37
지대공미사일(기)		1,183		1,520		524		327
헬기(대)		3,875		-		1,015		385
항공기(대)		211		-		10		7

해군

구분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전술잠수함(척)		53	39	55	21
전략핵잠수함(척)		14	10	4	–
항공모함(척)		11	1	2	–
순양함(척)		24	4	–	–
구축함(척)		67	13	28	40
호위함(척)		19	15	52	11
초계함·연안전투함정(척)		84	118	209	6
소해함(척)		11	43	54	25
상륙지휘함/상륙함(척)		2 / 32	20	49	3
상륙정(척)		131	28	67	8
지원함(척)		12	269	148	18
전투기(대)		716	157	318	–
헬기(대)		692	198	113	122
해병전력	해병사단(개)	해병원정군 3	여단 3	여단 7	
	전차(대)	447	300	75	
	보병전투차량(대)	488	1,061	10	
	상륙돌격장갑차(대)	1,200	–	152	
	병력수송장갑차(대)	207	400	–	
	정찰장갑차(대)	2,579	–	–	
	야포(문)	1,452	383	40	
	대전차미사일(기)	106	–	–	
	UAV·ISR(대)	180	–	–	
	전투기(대)	432	–	–	
	틸트로터 수송기	309	–	–	
	헬기(대)	435	–	–	

공군

구분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전략폭격기(대)		139	138	176	–
폭격기(대)		–	–	794	–
정찰기(대)	ISR	40	58	51	14
지휘기(대)		4	11	5	–
전투기(대)	FTR·FGA·ATK	1,383	888	899	338
수송기(대)	TPT	331	442	336	57
급유기(대)	TKR/TPT	237	15	13	6
조기경보기(대)	AWE&C·EW	31	9	13	18
훈련기(대)	TRG	1,126	227	1,012	247
헬기(대)		136	822	53	54
민간예비(대)	국제/국내선 민항기	553	–	–	–
전자전기(대)	ELINT	22	34	18	3

*출처 : 「The Military Balance 2020」 (국제전략문제연구소, 2020년 2월)

세계 주요 국가의 국방비 현황

2019년 기준

국가	GDP(억 달러)	국방비(억 달러)	GDP 대비 국방비(%)	병력(천 명)	국민 1인당 국방비(달러)
대한민국	16,463	425	2.43	579	816
미국	224,400	6,846	3.19	1,380	2,063
일본	51,500	486	0.94	247	386
중국	141,000	1,811	1.28	2,035	130
러시아	16,400	482	2.94	900	340
대만	5,860	109	1.87	163	464
영국	27,400	548	2.00	148	837
프랑스	27,100	523	1.93	204	773
독일	38,600	485	1.26	181	604
이스라엘	3,880	193	5.82	170	2,254
이집트	3,020	34	1.54	439	33
사우디아라비아	7,790	784	10.06	227	2,331
호주	13,800	255	1.85	57	1,074
터키	7,440	81	1.09	355	99
말레이시아	3,650	33	0.91	113	103
태국	5,290	71	1.34	361	103
싱가포르	3,630	113	3.11	51	1,846
캐나다	23,000	187	1.08	67	518

*출처 : 「The Military Balance 2020」(국제전략문제연구소, 2020년 2월), 대한민국은 정부통계 기준

일반부록 3

연도별 국방비 현황

연도	국방비(억원)		GDP대비 국방비(%)		정부재정대비 국방비(%)		국방비 증가율(%)	
	본예산	추경예산	본예산	추경예산	본예산	추경예산	본예산	추경예산
1991	7조 4,524	7조 4,764	3.07	3.08	27.4	23.8	12.3	12.6
1992	8조 4,100	8조 4,100	3.03	3.03	25.1	25.1	12.8	12.5
1993	9조 2,154	9조 2,154	2.92	2.92	24.2	24.2	9.6	9.6
1994	10조 0,753	10조 0,753	2.70	2.70	23.3	23.3	9.3	9.3
1995	11조 0,744	11조 0,744	2.53	2.53	21.3	21.3	9.9	9.9
1996	12조 2,434	12조 2,434	2.49	2.49	21.1	20.8	10.6	10.6
1997	13조 7,865	13조 7,865	2.54	2.54	20.4	20.7	12.6	12.6
1998	14조 6,275	13조 8,000	2.72	2.57	20.8	18.3	6.1	0.1
1999	13조 7,490	13조 7,490	2.32	2.32	17.2	16.4	△6.0	△0.4
2000	14조 4,390	14조 4,774	2.22	2.22	16.7	16.3	5.0	5.3
2001	15조 3,884	15조 3,884	2.18	2.18	16.3	15.5	6.6	6.3
2002	16조 3,640	16조 3,640	2.09	2.09	15.5	14.9	6.3	6.3
2003	17조 4,264	17조 5,148	2.08	2.09	15.6	14.8	6.5	7.0
2004	18조 9,412	18조 9,412	2.09	2.09	16.0	15.8	8.7	8.1
2005	20조 8,226	21조 1,026	2.17	2.20	15.5	15.6	9.9	11.4
2006	22조 5,129	22조 5,129	2.24	2.24	15.5	15.3	8.1	6.7
2007	24조 4,972	24조 4,972	2.25	2.25	15.7	15.7	8.8	8.8
2008	26조 6,490	26조 6,490	2.31	2.31	15.2	14.8	8.8	8.8
2009	28조 5,326	28조 9,803	2.37	2.40	14.5	14.2	7.1	8.7
2010	29조 5,627	29조 5,627	2.24	2.24	14.7	14.7	3.6	2.0
2011	31조 4,031	31조 4,031	2.26	2.26	15.0	15.0	6.2	6.2
2012	32조 9,576	32조 9,576	2.29	2.29	14.8	14.8	5.0	5.0
2013	34조 3,453	34조 4,970	2.29	2.30	14.5	14.3	4.2	4.7
2014	35조 7,056	35조 7,056	2.28	2.28	14.4	14.4	4.0	3.5
2015	37조 4,560	37조 5,550	2.26	2.27	14.5	14.3	4.9	5.2
2016	38조 7,995	38조 8,421	2.23	2.23	14.5	13.9	3.6	3.4
2017	40조 3,347	40조 3,347	2.20	2.20	14.7	14.2	4.0	3.8
2018	43조 1,581	43조 1,581	2.27	2.27	14.3	14.2	7.0	7.0
2019	46조 6,971	46조 6,971	(2.43)	(2.43)	14.1	14.0	8.2	8.2
2020	50조 1,527	48조 3,782	(2.62)	(2.52)	14.1	12.4	7.4	3.6

*GDP : 한국은행의 국민계정 2015년 기준
*2020년은 기획재정부 명목 GDP 예상치 기준 (기획재정부 경제정책방향, 2020년 12월)
※ 명목 GDP : GDP를 구하는 해의 생산물에 당해연도 가격을 적용

일반부록 4

남북 군사력 현황

2020년 12월 기준

구분				한국		북한	
병력(평시)			육군		42만여 명		110만여 명
			해군		7.0만여 명 (해병대 2.9만여 명 포함)		6만여 명
			공군		6.5만여 명		11만여 명
			전략군		–		1만여 명
			계		**55.5만여 명**		**128만여 명**
주요전력	육군	부대	군단(급)	(해병대 포함)	13		15
			사단	(해병대 포함)	37		84
			여단(독립여단)	(해병대 포함)	34		117
		장비	전차	(해병대 포함)	2,130여 대		4,300여 대
			장갑차	(해병대 포함)	3,000여 대		2,600여 대
			야포	(해병대 포함)	6,000여 문		8,800여 문
			다련장 / 방사포	(해병대 포함)	270여 문		5,500여 문
			지대지 유도무기		발사대 60여 기	(전략군)	발사대 100여 기
	해군	수상함정	전투함정		100여 척		430여 척
			상륙함정		10여 척		250여 척
			기뢰전함정(소해정)		10여 척		20여 척
			지원함정		20여 척		40여 척
		잠수함정			10여 척		70여 척
	공군		전투임무기		410여 대		810여 대
			감시통제기	(해군 포함)	70여 대	(정찰기)	30여 대
			공중기동기(AN-2포함)		50여 대		350여 대
			훈련기		190여 대		80여 대
			헬기(육·해·공군)		660여 대		290여 대
			예비병력		310만여 명 (사관후보생, 전시근로소집, 전환/대체 복무 인원 등 포함)		762만여 명 (교도대, 노농적위군, 붉은청년근위대 등 포함)

*남북 군사력 비교를 위해 육군 부대·장비 항목에 타군 부대·장비도 포함하여 산출
*북한군 야포문수는 보병 연대급 화포인 76.2㎜를 제외하고 산출
*남북 군사력 현황은 양적 비교만 제시하였음. 군사력을 실질적으로 비교하기 위해서는 양적 비교뿐만 아니라 장비성능 및 노후도, 훈련수준, 합동전력 운용개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육군 여단 비교의 경우 군단급 이상 제대에 편성된 독립여단인 포병, 공병, 항공여단 등을 포함하여 비교한 것임. 따라서 북한 2개 기계화군단 예하에 있었던 14개 여단은 해당 군단이 사단으로 변경됨에 따라 북한 육군 여단 수치에 미포함
*북한 특수작전군 병력은 북한 육군·해군·공군 등에 포함되어 있음

일반부록 5

남북 경제지표 현황

구분	한국		북한		한국/북한	
	2018년	2019년	2018년	2019년	2018년	2019년
명목GNI(조 원)	1,905.8	1,935.7	35.9	35.6	53.1배	54.4배
1인당GNI(만 원)	3,693.0	3,743.5	142.8	140.8	25.9배	26.6배
경제성장률(%)	2.9	2.0	-4.1	0.4	-	-
무역총액(억 달러)	11,400.6	10,455.8	28.4	32.4	400.9배	322.2배
총인구(천 명)	51,607	51,709	25,132	25,250	2.1배	2.0배

*출처 : 한국은행

*GNI (Gross National Income, 국민총소득) : 1993년부터 유엔(UN),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 및 주요 선진국에서 GNP 대신 사용 (GNI≒GNP)

일반부록 6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결의 현황

구분	배경	주요 내용(요약)
1695호 (2006.7.15.)	장거리미사일 발사 (2006.7.5.)	· 대량살상무기(WMD)·미사일 활동 관련 물자, 기술, 금융자원 이전을 방지하고 감시할 것을 요구
1718호 (2006.10.14.)	1차 핵실험 (2006.10.9.)	· 금수조치, 화물검색 도입, 제재대상 자산동결 및 여행통제 · 유엔 안전보장위원회 산하에 북한제재위원회 설치
1874호 (2009.6.12.)	2차 핵실험 (2009.5.25.)	· 소형무기 수입을 제외한 전면 무기 금수 · 대량살상무기(WMD)·미사일 활동에 기여 가능한 금융거래 금지 · 북한제재위원회 지원을 위한 전문가 패널 설치
2087호 (2013.1.22.)	장거리미사일 발사 (2012.12.12.)	· 공해상 의심선박에 대한 검색 강화 기준 마련 추진 · 'catch-all' 성격의 대북 수출통제 강화 · 북한 금융기관 관련 모든 활동에 대한 감시 강화 촉구
2094호 (2013.3.7.)	3차 핵실험 (2013.2.12.)	· 핵·미사일 관련 금수 품목 확대 · 금융제재 강화(결의 위반 북한 은행의 해외 신규활동 금지 등)
2270호 (2016.3.2.)	4차 핵실험 (2016.1.6) /장거리미사일 발사 (2016.2.7.)	· 북한과의 군·경 협력 금지 · 북한 행·발 화물 검색 의무화, 제재 대상 선박 또는 불법활동 연루 의심 선박 입항 금지 · 북한 은행의 해외 지점·사무소의 90일 내 폐쇄 · 북한산 광물(석탄, 철, 금 등) 수입 금지 조치 도입
2321호 (2016.11.30.)	5차 핵실험 (2016.9.9.)	· 북한과의 과학·기술협력 금지 · 북한에 대한 항공기·선박 대여 및 승무원 제공 금지, 북한 행·발 여행용 수하물 검색의무 명시 · 북한 내 외국 금융기관 전면 폐쇄 · 수출금지 광물(은, 동, 아연, 니켈) 추가 및 조형물 수출 금지 · 북한산 석탄 수출 상한제 도입
2356호 (2017.6.2.)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2017.5.14.)	· 제재 대상 지정 확대
2371호 (2017.8.5.)	탄도미사일 발사 (2017.7.4., 7.28.)	· 대량살상무기(WMD) 및 재래식무기 이중용도 통제 품목 추가 · 북한제재위원회에 금지활동과 연관된 선박 지정 권한 부여 및 회원국의 동 선박 입항 불허 의무 · 회원국들의 북한 해외노동자 고용제한 · 북한 석탄, 철, 철광석 수출 전면 금지 · 북한 납 및 납광석, 해산물 수출 금지
2375호 (2017.9.11.)	6차 핵실험 (2017.9.3.)	· 대량살상무기(WMD) 및 재래식무기 이중용도 통제 품목 추가 · 기국 동의하 금지품목 의심 선박에 대한 검색 촉구 · 북한 해외노동자에 대한 노동허가 부여 금지 · 대북 유류 공급 제한 · 북한의 섬유 수출 금지
2397호 (2017.12.22.)	화성-15형 발사 (2017.11.29.)	· 영토 및 영해에서 금수품 운송 또는 금지활동 연루 의심 선박 대상 나포, 검색, 억류 · 북한 해외노동자 24개월 내 송환 · 대북 유류 공급 제한 · 북한의 식료품, 농산품, 기계류, 전자기기, 광물 및 토석류, 목재류, 선박 수출 금지 · 대북 산업용 기계류, 운송수단, 청갈 및 여타 금속류 수출 금지 · 조업권 거래 금지 명확화

일반부록 7

북핵문제 관련 주요 비핵화 합의

합의	주요 내용(요약)
① 제네바 기본합의 (1994. 10. 21.)	· 흑연감속로를 경수로로 대체하기 위한 협력 · 북미 간 정치·경제 관계의 완전 정상화 지향 · 비핵화된 한반도의 평화·안보를 위한 협력 · 핵 비확산체제 강화를 위한 협력
② 9·1 공동성명 (2005. 9. 19.)	· 한반도의 검증 가능한 비핵화 재확인 · 에너지, 교역, 투자 분야에서의 경제협력 증진 약속 · 동북아의 항구적 평화와 안정을 위한 공동 노력에 약속 · 단계적 방식의 합의 이행 조치 합의
③ 2·13합의 (2007. 2. 13.)	· 북한 내 핵시설의 폐쇄·봉인 및 국제원자력기구 사찰관 복귀, 모든 핵프로그램 목록 작성 협의 · 북미/북일 관계 정상화를 위한 양자대화 개시 · 대북 경제·에너지·인도적 지원 · 직접적 관련 당사국 간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협상
④ 10·3합의 (2007. 10. 3.)	· 북한이 모든 현존 핵시설 불능화 및 모든 핵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 완료 · 북한은 핵 물질, 기술 및 노하우를 이전하지 않는다는 공약 재확인 · 중유 100만 톤 상당 대북 경제·에너지·인도적 지원 제공
⑤ 2·29합의 (2012. 2. 29.)	· 북, 비핵화 사전조치 실행 · 미, 24만 톤의 영양지원 제공 · 미, 대북 적대의사 없음을 확인 · 북미관계 개선 및 문화·교육·체육 등 민간교류 확대
⑥ 판문점선언 (2018. 4. 27.)	· 공동번영 및 자주통일 ·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 · 한반도의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 ·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핵 없는 한반도 실현
⑦ 북미공동성명 (2018. 6. 12.)	·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 한반도의 항구적·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공동 노력 · 북한의 「판문점선언」 재확인 및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노력 · 전쟁포로, 전쟁실종자의 유해수습 및 신원확인 유해송환
⑧ 평양공동선언 (2018. 9. 19.)	·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 교류·협력 증대 ·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 영구적 폐기 · 미측의 상응조치에 따라 영변 핵시설 영구적 폐기

일반부록 8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경과 및 평가

1. 핵 개발 경과 및 평가

| 핵 기반시설 구축 | 북한은 6·25전쟁이 끝난 직후 전후 복구와 동시에 원자력에 관한 기초연구, 인력 양성 등 핵에너지 활용을 위한 기반체계를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1955년 김일성종합대학 물리학부에 핵물리강좌를 개설하였고 1956년에는 국가과학원(구 과학원)에 핵물리실험실을 설치하였다. 특히 1956년 「북·소 원자력협력협정」을 체결하면서 구소련 드브나(Dubna) 핵연구소에 과학자들을 파견하여 선진기술 확보 및 전문인력 양성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1959년에는 중국과도 원자력협력협정을 체결하였다. 1963년 구소련의 도움을 받아 연구용 원자로를 도입하였고, 이를 토대로 1965년부터 평북 영변에 대규모 핵단지를 조성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동시에 평산, 순천, 박천 등의 우라늄 광산 개발과 채광된 우라늄을 정련하기 위한 시설 등도 건설하였다. 이처럼 북한은 풍부한 우라늄 자원을 바탕으로 핵시설들을 차례대로 건설하기 시작하였다.

| 핵 개발 본격화 | 북한은 1980년대 들어 무기급 핵물질 생산시설 구비, 우수한 핵 전문인력 양성, 핵실험장 건설 등 핵무기 개발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장하면서 본격적인 핵 개발에 착수하였다. 영변에 조성된 핵단지에 플루토늄 생산에 필요한 핵심시설인 원자로, 재처리시설, 핵연료제조공장 등이 차례대로 완공되었다. 북한은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한 5MWe 흑연감속용 원자로를 1986년 완공하여 가동하였으며,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할 수 있는 방사화학실험실을 1985년에 착공, 1989년부터 가동하였다. 이와 동시에 영변 단지 내 50MWe 흑연감속용 원자로가 1995년 완공을 목표로 착공되었고, 태천에는 200MWe 흑연감속용 원자로 건설 계획을 수립하였다.


영변에 위치한 5MWe 원자로

1989년 프랑스 상업 위성에 의해 영변 핵단지가 노출되면서 북한의 비밀 핵 개발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후 국제사회의 압력에 의해 1991년 북한과 국제원자력기구 간 안전조치협정이 체결되었고, 이에 따라 1992년 국제원자력기구의 핵사찰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 결과 북한의 핵활동 신고 내역에 중대한 불일치가 발견되면서 북한의 핵 개발 의혹은 더욱 논란이 되었다. 추가 확인을 요구하는 국제원자력기구의 특별사찰 요청은 북한의 「핵비확산조약(NPT)」 탈퇴 선언으로 이어졌고 클린턴 행정부는 군사 옵션까지 검토하였으나 1994년 북미 간 「제네바 기본합의」[1] 타결로 북핵문제가 극적으로 봉합[2]됨으로써 북한의 핵활동은 이후 2002년까지 한동안 동결되었다.

1)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북미 간 3차례 고위급회담을 통해 합의문을 채택 (1994.10.21.)
2) 북한의 핵개발 동결·포기를 대가로 미국은 중유 제공, 경수로 2기 건설, 북미 관계 정상화 등에 합의

그러나 북한은 「제네바 기본합의」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중반에 파키스탄의 지원을 받아 비밀리에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우라늄 농축 추진에 대해 북한은 한동안 존재 자체를 부인하였으나, 2010년 미국의 헤커 박사를 초청하여 우라늄 농축시설을 대외에 전격 공개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우려를 가중시켰다.

2002년 부시 행정부는 「제네바 기본합의」의 불완전성과 북한의 우라늄 농축활동 의혹을 제기하며 「제네바 기본합의」 파기를 선언하였고 북한에 대한 중유 지원과 경수로 건설 중단을 선언하였다. 이에 북한도 합의 파기를 선언하고 국제원자력기구 사찰관 추방, 영변 핵시설의 동결 해제, 사용후핵연료봉의 재처리 조치를 취함으로써 핵물질 생산을 전격적으로 재개하였다. 이후 북한은 2003년과 2005년 두 차례에 걸친 재처리를 통해 상당량의 플루토늄을 확보하였으며, 2005년 2월 핵무기 보유 선언에 이어 2006년 10월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최초의 지하 핵실험을 감행하였다.

당시 우리나라 기상청에 의해 탐지된 인공지진파의 강도는 약 3.9mb로 측정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평가된 핵폭발 위력은 1kt 미만이었다. 이러한 핵실험 결과에 기초하여 분석된 북한의 핵기술 수준은 실전에 운용하기에는 미흡하였으나 최소한의 핵폭발장치를 제조하고 폭발시킬 수 있는 단계에는 도달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 핵능력 고도화 | 북한은 1차 핵실험 이후 핵탄두의 위력 증대, 미사일 탑재, 대량생산 등에 초점을 맞추고 핵능력 고도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였다. 북한은 6자회담이 진행되던 2008년 말까지 영변 핵단지 내 주요 핵시설에 대한 불능화 조치를 단행하며 핵물질 생산을 잠정 중단하였다. 그러나 검증 문제에 대한 의견 불일치로 6자회담이 더 이상 개최되지 못하면서 2009년에 북한은 불능화가 진행 중인 핵시설을 재가동하였고, 같은 해 5월에는 2차 핵실험까지 감행하였다. 2차 핵실험에서 보여준 핵폭발 위력은 1차 핵실험보다 한층 증가한 약 3~4kt의 위력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이는 과거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핵무기의 위력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실전에 사용하기에는 여전히 기술 수준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북한 핵실험 현황〉

구 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일시	2006.10.9.(월). 10:36	2009.5.25.(월). 09:54	2013.2.12.(화). 11:57	2016.1.6.(수). 10:30	2016.9.9.(금). 09:30	2017.9.3.(일). 12:29
규모(mb)	3.9	4.5	4.9	4.8	5.0	5.7
위력(kt)	약 0.8	약 3~4	약 6~7	약 6	약 10	약 50

2012년 이후 북한은 경제·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을 내세우면서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위한 행보에 박차를 가하였다. 그 결과 2013년 2월, 2016년 1월과 9월, 2017년 9월 등 4차례의 추가 핵실험을 감행하였다. 특히 6차 핵실험에서 보여준 핵폭발 위력은 약 50kt으로 이는 과거 핵실험에 비해 현저히 증대되어 수소탄 시험을 시행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수차례 핵실험 직후 북한은 핵보유국임을 강조하면서 '핵탄두의 표준화·규격화·소형화·경량화·다종화 달성'을 주장[3]하였고 핵탄두와 미사일의 대량생산 및 실전배치 의사 등을 표명하였다.

2. 미사일 개발 경과 및 평가

북한은 핵·고폭탄·화생무기의 장거리 투발능력을 보유하기 위해 1960년대 중반부터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에 인력과 자원을 투입하여 왔다. 1976년 이집트로부터 스커드-B를 도입 후 역설계를 통해 스커드 미사일의 자체 생산에 성공하였고, 이를 개량하여 1988년에 작전배치를 완료하였다. 1990년대에는 사거리 1,300km인 노동미사일을 개발하여 작전배치를 완료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1998년에는 대포동 1호를, 2006년과 2009년, 2012년, 2016년에는 대포동 2호를 위성 발사 명분하에 발사하였다. 또한 구소련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기술을 도입하여 사거리 3,000km 이상의 중거리 미사일인 무수단을 개발하여 시험발사 없이 2007년에 작전배치하였고, 다양한 종류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지속하였다.

2016년에는 신형 고출력 미사일 엔진인 백두산 엔진 개발에 성공하여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탄도미사일 개발의 기반을 구축하였다. 2017년 5월과 8월, 9월에는 중거리탄도미사일급으로 평가되는 화성-12형을 시험발사하였고, 2017년 7월과 11월에 대륙간탄도미사일급으로 평가되는 화성-14형과 화성-15형을 시험발사하였다.

또한 2016년 8월에는 구소련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하여 고래급 잠수함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북극성)을 시험발사하였으며, 2017년 이를 지상형으로 개조한 북극성-2형을 2차례 시험발사하였다. 2019년에는 다양한 형태의 신형 고체추진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플랫폼(차륜형, 궤도형)을 개발하여 시험발사하였고, 신형 수중사출장비를 이용하여 북극성-3형도 시험발사(2019.10.2.)하였다.

3) 북한이 주장하는 표준화·규격화·소형화·경량화·다종화의 의미(2013.5.21. 노동신문 / 2016.9.9. 핵무기연구소 성명)
- 표준화 : 여러 종류의 미사일에 탑재될 수 있도록 핵탄두를 표준화하는 것을 의미
- 규격화 : 대량생산이 가능하도록 핵탄두와 그 부품을 규격화하는 것을 의미
- 소형화 : 핵탄두의 폭발력을 15kt 이하인 무기를 만드는 것을 의미
- 경량화 : 미사일 탑재를 위하여 핵탄두의 총체적 질량을 가볍게 만드는 것을 의미
- 다종화 : 해당 군사적 목적 달성을 위해 여러 가지 종류의 핵무기를 만드는 것으로 핵반응 방식에 따라 원자·수소·중성자탄, 파괴력·사거리에 따라 전략·전술·전역 핵무기 등으로 구분 가능

〈북한 미사일 시험발사 현황〉

2019년 1월 1일 이후

일자	주요내용
2019. 5. 4.	함남 호도반도에서 19-1 SRBM(차륜형)(북 주장, 신형전술유도무기) 발사
2019. 5. 9.	평북 구성에서 19-1 SRBM(궤도형)(북 주장, 신형전술유도무기) 발사
2019. 7. 25.	함남 호도반도에서 19-1 SRBM(차륜형)(북 주장, 신형전술유도무기) 발사
2019. 7. 31.	강원 원산에서 19-2 미상 미사일(북 주장, 신형대구경조종방사포) 발사
2019. 8. 2.	함남 영흥에서 19-3 미상 미사일(북 주장, 신형대구경조종방사포) 발사
2019. 8. 6.	황남 과일에서 19-1 SRBM(차륜형)(북 주장, 신형전술유도탄) 발사
2019. 8. 10.	함남 함흥에서 19-4 SRBM(북 주장, 새무기) 발사
2019. 8. 16.	강원 통천에서 19-4 SRBM(북 주장, 새무기) 발사
2019. 8. 24.	함남 선덕에서 19-5 SRBM(차륜형)(북 주장, 초대형방사포) 발사
2019. 9. 10.	평남 개천에서 19-5 SRBM(차륜형)(북 주장, 초대형방사포) 발사
2019. 10. 2.	강원 문천 인근 해상에서 19-6 SLBM((북 주장, 북극성-3형) 발사
2019. 10. 31.	평남 순천에서 19-5 SRBM(차륜형)(북 주장, 초대형방사포) 발사
2019. 11. 28.	함남 연포에서 19-5 SRBM(차륜형)(북 주장, 초대형방사포) 발사
2020. 3. 2.	강원 원산에서 19-5 SRBM(차륜형)(북 주장, 방사탄) 발사
2020. 3. 9.	함남 선덕 인근에서 19-5 SRBM(차륜형)(북 주장, 전선장거리포) 발사
2020. 3. 21.	평북 선천에서 19-4 SRBM(북 주장, 전술유도무기) 발사
2020. 3. 29.	강원 원산에서 19-5 SRBM(궤도형)(북 주장, 초대형방사포) 발사

〈북한 미사일 종류 및 제원〉

구분	SCUD-B/C	19-1 SRBM	19-4 SRBM	19-5 SRBM	SCUD-ER	노동	무수단
사거리(km)	300~500	약 600	약 600 미만	약 400	약 1,000	1,300	3,000 이상
탄두중량(kg)	1,000	미상	미상	미상	500	700	650
비고	작전배치	시험발사	시험발사	시험발사	작전배치	작전배치	작전배치

구분	대포동 2호	북극성/북극성-2형	북극성-3형	화성-12형	화성-14형	화성-15형
사거리(km)	10,000 이상	약 1,300	약 2,000	5,000	10,000 이상	10,000 이상
탄두중량(kg)	500~1,000	650	미상	650	미상	1,000
비고	발사	시험발사	시험발사	시험발사	시험발사	시험발사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공통된 인식으로부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을 군사적으로 철저히 이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포괄적으로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무력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였다.

쌍방은 군사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평화적 방법으로 협의·해결하며, 어떤 경우에도 무력을 사용하지 않기로 하였다.

쌍방은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도 상대방의 관할구역을 침입 또는 공격하거나 점령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였다.

쌍방은 상대방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훈련 및 무력증강 문제, 다양한 형태의 봉쇄·차단 및 항행방해 문제, 상대방에 대한 정찰행위 중지 문제 등에 대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하여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쌍방은 군사적 긴장 해소 및 신뢰구축에 따라 단계적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합의한 「판문점선언」을 구현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다양한 실행 대책들을 계속 협의하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2018년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각종 군사연습을 중지하기로 하였다.

지상에서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5km 안에서 포병 사격훈련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해상에서는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의 수역, 동해 남측 속초 이북으로부터 북측 통천 이남까지의 수역에서 포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을 중지하고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폐쇄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공중에서는 군사분계선 동·서부 지역 상공에 설정된 비행 금지구역 내에서 고정익항공기의 공대지 유도무기사격 등 실탄사격을 동반한 전술훈련을 금지하기로 하였다.

③ 쌍방은 2018년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상공에서 모든 기종들의 비행금지구역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기로 하였다.

고정익항공기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동부지역(군사분계선표식물 제0646호부터 제1292호까지의 구간)은 40km, 서부지역(군사분계선표식물 제0001호부터 제0646호까지의 구간)은 20km를 적용하여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다.

회전익항공기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0km로, 무인기는 동부지역에서 15km, 서부지역에서 10km로, 기구는 25km로 적용한다.

다만, 산불 진화, 지·해상 조난 구조, 환자 후송, 기상 관측, 영농지원 등으로 비행기 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측에 사전 통보하고 비행할 수 있도록 한다. 민간 여객기(화물기 포함)에 대해서는 상기 비행금지구역을 적용하지 않는다.

④ 쌍방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우발적인 무력충돌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취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지상과 해상에서는 경고방송 → 2차 경고방송 → 경고사격 → 2차 경고사격 → 군사적 조치의 5개 단계로, 공중에서는 경고교신 및 신호 → 차단비행 → 경고사격 → 군사적 조치의 4개 단계의 절차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쌍방은 수정된 절차를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⑤ 쌍방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우발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연락체계를 가동하며,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통보하는 등 모든 군사적 문제를 평화적으로 협의하여 해결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실질적인 군사적 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비무장지대 안에 감시초소(GP)를 전부 철수하기 위한 시범적 조치로 상호 1km 이내 근접해 있는 남북 감시초소 들을 완전히 철수하기로 하였다. 【붙임 1】

② 쌍방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비무장화하기로 하였다. 【붙임 2】

③ 쌍방은 비무장지대 내에서 시범적 남북공동유해발굴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붙임 3】

④ 쌍방은 비무장지대 안의 역사유적에 대한 공동조사 및 발굴과 관련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계속 협의하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군사적 대책을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2004년 6월 4일 제2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서 서명한 '서해 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 관련 합의를 재확인하고, 전면적으로 복원·이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서해 해상에서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기로 하였다. 【붙임 4】

③ 쌍방은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에 출입하는 인원 및 선박에 대한 안전을 철저히 보장하기로 하였다.

④ 쌍방은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 내에서 불법어로 차단 및 남북 어민들의 안전한 어로활동 보장을 위하여 남북 공동순찰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교류협력 및 접촉·왕래 활성화에 필요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남북관리구역에서의 통행·통신·통관(3통)을 군사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동·서해선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③ 쌍방은 북측 선박들의 해주직항로 이용과 제주해협 통과 문제 등을 남북군사공동위에서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④ 쌍방은 한강(임진강) 하구 공동이용을 위한 군사적 보장 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붙임 5】

5. 남과 북은 상호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강구해 나가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남북군사당국자사이에 직통전화 설치 및 운영 문제를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협의·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③ 쌍방은 남북군사당국 간 채택한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하며, 그 이행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해 나가기로 하였다.

6.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①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 및 보충할 수 있다.

② 합의서는 2부 작성되었으며, 같은 효력을 가진다.

2018년 9월 19일

대 한 민 국 조 선 민 주 주 의 인 민 공 화 국

국 방 부 장 관 인 민 무 력 상

송 영 무 조 선 인 민 군 대 장 노 광 철

【붙임 1】

비무장지대 내 상호 감시초소(GP) 철수

1. 비무장지대 내 모든 감시초소를 완전히 철수하기로 합의하고, 다음과 같은 단계로 나누어 진행한다.

① 1단계 : 모든 화기 및 장비 철수
② 2단계 : 근무인원 철수
③ 3단계 : 시설물 완전파괴
④ 4단계 : 상호 검증

2. 비무장지대내 모든 감시초소 철수를 위한 제반 조치들은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 진행한다.

3. 비무장지대 안에서 역사적 의미를 가지는 사적물과 유적, 유물들은 민족공동의 재산으로 원래 상태를 보존하여 관리한다.

4. 비무장지대 안의 1km 거리 내에 근접해 있는 양측의 11개 감시초소를 시범적으로 철수한다.

① 지역별로 철수할 양측 감시초소들은 다음과 같다.

– 동부지역
- 군사분계선표식물 제1273호와 제1278호 사이의 쌍방초소
- 군사분계선표식물 제1123호와 제1135호 사이의 쌍방초소
- 군사분계선표식물 제0799호와 제0808호 사이의 쌍방초소

– 중부지역
- 군사분계선표식물 제0652호와 제0660호 사이의 쌍방초소
- 군사분계선표식물 제0679호와 제0683호 사이의 쌍방초소
- 군사분계선표식물 제0717호와 제0724호 사이의 쌍방초소

– 서부지역
- 군사분계선표식물 제0023호와 제0027호 사이의 쌍방초소
- 군사분계선표식물 제0034호와 제0043호 사이의 쌍방초소
- 군사분계선표식물 제0155호와 제0166호 사이의 쌍방초소
- 군사분계선표식물 제0212호와 제0216호 사이의 쌍방초소
- 군사분계선표식물 제0233호와 제0240호 사이의 쌍방초소

② 양측의 11개 감시초소들에 대한 철수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한다.

【붙임 2】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비무장화

1. 첫 단계로 남·북·유엔사 3자 협의체를 구성하여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비무장화 조치 방안을 협의·이행한다.

① 남·북·유엔사(이하 3자로 표기)는 2018년 10월 1일부터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 지뢰를 20일 안에 제거한다.

② 3자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지뢰제거가 완료된 때로부터 5일 내에 쌍방초소들과 인원 및 화력장비를 전부 철수한다.

③ 3자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안에 불필요한 감시장비를 철수하고, 협의를 통해 필요한 감시장비를 추가 설치하며, 관련 정보를 상호 공유한다.

④ 3자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비무장화 조치 완료 상태를 2일간 공동으로 검증한다.

⑤ 3자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조치 완료 이후의 공동관리기구 구성 및 임무, 공동관리기구 운영 방식 등과 관련한 제반 사항들을 협의하여 결정한다.

2. 비무장화 조치 이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관리운영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경비근무조직 및 초소 설치

- 경비근무는 양측이 각각 35명 이하의 비무장 인원으로 수행한다.
- 경비근무 인원의 교대 및 순찰과 관련한 사항은 쌍방이 각자 규정하고 상호 통보한다.
- 양측 경비근무 인원들은 노란색 바탕에 파란색으로 「판문점 민사경찰」이라고 쓴 너비 15cm의 완장을 왼팔에 착용한다.
- 공동경비구역 북측지역 「판문점 다리」 끝점에 남측 초소를, 남측지역 진입초소 일대에 북측 초소를 새로 설치하며, 남과 북이 근접하여 근무한다.

② 건물 관리

-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 자기측 건물들은 각측이 관리한다.
-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 건물을 보수 또는 새로 건설해야 할 경우, 공동관리기구의 승인하에 진행한다.

③ 참관(방문)

-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 대한 참관은 09시부터 17시까지의 사이에 진행한다.
-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에서 관광객들과 참관 인원들의 자유왕래를 허용한다.

【붙임 3】

비무장지대 시범적 남북공동유해발굴

1. 시범적 공동유해발굴지역 설정과 지뢰제거

① 시범적 공동유해발굴지역 설정

– 시범적 공동유해발굴지역은 강원도 철원지역 비무장지대의 군사분계선 표식물 제0489호~제0497호 구간에서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설정한다.

시범적 공동유해발굴지역의 끝점좌표는 다음과 같다.

• 북측 : ㄱ) 북위 38° 17' 35" 동경 127° 05' 22"
ㄴ) 북위 38° 18' 23" 동경 127° 06' 52"

• 남측 : ㄱ) 북위 38° 16' 38" 동경 127° 06' 04"
ㄴ) 북위 38° 17' 26" 동경 127° 07' 33"

– 공동유해발굴지역에 있는 양측의 감시초소와 장애물들은 전부 철수한다.

② 지뢰제거

– 시범적 공동유해발굴지역의 지뢰와 폭발물은 2018년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완전히 제거한다.

– 쌍방은 비무장지대 자기측 경계선으로부터 군사분계선 방향으로 지뢰제거 작업을 진행한다.

– 쌍방은 지뢰제거 작업을 10시부터 12시까지, 15시부터 17시까지 총 4시간 진행하며, 경우에 따라 작업시간을 단축 또는 연장한다.

– 쌍방은 시범 공동유해발굴지역내 지뢰가 제거된 구역의 외곽선을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표식물을 설치하며, 그에 대하여 상대측에 통보한다.

– 지뢰제거에 필요한 장비와 자재 이용은 상호 협조한다.

– 지뢰제거 과정에서 발굴되는 유해들은 수습하여 공동으로 감식, 협의, 처리한다.

2. 공동유해발굴지역내 남북도로 개설

① 비무장지대 공동유해발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범적 공동유해발굴지역내에 남북간 12m 폭의 도로를 개설한다.

② 도로는 각각 비무장지대 각측 경계선으로부터 군사분계선 방향으로 나가면서 지뢰제거 작업을 선행한 후 개설하며, 군사분계선상에서 연결한다.

③ 굴착기를 비롯하여 도로건설에 필요한 자재와 장비 이용에 대해 상호 협조한다.

④ 도로개설 작업 인원과 장비들의 수량과 식별표식, 작업시간은 각기 편리하게 정하며 이를 상대측에 통보한다.

⑤ 도로연결과 관련하여 일방의 인원이나 차량들이 군사 분계선을 통과해야 할 경우에는 상대측에 사전에 통보한다.

⑥ 도로개설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한다.

3. 공동유해발굴단 구성과 운영

① 공동유해발굴단의 구성

- 쌍방은 대령급을 책임자로 하여 각각 5명씩의 유해발굴 공동조사 및 현장지휘조를 구성한다.
- 유해발굴단은 쌍방에서 각각 80~100명 정도로 구성한다.
- 쌍방은 2019년 2월 말까지 공동유해발굴단 구성을 완료하여 상호 통보한다.

② 공동유해발굴단의 운영

- 유해발굴 공동조사 및 현장지휘조는 비무장지대의 시범적 공동유해발굴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실무적 문제들을 공동으로 협의하여 해결한다.
- 시범적 공동유해발굴지역에서의 공동유해발굴은 2019년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의 기간동안 진행한다.
- 시범적 공동유해발굴지역에서의 유해발굴 작업 시간은 계절 특성을 고려하여 9시부터 12시까지, 15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이 합의하여 단축 또는 연장한다.

4. 안전보장 및 공동관리

① 공동유해발굴 과정에서 상대측 인원들의 신변안전을 침해하는 일체 행위를 금지한다

② 공동유해발굴지역에 무기, 폭발물 등 신변안전을 위협하는 물자 및 장비의 반입을 불허한다.

③ 공동유해발굴지역에서 상대측을 자극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④ 공동유해발굴지역에서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복구 대책을 수립하여 상호 협력한다.

⑤ 공동유해발굴이 완료된 후 중앙군사분계선으로부터 자기측 경계선까지의 지역과 도로에 대해서는 각측이 책임지고 관리하며, 도로이용과 관련한 문제는 추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붙임 4】

서해 해상에서 우발적 충돌방지 및 평화수역 설정, 안전한 어로활동 보장

1. 평화수역 설정

1) 평화수역 범위

평화수역 범위는 쌍방의 관할하에 있는 섬들의 지리적 위치, 선박들의 항해밀도, 고정항로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되, 구체적인 경계선은 남북군사공동위에서 협의하여 확정하기로 하였다.

2) 평화수역 출입 질서

① 평화수역에는 쌍방의 비무장선박들만 출입한다. 해군 함정들이 평화수역으로 불가피하게 진입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상대측에 사전 통보하고 승인하에 출입한다.

② 평화수역 내에서 활동하는 선박 수는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선박들의 평화수역 출입 및 활동 계획은 48시간 전에 상호 통보한다.

③ 평화수역 출입시간은 4월부터 9월까지는 7시부터 18시, 10월부터 3월까지는 8시부터 17시까지로 하며,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3) 평화수역에서의 행동 질서

① 평화수역에서 남측 선박은 평화수역 북경계선을, 북측선박은 평화수역 남경계선을 넘지 않으며, 평화적 활동으로만 한정한다.
평화수역을 벗어나 상대측 수역에서 상대측에 대한 적대행위를 하는 선박들에 대해서는, 적대행위를 즉시 제지시키고 상대측에 통보한 후 남과 북이 협의하여 처리한다.

② 평화수역에서 쌍방 선박들은 식별을 위하여 가로 900mm×세로 600mm 크기의 한반도기를 남측 선박은 마스트 좌현 기류줄에, 북측 선박은 마스트 우현 기류줄에 게양한다.

③ 평화수역에서 심리전행위를 비롯하여 상대측을 자극하는 일체 언행을 하지 않는다.

④ 평화수역에서 민간선박들 사이에 우발적인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자기측의 모든 선박 등을 평화수역 밖으로 철수시키고, 남북 군통신선 혹은 남북군사실무회담을 통하여 사태를 수습하며 재발방지 대책을 철저히 세운다.

4) 평화수역에서 인도주의적 협력 문제

개별 인원과 선박, 함정, 항공기 등이 기관고장, 조난, 기상악화로 인한 항로미실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평화수역에 들어가는 경우 상대측에 연락 수단을 통해 즉시 통보한다.
평화수역 안에서 상기와 같은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상호 협력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5) 평화수역 활용

쌍방은 서해 평화수역을 군사적 긴장완화·신뢰구축 및 공영·공리 원칙에 맞게 해양측량·공동조사, 민간선박 운항 등 평화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계속 협의하기로 하였다.

2. 시범 공동어로구역 설정

1) 시범 공동어로구역 범위

시범 공동어로구역 범위는 남측 백령도와 북측 장산곶 사이에 설정하되, 구체적인 경계선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확정하기로 하였다.

2) 시범 공동어로구역 운용질서

① 시범 공동어로구역에서 조업하고자 하는 어선들은 기관(소속) 명칭, 선장(대표자), 선원명단, 어선명, 출입경로, 조업일자 등이 기록된 출입신청 문건을 출입예정 2일(48시간) 전까지 상대측에 제출한다.

② 쌍방 해당기관은 어선의 출항예정 1일(24시간) 전까지 출입 신청서 검토 결과(동의 여부)를 상대측에 통보하되, 출입이 허가되지 않는 선박에 대해서는 타당한 사유와 함께 통보한다.

③ 쌍방 해당기관은 시범 공동어로구역 내에서 일정 기간 연속조업을 신청한 어선들에 대하여 최대 5일간까지 공동어로구역내 체류를 허가한다.

④ 시범 공동어로구역에 출입하는 어선들은 상호 승인한 경로를 이용하며 쌍방 어업지도선의 통제를 받도록 한다.

⑤ 향후 평화수역 내에 공동어로구역을 확대하여 설정하는 경우, 남북 어선들의 공동어로구역 출입 질서와 관련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시행한다.

3. 불법어선 차단 및 안전한 어로활동 보장을 위한 공동순찰

1) 남북공동순찰대 조직

① 쌍방은 해경정(경비정)으로 '남북공동순찰대'를 조직한다. 공동순찰정은 250톤급 이하로 한다.

② 공동순찰을 실시하는 순찰정은 쌍방이 각각 3척(총 6척)으로 하며 합의에 따라 척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남북공동순찰대의 순찰정들은 가로 900mm×세로 600mm 크기의 황색 깃발을 선박 마스트 상단 부분에 게양한다.

2) 남북공동순찰대의 임무

① 서해 해상의 시범 공동어로구역을 통하여 평화수역에 진입하는 제3국 불법 어선들을 차단하며, 상호 긴밀하게 협조하여 단속·처리한다.

② 시범 공동어로구역에 출입하는 남북 어선들과 어업지도선 들의 항행질서를 통제한다.

③ 기관고장, 조난, 기상악화 등으로 표류하는 쌍방의 선박들을 구조하고 인도주의적 원칙에 따라 돌려 보낸다.

3) 남북공동순찰대의 운용

① 남북공동순찰대의 순찰정들은 공동어로구역 내로 진입을 금지한다. 다만, 공동어로구역내 조난, 인명구조 등 긴급한 상황 발생 시에는 상대측에 통보 후 진입할 수 있다.

② 공동순찰은 조업 일정과 제3국 불법조업선박 차단 등과 연계하여 필요에 따라 쌍방이 합의한 날짜에 진행한다.

③ 공동순찰은 주간(4월부터 9월까지는 8시부터 18시까지, 10월부터 3월까지는 9시부터 17시까지)에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자기측 공동순찰대의 순찰계획은 24시간 전에 상대측에 통보한다.

야간에 발생하는 상황은 쌍방이 협의하여 처리한다.

④ 공동순찰은 공동어로구역 외곽선을 따라 순방향 또는 역방향으로 상호 합의하여 기동한다.

⑤ 남북공동순찰대는 각기 자기측 상부의 지휘에 따라 행동하며, 쌍방 순찰정간 교신, 호출부호 등은 2004년 「6.4합의서」를 준용하여 적용한다.

⑥ 공동순찰 과정에서 상대측을 자극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하지 않으며, 상황 발생 시 즉시 순찰정을 격리시키고 상호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

【붙임 5】

한강(임진강) 하구 공동이용의 군사적 보장

1. 공동이용수역 설정

① 남측의 김포반도 동북쪽 끝점으로부터 교동도 서남쪽 끝점까지, 북측의 개성시 판문군 임한리로부터 황해남도 연안군 해남리까지 70㎞에 이르는 한강(임진강) 하구 수역을 공동이용수역으로 설정한다.

② 공동이용수역 안에서 제기되는 모든 군사 실무적 문제들은 쌍방이 협의하여 처리한다.

2. 공동조사

① 공동이용수역에 대한 현장조사는 2018년 12월 말까지 공동으로 진행한다.

② 공동조사단은 쌍방에서 해당 전문가를 포함하여 각각 10여 명의 인원들로 구성한다.

③ 공동조사에 필요한 장비, 기재, 선박 이용 문제는 상호 협조한다.

④ 현장조사 인원들은 상대측을 자극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금지하며, 폭발물 및 각종 무기, 총탄 등을 휴대하지 않는다.

⑤ 공동조사 중 자연재해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가까운 상대측 지역에 정박할 수 있으며 상대측 인원들의 신변 안전과 편의를 보장한다.

3. 공동이용수역에서의 군사적 보장 대책

① 공동이용수역에 출입하는 인원 및 선박(선박의 형태, 길이 및 톤수, 출입목적, 탑승인원 수, 적재화물)에 대한 관련 내용을 작성하여 서해지구 남북 군통신선을 통해 1일전에 상호 통보한다.

② 공동이용수역내 쌍방이 합의한 위치에 각측 통행검사소를 설치하고 출입인원과 선박들에 대한 통행검사를 진행한다.

③ 공동이용수역에 항행하는 선박들은 상대측 경계선으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못한다.

④ 공동이용수역에서 선박들의 통행시간은 육안으로 관측이 가능한 계절적 특성을 고려하여 4월1일부터 9월30일까지는 7시부터 19시까지, 10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는 8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⑤ 공동이용수역에서 항행하는 인원 및 선박들은 정찰 및 감시 장비, 폭발물 및 각종 무기, 총탄 등을 일체 휴대하지 않는다.

⑥ 공동이용수역에서 상대측을 자극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하지 않는다.

⑦ 쌍방 선박은 상호 충돌을 피하기 위한 항행신호 교환을 제외하고 상대측 선박과 연락 및 통신을 할 수 없다.

⑧ 공동이용수역 내에서 선박이나 인원이 표류하거나 기타 요인에 의하여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인도주의 원칙에서 상호 협력한다.

4. 공동이용수역에서의 남북 교류협력 관련 군사적 보장 대책은 쌍방 협의를 통해 마련해 나간다.

일반부록 10

남북 군사관계 일지

2018. 12. 1. ~ 2020. 11. 30.

북측	일자	남측
군인(1명), 22사단 DMZ 경유 월남(귀순)	2018.12.1.	
	12.4.	시범철수GP(11개소) 상호검증통로개설(12.4.~11.)
	12.9.	남북, 한강하구 공동수로조사 완료(11.5.~12.9.)
	12.12.	남북, 시범철수 GP 상호현장검증(각 11개소)
	12.28.	서해지구 군통신선 정상화 물품 북측 전달(개성)
신년사 발표 * 남북합의사항 철저이행, 협력·교류 확대발전	2019.1.1.	정부, 환영입장 발표
북중 정상회담(1.7.~10. 김정은 위원장 방중)	1.8.	
김영철·폼페이오 고위급회담(워싱턴)	1.18.	백악관, 2차 북미정상회담 2월 말 개최 발표
	1.28.	유엔 안보리, 남북공동유해발굴 대북제재 면제
	1.30.	남북군사실무접촉, 한강하구 해도 전달
북미 정상회담 실무협상(2.6.~8.,평양) * 북(김혁철)·미(비건)	2.6.	
김정은 위원장, 건군절 인민무력성 방문 * "혁명무장역량의 정예화를 추진"	2.8.	
북미 정상회담(2.27.~28., 하노이) * 비핵화 협상 결렬	2.27.	
리용호 외무상, 긴급 심야 기자회견 * 제재 전면해제가 아닌 일부해제 주장	3.1.	
	3.2.	한미 국방장관 전화통화, 'KR/FE' 종료 발표
	3.3.	한미 국방당국, '19-1 동맹'연습 발표
	3.4.	한미, '19-1 동맹'연습(3.4.~12.)
	3.6.	정부, '을지태극연습'(5월 예정) 발표
	3.8.	유엔안보리, 남북이산가족 화상상봉 대북제재 면제
최선희 외무성 부상, 북미회담 관련 기자회견 * "이번과 같은 협상은 할 계획이 없음"	3.15.	
	4.1.	화살머리고지 남측 추가지뢰제거·기초발굴 개시
	4.3.	DMZ 평화둘레길 3개소 개방 발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1차 회의(4.11.~12.)	4.11.	
김정은 위원장,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 * "북남관계를 공고한 화해 협력 관계로 전환"	4.12.	
	4.22.	한미, 연합공중훈련(2주) *기존 맥스선더 대체

북측	일자	남측
북러 정상회담(블라디보스톡) 조평통 대변인 담화, 연합공중훈련 비난 * 한미 연합공중훈련은 군사분야 합의 위반 인민무력상 연설, 평화체제 관련(모스크바) * "정전협정에서 평화체제로 이동해야"	4.25.	
	4.27.	정부, 평화퍼포먼스 개최(JSA) 정부, 고성 'DMZ 평화의길'(1단계) 개방
	5.1.	정부, JSA 남측지역 견학 재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발사(원산) * 김정은 위원장, 동부 화력타격훈련 지도	5.4.	정부, 북 단거리 발사체 발사 대응 * "「9·19 군사합의」 취지에 어긋남"
외무성 대변인 문답 * "정상적인 군사훈련의 일환" 장령급군사회담 대표단 대변인 문답 * 우리 군 당국 비난, "군사분야 합의에 대해 일언반구할 체면이 없음"	5.8.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발사(평북 구성) * 김정은 위원장, 서부 화력타격훈련 지도	5.9.	정부, 북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대응 *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완화 노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매우 우려됨"
	5.10.	대통령 취임 2주년 대담 * "이런 행위가 계속된다면 대화·협상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북에 경고"
	5.27.	을지태극연습(5.27.~30.)
	6.1.	정부, 철원 'DMZ 평화의길' 개방
	6.3.	한미 국방장관회담, UFG연습종료 발표
	6.11.	화살머리고지 유엔군 추정 유해 봉영식 해군, 동해 표류 북 어선 예인·북송
	6.15.	북한 어선(4명 탑승) 발견(동해 삼척항)
	6.18.	남→북, 북측 주민(2명) 송환(JSA)
북중 정상회담(6.20.~21., 시진핑 방북)	6.20.	
	6.30.	한미 정상회담(서울) 남북미 정상 판문점회동, 이어서 북미 회동
외무성 대변인 담화, 연합연습 중지 요구	7.16.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발사(원산) * 김정은 위원장, 신형전술유도무기 위력시위사격 지도	7.25.	정부, 북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대응 * "한반도 군사적 긴장완화 노력에 도움되지 않는 것으로 강한 우려 표명"

북측	일자	남측
북, 러시아 어선 송환(한국 선원 2명, 속초항)	7.28.	해군, 동해에서 북 어선(3명 탑승) 예인·북송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발사(원산) * 김정은 위원장, 신형 대구경조종방사포 시험사격 지도	7.31.	북 군인 추정 사체 발견(1사단, 임진강) 합참, 북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대응 * "한반도 군사적 긴장완화 노력에 도움되지 않는 것으로 강한 우려 표명"
	8.1.	군인(1명), 임진강 경유 월남(귀순) 영·프·독, 북 탄도미사일 발사 규탄 공동성명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발사(함남 영흥) * 김정은 위원장, 신형 대구경조종방사포 시험사격 지도	8.2.	정부, 북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대응 * "한반도 군사적 긴장완화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재차 촉구"
외무성 대변인 담화, 영·프·독 공동성명 비난 * "자주권과 자위권 농락"	8.3.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발사(황남 과일) * 김정은 위원장, 신형 전술유도탄 위력시위발사 지도 외무성 대변인 담화, 연합연습 관련 비난 * "대화의 동력은 점점 더 사라지게 될 것"	8.6.	정부, 북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대응 *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 한미간 긴밀한 공조 하 동향 예의주시, 철저한 대비태세 유지 강화"
조평통 진상공개장, 연합연습 관련 비난 * "적대행위 중지 위반"	8.8.	
	8.9.	한미 국방장관회담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발사(함남 함흥) * 김정은 위원장, 새 무기 시험사격 지도	8.10.	정부, 파주 'DMZ 평화의길' 개방 정부, 북 단거리 발사체 발사 대응 * "북 연이은 발사가 한반도 군사적 긴장 고조 우려, 중단할 것을 촉구"
외무성 미국국장 담화 * "자위적 무력건설 사업"	8.11.	한미 연합지휘소훈련(8.11.~20.) * 전작권 전환 대비 기본운용능력(IOC) 검증
단거리 발사체 2발 발사(강원 통천) * 김정은 위원장, 새 무기 시험사격 지도 조평통 대변인 담화, 광복절·연합연습 비난 * "남북대화의 동력이 상실된 것은 전적으로 남한 당국자의 자업자득"	8.16.	정부, 북 단거리 발사체 발사 대응 * "한반도 군사적 긴장완화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
외무성 대변인 담화, 전략무기 반입 비난 * "군사적 위협을 동반한 대화에는 흥미가 없음"	8.22.	
단거리 발사체 2발 발사(함남 선덕) * 김정은 위원장, 초대형 방사포 시험사격 지도	8.24.	정부, 북 단거리 발사체 발사 대응 * "한반도 군사적 긴장완화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
	8.27.	영·프·독, 북 탄도미사일 발사 규탄 공동성명

북측	일자	남측
최고인민회의 제14기 2차 회의 * 김정은 위원장 불참, 김정은 위원장 위상·권한 강화 외무성 대변인 담화, 영·프·독 공동성명 비난 * "대화의 시점만 더 멀어지게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함"	8.29.	
김정은 위원장, 중앙군사위 비상확대회의 소집 * 박정천 대장 총참모장 임명	9.6.	
최선희 외무성 부상 담화, 북미 대화 제의 * "접수 가능한 계산법에 기초한 대안"	9.9.	
단거리 발사체 2발 발사(평남 개천) * 김정은 위원장, 초대형 방사포 시험사격 지도	9.10.	정부, 북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대응 * "단거리 발사체 발사에 강한 우려, 한반도 전반적 군사안보 상황 점검"
	9.19.	유엔사·북한군 참모장교접촉(T-3)
	9.23.	한미 정상회담(워싱턴)
	9.24.	대통령, 유엔총회 기조연설(뉴욕) * 전쟁불용, 상호 간 안전보장, 공동번영
	9.30.	국회, 북핵 고도화·미사일 도발 규탄 결의
최선희 외무성 부상 담화, 북미 실무협상 일정 공개 * 10.4. 예비접촉, 10.5. 실무협상	10.1.	
북극성-3형(SLBM) 시험발사(원산) * 김정은 위원장 불참	10.2.	정부, 북 미사일 발사 대응 * "북미 실무협상을 앞두고 발사체를 발사한 데 우려, 실무협상의 성공적 개최 및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항구적 평화구축을 위해 외교적 노력"
북미 실무협상(스톡홀름) 외무성 대사 김명길 기자회견, 협상결렬 발표	10.5.	
외무성 담화, 협상 결렬 대미 비난 * "대화의 운명은 미국의 태도에 달려있으며 그 시한부는 올해 말"	10.6.	
	10.8.	유럽연합(영,프,독,벨,폴,에), SLBM 발사 규탄 공동성명
김정은 위원장, 금강산 방문, 남측시설 철거 발언	10.23.	
	10.28.	정부, 금강산 관련 남북실무회담 제의
금강산 관련 남북실무회담 거부	10.29.	
김정은 위원장, 대통령 모친상 조의문 전달(판문점)	10.30.	
단거리 발사체 2발 발사(평남 순천) * 김정은 위원장, 초대형 방사포 시험사격 지도	10.31.	정부, 북 단거리 발사체 발사 대응 *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한 데 대한 강한 우려를 표시"
	11.2.	해군, 북 어선(2명 탑승) 나포(동해 해상) * 11.7. 북측에 송환(2명)

북측	일자	남측
	11.4.	미 국방부, 한미 연합공중훈련(12월) 진행 발표
	11.5.	정부, 금강산 관련 시설점검단 방북 제의 *북한 무응답
외무성 대사 권정근 담화, 한미연합공중훈련 재개 발표 비난 * "우리에 대한 대결선언, 대화의 불씨에 찬물"	11.6.	미 국방부, 비난과 무관 훈련 진행 발표
국무위원회 대변인 담화, 한미 연합공중훈련 비난 * "'새로운 길'이 미국의 앞날에 장차 어떤 영향을 미치겠는가에 대해 고민할 것임"	11.13.	미 국방부 장관, "대화 증진 위해 군사훈련 조정 가능"
김영철 담화, 한미 연합공중훈련 중단 촉구	11.14.	한미, 제51차 안보협의회의(SCM, 국방부) 영·프·독, 북 탄도미사일 발사 규탄 공동성명
김정은 위원장, 항공 및 반항공군 전투비행술경기대회 참관	11.16.	
	11.17.	한미 국방부 장관, 연합공중훈련 연기
김정은 위원장, 항공 및 반항공군 낙하산 침투훈련 지도 외무성 고문 김계관 담화, 북미회담 이전 적대정책 철회 촉구 * "대화의 끈을 놓고 싶지 않다면 우리를 적으로 보는 적대시 정책부터 철회할 결단을 내려야 한다."	11.18.	트럼프 대통령, 3차 북미 정상회담 촉구
김영철 담화, 북미회담 이전 적대정책 철회 촉구 * "위협들이 깨끗이 제거된 다음에야 비핵화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 외무성 대사 김명길 담화, 북미회담 이전 적대정책 철회 촉구	11.19.	
김정은 위원장, 접경도서 창린도 방어부대 시찰 * 해안포 사격 지시	11.23.	
	11.25.	정부, 창린도 해안포 사격 군사합의 위반 유감표현·재발방지 촉구 * '항의문' 전달
단거리 발사체 2발 발사(함남 연포) * 김정은 위원장, 초대형 방사포 시험사격 지도	11.28.	합참, 북 단거리 발사체 발사 대응 *"북한의 행위는 한반도 긴장완화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음, 우리 군은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군사적 긴장 고조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
외무성 미국담당 부상 리태성 담화, 연말시한 임박, 미국 결심 촉구 * "크리스마스 선물을 무엇으로 선정하는가는 전적으로 미국의 결심에 달려있다."	12.3.	트럼프 대통령, 무력사용 가능성 언급 * "원치 않지만 군사력을 사용해야 한다면 그렇게 할 것"
총참모장 박정천 담화 * "미국이 무력 사용하면 우리도 상응 행동"	12.4.	유엔 안보리, 북 발사체 논의 비공개 회의 * 유럽연합 6개국 공동성명/영,프,독,벨,폴,에 정경두 국방부 장관, "북 '새로운 길' 주장 등 긴장고조, 예의주시" *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 모두발언

북측	일자	남측
유엔주재 북한대사 담화, 유럽연합 6개국 공동성명 대응 * "비핵화는 협상 테이블에서 이미 내려졌다."	12.7.	한미 대통령 통화, '비핵화 대화 모멘텀 유지 공감'
국방과학원 대변인 발표, 중대한 시험 진행 * "12.7. 오후 서해위성발사장에서는 대단히 중대한 시험이 진행"	12.8.	트럼프 대통령, "북한 적대적인 행동을 하면 모든 것을 잃게 될 것" 미 국방부 장관, "북한과의 대화 언제나 열려있다"
김영철 담화 * "우리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사람들" 당 중앙위 리수용 담화, 트럼프 막말 중단 촉구	12.9.	
	12.10.	한·호주 국방부 장관, 북 긴장고조 중단 및 대화재개 촉구
	12.11.	미 폼페이오, "북한 ICBM 발사 중단·비핵화 약속 준수 기대" 유엔 안보리 소집 미 유엔대사, "북한 담대한 결정 내려야", "북한 '새로운 길' 심각한 도발 의미" 유엔총회,핵무기 포기 촉구 포함 결의안 3건 채택
외무성 대변인 담화, 유엔 안보리회의 대응 * "어느 길을 택할 것인가에 대한 명백한 결심을 내리게 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다."	12.12.	
박정천 총참모장 담화, 중대시험 관련, 북에 대한 도발 자제 촉구 * "우리를 자극하는 그 어떤 언행도 삼가야 연말을 편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국방과학원 대변인 발표, 중대한 시험 진행 * "12.13. 서해위성발사장에서는 중대한 시험이 또다시 진행"	12.14.	
	12.16.	미 비건 북에 만남 제안 * 북한 미응답
	12.21.	북 선원 구조(2명) 북측 인계(동해)
김정은 위원장, 당 중앙군사위원회 7기 3차 확대회의 참석 * "중요한 군사적문제와 대책들 토의"	12.22.	
	12.24.	트럼프 대통령, 북 성탄선물 관련 "처리할 것, 지켜보자"
노동당 제7기 제5차 전원회의 개최(12.28.~31.) * "강력한 정치 외교적, 군사적공세로 정면돌파전의 승리 담보"	12.28.	
신년사 생략(7기 5차 전원회의로 대체) * "모든 난관을 정면돌파전으로 뚫고 나가자"	2020.1.1.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과 좋은 관계"
	1.2.	미 국방부 장관, "북 행동 따라 연합훈련 재개 검토"

북측	일자	남측
	1.10.	안보실장, 방미 귀국 * "트럼프 대통령의 김정은 생일 메시지 북한에 전달"
김계관 외무성 고문 담화 * "트럼프 생일메시지 친서로 직접 전달, 김정은-트럼프 사이에 끼어드는 것은 주제넘은 일"	1.11.	
	1.12.	미 안보보좌관, "미국, 북한에 대화 재개 의사 전달"
코로나19 대응 국가비상방역체계 전환 선포	1.24.	
코로나19 관련 남북통행 제한 조치, 개성연락사무소 가동 잠정중단	1.30.	
코로나19 관련 금강산 철거 연기 통보 국제 항공·열차·선박편 폐쇄	1.31.	
김정은 위원장, 동부지구 방어부대 합동타격훈련 참관	2.28.	
단거리 발사체 2발 발사(원산) * 김정은 위원장, 초대형 방사포 시험사격 지도	3.2.	정부,북 화력타격훈련 유감표명 * "군사적 긴장 초래 행동에 강한 우려"
김여정 담화 * "화력전투훈련은 자위적 행동, 유감·중단요구는 주제넘은 처사"	3.3.	
	3.6.	유엔 안보리 유럽 5개국 대사(영,프,독,벨,에), 북 도발행위 규탄 성명
외무성 대변인 담화, 안보리 5개국 규탄성명 반박 * "통상적 훈련"	3.7.	
단거리 발사체 2발 발사(함남 선덕) * 김정은 위원장, 전선장거리포병 화력타격훈련 재차 지도	3.9.	정부, 북 단거리 발사체 발사 대응 * "대규모 합동타격훈련을 계속하는 것은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지적"
김정은 위원장, 포사격대항경기 지도(7군단, 9군단)	3.12.	
김정은 위원장, 포사격대항경기 지도(3군단, 4군단, 8군단) 단거리 발사체 2발 발사(평북 선천) * 김정은 위원장, 전술유도무기 시범사격 지도	3.21.	합참, 북 단거리 발사체 발사 대응 * "'코로나19'로 인해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북의 군사적 행동은 대단히 부적절한 행위이며, 즉각 중단을 촉구함"
단거리 발사체 2발 발사(원산) * 김정은 위원장 불참, 초대형 방사포 시험사격	3.29.	정부, 북 단거리 발사체 발사 대응 * "국방부 및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으면서 관련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음"
김정은 위원장, 박격포병 포사격훈련 지도 * "포병강화, 포병중시"	4.10.	
김정은 위원장, 서부지구 추격습격기연대 시찰	4.11.	
순항미사일 발사(김정은 위원장 불참)	4.14.	미 합참의장, 순항미사일 관련 * "도발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내부 기념행사 연결로 추정"

북측	일자	남측
GP 총격(3사단)	5.3.	합참, GP 총격 관련 대응 * "「9·19 군사합의」 위반"
	5.6.	군, 서북도 합동방어훈련 * 공군공중전투사령부, 해군2함대
인민무력성 대변인 담화, 서해 군사훈련 비난 * "모든 것이 2018년 이전의 원점으로 돌아가고 있다."	5.8.	
김정은 위원장, 당 중앙군사위 제7기 제4차 확대회의 진행 * ㅅ핵전쟁억제력을 더 한층 강화 ㅅ리병철 당중앙군사위 부위원장에 선출 등	5.24	
김여정 담화 발표 * 탈북자들의 반공화국적대행위 감행 비판	6.4	
통전부 대변인 담화 * 김여정 제1부부장의 6.4 담화에 대한 실무적 집행을 위한 검토사업(공동연락사무소 철폐 등) 착수 예고	6.5	
중통, 2020.6.9.,12시부터 '남북간 모든 통신연락선 완전 차단 조치'발표	6.9	
장금철, 통일전선부 부장 담화 * "이제부터 흘러가는 시간은 남조선 당국에 있어서 참으로 후회스럽고 괴로울 것"	6.12	
김여정, 담화 *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광경을 보게 될 것, 다음 대적행동의 행사권은 군 총참모부에 넘겨주려 한다."	6.13	
14시 50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 파괴	6.16	통일부 차관, 현안 관련 브리핑 *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파괴는 2018년 「판문점선언」의 위반이며..." 청와대 안보실 1차장, NSC 개최 결과 브리핑 * "북측이 상황을 계속 악화시키는 조치를 취할 경우 우리는 그에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김여정·장금철 통전부장 담화 및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발표문 발표 * "책임을 전가한 철면피한 궤변, 비굴함과 굴종"(김여정) * "앞으로 남측 당국과 무슨 교류, 협력 없다."(장금철) * 4대군사행동계획 발표(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6.17	합참 작전부장, 현 상황 관련 브리핑 * "……각종 군사계획을 비준 받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통일부 차관, 현안 관련 브리핑 * "……금강산 관광지구와 개성공단을 군사지역화 한다고 밝힌 점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 브리핑 * "….전례없는 비상식적 행위, 대북특사 파견 제안의 취지를 의도적으로 왜곡한 처사로 강한 유감을 표한다."

북측	일자	남측
통일전선부 대변인, '전단살포계획 불변'담화 * "우리의 계획을 고려하거나 변경할 의사는 전혀 없다."	6.20	
김정은 위원장, 당 중앙군사위 제7기 제5차회의 예비회의 진행 * 대남군사행동계획 보류 등	6.23	
김영철, 6.24 정경두 장관의 '대남군사행동 보류가 아닌 완전 철회'발언 관련 담화 * "우리의 '보류'가 '재고'가 될 때는 재미 없을 것"	6.24	
최선희 외무부상, 담화 * 미 내부 정치적 목적을 위한 북미회담 가능성을 부정하면서 남측의 중재의사를 비난, 미의 태도변화를 요구하며 대미 압박	7.4	
권정근 미 국장 담화 * 미 고위당국자의 방한일에 맞춰 북미정상회담 가능성을 거듭 일축하는 한편, 남측의 북미대화 '중재' 역할을 비난	7.7	
김여정, 담화 * 연내 북미정상회담 가능성을 일축하면서도 북의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미의 획기적인 태도변화를 촉구	7.10	
김정은 위원장, 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5차 확대회의 지도 * 군수사업에서 제기되는 일련의 문제들을 지적, 전쟁억제력 강화하기 위한 핵심문제들을 토의하는 비공개회의도 개최	7.18	
김정은 위원장, 당 중앙위 정치국 비상확대회의 긴급소집 * △개성시 봉쇄 및 비상사태 선포 △'국가비상방역체계'를 '최대 비상체제'로 이행 결정 △월남도주 발생 부대에 대한 엄중 처벌 및 대책 강구	7.25	
김정은 위원장, 전승절(7.27) 계기 기념행사 주관 * △참전열사묘 방문·'백두산 기념 권총' 수여(7.26.)△전국노병대회(7.27.) * 특히 전국노병대회 참가, 축하 연설 "핵억제력으로 국가의 안전과 미래는 굳건하게 담보될 것" 등	7.27	
	7.31	통일부 장관, 동해선 남북출입사무소 및 제진역 방문 * "금강산관광이 재개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을 것이며 남북 철도·도로 연결도 추진하여 새로운 한반도 경제질서를 만들어 가겠음"

북측	일자	남측
	8.15.	대통령 8.15 경축사 * “방역협력과 공유하천의 공동관리로 남북의 국민들이 평화의 혜택을 실질적으로 체감하게 되길 바란다.”
김정은 위원장, 당 중앙위 제7기 제6차 전원회의 주재 * “혹독한 대내외 정세가 지속되고, 계획되었던 국가경제의 장성목표들이 심히 미진되고 인민생활이 뚜렷하게 향상되지 못하는 결과” ** 8차 당대회 안건: △올해의 사업정형 △당 중앙위 사업총화 △내년 사업방향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등 언급	8.19.	
	9.23.	대통령, 유엔연설 * “이제 한반도에서 전쟁은 완전히 영구적으로 종식돼야 한다.”
	9.24.	우리 어업지도원 사망 관련 NSC 상임위 성명 * △우리 국민 총격과 시신 훼손은 정당화 될 수 없음 △우리 정부는 이를 강력히 규탄함 △북한은 이번 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분명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
	9.25.	북측 통지문 관련 서훈 안보실장 브리핑 - 김정은 위원장, 서해 우리어업지도원 사망 관련 유감 표명 * “우리측 수역에서 뜻밖의 불미스러운 일,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준 것,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함”
	9.25.	남북 정상 친서 관련 안보실장 브리핑 - 문재인 대통령 친서(9.8.) * 국무위원장의 생명존중에 대한 강력한 의지에 경의를 표함. 매일이 위태로운 지금 서로 돕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 국무위원장이 뜻하시는대로 모든 어려움이 극복되기를 진심으로 기원 - 김정은 위원장 친서(9.12.) * 이 기회를 통해 대통령과 남녘의 동포들에게 가식없는 진심을 전해 드림. 악성비루스, 태풍 피해 소식을 접하고 대통령의 노고를 생각, 끔찍한 올해의 시간이 흘러가고 좋은 일들이 차례로 기다릴 그런 날들이 하루빨리 다가오기를 기다림
	9.27.	우리 어업지도원 사망에 대한 북측 통지문 관련 NSC 사무처장 브리핑 * △북측의 신속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긍정적으로 평가 △진상규명을 위해 공동조사를 요청 △군통신선의 복구와 재가동을 요청함

북측	일자	남측
김정은 위원장, 트럼프 대통령 부부에게 코로나19 양성 판정 관련 위로전문 발송 * "하루 빨리 완쾌되기를 진심으로 기원"	10.3.	
당 창건 열병식 * (육성연설) △인민군 노력 치하 △대남 유화메시지 발송 등	10.10.	
	10.14 ~ 15.	한미, 제52차 안보협의회의 개최(워싱턴)
조중통, '서해상 우리 국민 사망사건'유감 표명(9.25.) 이후 한 달만에 입장 표명 * "불행한 사건을 초래한 남측에 우선적인 책임, 북남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갔던 불쾌한 전례가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입장"	10.30.	
	11.4.	통일부 장관, 판문점견학지원센터 개소식 축사 * "남북통신복구, 공동연락사무소 복원, 이산가족상봉 북에 제안"
	11.6.	대통령 제주포럼 기조연설 * "남북의 결단과 다자협력이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고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 다자적 평화체제야 말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에 반드시 필요한 정신"
	11.9.	대통령 수보회의 말씀 * "우리는 한반도 생명·안전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것과 함께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준비가 되어 있음"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개발한 무기 체계를 총정리한 화보집 발간	11.24.	

일반부록 11

북한의 대남 침투·국지도발 일지

연대별 침투 및 국지도발 현황

2020년 11월 30일 기준

구분	계	1950년대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계	3,120	398	1,336	403	227	250
침투	2,002	379	1,009	310	167	94
국지도발	1,118	19	327	93	60	156

구분	2000년대	2010~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계	241	264	0	0	1
침투	16	27	0	0	0
국지도발	225	237	0	0	1

침투 및 국지도발 일지(2018. 12. 1. ~ 2020. 11. 30.)

일자	주요 내용
2020.5.3.	철원지역, 북한 GP에서 아군 GP로 총격(4발 피탄)

연대별·유형별 침투 및 국지도발 세부현황

2020년 11월 30일 기준

구분		계	1950년대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2010~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계		3,120	398	1,336	403	227	250	241	264	0	0	1
침투	직접 침투	1,749	375	988	298	38	50	0	0	0	0	0
	간접 침투	214	0	0	0	127	44	16	27	0	0	0
	월북·납북자 남파	39	4	21	12	2	0	0	0	0	0	0
	소계	2,002	379	1,009	310	167	94	16	27	0	0	0
국지도발	지상 도발	503	7	298	51	44	48	42	12	0	0	1
	해상 도발	559	2	22	27	12	107	180	209	0	0	0
	공중 도발	51	10	7	15	4	1	3	11	0	0	0
	전자전 도발	5	0	0	0	0	0	0	5	0	0	0
	소계	1,118	19	327	93	60	156	225	237	0	0	1

일반부록 12

연합·합동연습 및 훈련 현황

한미 연합연습

연습명	형태	목적	내용
전·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 (CCPT)	지휘소 연습(CPX)	· 현 연합방위체제 하 전구작전 지휘 및 전쟁수행절차 숙달 · 한미 연합작전 및 후방지역 방호작전 능력 배양	· 위기관리 초기대응 · 전시전환 절차 숙달 · 작전계획 시행절차 숙달 · 연합작전지역내 수용, 대기, 전방이동 및 통합절차 숙달

*한미합의 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하여 미래연합군사령부 운용능력 검증평가 병행

한국군 합동연습 및 훈련

연습명	형태	목적	내용
을지태극연습	전구급 지휘소연습 및 정부연습	· 합동 작전지휘능력 배양 · 군사연습과 연계하여 충무계획 및 전쟁수행예규 수행절차 숙달	· 국가위기대응 지원 · 위기관리 절차 연습 · 전시전환 절차 연습
호국훈련	작전사급 야외기동훈련	· 군사대비태세 확립 및 합동작전 수행 능력 배양	· 국지도발 및 전면전 관련 작계시행훈련 · 작전환경 변화에 따른 작전수행 절차 적용 훈련
후방지역 종합훈련 (화랑훈련)	권역별 민·관·군·경·소방 통합방위훈련	· 전·평시 작계시행 절차 숙달 · 지역주민 안보의식 고취 · 민·관·군·경 통합방위태세 확인	· 대테러작전 · 침투·국지도발 대비작전 · 전시전환 · 전면전 대비작전

일반부록 13

제51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

2019년 11월 15일, 서울

1. 제51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가 2019년 11월 15일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는 정경두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Mark T. Esper) 미합중국 국방장관이 공동 주재하였으며, 양국의 국방 및 외교 분야 고위 관계관들이 참석하였다. 이 회의에 앞서 2019년 11월 14일 대한민국 합참의장 박한기 대장과 미합중국 합참의장 마크 밀리(Mark A. Milley) 대장이 제44차 한미군사위원회회의(MCM)를 주재하였다.

2. 양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와 안정 유지의 핵심축으로 역할을 해온 한미동맹을 상호보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SCM이 지난 반세기 동안 한미동맹의 정책을 효과적으로 다루어왔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며, 향후에도 SCM이 한미동맹 발전과 역내 안보와 번영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공약을 확인하는 중추적인 협의체로 지속 유지될 것이라는 큰 기대를 표명하였다. 한편 양 장관은 동맹의 미래 국방분야 협력에 관한 「미래 한미동맹 국방비전」 공동연구의 성과를 평가하면서, 미래 동맹협력의 범위와 수준이 지속적으로 확대·심화되어야 한다는 공동의 인식을 재확인하였다.

3. 양 장관은 최근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을 점검하고, 양국간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양측은 검증 가능한 방식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긴밀한 공조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2019년 6월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에서 개최된 남북미 회동 등 2018년과 2019년 개최된 남북미 정상간 회담의 역사적 성과를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과 '2018년 9월 평양공동선언',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 싱가포르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명시된 공약들을 이행하는 데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최근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행위들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고, 긴밀히 공조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하게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4. 양 장관은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해 남북 군사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조치들이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전쟁 위험 감소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정 장관은 '9·19 군사합의' 이행을 통해 지상·해상·공중 등 접경지역에서 상호 적대행위가 전면 중지되었고, JSA 비무장화 조치와 비무장지대 내 상호 GP 시범철수 등의 주요 조치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음을 강조하였다. 양측은 이러한 노력이 지난 일 년 간 남북 접경지역에서 단 한 건의 군사적 긴장고조 행위가 식별되지 않은 가운데, 접경지역이 안정적으로 관리되는데 기여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앞으로도 양 장관은 '9·19 군사합의' 이행을 위해 긴밀한 공조와 협력을 해나가기로 하였으며, '9·19 군사합의'

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서는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개최를 포함한 조치를 통해 북한이 대화를 재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5. 양 장관은 유엔사의 정전협정 관리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9·19 군사합의'에 명시된 남북간 신뢰구축 조치 이행에 기여하였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정 장관은 대한민국이 정전협정과 유엔사의 권한 및 책임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존중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정 장관은 북방한계선(NLL)이 그동안 남북 간의 군사력을 분리하고 군사적 긴장을 예방하는 효과적 수단이었다고 평가하고, '9·19 군사합의'에서 합의한 완충구역이 우발적 충돌 방지는 물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하였다. 이에 에스퍼 장관은 이러한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들이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유엔사가 정전협정 이행과 신뢰구축 조치의 순조로운 이행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평가하였다.

6. 양 장관은 한미동맹이 강력하다고 평가하며, 한미상호방위조약과 굳건한 연합방위태세에 기반한 대한민국 방위 및 상호 안보 증진에 대한 양국의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에스퍼 장관은 핵,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하여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할 것이라는 미합중국의 지속적인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한편, 양 장관은 확장억제 공동연구 결과를 통해 확장 핵억제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들을 도출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양측은 향후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영향을 고려하면서, 한미동맹의 억제태세를 제고하고 맞춤형 억제전략을 이행하기 위한 방안들을 공동으로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7. 양 장관은 주한미군이 지난 66년간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의 무력분쟁 방지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지속 수행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에스퍼 장관은 현 안보 상황을 반영하여 주한미군의 현 수준을 유지하고 전투준비태세를 향상시키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8. 양 장관은 금년 6월 3일 국방장관 회담시 승인한 한미연합군사령부(연합사) 본부의 험프리스 기지 내 이전 추진 상황을 점검하였다. 양 장관은 연합사 본부 이전이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할 것이라고 평가하고, 연합사 본부 이전을 조속히 완료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측은 본 이전이 연합방위지침과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계획(COTP)에 의거하여 전작권 전환 이후 안정적 이행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하였다.

9. 양 장관은 조정된 방식의 한미 연합연습과 훈련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현행 외교적 노력을 지원한 성과를 공유하였다. 또한 양측은 조정된 연합연습과 훈련이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전작권 전환이 이루어지기 위한 우호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하였다고 평가하였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조치 이행과 관련하여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

다. 양측은 한미동맹이 한반도에서의 역동적인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군사대비태세와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지속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평가하였다.

10. 양 장관은 공동의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포괄적인 동맹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정 장관은 현재 추진 중인 「국방개혁 2.0」을 통해 전방위 안보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미래 안보환경의 변화를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한국군의 국방역량을 확충해 나갈 계획임을 강조하였다. 에스퍼 장관은 한국군의 국방개혁이 포괄적인 동맹능력 향상은 물론 한측 장성이 지휘하는 한미 양국의 굳건한 미래연합사 구축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하였다.

11. 양 장관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제반 이행과업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한측이 지휘하는 미래연합사로의 전작권 전환 준비에 실질적인 성과와 진전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하였다. 양측은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공고한 연합방위태세 유지를 위해 2018년 서명한 '연합방위지침'을 이행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금년 시행한 연합지휘소훈련이 강력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유지와 미래연합사의 기본운용능력(IOC)을 검증평가 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점에 공감하였다. 양 장관은 연합검증단의 평가 결과와 MCM 평가 결과를 보고받은 후, 기본운용능력 검증평가 결과를 검토하였다. 양 장관은 2020년에 미래연합사에 대한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를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전략문서 발전 등 검증평가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12. 또한, 양 장관은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에 진전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양측은 특별상설군사위원회(special PMC)가 핵심군사능력 평가를 위해 개최되었으며, 특별상설군사위원회 활동이 평가의 신뢰성을 높였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정 장관은 미래 연합방위체제 지휘에 필요한 한국군의 방위역량 확충을 지속하는 가운데 전작권 전환을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다. 에스퍼 장관은 미국의 지속능력 제공과 함께 대한민국이 방위역량을 갖출 때까지 보완능력을 계속 제공할 것이라는 미합중국의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정 장관은 방위역량을 조속히 확보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현재와 같은 공고한 연합방위체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연례 SCM 및 MCM 회의를 통해 전작권 전환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평가·점검해 나가기로 하였다.

13. 양 장관은 한미연합군사령관으로부터 MCM 결과를 보고 받았으며, 연합방위능력 향상, 관련 작전계획 및 내년 전반기 전략문서 발전 등의 진전에 만족을 표명하였다. 양측은 연합합동다목적 실사격훈련장 발전을 위한 공동연구 수행에 동의하였다.

14. 양 장관은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위협에 대해 효과적인 공동 대응을 보장하고 동맹의 포괄적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우주, 사이버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미국의 우주사령부 창설, 한국의 우주감시체계 구축 등 우주 역량 구축을 위한 양국 국방부의 노력

을 확인하였다. 양측은 동맹으로서의 우주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고자 우주상황인식 정보공유체계 등 협력방안을 더욱 모색하고, 우주작전능력 향상을 위한 양자 및 다자간 연합연습 및 훈련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새로운 우주 위협과 도전에 대응할 능력을 갖춘 우주 전문인력 양성 협력도 지속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15. 양 장관은 날로 증대되는 사이버 안보위협을 고려하여 동맹의 사이버 역량을 강화하기로 한 양국의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측은 사이버 위협 동향 및 양국의 정책 변화 추이를 공유하고, 공동의 관심 현안을 협의하는 등 사이버 분야에서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유지해 나가기로 하였다.

16. 양 장관은 사이버방어, 인공지능, 자율기술, 지향성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미 과학기술협력이 확대되었음에 주목하고, 한미 공동 이익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지속 발전되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17. 양 장관은 동맹의 국방역량을 강화할 필요성과, 국방력 건설과 획득, 그리고 운영과 관련하여 더욱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협업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하였다. 양측은 한미동맹의 국방역량 및 상호운용성 강화에 중점을 둔 국방연구개발, 산업협력, 무기체계 획득, 그리고 군수 및 운영유지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심화가 중요하다는 점에 동의하였다. 양측은 향후 위 분야를 지원하는 정례협의체를 통하여 협력을 모색하고 심화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한미동맹의 정책 및 전략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기 협의체 개편을 승인하였다.

18. 양 장관은 평화유지활동, 대해적작전, 안정화 및 재건 노력, 지역안보협력구상, 인도적 지원 및 재난구호 등을 포함하여 상호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광범위한 범세계적 안보도전에 대처하기 위한 국방협력을 지속 및 증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정 장관은 미국이 다양한 범세계적 안보도전에 대처하는데 있어 글로벌 리더십을 효과적으로 발휘하고 있는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하였다. 에스퍼 장관은 아덴만 해적퇴치활동, 유엔 평화유지활동, 확산방지구상(PSI) 등을 포함하여 글로벌 안보를 위한 대한민국의 헌신과 기여를 높이 평가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동맹의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한 공동의 인식을 바탕으로, WMD 확산 차단과 유사시 WMD 위협 대응을 위한 연합전력의 상호운용성 보장 및 대응능력 강화 노력을 높게 평가하고, 미 국방부의 협력적 위협감소 프로그램 등을 통해 앞으로도 WMD 대응역량 증진을 위한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19. 양 장관은 도전 요소에도 불구하고, 공동의 안보이익에 기초한 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하였다. 양 장관은 고위급 정책협의, 연합훈련, 정보공유, 인적교류활동을 포함한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을 지속해 나가면서,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시키기 위해 역내 다자간 안보협력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하기로 하였다.

20. 양 장관은 주한미군 기지 이전 및 반환의 신속한 추진이 양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한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른 적시적인 기지 반환을 위해 환경 여건 등 제반사항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신속한 반환 추진이 필요한 네 개 기지 관련, SOFA 채널을 통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한 점을 높게 평가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상호 수용 가능한 결과 도출을 위해 SOFA에 따른 정례 협의를 통해서 관련 사항을 논의해 나가겠다는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양측은 또한 시설과 구역의 원상회복 책임은 양측의 합의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는 한편, 관련 정보 공개에 있어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기로 하였다.

21. 양 장관은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훈련여건 보장이 강력한 연합방위태세 유지를 위한 핵심 요소임에 의견을 같이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훈련장의 효과적인 공동 사용을 위해 민군 협의를 강화하고, 연합방위태세 유지를 위한 연합 실사격 훈련 여건을 보장하는데 있어 한국 국방부와 주한미군사 간의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에 동의하였다.

22. 에스퍼 장관은 방위 비용 분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대한민국이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보장을 위해 기여하고 있는데 대해 사의를 표명하였다. 양 장관은 방위비분담 특별조치협정(SMA)이 한미 연합방위능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제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만료 이전에 제11차 협상이 타결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였다. 아울러 양측은 향후 방위비분담금이 공평하며 상호 동의 가능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데에 공감하였다.

23. 정 장관과 에스퍼 장관은 금번 SCM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양국의 예우와 환대 그리고 성공적인 회의를 위한 훌륭한 준비에 대해 사의를 표하였다. 양 장관은 제51차 SCM과 제44차 MCM에서의 논의가 한미동맹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양국의 국방관계가 상호보완적 한미동맹으로 발전하는데 기여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양측은 제52차 SCM과 제45차 MCM을 2020년 상호 편리한 시기에 워싱턴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일반부록 14

미래 한미동맹 국방비전

1. 한미동맹은 지난 66년 간 양국의 정치, 사회 및 경제적 유대관계 심화에 기여해 왔으며, 양국의 공동 가치와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 호혜적인 동맹관계로 발전하였다. 한미 양국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정, 번영의 핵심축(linchpin)으로 삼아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검증 가능한 방식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군사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긴밀히 공조해 나가고 있다.

2. 한미 국방장관은 역동적인 안보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제50차 SCM(2018.10.31.)에서 동맹의 국방협력을 상호보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공동의 국방비전에 대해 논의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한미 양 정상의 인식에서 비롯되었으며, 한미 양 정상은 2019년 6월 30일 정상회담에서 개방성, 포용성, 투명성이라는 역내 협력 원칙에 따라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 간 조화로운 협력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3. 한미 국방협력은 한반도, 지역 및 세계 질서를 뒷받침하는 공동 원칙에 대한 공약으로부터 비롯되며, 이러한 공동 원칙은 아래의 요소를 포함한다.

   가. 한반도, 동북아 및 세계 평화와 번영 추구
   나. 모든 국가의 주권과 독립 존중
   다. 국제적으로 확립된 법과 규범에 따른 분쟁의 평화로운 해결
   라. 자유로운 접근, 항행과 비행을 포함한 국제 규칙과 규범 준수

4. 한미 양국은 한반도 평화정착 이후에도 상기 공동 원칙을 바탕으로 양국 국방당국의 협력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 그리고 범세계적 공동의 국가안보이익을 보호해 나가기로 하였다.

5. 동맹의 국방협력은 한미 양국이 새로운 도전과 안보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한미 양국은 사이버, 우주, 해양, 그리고 환경문제와 같은 초국가적이고 비전통적인 새로운 위협을 포함할 수 있도록 국방협력의 수준과 범위를 심화·확대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국은 공동의 가치와 원칙을 증진시켜 나가기 위해 초국가 및 비전통적 위협에 대응하여 역내 파트너 역량 구축을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6. 동맹은 잠재적 핵, 화학, 생물 및 방사능(CBRN) 위협 예방 및 대응과 아울러, CBRN 능력과 투발체계 및 관련물질 확산 예방과 같은 전통적인 영역에서도 협력을 심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미는 확장억제의 신뢰성, 능력,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확장억제 강화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동

맹은 사이버, 무인·자율 분야, 그리고 전략 물자·기술 공급망 등의 분야에서 미래지향적인 국방과학기술 협력 기회를 발굴해 나갈 것이다.

7. 앞으로도 한미 양국은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 그리고 세계의 안보, 안정 및 번영을 보장해 나가기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일반부록 15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

2020년 10월 14일, 워싱턴 DC

1.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가 2020년 10월 14일 워싱턴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는 서 욱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Mark T. Esper) 미합중국 국방장관이 공동 주재하였으며, 양국의 국방 및 외교 분야 고위 관계관들이 참석하였다. 이 회의에 앞서 2020년 10월 13일 대한민국 합참의장 원인철 대장과 미합중국 합참의장 마크 밀리(Mark A. Milley) 대장이 제45차 한미군사위원회회의(MCM)를 주재하였다.

2. 양 장관은 SCM이 한미동맹의 발전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SCM이 국가적 차원의 공약을 논의하고 확인하는 중추적인 협의체로 지속 유지될 것으로 평가하였다. 양측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와 안정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을 상호보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미래 한미동맹 국방비전」 공동연구에서 제시된 목표들을 지속 재공약함으로써 한미관계의 기반인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치 등 공동의 가치와 미래 국방협력, 상호 신뢰 등을 더욱 증진시켜 나갈 것임에 주목하였다.

3. 양 장관은 최근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을 점검하고, 양국간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양측은 북한의 군사활동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며,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국제 안보에 제기하는 심각한 위협을 감안하여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폐기를 통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달성하기 위해 긴밀한 공조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북한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 싱가포르 정상회담 공동성명 등 관련 합의사항 및 조치들에 명시된 공약들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였다.

4. 서 장관은 한반도에서의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 이행을 위해 남북 군사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조치들이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전쟁 위험 감소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였다고 평가하였다. 한편, 양 장관은 남북이 '9·19 군사합의' 이행을 통한 지상·해상·공중 등 접경지역에서의 적대행위 중지와 유엔사의 정전협정의 지속 이행 및 관리를 통해 안정성이 유지되고 우발적 충돌 가능성이 현저히 감소되었다는 점에 공감하였으며, 서 장관은 '9·19 군사합의'의 이행이 한반도에서의 평화 구축에 기여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서 장관은 또한 '9·19 군사합의'를 통해 합의된 완충지역이 한반도에서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명하였다. 서 장관은 DMZ내 GP철수, 남북군사공동위 정례적 개최 등이 포함된 '9·19 군사합의'의 이행 노력이 지속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양측은 현재의 안보 상황에 더 잘 대처하기 위해, 안보협의체의 향상 방안을 지속 모색하기로 결정하였다.

5. 양 장관은 유엔사의 정전협정 준수와 집행 역할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유엔사가 67년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성공적으로 유지하는데 기여해 왔으며 대한민국의 주권을 완전히 존중하는 가운데 그 임무와 과업을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서 장관은 북방한계선(NLL) 이 그동안 남북간의 군사력을 분리하고 군사적 긴장을 예방하는 효과적 수단이었음에 주목하였다. 또한 에스퍼 장관은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들이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유엔사가 한반도에서의 정전협정을 이행하고 신뢰구축 조치를 실행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서 장관은 정전협정과 유엔안보리결의안에 의거 유엔사에 부여된 권한과 책임을 지지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6. 양 장관은 한미동맹이 강력하다고 평가하며,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합의된 대한민국을 방어한다는 연합방위에 대한 양국 상호간의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주한미군이 지난 67년 이상 동안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음을 강조하였으며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의 무력분쟁 방지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지속 수행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에스퍼 장관은 상호방위조약에 명시된 대한민국의 연합방위에 대한 미국의 흔들림 없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에스퍼 장관은 또한 핵,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하여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할 것이라는 미합중국의 지속적인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한편, 양 장관은 동맹의 억제 태세의 신뢰성, 능력, 지속성을 보장하기로 공약하였다. 이를 위해 양 장관은 확장억제 공동연구를 통하여 제시된 많은 정책제언의 이행을 통해, 억제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동 공약의 일환으로 성주기지 사드 포대의 안정적인 주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장기적인 계획을 구축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향후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영향을 고려하면서, 한미동맹의 억제태세를 제고하고 맞춤형 억제전략을 이행하기 위한 방안들을 공동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7. 양 장관은 에이브람스 한미연합군사령관으로부터 연합방위태세가 상시전투태세의 능력과 준비를 갖추고 있으며, 어떠한 안보 도전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요지의 MCM 결과를 보고받았다. 에스퍼 장관은 현재 연합사에 관련된 작전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한반도 및 역내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작전계획과 동맹 절차를 최신화하려는 연합사령관의 노력에 지지를 표명하였다.

8. 양 장관은 동맹의 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한반도에서 연합연습 및 훈련의 지속 필요성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양측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2020년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과 조정된 방식으로 연중 균형되게 실시한 연합훈련이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군사대비태세를 강화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양측은 한미동맹이 한반도에서의 역동적인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군사대비태세와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계속해서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평가하였다.

9. 양 장관은 또한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훈련 여건이 강력한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필수적임을 강조하였다. 양 장관은 강력한 연합방위태세의 준비태세 유지에 필요한 주한미군의 훈련을 목적으로 한측 시

설 및 공역의 보다 효과적이고 생산적인 공동사용을 위한 협조 과정에서 국방부와 주한미군 간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연합합동다목적실사격장 개발과 관련하여 계속 협력하고 구체적인 일정을 설정해 나가기로 하였다.

10. 양 장관은 한미연합군사령부가 1978년 창설된 이래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억제하고 대한민국을 방어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는 점에 사의를 표하면서, 연합사 본부의 험프리스 기지 내 이전 추진현황을 검토하였다. 양 장관은 연합사 본부 이전이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하고, 관련 부지들의 행정적·작전적 적합성이 갖춰지는 대로 연합사 본부 이전을 조속히 완료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측은 안전하고, 원활하며, 효율적인 이전을 수행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다.

11. 양 장관은 전작권 전환을 위해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전환계획에 지정된 이행과업의 추진현황을 검토하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 관련 진전에 주목하였으며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포함한 미래연합사로의 전작권 전환의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양 장관은 전시 작전권이 미래연합사로 전환되기 전에 상호 합의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명시된 조건들이 충분히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양측은 「2015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기본 계획」 및 「2018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 수정1호」를 완전히 준수할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올해 미래연합사의 기본운용능력과 완전운용능력 평가를 위해 사용될 전략문서 공동초안이 마련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8월 위기관리참모훈련 간 미래연합사의 기본운용능력 검증평가를 완료하기 위한 동맹의 노력을 높게 평가하였으며, 에스퍼 장관은 2020년 말까지 2016 위기관리 합의각서를 최신화해야 할 필요성에 주목하였다.

12. 양 장관은 한미 공동의 노력을 통해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에 커다란 진전이 있었음에 주목하였다. 양측은 2020년에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관련 현안들에 대한 수차례 상설군사위원회가 개최된 점에 주목하고, 특별상설군사위원회의 활동이 전환조건 평가와 조건들에 대한 이해의 신뢰성을 높인 점에 공감하였다. 서 장관은 한국군이 「2015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기본 계획」 및 「2018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 수정 1호」가 명시한 방위역량 확충을 지속하는 가운데 동 계획의 목표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동맹의 연합방위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긴밀히 협력해야 할 필요성을 확인하고, 보완 및 지속능력에 대한 공동연구를 통해 전환조건 충족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에스퍼 장관은 보완능력의 제공을 공약하면서, 구체적 소요 능력 및 기간을 결정하는데 있어 우선적으로 한국의 획득계획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서 장관은 대한민국의 경제·군사적 발전을 고려하여 대한민국이 해당 능력들을 획득, 개발, 및 제공할 것임에 주목하였고 한측의 획득 계획에 대해 보다 더 활발히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서 장관은 한반도의 방위에 필요한 한국군의 적절한 방위 역량을 획득할 대한민국의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한측 능력의 발전에 연계하여 보완 및 지속능력을 최적화하는 공동연구를 지속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현재와 같은 굳건한 연합방위체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연례 SCM 및 MCM을 통해 전작권 전환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평가·점검해 나가기로 하였다.

13. 양 장관은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위협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을 보장하고 동맹의 포괄적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우주, 사이버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정보 및 우주 체계 등 핵심 기반체계를 발전시키고 안전성을 증진하기 위한 양국 국방부의 노력을 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동맹의 더 긴밀한 우주정책 발전을 조성해 나가자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 양측은 동맹으로서의 우주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고자 우주상황인식 정보공유체계의 발전 등 협력방안을 더욱 모색하고, 동맹의 우주작전능력 향상을 위한 양자 및 다자간 연합연습 및 훈련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우주 전문인력을 양성할 기회 또한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사이버 위협 동향 및 양국의 정책 변화 공유를 통해 사이버 영역 관련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유지해 나가기로 하였고, 양국 상호이익에 대한 논의와 증진을 위해 사이버사령부 간 교류의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14. 양 장관은 국방 연구개발, 산업협력, 군사력 건설과 획득, 군수 그리고 기술보호 분야 등을 다루는 한미 협의체 간 교류 활동을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전력증강, 상호운용성, 획득, 운영유지 등 분야에서 동맹의 계획과 우선 현안을 추진해 나간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측은 동맹의 요구사항에 대한 적시적이고 통합된 해결책을 제공하기 위해 양자 협의체 개편을 신속히 추진하고 동 분야에 대한 목표와 과업들을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15. 양 장관은 사이버방어, 인공지능, 자율기술, 지향성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미 과학기술협력이 확대되었음에 주목하였다. 양측은 이러한 협력이 한미 공동 이익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지속 발전되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16. 양 장관은 지역 및 세계의 복잡한 안보 상황을 고려하여 상호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폭넓은 글로벌 안보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국방 및 안보 협력을 지속 증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양측은 한미 역내 전략의 시너지 모색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양 장관은 항행과 비행의 자유 등 규칙에 기초한 국제 질서와 국제 규칙 및 규범 준수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고, 이를 위해 더욱 협력할 의지를 표명하였다. 양 장관은 평화유지활동, 대해적 작전, 안정화 및 재건 노력, 지역안보협력구상, 인도적 지원 및 재난 구호 등에 대한 공약도 재강조하였다. 에스퍼 장관은 한국이 코로나19 대응간 효과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였으며 올해 초 개인보호 장비 제공 등 한국의 대미 지원에 대해 사의를 표명하였다. 양측은 이 세계적 전염병을 해결하기 위해 긴밀한 협조와 협력을 지속하기로 하였다. 서 장관은 역내 국가들에 제공해 온 한국과 미국의 코로나19 지원과 주한미군사가 코로나19 방역을 보장하기 위해 취한 강력한 조치들에 주목하였다. 에스퍼 장관은 또한 확산방지구상(PSI) 등 글로벌 안보를 위한 대한민국의 헌신과 기여에 사의를 표명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대량살상무기(WMD) 확보 및 사용 방지, 필요시 WMD 위협을 경감시켜 동맹의 연합대응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한미 WMD 대응(CWMD) 노력을 높이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동맹의 WMD 대응역량을 증진시켜온 한미 대량살상무기대응위원회(CWMDC)를 통해 앞으로도 협력 관련 논의를 지속하기로 하였다.

17. 양 장관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시키기 위해 정보공유, 한미일 안보회의(DTT)를 포함한 고위급 정책협의, 연합훈련, 인적교류활동 등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18. 양 장관은 용산 기지 반환을 포함한 주한미군 기지 이전 및 부지 반환의 신속한 추진이 양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한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른 적시적인 기지 반환을 위해 환경 여건 등 제반사항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미측은 현 시점에서 17개 부지가 한국 정부로 반환이 가능하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유관 현안을 한미 SOFA 공동위원회의 정립된 절차 속에서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19. 에스퍼 장관은 방위비 분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대한민국이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보장을 위해 기여하고 있는데 대해 사의를 표명하였다. 에스퍼 장관은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이 조속히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현재의 협정 공백이 동맹의 준비태세에 지속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에 주목하였다. 양측은 특히 협정 공백이 한미동맹에 끼칠 영향을 고려하여,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공평하고 공정하며, 상호 동의 가능한 수준에서 조속히 타결되어야 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였다.

20. 서 장관과 에스퍼 장관은 금번 SCM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양국의 예우와 환대 그리고 성공적인 회의를 위한 훌륭한 준비에 대해 사의를 표하였다. 양 장관은 제52차 SCM과 제45차 MCM에서의 논의가 한미동맹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양국의 국방관계가 상호보완적 한미동맹으로 발전하는데 기여하였다고 확인하였다. 양측은 제53차 SCM과 제46차 MCM을 2021년 상호 편리한 시기에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일반부록 16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연합방위지침

2018년 10월 31일

(목적) 2017년 양국정상이 "조건에 기초한 한국군으로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한다."고 합의함에 따라 대한민국 국방부와 미합중국 국방부(한미 국방부)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에도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연합방위지침을 아래와 같이 마련하였다.

(전문) 한미 국방부는 1953년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된 이후 상호 신뢰와 자유민주주의, 인권, 법치라는 공동의 가치들에 기반한 한미동맹이 한반도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 안정, 그리고 번영을 위한 핵심 역할을 수행해 왔음에 인식을 같이한다.

한미 국방부는 이러한 한미동맹의 기여가 향후에도 지속되어, 한반도에서 무력분쟁을 방지하고, 동북아에서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며, 나아가 세계 평화에 기여한다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정신을 계승해 나갈 것임을 확인한다.

이와 같은 인식하에 한미 국방부는 전시작전통제권이 전환된 이후에도 강화된 방위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연합방위지침을 다음과 같이 승인한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공약의 상징으로 주한미군은 한반도에 계속 주둔하며 대한민국에 대한 방위공약을 확고히 이행한다.

대한민국에 대한 외부의 침략을 억제하고, 억제 실패 시 방어하기 위해 한미 연합군사령부와 예하 연합구성군사령부를 편성한다.

연합군사령부는 독립적인 상설기구로 운용되며, 양국 국가통수기구의 공동지침을 받는 군사협의기구로부터 전략지시와 작전지침을 받는다.

대한민국 국가통수기구는 한국군 4성 장성을 연합군사령관으로 임명하며, 미합중국의 국가통수기구는 미군 4성 장성을 연합군 부사령관으로 임명한다.

한미 국방부는 한반도에서 무력분쟁을 예방하는 역할을 수행해 온 유엔군사령부를 지속 유지하고 지원하며, 한국 합참, 연합군사령부, 주한미군사령부, 유엔군사령부간의 상호관계를 발전시킨다.

대한민국 국방부는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을 지속 발전시키고, 미합중국 국방부는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한 보완 및 지속능력을 계속 제공한다.

대한민국 국방부는 외부의 침략을 억제하기 위한 책임을 확대해 나가며, 미합중국 국방부는 확장억제를 지속 제공한다.

한미 국방부는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에도 정기적인 협의를 진행한다.

한미 국방부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의 연합방위체제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더욱 굳건히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한미동맹을 상호보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노력한다.

일반부록 17

주한미군 주둔비용 직·간접 지원 규모

지속적 지원내역 : 약 2.9조 원

단위 : 억 원

구분	분류	세분	항목	2018년
직접지원	국방예산	방위비분담금	인건비(3,710), 군사건설(4,442), 군수지원(1,450)	9,602
		방위비분담금 외	미 통신선·연합 C4I체계 사용	209
			카투사 병력지원(기본급, 피복비 등 운영 지원비)	192
			기지정비 및 이전 관련 비용	2,661
			부동산 지원	73
	국방예산 외 지원		기지 주변 정비 비용(주변 도로사업, 지역개발)	4,971
			직접지원 합계	17,708
간접지원	기회 비용		무상 공여토지 임대료 평가	8,919
			카투사 기회 비용	868
			훈련장 사용지원	278
	면제 및 감면 비용		관세, 내국세, 지방세, 석유 수입 및 판매 관련 세금 면제	1,215
			상하수도료, 전기료, 가스사용료, 전화통신료 감면	97
			도로, 항만, 공항, 철도 이용료 면제	92
			간접지원 합계	11,469
			총계	29,177

항목별 설명

구분	내용	관련 근거
미 통신선·연합 C4I체계 사용비	미 통신선 사용료 및 연합 C4I체계 지원비	한미연합사 통신비용부담합의서, 비용분담 및 정보상호운용성 체계에 관한 이행협정서
카투사 병력지원 (기본급, 피복비 등 운영 지원비)	카투사 병력에 대한 기본급·피복비 및 한국군지원단 운영비 지원	이승만 대통령과 맥아더 유엔군사령관 간 구두협약
기지정비 및 이전 관련 비용	반환기지 내 구 시설물 철거 및 환경정화비용,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용역 등	SOFA 2조·5조, SOFA 양해사항 2조·3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보상에 관한 법률 78조,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
부동산 지원	시설부지·사용부지의 매입비, 사용료, 보상비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 SOFA 2조·5조, SOFA 양해사항 2조·3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78조 및 동법 시행령 40조,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2조
기지 주변 정비비용 (주변 도로사업, 지역개발)	주한미군기지 주변지역 개발비용 (주변 도로정비, 지역개발 지원비용)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 SOFA 2조·3조·5조,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및 미군이전평택지원법
무상 공여토지 임대료 평가	주한미군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공여토지 및 건물의 임대료 기회 비용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 SOFA 2조, 국유재산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카투사 기회 비용	카투사 병력이 미군일 경우를 가정 시, 미군이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할 비용	이승만 대통령과 맥아더 유엔군사령관 간 구두협약
훈련장 사용지원	주한미군 사격훈련장 이용 지원비용	SOFA 2조·5조, 우리 군 훈련장·사격장의 미군 이용에 관한 각종 합의각서 및 양해각서
면제 및 감면 비용	각종 세금 및 공과금을 면제 또는 감면	SOFA 6조·10조·14조·16조

일반부록 18

국제 방산협력협정 체결 현황

국제 방산협력협정(양해각서) 체결국 : 39개국

2020년 12월 기준

상대국	체결년도	상대국	체결년도	상대국	체결년도	상대국	체결년도
미국	1988. 6.	태국	1991. 11.	스페인	1992. 3.	프랑스	1992. 3.
영국	1993. 9.	필리핀	1994. 5.	이스라엘	1995. 8.	인도네시아	1995. 10.
캐나다	1996. 5.	독일	1997. 11.	러시아	1997. 11.	루마니아	1997. 11.
네덜란드	1999. 6.	터키	1999. 12.	베네수엘라	1999. 12.	베트남	2001. 8.
우크라이나	2006. 12.	콜롬비아	2008. 5.	이집트	2009. 12.	에콰도르	2010. 1.
페루	2010. 6.	UAE	2010. 9.	노르웨이	2010. 9.	덴마크	2011. 5.
폴란드	2014. 5.	칠레	2015. 8.	체코	2015. 8.	핀란드	2016. 6.
헝가리	2016. 7.	보츠와나	2017. 1.	에스토니아	2017. 2.	크로아티아	2017. 2.
사우디아라비아	2017. 9.	카자흐스탄	2017. 10.	아르헨티나	2019. 2.	우즈베키스탄	2019. 4.
뉴질랜드	2019. 5.	스웨덴	2019. 6.	파라과이	2019. 10.		

기타 방산협력 관련 협정(양해각서) 체결 현황

2020년 12월 기준

구분	국제기술협력·보호 협정(18개국)	품질보증 협정(24개국)	가격 정보 제공 협정(4개국)
국가	미국, 프랑스, 영국, 이스라엘, 인도, 콜롬비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호주, 다자간* * 미국 등 14개국 다자간 체결 (호주,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 영국, 미국, 한국)	미국, 영국, 프랑스, 스페인, 스위스, 캐나다, 네덜란드, 덴마크, 호주, 필리핀, 독일, 이스라엘, 터키, 뉴질랜드,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스웨덴, 페루, 노르웨이, 콜롬비아, 베트남,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미국, 영국, 독일, 네덜란드

국방협력협정 체결 현황[1)]

2020년 11월 기준

상대국	체결연월	상대국	체결연월	상대국	체결연월	상대국	체결연월
독일	1994. 5.	요르단(조약)	2009.10.	필리핀	2013.10.	피지	2017. 1.
캐나다	1995. 5.	싱가포르	2009.12.	폴란드(조약)	2013.10.	이집트	2017. 3.
이스라엘	1995. 8.	리투아니아	2010. 2.	아제르바이잔	2013.12.	앙골라	2017. 3.
러시아	1996.11.	인도	2010. 9.	뉴질랜드	2014. 5.	미얀마	2017. 9.
터키	1999.11.	카자흐스탄	2010. 9.	카타르(조약)	2014.11.	캄보디아	2018. 9.
몽골	1999.12.	베트남	2010.10.	체코	2015. 2.	브루나이	2018. 9.
쿠웨이트	2004.11.	루마니아	2010.10.	콜롬비아	2015. 3.	이탈리아 (조약)	2018.10.
브라질(조약)	2006. 3.	가봉	2011.10.	불가리아	2015. 5.	칠레(조약)	2019. 4.
우크라이나	2006. 9.	페루	2011.10.	투르크메니스탄	2015. 5.	바레인	2019. 6.
UAE(조약)	2006.11.	호주	2011.12.	파라과이	2016. 1.	오만	2019.10.
스페인	2006.12.	태국	2012. 3.	에티오피아	2016. 5.	세네갈	2019.10.
우즈베키스탄	2008. 6.	중국	2012. 7.	우간다	2016. 5.	헝가리	2019.11.
일본	2009. 4.	사우디아라비아 (조약)	2013. 2.	에콰도르	2016. 7.		
스웨덴	2009. 7.	인도네시아 (조약)	2013.10.	보츠와나	2017. 1.		

1) 의의 : 상호 본격적 국방협력 추진을 위한 기본합의서 성격의 문서로서, 협력 원칙·분야·방식 등 포괄적 사항 규정
내용 : 협력 원칙(상호 호혜주의 등), 협력 범위(군사정보·군인사 교류, 방산, 군수 등),
행정사항(비용부담, 효력발생 등) 등

일반부록 20

국제 군축 및 비확산 협약 및 기구

2020년 11월 기준

구분		가입국 (발효·설립)	남북한 가입현황	주요 내용
유엔 관련 기구	유엔 총회 제1위원회 (First Committee)	193개국 (1945.10.)	한국(1991.9.) 북한(1991.9.)	· 유엔 총회 6개 위원회 중 하나로 군축 및 국제안보 의제 논의 · 매년 50~60여 개의 결의안 초안을 총회에 권고하며, 대부분 본회의에서 그대로 채택
	유엔 군축위원회 (UNDC : UN Disarmament Commission)	193개국 (1952.1.)	한국(1991.9.) 북한(1991.9.)	· 군축·비확산 분야 주요 이슈 3개를 선정, 심층 검토하여 유엔 총회에 보고서 제출 · 주요 이슈에 대한 국제사회의 합의 방향, 원칙 등을 도출해 내는 심의기구
	제네바군축회의 (CD : Conference on Disarmament)	65개국 (1984.2.)	한국(1996.6.) 북한(1996.6.)	· 다자군축을 담당하는 유일한 국제협상기구 · 군축 관련 주요 다자조약의 대부분이 군축회의에서 교섭을 통해 탄생 · 유엔 총회의 직속기구는 아니나 유엔 정규예산으로 운영되고, 독자적으로 의제 및 의사규칙 결정 · 매년 유엔 총회에 정기보고서 제출
핵무기	핵확산금지조약 (NPT :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191개국 (1970.3.)	한국(1975.4.) 북한(1985.12.) *2003.1. 탈퇴	· 핵무기의 확산 방지 및 핵군축 실현 ·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증진
	국제원자력기구 (IAEA :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172개국 (1957.7.)	한국(1957.8.) 북한(1974.9.) *1994.6. 탈퇴	·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증진을 위한 기술 지원 · 핵물질의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 방지
	포괄적핵실험 금지조약 (CTBT : Comprehensive Nuclear Test Ban Treaty)	184개국 (미발효)	한국(1999.9.) 북한(미가입)	· 일체의 핵실험(대기권, 외기권, 수중 및 지하 포함) 금지
미사일 및 우주	탄도미사일 확산방지를 위한 헤이그 행동규약 (HCoC : Hague Code of Conduct against Ballistic Missile Proliferation)	143개국 (2002.11.)	한국(2002.11.) 북한(미가입)	· 탄도미사일 확산 방지를 위한 정치적·자발적 성격의 행동지침
	외기권평화적 이용위원회 (COPUOS : Committee on the Peaceful Uses of Outer Space)	95개국 (1959.12.)	한국(1994.9.) 북한(미가입)	· 외기권의 탐사 및 평화적 이용에 관한 기술적·법률적 문제의 기본원칙 제시
생물화학 무기	생물무기금지협약 (BWC : Biological Weapons Convention)	183개국 (1975.3.)	한국(1987.6.) 북한(1987.3.)	· 생물무기(작용제 및 독소)의 개발, 생산, 비축 전면 금지
	화학무기금지협약 (CWC : Chemical Weapons Convention)	193개국 (1997.4.)	한국(1997.4.) 북한(미가입)	· 화학무기 개발, 생산, 비축, 사용, 이전 전면 금지 · 가입 후 10년 내 모든 화학무기·시설 폐기 *불가피한 경우 5년까지 연장 가능

구분		가입국 (발효·설립)	남북한 가입현황	주요 내용
생물화학무기	화학무기금지기구 (OPCW : Organization for the Prohibition of Chemical Weapons)	193개국 (1997.4.)	한국(1997.4.) 북한(미가입)	· 화학무기금지협약 의무 이행 감시 및 사찰을 위한 집행기구
재래식무기	무기거래조약 (ATT : The Arms Trade Treaty)	110개국 (2014.12.)	한국(2017.2.) 북한(미가입)	· 재래식무기의 불법거래 및 전용을 방지함으로써 국제평화 및 안보에 기여 · 재래식 무기의 국제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 규정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 (CCW : Convention on Certain Conventional Weapons)	125개국 (1983.12.)	한국1의정서 (2001.5.) (개정)2의정서 (2001.5.) 5의정서 (2008.1.) 북한(미가입)	· 정식명칭 : 과도한 상해나 무차별한 영향을 초래하는 특정 재래식 무기의 사용금지 또는 제한에 관한 협약 – 제1의정서 : X-ray로 탐지 불가한 파편무기 사용 금지 – 제2의정서 : 지뢰, 부비트랩 등의 사용금지 또는 제한 – 제3의정서 : 화염무기의 사용금지 및 제한 – 제4의정서 : 실명 레이저무기 사용 금지 – 제5의정서 : 전쟁잔류폭발물 규제
	유엔 재래식무기 등록제도 (UNRCA : United Nations Register of Conventional Arms)	193개국 (1991.12.)	한국(1993.3.) 북한(미참여)	· 재래식무기 수출입 실적 및 보유현황 등을 유엔에 등록 · 재래식무기 이전 정보 공유 및 군비 투명성 제고를 통한 신뢰 증진
	대인지뢰금지협약 (Ottawa Convention)	164개국 (1999.3.)	남·북한 미가입	· 대인지뢰의 생산, 사용, 비축, 수출 전면금지 · 대인지뢰 폐기(비축분 4년 이내, 매설분 10년 이내) *불가피한 경우 10년까지 연장 가능
	확산탄금지협약 (Convention on Cluster Munitions)	110개국 (2010.8.)	남·북한 미가입	· 모든 확산탄의 생산, 사용, 비축, 이전 전면 금지 *현재 비축 확산탄은 8년 내 폐기
다자수출통제체제	쟁거위원회 (ZC : Zangger Committee)	39개국 (1974.8.)	한국(1995.10.) 북한(미가입)	· NPT 미가입 핵비보유국에 대한 핵 관련 물자 수출시 IAEA 안전조치를 조건으로 수출 · NPT 회원국만 가입 가능
	핵공급국그룹 (NSG : Nuclear Suppliers Group)	48개국 (1978.1.)	한국(1995.10.) 북한(미가입)	· 핵물질, 기술, 장비,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 NPT 회원국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핵비보유국에 대해 수출 통제
	호주그룹 (AG : Australia Group)	43개국 (1985.6.)	한국(1996.10.) 북한(미가입)	· 화학·생물무기 관련 물질, 이중용도 품목 및 기술 등이 우려국가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수출통제체제
	미사일기술 통제체제 (MTCR :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35개국 (1987.4.)	한국(2001.3.) 북한(미가입)	· 대량살상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로켓, 무인비행체, 그리고 관련 장비·기술의 확산을 자발적으로 통제하는 체제
	바세나르체제 (WA : Wassenaar Arrangement)	42개국 (1996.7.)	한국(1996.7.) 북한(미가입)	· 재래식무기와 이중용도 품목 및 기술에 관한 수출통제 체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확산방지구상 (PSI :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s)	107개국 (2003.6.)	한국(2009.5.)	· 불량국가 및 테러집단에 의한 대량살상무기, 미사일 및 관련물자의 불법거래를 차단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협력 활동

일반부록 21

우리 군의 해외파병 현황

총 14개 지역 1,038명

2020년 11월 기준

구분				현재 인원	지역	최초 파병	교대주기
유엔 임무단	부대단위	레바논 동명부대		280	티르	2007년 7월	8개월
		남수단 한빛부대		270	보르	2013년 3월	
	개인단위	인도·파키스탄 정전감시단(UNMOGIP)		8	스리나가	1994년 11월	1년
		남수단 임무단(UNMISS)		7	주바	2011년 7월	
		수단 다푸르 임무단(UNAMID)		1	다푸르	2009년 6월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4	나쿠라	2007년 1월	
		서부사하라 선거감시단(MINURSO)		3	라윤	2009년 7월	
		예멘 협정지원임무단(UNMHA)		-	호데이다	2019년 7월	
	소계			573			
다국적군 평화활동	부대단위	소말리아해역 청해부대		306	소말리아해역	2009년 3월	6개월
	개인단위	바레인 연합해군사령부	참모장교	4	마나마	2008년 1월	1년
		지부티 아프리카사령부 연합합동기동부대 (CJTF-HOA)	협조장교	1	지부티	2009년 3월	
		미국 중부사령부	협조단	3	플로리다	2001년 11월	1년
		미국 아프리카사령부	협조장교	1	슈투트가르트	2016년 3월	1년
		쿠웨이트	협조장교	2	아라프잔	2019년 12월	1년
		EU 소말리아 해군사령부 (CTF-465)	참모장교	1	소말리아해역	2020년 3월	1년
	소계			318			
국방협력	부대단위	UAE 아크부대		147	아부다비	2011년 1월	8개월
	소계			147			
총계				1,038			

*예멘 협정지원임무단 : 코로나19로 2021년 재개 예정

병사 봉급 변화 추이

단위 : 원

연도	병장	상병	일병	이병
1970년	900	800	700	600
1971년	1,030	920	800	690
1972년	1,200	1,050	900	800
1973년	동결			
1974년	1,560	1,370	1,170	1,040
1975년	동결			
1976년	2,260	1,990	1,700	1,510
1977년	2,890	2,540	2,170	1,930
1978년	3,460	3,050	2,600	2,320
1979년	3,800	3,300	2,900	2,600
1980년	3,900	3,400	3,000	2,700
1981년	동결			
1982년	4,200	3,700	3,300	3,000
1983년	4,500	3,900	3,500	3,200
1984년	동결			
1985년	4,600	4,000	3,600	3,300
1986년	4,900	4,300	3,900	3,500
1987년	5,100	4,500	4,000	3,600
1988년	7,500	6,500	6,000	5,500
1989년	8,300	7,000	6,500	6,000
1990년	9,400	8,200	7,300	6,600
1991년	10,000	9,000	8,000	7,200
1992년	10,900	9,800	8,700	7,800
1993년	11,300	10,100	9,000	8,100
1994년	11,700	10,400	9,300	8,400
1995년	12,100	10,700	9,600	8,700
1996년	12,700	11,200	10,100	9,100
1997년	13,300	11,800	10,600	9,600
1998년	동결			
1999년	동결			
2000년	13,700	12,200	10,900	9,900
2001년	19,600	17,700	16,000	14,800

연도	병장	상병	일병	이병
2002년	21,900	19,800	17,900	16,500
2003년	23,100	20,900	18,900	17,400
2004년	34,000	30,700	27,800	25,600
2005년	44,200	39,900	36,100	33,300
2006년	72,000	65,000	58,800	54,300
2007년	88,600	80,000	72,300	66,800
2008년	97,500	88,000	79,500	73,500
2009년	동결			
2010년	동결			
2011년	103,800	93,700	84,700	78,300
2012년	108,000	97,500	88,200	81,500
2013년	129,600	117,000	105,800	97,800
2014년	149,000	134,600	121,700	112,500
2015년	171,400	154,800	140,000	129,400
2016년	197,000	178,000	161,000	148,800
2017년	216,000	195,000	176,400	163,000
2018년	405,700	366,200	331,300	306,100
2019년	동결			
2020년	540,900	488,200	441,700	408,100

*출처 : – 1983년~2020년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별표 13 군인의 봉급표
– 1970년~1982년 군인보수법시행령(대통령령) 별표 2 병의 봉급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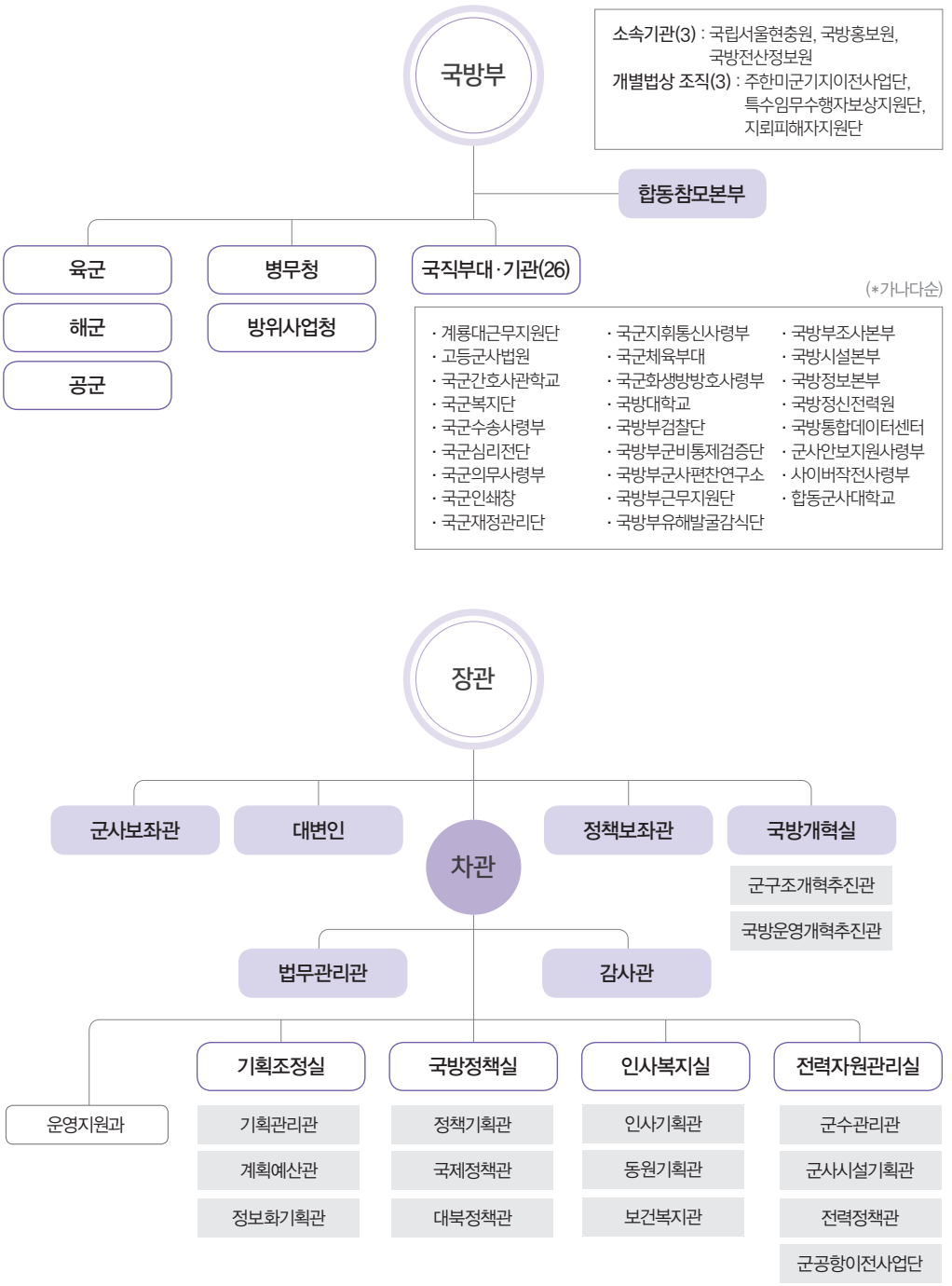
일반부록 23

현역병 복무기간 변천

연도	복무기간(개월)			조정사유
	육군·해병	해군	공군	
1952년 이전	전역제도 없음			6·25전쟁 발발로 「병역법」의 정상적 시행 불가
1953년	36	36	36	6·25전쟁 후 장기복무자 전역 조치
1959년	33	36	36	징집병 병역부담 완화
1962년	30	36	36	징집병 병역부담 완화
1968년	36	39	39	1·21사태로 복무기간 연장
1977년	33	39	39	잉여자원 해소 및 산업기술 인력 지원
1979년	33	35	35	해·공군병 획득난 해소
1984년	30	35	35	징집병 병역부담 완화
1990년	30	32	35	해군병 획득난 해소
1993년	26	30	30	방위병제도 폐지로 인한 잉여자원 해소
1994년	26	28	30	해군병 획득난 해소
2003년	24	26	28	병역부담 완화
2004년	24	26	27	공군병 획득난 해소
2008년	24 → 18	26 → 20	27 → 21	병역부담 완화를 위해 6개월 단축 추진 (2014년까지 단계적 추진)
2011년	21	23	24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도발 등으로 기존 6개월 단축을 3개월 단축으로 조정
2018년	21 → 18	23 → 20	24 → 22	병력중심의 군을 과학기술군으로 정예화하고, 징집병 병역부담 완화(「국방개혁 2.0」)
2020년	18	20	22 → 21	「국방개혁 2.0」 후속조치

일반부록 24

국방기구도



소속기관 및 개별법상 조직의 임무 및 기능

구분		임무 및 기능
소속기관	국립서울현충원	· 안장·위패봉안·추모식 등 위령행사 실시 · 참배행사 계획 수립 및 시행 · 현충선양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국립서울현충원 홍보 · 국립서울현충원 시설·묘역·산림의 관리 및 운영
	국방홍보원	· 국방일보, 국방TV 및 국방FM, 국방누리(뉴미디어)등을 통한 군 홍보 및 장병교육 · 국방뉴스, 시사보도물 제작 및 사이버 홍보 · 국방관련 행사 사진촬영 및 기록 관리 등
	국방전산정보원	· 국방자원관리 정보체계 개발 및 유지보수 · 국방부본부·소속기관 및 일부 국직부대(기관)의 전산장비 획득·운영 · 국방부본부·소속기관 및 일부 국직부대(기관)의 사무용 전산기기/SW 획득·운영 및 지원 · 정보화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별법상 조직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단	· 주한미군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주한미군시설사업의 집행 및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의 관리·운용의 지원 · 그 밖에 주한미군시설사업의 추진 등을 위한 업무 등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	·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심의 준비 및 지원 · 보상금 등의 지급을 위한 예산 편성 및 집행 · 신청인에 대한 자료 확인 및 조사 · 법에 따른 보상과 관련한 소송 및 민원 대응 등
	지뢰피해자지원단	· 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 피해자 및 유족여부심사 실무위원회, 장해등급판정 실무위원회 심의 준비 및 지원 · 위로금 등의 지급을 위한 예산 편성 및 집행 · 신청인에 대한 자료 확인 및 조사 · 그 밖에 지뢰피해자 지원 관련 업무 및 민원 대응 등

공공기관의 임무 및 기능

구분		임무 및 기능
공공기관	한국국방연구원	· 안보환경 및 국방기본정책에 관한 연구와 대안의 개발 · 군사전략, 군사력 건설, 무기체계의 선정 및 획득정책에 관한 연구 · 국방인력·자원관리 및 국방과학기술관리정책에 관한 연구 · 국방정보화 정책연구, 국방정보화 관련 사업의 개발지원 및 기술자문 · 국방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수집, 분석 및 정보서비스의 제공 등
	전쟁기념사업회	· 전쟁기념관 및 기념탑 운영 · 전쟁 및 군사유물의 수집, 보존, 관리, 전시 및 조사·연구 · 전쟁사 및 군사유물 연구, 호국인물 발굴 및 현양 및 기타 학예활동 · 기념사업에 관한 홍보와 교육 및 각종 관련 간행물의 작성·배부 등
	국방전직교육원	· 전역예정군인 전직관련 교육 및 취업역량 제고 · 전역예정군인 취업정보 제공, 채용박람회 개최 등 취업 촉진 · 전역예정군인 취업희망자 데이터베이스 관리 및 통계 유지·분석 · 전역예정군인 전직지원 관련 정책 및 제도발전 연구 등

일반부록 25

국방부 소관 법령 정비 현황

법령정비 현황(2018. 12. 1. ~ 2020. 11. 30.)

합계	법률	대통령령	부령
157	43	66	48

법률

법령명	공포호수(일자)	주요내용
군사법원법	일부개정 제15983호 (2018.12.18.)	·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서류와 소환장의 본인확인 방법으로 기명날인 외에 서명도 허용하는 등 「형사소송법」의 개정사항을 반영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제16029호 (2018.12.24.)	· 퇴직급여금 지급신청 기한을 2021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 국방부 장관이 업무수행을 위해 국가유공자 등록사항, 주민등록정보 및 가족관계등록 사항 등을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함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 제16030호 (2018.12.24.)	· 시행규칙에서 모법의 위임 없이 국방부 장관 또는 관할부대장 등이 조건을 정하여 동의할 수 있도록 하여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법률에 명시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 제16031호 (2018.12.24.)	· 현행법의 '잔임기간'이라는 한자어를 '남은 임기'로 변경하여, 국민이 법률의 용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
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 제16032호 (2018.12.24.)	· 전세대부계정의 명칭을 주거지원 계정으로 변경하고, 전세금을 포함한 보다 다양한 형태의 주거지원을 주거지원계정의 용도에 추가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 제16033호 (2018.12.24.)	· 민간주택전세금 대부 외에도 군인의 주거안정에 필요한 금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임대차보증금 또는 전세금 용도로 대출한 자금에 대한 이자 등 민간주택임대자금을 지원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 제16034호 (2018.12.24.)	· 모든 군인은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종교의식에 참여하도록 강요받거나 참여를 제한받지 않도록 하고 군 내 기본권 침해 등 고충사항의 발생 시 신속히 피해자 보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
군인사법	일부개정 제16224호 (2019.1.15.)	· 군인의 결격사유 중 성폭력범죄 부분을 강화, 군인의 성범죄에 대해 엄격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간부후보생의 결격사유를 명확히 하며, 군인이 공무원과 동일하게 조부모 또는 손자녀를 간호하기 위해 휴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공무원과 근무여건상의 균형을 도모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 제16315호 (2019.4.16.)	· 전투 또는 작전 관련 훈련 중 다른 군인에게 본보기가 될 만한 행위로 인하여 신체장애인이 된 군인과 예비역 군인을 군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경력경쟁채용 시험을 통해 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

법령명	공포호수(일자)	주요내용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제16346호 (2019.4.23.)	· 6 · 25전쟁 당시 전장에서 공로를 세워 무공훈장 서훈 대상자로 결정되었으나 훈장을 실제 전달받지 못한 공로자 또는 그 유가족에게 무공훈장이 수여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제16347호 (2019.4.23.)	· 병역사항 공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병역사항 신고의무자가 신고할 병역사항에 복무부대 또는 복무기관, 병과 및 군사특기를 추가하려는 것임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 제16348호 (2019.4.23.)	· 국군간호사관학교의 교과과정이 간호학사 학위를 수여하기에 충분하게 구성되도록 의무 규정을 명시하려는 것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제16349호 (2019.4.23.)	· 국군포로의 송환에 참여한 사람 등이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교부받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범죄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과소한 벌금형을 현실화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제16350호 (2019.4.23.)	· 국방·군사시설의 설치 및 이용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 실태조사 결과 국가가 국방·군사시설로서 사용·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등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이를 공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제16351호 (2019.4.23.)	· 군에서 실시한 예방접종 이력이 통합관리될 수 있도록 예방접종 대상자의 인적사항, 예방접종 실시내역 등의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질병관리본부와 공유하도록 규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 제16352호 (2019.4.23.)	· 군사시설의 정의에 군사목적을 위한 연구시설 및 시험시설·시험장을 명시 ·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한 반환 공여구역은 반환이 완료된 때에 보호구역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제16353호 (2019.4.23.)	· 연구·시험·수출·홍보 등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운용하는 군용항공기에 관한 감항 인증 절차 마련 · 군용항공기 사업별로 전문기관 중 1개 기관을 감항 인증 주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정
군인사법	일부개정 제16354호 (2019.4.23)	· 해병대사령관의 임기가 끝난 후에 진급하거나 다른 직위로 전직된 경우에는 전역되지 않고 연합작전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전문성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군인연금법	일부개정 제16355호 (2019.4.23.)	·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로 순직이 인정된 경우 유족연금과 사망보상금, 퇴직수당 및 사망조위금의 시효의 기산일을 순직 결정일로 하도록 함으로써, 순직한 사람의 유족에 대한 예우와 보상을 강화
병역법	일부개정 제16356호 (2019.4.23.)	·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 및 공직자 등에 대한 병적 관리를 강화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 제16357호 (2019.4.23.)	· 육군3사관학교의 교과과정이 학위를 수여하기에 충분하게 구성되도록 의무 규정을 명시
전사·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	제정 제16358호 (2019.4.23.)	· 2001년 9월 1일 이후 2011년 3월 28일 이전에 전사·순직한 진급예정자에 대하여도 그 유족으로부터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의 기간 동안 진급신청을 받아 진급시킬 수 있도록 「군인사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

법령명	공포호수(일자)	주요내용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제16359호 (2019.4.23.)	· 위로금 등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2021년 5월 31일까지 연장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제16360호 (2019.4.23.)	· 보상금 등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이 법 시행 후 6개월까지 연장
5 · 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제16577호 (2019.11.12.)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위원 자격에 군인으로 20년 이상 복무한 사람을 추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 제16582호 (2019.11.26.)	·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의 방지 및 그 피해에 대한 보상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제16583호 (2019.11.26.)	· 군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에 필요한 자격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자격증명을 취소하도록 하는 등 항공교통관제업무에 종사한 자에 대한 벌칙을 상향하는 내용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 제16584호 (2019.11.26.)	· 군대 내에서 기본권 교육 강화 · 군복무 중 사망한 군인의 유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족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를 규정
예비군법	일부개정 제16585호 (2019.11.26.)	· 국방부 장관은 예비군훈련 시 미세먼지가 대기오염경보 발령기준 이상일 경우 실내훈련, 훈련시간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도록 규정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제16759호 (2019.12.10.)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구성을 마치면 그 날부터 1년 이내에 진상규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기한을 연장
군인연금법	전부개정 제16760호 (2019.12.10.)	· 「군인 재해보상법」을 제정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분할연금 제도를 도입하여 이혼한 배우자에 대한 노후생활 보장을 강화
군인 재해보상법	제정 제16761호 (2019.12.10.)	·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군인 재해보상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군인연금법」에서 군인 재해보상제도를 분리하여 「군인 재해보상법」을 제정
병역법	일부개정 제16852호 (2019.12.31.)	· 대체역을 신설하고, 대체역과 현역, 예비역 또는 보충역 간 병역의무 형평성을 확보하게 함으로써 헌법상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를 조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제16851호 (2019.12.31.)	·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등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는 대체역으로의 편입·심사 및 대체역의 복무 등 대체복무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헌법상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를 조화
군사법원법	일부개정 제16926호 (2020.2.4.)	· 헌병의 수행 임무를 명확히 반영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우리말 표현인 군사경찰로의 변경이 추진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제16927호 (2020.2.4.)	· 병(兵)의 인권 신장을 위하여 병에 대한 징계의 종류 중 영창(營倉)을 폐지하되, 이를 대체할 수 있도록 징계의 종류에 군기교육, 감봉 등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정비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제16929호 (2020.2.4.)	· 방위산업의 발전과 관련된 부분을 「방위사업법」에서 분리하여 이 법을 제정하고, 방위산업의 발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법령명	공포호수(일자)	주요내용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정 제17163호 (2020. 3. 31.)	· 제4차 산업혁명 등으로 기술발전 속도의 가속화됨에 따라 국방과학기술분야에서도 혁신 및 발전이 요구되고 있으나, 현행 방위사업법에 따른 연구개발은 무기체계 획득을 위한 수단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국방과학기술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체계는 부족한 실정인바, 이 법을 제정함으로써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국방연구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기반 조성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 제17164호 (2020. 3. 31.)	· 비행안전구역 제1구역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수종말처리 및 폐기물처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지하에 매설하는 시설물 및 그 부속물을 설치하려는 경우 관할부대장과의 협의를 거쳐 이를 허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방위사업법	일부개정 제17165호 (2020. 3. 31.)	·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국방과학기술의 혁신을 위한 연구 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을 제정하면서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련 내용을 삭제 · 수정
병역법	일부개정 제17166호 (2020. 3. 31.)	· 공군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1개월 단축하고, 해운업체 등과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강화하며, 승선근무예비역의 권리 보호를 제고하기 위하여 해운업체 등의 장에게 약정 근로조건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제17266호 (2020. 5.19)	·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협정」의 타결이 지연되면서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가 무급휴직에 들어가게 됨에 따라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위와 생활이 불안정한 상황에 처하였음. 이에 무급휴직 중인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의 생계위협 및 생활 상의 불이익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군사법원법	일부개정 제17367호 (2020. 6. 9.)	· 군인·군무원 등 사이에 발생한 범죄의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군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줄 수 있도록 하고, 군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고소·고발인의 불복절차인 재정신청 제기 기간을 그 처분을 통지받는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연장하는 등 군 형사소송절차에서 군 장병의 인권보장을 강화하는 동시에 최근에 개정된 형사소송법의 주요 내용을 반영

대통령령

법령명	공포호수(일자)	주요내용
작전사령부령	일부개정 제29321호 (2018.12.4.)	· 종전에 「야전군사령부령」에 따라 두고 있던 제1군사령부 및 제3군사령부를 통합하여 군단 단위의 지상작전부대를 지휘하는 지상작전사령부로 개편하기 위한 규정 개정
국방정보본부령	일부개정 제29322호 (2018.12.4.)	· 국방지형정보단을 폐지하고 해당 업무를 정보사령부에서 통합 수행하기 위한 개정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29373호 (2018.12.18.)	· 상근예비역의 복무기간도 6개월의 범위에서 단축할 수 있도록 규정

법령명	공포호수(일자)	주요내용
통합방위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29399호 (2018.12.24.)	· 효율적인 통합방위작전 수행 여건을 보장하기 위하여 시 · 도 통합방위협의회 및 시 · 군 · 구 통합방위협의회의 회의를 화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개선을 위한 개정
군사법원의 조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제29400호 (2018.12.24.)	· 「작전사령부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육군 본부 보통군사법원 2부 및 4부의 소재지를 변경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29496호 (2019.1.22.)	· 육군 · 해군 · 공군 본부 등 소요제기기관이 무기체계 등에 관하여 객관적 · 합리적인 소요제기를 하도록 소요제기서에 포함되는 사항을 전력소요서 안에 포함되는 사항과 동일하게 하는 등 규정 개정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제29497호 (2019.1.22.)	· 국방부 장관이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군보건의료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진료실적에 따라 진료업무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업무보조비가 지급된 경우에는 그 진료업무보조비를 환수하는 근거를 마련
사이버작전사령부령	전부개정 제29561호 (2019.2.26.)	· 국방 사이버공간에서의 사이버작전 시행 및 그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이버작전사령부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현행 규정을 「사이버작전사령부령」으로 전부개정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29637호 (2019.3.25.)	· 국방부 장관이 사실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를 국가유공자 등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병역 정보 등으로 정함. · 퇴직급여금의 지급신청 시 첨부서류로 제출하여야 하는 인감증명서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제29640호 (2019.3.26.)	· 국방부에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및 군 내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
6 · 25 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제29672호 (2019.4.2.)	· 본인의 유전자 시료(試料)를 제공하여 6 · 25전쟁 중의 전사자유해의 신원확인에 기여한 사람에게 최대 1천만원 이내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포상금 지급대상을 추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제29734호 (2019.5.7.)	· 국방 분야 양성평등 정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전문경력관 1명)을 증원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제29747호 (2019.5.7.)	· 국방부 장관은 등록포로에 대한 환영식 및 퇴역식 등의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국방부 장관이 본인 또는 그 유족의 신청을 받아 억류기간 중의 억류국 등에의 동조 여부 등을 고려하여 예우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그 예우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군위탁생규정	일부개정 제29790호 (2019.5.28.)	· 군위탁생에 대한 관리 ·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규정
합동참모본부 직제	일부개정 제29819호 (2019.6.11.)	· 작전부대와 합동부대에 대한 전투준비태세 검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합동참모본부에 특별참모부로 전비태세검열실을 신설하려는 것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29893호 (2019.6.25.)	· 관할부대장 등의 동의의 조건을 기존 군사시설의 대체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등으로 정하고, 부대방향 창문 설치 금지 등 불합리하거나 과다한 조건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며, 군사목적에 직접 공용되는 시설을 전쟁장비 · 물자의 생산 · 저장시설 등으로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법령명	공포호수(일자)	주요내용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29894호 (2019.6.25.)	· 본인 외에는 조부모의 직계비속이 없거나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없어 조부모 또는 손자녀를 간호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등의 경우에는 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간호를 위하여 휴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각 군별 기본병과 명칭 중 화학과를 화생방과로 변경하는 등 현재 수행하는 병과의 임무를 명칭에 명확히 반영하는 등 규정 개정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29937호 (2019.7.2.)	· 별정군무원 또는 일반계약군무원에서 일반군무원으로 전환된 군무원에 관하여 근속승진기간을 산정할 때 해당 경력 전부를 산입하도록 함
6 · 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제29993호 (2019.7.23.)	· 공로자 또는 유가족의 등록 신청 방법 및 6 · 25 무공훈장 찾아주기 조사단의 업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전사 · 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 제29994호 (2019.7.23.)	· 전사 · 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유족이 진급을 신청할 때에는 진급신청서에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국방부 장관은 진급신청이 접수되면 각 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에게 진급신청을 한 대상자가 전사 · 순직한 진급예정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사실 확인을 하도록 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보고하게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군인 징계령	일부개정 제30022호 (2019.8.6.)	· 적극행정을 한 군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징계 등 심의대상자가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때에는 징계 등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정 개정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제30041호 (2019.8.13.)	· 국방부 군수관리관을 앞으로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1명(고위공무원단 1명)을 증원
군예식령	일부개정 제30064호 (2019.9.3.)	· 외국 국빈의 경우에는 관악 연주 없이 예악만 연주하도록 하고, 대통령의 경우에는 예포 발사가 없는 행사에 한정하여 관악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례곡 연주시간을 단축하는 등 규정 개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30065호 (2019.9.3.)	· 군인은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 외조부모, 자녀나 자녀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3일 이내의 범위에서 청원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의무복무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마친 병(兵)에게 의무복무기간 중 2일의 범위에서 취업상담, 채용시험 응시 등 구직활동을 위한 청원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30066호 (2019.9.3.)	·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 그 사람에 대하여 도주 등에 따른 소재불명으로 지명수배 · 통보 결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지명수배 · 통보가 해제될 때까지 퇴역연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정지하는 등 규정 개정
해병대사령부 직제	일부개정 제30067호 (2019.9.3.)	· 해병대사령부의 효율적인 정책기능 수행을 위하여 전력기획실의 정책업무를 이관하여 정책실장을 신설하는 등 조직개편을 위한 규정 개정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30090호 (2019.9.24.)	·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분과위원회 중 방위사업의 추진단계별로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는 정책 · 기획분과위원회, 사업관리분과위원회 및 군수조달분과위원회를 방위사업기획 · 관리분과위원회로 통합 · 분과위원회의 위원 정원을 20명 이내에서 26명 이내로 확대
국군체육부대령	일부개정 제30121호 (2019.10.15.)	· 국군체육부대 부대장의 직급을 장성급(將星級)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에서 2급 이상 군무원으로 조정

법령명	공포호수(일자)	주요내용
군인복지기금법 시행령	제30122호 (2019.10.15.)	· 「군인복지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제30135호 (2019.10.22.)	· 국방부가 보유한 군인 등의 예방접종 이력을 국방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예방접종일부터 14일 이내에 전송하여 공유하도록 함
국방 ·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제30136호 (2019.10.22.)	· 국방부 장관은 매 짝수연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다음 해 5월 31일까지 보고해야 하는 등 실태조사와 공고의 방법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제30137호 (2019.10.22.)	· 항공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의 범위를 무인 항공기, 동력패러슈트 및 동력패러글라이더 등으로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제30162호 (2019.10.29.)	· 병무청장이 확인해야 하는 병역 변동사항에도 복무부대 또는 복무기관, 병과 및 군사특기를 추가 · 병무청장이 신고대상자의 병역 변동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각 군 참모총장 등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제30185호 (2019.11.5.)	· 군 책임운영기관의 운영상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관장에게 위임되는 소속 군무원에 대한 임용권의 범위를 조정하고, 군 책임운영기관의 상여금 지급액 및 지급방법 등을 기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30199호 (2019.11.5.)	· 적극행정 수행 태도 등이 돋보인 일반군무원에 대해서는 근속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소극행정이나 음주운전을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징계처분에 따른 일반적인 승진임용 제한기간에 각각 6개월을 가산하고 그 기간 동안 승진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 개정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제30213호 (2019.11.26.)	· 2급 이상 군무원이 지휘하는 부대에도 군 미결수용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30225호 (2019.12.3.)	· 현재 군수품무역대리업자의 동일한 서류를 중복 제출하여야 하는 문제점을 해소하는 한편, 국세청장 및 관세청장이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제출받은 군수품무역대리업자의 중개수수료 신고 관련 과세자료에 대해 세무조사 등을 한 경우 그 조사 결과 중 과세자료와 내용이 다른 사항이 있으면 이를 방위사업청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
군인 명예전역수당 지급 규정	일부개정 제30269호 (2019.12.24.)	· 군인명예전역수당을 신청한 후 사망한 군인도 군인명예전역수당 지급대상자 심사 · 결정 대상에 포함하여 군인명예전역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 군인명예전역수당을 받은 사람을 국가공무원으로 재임용한 경우에는 재임용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군인명예전역수당 환수를 보다 원활히 하기 위하여 군인명예전역수당을 지급한 각 군 참모총장에게 환수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내용 개정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30279호 (2019.12.31.)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신체 장애로 인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을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 ·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첫째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로서 각 휴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그 휴직기간 전부를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

법령명	공포호수(일자)	주요내용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제30281호 (2019.12.31.)	· 국방정책에 대한 민주적 통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에 장성급 장교로 보하던 국방부 정보화기획관 및 동원기획관을 앞으로는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인력증원에 관한 사항 규정 · 국방정책실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기간을 2년 연장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30312호 (2019.12.31.)	·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해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임신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군인 등이 사용할 수 있는 휴가를 확대하려는 것임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30323호 (2020.1.7.)	· 입영신체검사 후 질병 등의 사유로 귀가된 현역병입영 대상자의 재신체검사 대기 기간을 일부 단축하고, 병역판정검사 없이 병역면제되거나 전시근로역에 편입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여 병역처분 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현행 제도 개선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제30364호 (2020.1.29.)	· 국방부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군공항이전사업단의 존속기한을 2020년 1월 30일에서 2022년 1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등 규정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30384호 (2020.2.4.)	· 군인의 기본병과 중 하나인 헌병과를 군사경찰과로 하고, 해병대 정보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해병대 기본병과에 정보과를 신설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일부개정 제30385호 (2020.2.4.)	· 재외공관에 두는 무관(武官)의 정원을 75명에서 77명으로 2명(육군 및 공군 영관급 장교 각 1명) 증원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제30452호 (2020.2.25.)	· 국방부에 청년장병 취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는 등 인력 증원관련 규정 개정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30553호 (2020.3.31.)	· 중증장애인의 군무원 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만 응시할 수 있는 일반군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근거를 마련하고 이 경우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일반군무원의 정보통신 직군에 사이버직렬을 신설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30554호 (2020.3.31.)	· 군용총포 · 도검 · 화약류 등의 제조 · 저장 관련 안전사고 관련 별도의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고 기존에 수출 허가를 받은 것과 동일한 방위산업물자를 동일한 사용자에게 재수출하는 경우 등에는 수출 허가를 면제하는 등의 규정 개정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제30635호 (2020.4.28.)	· 국방부 인사복지실 및 전력자원관리실의 분장 사무 일부를 조정, 전력자원관리실의 분장 사무에 군 안전관리 정책 수립 업무를 추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30695호 (2020.5.26.)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실내공기질 관리의 대상이 되는 시설기준과 실내 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 및 군기훈련의 목적, 방법 및 종류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군인연금법 시행령	전부개정 제30759호 (2020.6.9.)	· 「군인 재해보상법」 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군인연금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분할연금에서 제외되는 혼인 기간의 인정기준 및 분할연금의 청구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정 제30760호 (2020.6.9.)	· 「군인 재해보상법」이 제정됨에 따라 분할연금에서 제외되는 혼인기간의 인정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법령명	공포호수(일자)	주요내용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제30767호 (2020.6.9.)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병무청에 대체역 심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0명을 증원하며, 병무청에 대체역 심사위원회 2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하고, 조직 및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병무청 정원 2명을 병무청 소속기관으로 재배치하려는 것임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제30807호 (2020.6.30.)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대체역 편입신청 절차, 대체역 편입신청을 한 사람의 징집·소집 연기절차를 마련하고,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대체역 복무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30814호 (2020.7.1.)	· 방위사업청장의 방위력개선사업 수행 역량을 강화하고 군수품 조달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이 군수품 중 전력지원체계 일부를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조달하는 근거를 마련
군인 징계령	일부개정 제30880호 (2020.7.28.)	· 군인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성폭력범죄 또는 성희롱 사건을 심의하는 징계위원회는 원칙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3분의 1이상 포함되도록 하여, 징계위원회와 항고심사위원회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30881호 (2020.7.28.)	· 성폭력범죄 또는 성희롱 사건을 심의하는 군무원징계위원회는 원칙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3분의1이상 포함되도록 하고, 군무원징계위원회 및 군무원항고심사위원회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30891호 (2020.8.4.)	· 군인사법의 개정에 따라 법률로 상향된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 및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전상자 등이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 또는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회의록 공개를 요청한 경우 3개월 이내에 공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 제30945호 (2020.8.19.)	·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해당 지원금의 구체적인 선정기준 및 지급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합동군사대학교령	일부개정 제30963호 (2020.8.25.)	· 각 군의 특성에 따른 전문화된 교육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합동군사대학교에 두고 있던 육군대학, 해군대학, 공군대학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고 이를 각 군에 두려는 것임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31058호 (2020.9.29.)	· 병역법이 개정됨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한 실태조사 사항에 인권침해 발생여부를 추가하고, 해운업체 등의 장이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원서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할 때에 약정한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서약서를 첨부하게 함
통합방위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31092호 (2020.10.7.)	· 지역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중 기존 지방병무관서의 장을 기관의 편성이나 역할 등을 고려하여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 및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 특정하고,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실질적인 방호를 위해 관할지역 구분없이 국가중요시설의 관리자, 지역책임 부대장 및 경찰서장이 공동으로 경계협정서를 체결하도록 함

법령명	공포호수(일자)	주요내용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제31122호 (2020.10.27.)	· 상근 예비역 또는 현역병이 복무기간 동안 교육훈련 등으로 질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입어 민간의료기관에서 치료 등을 받은 경우 국방부 장관이 그 치료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보험가입 및 해지 등의 업무를 군인공제회에 위탁하는 한편 해당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병무청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예비군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31123호 (2020.10.27.)	· 「군인 재해보상법」의 제정에 따른 준용근거 법률 및 조문을 정비하고 「군인 재해보상법」에서 장해보상금 및 사망보상금의 지급기준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으로 통일함에 따라 예비군도 군인과 동일한 지급기준을 적용함으로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에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예비군에 대한 보상을 강화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개정 제31124호 (2020.10.27.)	· 4차 산업혁명과 미래 부대구조 개편 등 급변하는 국방환경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재 국방부 장관이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에게 위임하고 있는 일반군무원의 직군·직렬조정권한의 위임범위를 6급 이하 일반군무원에서 전 계급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정 제31173호 (2020.11.24.)	·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소음대책 지역의 지정·고시등에 필요한 사항 소음피해 보상금의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지급방법을 정함

부령

법령명	공포호수(일자)	주요내용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974호 (2018.12.14.)	·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을 지원하고 국정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국방부에 인력 증원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제976호 (2019.1.24.)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위험 근무수당 지급대상에 항공생리훈련교관을 추가하는 등 규정 개정
군 장려금 지급 규칙	일부개정 제977호 (2019.1.31.)	· 군 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종전에는 4년제 대학 4학년 때만 군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사관후보생 선발 및 대학 졸업 시기를 고려하여 그 학생의 동의가 있으면 사관후보생과정을 시작하기 전까지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978호 (2019.2.27.)	·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하는 공공단체의 범위를 확대,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신청 시 지방병무청장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할 서류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및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를 추가하는 등 규정 개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980호 (2019.3.5.)	·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철도·도로·교량 및 하천에 관한 공익사업의 시행에 대하여 폭발물 관련 군사 시설이 있는 보호구역 안에서의 허가 등에 관하여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일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동의해야 하는데, 그 사항에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폐쇄되는 도로를 대신하여 기존 차로의 수 이하인 새로운 도로를 만드는 경우를 새로 추가

법령명	공포호수(일자)	주요내용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981호 (2019.3.5.)	· 국방부에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983호 (2019.4.26.)	· 장교 진급제도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부사관 진급선발 대상자 제외 사유를 삭제하고 진급 발령 전에 진급시킬 수 없는 사유를 신설하는 등 부사관 진급제도를 개선하는 등 규정 개정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984호 (2019.5.7.)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9734호, 2019. 5. 7. 공포 · 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구체적인 직급을 정하는 한편, 전직지원정책과 및 국방여성가족정책과의 명칭을 각각 국방일자리정책과 및 양성평등정책과로 변경하는 등 규정 개정
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985호 (2019.5.30.)	· 「군위탁생규정」으로 상향하여 규정된 내용을 삭제하고, 각 군 참모총장이 매 학기 보고하는 군위탁생의 현황을 국방부 장관이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군위탁생 교육계획서 승인 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 개선을 위한 규정개정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986호 (2019.6.25.)	·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책을 수립 · 집행하는 등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비행사실에 대해서는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하지 않도록 하는 등 규정 개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987호 (2019.7.8.)	·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보호구역 안에서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을 하기 위하여 국방부 장관 또는 관할부대장 등과 협의를 하는 경우 조건부로 동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법률로 상향 입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등 규정 개정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988호 (2019.8.6.)	· 적극행정 등에 대한 징계면제를 위하여 징계 등 의결서에 면제 사유 해당 여부 등을 기재할 수 있도록 서식을 정비하는 등 관련 내용 개정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989호 (2019.8.6.)	· 적극행정 등에 대한 징계면제를 위하여 징계등 의결서에 면제 사유 해당 여부 등을 기재할 수 있도록 서식을 정비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990호 (2019.8.13.)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0041호, 2019. 8. 13. 공포 ·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991호 (2019.8.27.)	·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단계적으로 단축됨에 따라 일등병, 상등병 및 병장으로 진급하기 위한 최저복무기간을 각각 1개월씩 단축하고, 각 군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급 최저복무기간을 1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993호 (2019.9.3.)	· 군인연금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1180호, 2019. 9. 3. 공포 · 시행)됨에 따라, 외국거주자 신상신고서 및 급여제한 사유 소멸로 인한 잔여 퇴직급여 청구서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 해당 내용을 반영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995호 (2019.9.24.)	· 「방위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0090호, 2019. 9. 24. 공포 · 시행)됨에 따라, 핵심기술기획서를 심의하는 분과위원회를 정책 · 기획분과위원회에서 방위사업기획 · 관리분과위원회로 변경
예비군 육성 · 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제996호 (2019.9.26.)	· 종전에는 예비군 육성 · 지원 요청서의 제출 절차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하고 있었으나, 지방자치단체별로 달리 규정할 필요성이 없어 조례 위임 규정을 삭제함

법령명	공포호수(일자)	주요내용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일부개정 제997호 (2019.10.11.)	· 협력업체의 지급보증서 등에 명시된 보증금액 또는 보험금액만큼 조선업체의 지급보증서 등의 제출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특례의 기한을 2년 연장하는 내용의 규정 개정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998호 (2019.10.18.)	· 장기복무 부사관 선발 및 부사관 진급 대상자 선발 시 부여하는 가점과 관련하여 각 군 참모총장이 일정한 범위에서 각 군의 인력 획득 환경과 특성을 고려하여 가점을 부여하도록 하고 회전익항공기 조종사를 준사관으로 임용할 때 임용기준을 비행경력이 300시간 이상인 사람으로 하여 명확성을 높이는 등 제도개선을 위한 규정 개정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999호 (2019.10.24.)	· 군용항공기 중 무인항공기의 세부 기준을 정하고, 연구 등 목적의 감항인증을 신청하려는 사업관리기관의 장은 군용항공기 운용 목적 및 기간 등의 내용이 포함된 감항인증신청서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규정 개정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1000호 (2019.10.29.)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병역사항 변동신고의무 고지서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규정 개정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1001호 (2019.12.4.)	· 「방위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보안서약서 서식을 삭제하는 등의 규정 개정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제1002호 (2019.12.30.)	· 방위산업체에 적정 이윤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이윤산정기준을 개선하고, 방산노임단가와 기준노무량 개념을 도입하는 등의 규정 개정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1004호 (2019.12.31.)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0281호, 2019. 12. 31. 공포 ·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개방형 직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방부 양성평등정책과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는 등 규정 개정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1006호 (2020.1.7.)	· 장애등급제 개편을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복지법령의 개정에 따라 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대상 장애인 중 병역판정검사가 필요한 사람의 기준을 정비하는 등 규정 개정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1008호 (2020.1.23.)	· 부사관 진급 선발기준 중 나이를 삭제하여 나이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하고, 심신장애인 중 의무복무기간을 마치지 못한 사람의 경우 심신장애 치유 가능성, 병과 특성에 따른 복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육군, 해군 및 공군 전역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현역으로 계속 복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정 개정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1009호 (2020.1.29.)	· 국방부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군공항이전사업단의 존속기한을 2년 연장하고, 기존 한시정원 중 1명을 감축하는 등의 내용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1011호 (2020.2.17.)	· 일반군무원의 신규 채용시험 중 면접시험의 변별력을 강화하고 동점자가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면접시험의 평정요소별 점수를 세분화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1013호 (2020.2.25.)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

법령명	공포호수(일자)	주요내용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1014호 (2020.3.31.)	· 방위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군용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제조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 등이 수립해야 하는 위해 예방규정의 기준 등을 정하고, 수출허가를 면제받고 방위산업물자 등을 수출한 자가 수출 후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는 수출거래 현황 서식 및 첨부서류를 정함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제1015호 (2020.4.2.)	· 특수업무수당의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장성급 장교인 조종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월지급액을 정함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1017호 (2020.4.28.)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0635호, 2020. 4. 28. 공포 ·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 및 부서 명칭을 조정함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1018호 (2020.5.27.)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병영생활에 필요한 시설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기 위한 관리기준을 정함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1019호 (2020.6.1.)	· 전투 또는 작전 관련 훈련 중 다른 군인에게 본보기가 될만한 행위로 신체장애인이 된 부사관을 준사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특별전형을 마련하는 등 인사제도 운영을 개선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1020호 (2020.6.2.)	· 국방기술품질원장이 방산업체로부터 인증갱신의 신청을 받고, 부득이한 사유로 현장심사를 할 수 없는 경우 현장심사를 갈음하여 제출한 자료 등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규정함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전부개정 제1022호 (2020.6.11.)	· 분할연금 산정 시 제외되는 혼인기간의 신고절차 등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제정 제1023호 (2020.6.11.)	·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학생군사교육단 군간부후보생 규칙	일부개정 제1024호 (2020.6.19.)	· 학생군사교육단 설치기준 인원을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은 40명으로, 부사관후보생은 30명으로 변경하고, 병적 전환 근거를 마련함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제1026호 (2020.6.30.)	· 대체역 편입신청서의 서식을 정하고, 편입신청서 제출 시 본인 진술서 및 부모·주변인 진술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게 함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1027호 (2020.6.30.)	· 병역법의 개정에 따라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병적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는 대상에 대체역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 조문과 서식을 정비함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규칙	일부개정 제1028호 (2020.7.15.)	· 예비군부대 지휘관 및 예비전력관리기구의 운영을 위한 지휘관과 이를 보좌하는 인력 선발의 응시자격에 육군 인사과 지휘관 직위경력자를 포함시키는 한편, 선발시험 중 필기시험의 문항 수 및 배점을 변경하는 등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1029호 (2020.7.28.)	· 병의 징계양정기준을 정비하고, 소극행정, 금품수수, 공금횡령 비위 등을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간부징계양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운영 상 미비점 개선

법령명	공포호수(일자)	주요내용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1030호 (2020.7.27.)	·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사이버직렬 일반군무원의 신규채용을 위한 시험과목을 신설하는 한편, 일반군무원 신규채용을 위한 면접시험의 평정요소를 정비하고,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면접시험의 평정을 위하여 필요한 참고자료를 수집하여 면접시험위원에게 제공하려는 것임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 제1032호 (2020.8.20.)	·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해당 지원금 지급에 관한 국방부 장관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기 위함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1033호 (2020.9.29.)	· 승선근무예비역과 약정한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는 등의 내용으로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서약서의 서식을 정하는 개정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1034호 (2020.10.21.)	·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고 국방부 본부 정원의 직렬을 일부 조정함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제1035호 (2020.11.24.)	· 군용비행장 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군용항공기의 운항 및 군사격장에서의 사격훈련에 따른 소음영향도의 산정방법, 소음대책지역에서 설치가 제한되는 시설물의 종류와 제한조건, 자동소음측정망 설치계획의 고시방법을 정함

국회 국방위원회 구성 및 주요 활동

2020. 12. 31. 현재

수석전문위원

1급 배용근

전문위원

2급 이신우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민홍철(61년생, 경남 김해시갑)
3선(19·20·21대)
부산대 법학과, 부산대 법학석사, 육군 법무관,
고등군사법원장, (예)육군준장, (전)변호사,
(전)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현)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

본관 421호
회관 554호
O)784-6490
784-6491
F)6788-6435

입법조사관

3급 서덕교
4급 강건희
4급 김재환
5급 주경덕
5급 이지윤

더불어민주당


간사

황희 (67년생, 서울 양천구갑)
재선(20·21대)
연세대 대학원 도시공학과 공학박사
(전) 노무현 대통령비서실 청와대 행정관
(현) 대통령직속 4차위 스마트시티특위 위원

회관 838호
O)784-8551
784-8552
F)6788-7500



안규백(61년생, 서울 동대문구갑)
4선(18·19·20·21대)
성균관대 및 동무역대학원 수료, 노무현대통령
직인수위 전문위원, 민주당 조직위원장,
국방위원장, 새정치연합원내수석

회관 807호
O)784-4180
788-4181
F)6788-6705



김병기 (61년생, 서울 동작구갑)
재선(20·21대)
경희대 국민윤리학과
국정원 근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더불어민주당 한반도경제통일위원회 위원

회관 721호
O)784-1322
788-1323
F)6788-6170



설훈 (53년생, 경기 부천시을)
5선(15·16·19·20·21대)
고려대 사학과 졸업
(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전) 농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장

회관 948호
O)784-8570
788-8571
F)6788-6620



김진표 (47년생, 경기 수원시무)
5선(17·18·19·20·21대)
서울대 법과대학 법학과,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
민주당 최고위원, 원내대표

회관 744호
O)784-3807
784-3808
F)6788-6330



홍영표 (57년생, 인천 부평구을)
4선(18·19·20·21대)
동국대, 국무총리실 시민사회비서관,
원내대변인, 민주통합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 환노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회관 1004호
O)784-3143
784-3144
F)6788-7470



박성준 (69년생, 서울 중구성동구을)
초선(21대)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정치학 박사
(전) JTBC 아나운서
(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

회관 324호
O)784-8430
784-8431
F)6788-6480



김병주 (62년생, 비례대표)
초선(21대)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국제정치학 박사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회관 447호
O)784-4177
784-4178
F)6788-6185



김민기 (66년생, 경기 용인을)
3선(19·20·21대)
고려대 농업경제학과
(전) 정보위원회 위원장
(전)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회관 945호
O)784-1930
784-1931
F)6788-6155

국민의힘


간사

한기호 (52년생,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을)
3선(18·19·21대)
육군사관학교 졸업
(전) 새누리당 강원도당위원장
(전) 육군 교육사령관(예 중장)

회관 908호
O)784-3860
788-3861
F)6788-7410



신원식 (58년생, 비례대표)
초선(21대)
국민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박사)
(전) 합동참모본부 합동참모차장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예 중장)

회관 745호
O)784-9630
788-9631
F)6788-6685



이채익 (55년생, 울산 남구갑)
3선(19·20·21대)
울산대 일반대학원 행정학박사
(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전) 울산 남구청장 / 울산항만공사 사장

회관 844호
O)784-8011
788-8012
F)6788-7080



하태경 (68년생, 부산 해운대구갑)
3선(19·20·21대)
서울대 물리학과, 중국 지린대학교 대학원(세계
경제 박사), (사)열린북한방송 대표,
SK텔레콤 경영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회관 916호
O)784-2491
788-2492
F)6788-7405



강대식 (59년생, 대구 동구을)
초선(21대)
영남대 학사
(전) 대구 동구청장
(전) 대구 동구의회 의장

회관 341호
O)784-5275
788-5276
F)6788-6010



윤주경 (59년생, 비례대표)
초선(21대)
이화여자대학교 화학과(석사)
(현) (사) 매헌윤봉길 월진회 이사
(전) 독립기념관 관장
(전) 대통령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

회관 828호
O)784-7057
788-7058
F)6784-6880

무소속



홍준표 (54년생, 대구 수성구을)
5선(15·16·17·18·21대)
고려대 법과대학 졸업
전) 19대 대통령선거 자유한국당 후보
전) 자유한국당 대표 / 서울지검 검사

회관 549호
O)784-7610
784-7611
F)6784-7485

국회 국방위원회 주요 활동(2019. 1. ~ 2020. 12.)

회기	회의일자	주요내용
		제20대 국회
제367회 임시회 (2019.3.7.~4.5.)	2019.3.18.	· 업무보고(국방부·병무청·방위사업청 소관) · 2018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상정 · 「병역법」등 법률안 50건 상정 · 「제50주년 SCM 계기 한미동맹 지속발전 결의안」, 「일본 자위대의 해상초계기 위협비행 사과 및 재발방지 촉구 결의안」 의결
	2019.3.28.	· 2018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 병역특례제도 개선 소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 · 「군인사법」 등 법률안 30건 의결
제369회 임시회 (2019.6.20.~7.19.)	2019.7.3.	· 주요 현안보고(국방부·병무청·방위사업청 소관) · 「국군조직법」등 법률안 49건 상정
제370회 임시회 (2019.7.29.~8.27.)	2019.8.5.	· 국방부 현안보고(북 미사일 발사, 북 소형목선 상황, 러시아 군용기 영공 침범 관련) · 「북한의 핵 고도화와 미사일 도발 규탄 및 재발방지 촉구 결의안」 의결
	2019.8.21.	· 2018회계연도 결산안 상정 · 2018년도 국정감사 및 2017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추진현황 보고 · 「5·18진상규명 특별법」 등 법률안 31건 의결
제371회 정기회 (2019.9.2.~12.10.)	2019.9.4.	· 2018회계연도 결산안 의결
	2019.9.19.	·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관련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2019.9.24.	· 2019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 · 「군인연금법」 등 법률안 14건 의결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등 법률안 25건 상정
	2019.10.2.~10.26.	· 2019년도 국정감사 실시
	2019.11.4.	· 2020년도 예산안 상정
	2019.11.7.	· 2020년도 예산안 의결 · 「군사기밀보호법」 등 법률안 6건 상정 ·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 「UAE군 지원 파견연장 동의안」 상정
	2019.11.19.	·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 「UAE군 지원 파견연장 동의안」 의결 · 「군사기밀보호법」 등 법률안 27건 의결
제376회 임시회 (2020.2.17.~3.17.)	2020.2.24.	· 「주요 현안보고(국방부·병무청·방위사업청 소관)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등 법률안 27건 상정 · 「병역법 개정안」 1건 의결 · 「방위산업의 날 제정 촉구 결의안」 의결
제377회 임시회 (2020.4.16.~5.15.)	2020.4.29.	·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등 법률안 6건 상정 ·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의결

회기	회의일자	주요내용
		제21대 국회
제379회 임시회 (2020.6.5.~7.4.)	2020.6.22.	· 업무보고(국방부·병무청·방위사업청 소관)
	2020.6.29.	· 2020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상정 및 의결
제380회 임시회 (2020.7.6.~8.4.)	2020.7.28.	· 업무보고(국방부·병무청·방위사업청 소관)
제381회 임시회 (2020.8.18.~8.31.)	2020.8.25.	· 2019회계연도 결산안 상정 · 2018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추진현황 보고
제382회 정기회 (2020.9.1.~12.9.)	2020.9.1.	· 2019회계연도 결산안 의결
	2020.9.24.	· 국방부 긴급 현안보고(해수부 공무원 실종 관련) · 「북한 해수부 공무원 총격 무력도발 규탄 결의안」 의결
	2020.10.7.~10.26.	· 2020년도 국정감사 실시
	2020.11.9.	· 2021년도 예산안 상정 · 「통합방위법」 등 69건 상정 ·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 「UAE군 지원 파견연장 동의안」 상정 · 「방위산업의 날 제정 촉구 결의안」 의결
	2020.11.12.	· 2021년도 예산안 의결
	2020.11.20.	· 「주한미군기지 이전 특별법」 등 32건 의결 ·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 「UAE군 지원 파견연장 동의안」 의결
	2020.12.8.	· 「5·18진상규명 특별법 일부개정안」 의결

동영상

대한민국 국군
홍보영상
p50

육군 홍보영상
p51

해군 홍보영상
p51

해병대 홍보영상
p51

공군 홍보영상
p52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영토, 독도
p55

일상을 지키는
대한민국 국군
p70

아나시스 2호 발사
p76

육군 KCTC 훈련
p86

해군 순항훈련
p87

공군 해상 조난자
합동 탐색구조 훈련
p88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는
예비군
p102

스마트 국방혁신
p112

대한민국 여군
70년 발자취
p123

평화를 만드는
강한 힘, 국군
p131

M-프렌즈
5기 출범
p131

제72주년
국군의 날 챌린지
p131

대체복무제도
개선
p135

2019 서울 ADEX
p150

2020 서울안보대화
p185

한빛부대
p195

청해부대 파견지역
한시적 확대
p197

병사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p210

군 급식
업그레이드
프로젝트
p219

어머니 장병 급식·
피복 모니터링단
p219

2019 전역예정장병
취업박람회
p234

6·25전쟁
전사자 유가족
DNA 시료 채취
p239

우리 군의
코로나19 대응
p285

색인

ㄱ

가상현실 45, 93, 103, 114, 116, 118, 265
과학화 경계시스템 55, 260
군비통제검증단 64, 344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45, 230
군인연금제도 237
군인 재해보상법 240, 241, 348, 353, 355, 358
국가감염병전담병원 73, 226, 282
국가안전대진단 70
국가직무능력표준 236
국군외상센터 115, 159, 224, 227, 282
국군포로 242, 250, 252, 253, 254, 347, 350
국방과학연구소 68, 118, 145, 148
국방 모바일보안 앱 211, 272, 274, 275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 238, 344
국방신속지원단 73, 281
국방의료정보체계 115
국방자원 수명주기 44, 115
국방전략기술 109, 118, 157
국방정신전력원 85, 93, 344
국방헬프콜센터 214
국방 M&S체계 114
국제평화지원단 204
국제평화활동센터 202, 203, 204
국제해양방위산업전 69, 150
국제해양안보구상 198, 332
군복무 크레딧 216
군사분계선 246, 247, 252, 259, 260, 261, 298
규제 정부입증책임제 142
근력보조형 로봇 117
급식자동측정시스템 115, 220
기본운용능력 91, 169, 171, 310, 324, 331

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244, 250, 251, 252, 315, 318
남북공동유해발굴 245, 247, 258, 261, 262, 263, 299, 303, 308

ㄷ

다련장 51, 53, 107, 108, 109, 157, 290, 324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훈련 189, 190, 325, 332
대륙간탄도미사일 13, 15, 22, 28, 296
대체복무제 47, 135, 229, 231, 269
대한민국 방위산업전 69, 150
동명부대 193, 194, 205, 341
드론 17, 51, 68, 80, 117, 142
드론봇 전투체계 51

ㅁ

마일즈 장비 86
만물인터넷 118
미러 신전략무기감축협정 12
미래도전국방기술개발 118, 119, 148

ㅂ

방위력개선비 153, 154, 171
방위력개선사업 109, 111, 146, 147, 156, 356
방위비분담금 165, 166, 167, 326, 333, 335
방위비분담특별협정 166, 167, 326, 333
병영생활전문상담관 214, 275, 282
부사관 학군단 83, 84
북방한계선 21, 54, 55, 87, 245, 249, 259, 299, 323, 330
비무장지대 21, 180, 238, 245, 246, 247, 248, 249, 251, 258, 259, 260, 261, 262, 263, 299, 301, 303, 304, 322

ㅅ

사물인터넷 45, 116, 118, 158
상호군수지원협정 191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69, 150, 176, 179

서울안보대화 10, 69, 177, 178, 179, 181, 182, 184, 185, 186
성실수행인정제도 110, 146, 148
순항훈련 84, 87, 88, 182, 266, 314
스마트 국방혁신 44, 46, 112
스마트탄약고 116
스톡홀름 합의 22
신속시범획득사업 116

ㅇ

아세안 지역안보포럼 10, 187
아시아 지역 대화그룹 75
아크부대 178, 199, 200, 205, 341
아프리카돼지열병 63, 72
어머니 모니터링단 220
연합지휘소훈련 91, 310, 321
연합토지관리계획 165
예멘 협정지원임무단 196, 341
예비군훈련장 103, 156
오쉬노부대 196
완전운용능력 169, 170, 171
용산기지이전계획 165
우주상황인식 77, 163, 325, 332
우주작전대 17, 45, 76, 98
유엔 남수단임무단 195, 196
유엔 레바논평화유지군 194
위성감시통제대 76
을지태극연습 57, 70, 90, 309
인공지능 15, 83, 112, 113, 114, 118, 220, 325, 332

ㅈ

자기개발지원금 45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13, 22, 26, 28, 296
장병내일준비적금 216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70
정찰용 무인항공기 45, 108, 157
증강현실 114, 116, 118, 265
지원예비군 103
지체상금 상한제 110

ㅊ

청해부대 181, 196, 197, 198, 205

ㅋ

칸쿼스트 훈련 90
코브라골드 훈련 88

ㅌ

통합방위협의회 78, 79, 350, 354
통합재난관리시스템 73

ㅍ

판문점선언 20, 244, 245, 248, 249, 250, 251, 258
팔레스타인 정전감시단 193
평시 복무 예비군제도 100, 105
평양공동선언 20, 244, 245, 250, 258
플루토늄 28, 294, 295

ㅎ

한국방공식별구역 173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61, 157
한미 상호방위조약 53, 162
한미안보협의회의 14, 60, 77, 162, 163, 164, 167, 169, 170, 322, 329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187, 244
한빛부대 183, 193, 195, 196, 206, 283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173, 174
합성전장훈련체계 44, 114
해외긴급구호대 74, 198

해외파병 상비부대 204
핵·WMD 대응체계 61, 62
호국훈련 91, 321
혼합현실 118
화랑훈련 63, 91, 321
화학무기금지기구 64, 340
환태평양훈련 88, 90

A

ADEX 69, 150, 176
ADMM-Plus 10, 67, 69, 75, 88, 175, 184, 186, 202
AI 15, 66
AR 114, 265
ARF 10, 184, 187
ASF 63, 71, 72
ATT 189, 190, 340

B

BCTP 87
BWC 64, 188, 339

C

CCPT 91, 321
CPX 57, 91, 321
CWC 64, 188, 339
C4I 106, 167, 335, 336

D

DEMIS 115
DMZ 245, 246, 248, 258, 261, 267, 308, 309, 310, 329
DNA 238, 239, 240
DPAA 239, 240, 266
DX-Korea 69, 150

E

EU 9, 175, 179

F

FFX 107
FOC 169, 324, 331
FTX 57, 88
F-35A 21, 45, 53, 107, 108, 109, 155

G

GSOMIA 173

H

HEU 28
HGV 15
HUAV 107, 155

I

ICBM 13, 22, 28, 29, 313
INF 9
IOC 91, 169, 310, 324
IoE 118
IoT 116

J

JCPOA 9

K

KADIZ 173, 174
KCTC 86
KDRT 199
KF-X 107, 108, 109, 157

KIDD 59, 162, 171
KMEP 90

L

Life-Cycle 44, 115
LPP 165, 335
L-SAM 98, 157
LVC 44, 114

M

MADEX 69, 150
MCM 162, 322, 324, 326, 329, 330, 331, 333
MDL 246
MR 118
MUAV 108, 157

N

NATO 9, 175, 179
NDAA 12, 13
NDS 11
NLL 21, 54, 55, 87, 259, 323, 330
NPR 60
NPT 188, 294, 339, 340
NSS 11

O

OPCW 64, 340

P

PBL 58, 155
PKO 16, 176, 177, 186, 202, 203
PSI 189, 191, 325, 340

S

SCM 14, 59, 162, 169, 191, 312, 322, 324, 326, 327, 329, 331, 333, 361
SDD 10, 69, 177, 184, 185
SLBM 13, 22, 26, 28, 296, 297, 311
SMA 166, 326
SNS 130, 273
SOFA 165, 166, 328, 335, 338

T

TPFDD 53, 54

V

VR 45, 92, 103, 114, 265

W

War-game 92
WMD 23, 46, 61, 62, 64, 106, 108, 154, 156, 157, 292, 325, 332, 366

Y

YRP 165

숫자

3D 스캐닝 115
4D 작전개념 60, 61
4D 전략 60, 61
9·19 군사합의 20, 21, 55, 131, 162, 185, 238, 244, 245, 246, 247, 248, 249, 258, 259, 260, 261, 263, 309, 315, 322, 323, 329

2020 국방백서

Defense White Paper

발행일 2020년 12월

발행 대한민국 국방부

편찬 정책기획관실 기본정책과

편집디자인 ㈜다니기획

본 책자의 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국방부 기본정책과(02-748-6237)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방부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1번지)
대표전화 : 02)748-1111 민원안내 : 02)748-6891 Fax : 02)748-6895
www.mnd.go.kr